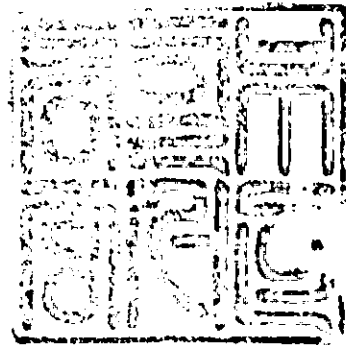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관련

국내 주요신문 기사집

2001. 11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일 반 기 사

北 이산상봉 돌연 연기

조평통 “남한 경계강화로 16일 4차방문 보류”

“경제협력위-장관급회담은 계속 진행” 밝혀

정부, 강력항의 방침속 “대화기피는 아닐것”

북한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제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인용,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를 고려해 출연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과 우리측 태권도 시범단 서울 파견을 부득이 당분간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한이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국가안진보장회의, 비상국무회의 등을 열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특히 군부 세력이 우리 군의 동향에 관한 대책을 논

의하는 등 군의 대비태세, 경찰의 출동태세를 더욱 강화한 것을 공언하고 있다”면서 “남조선에서 비상경계조치가 해제되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돼 방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평통 대변인은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 6차 장관급회담, 금강산 육로관광회담 등)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하되 금강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측이 정치·군사적인 이유를 내세워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당분간 연기했으나 미국의 반테러 전쟁이 끝나 분위기가 조성되면 올해 안에 상사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북은 이미 지난 9일 이산가족 최종 명단을 교환한데 이어 일정 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북측은 지난 3월 13일에도 갑자기 전통문을 보내 개최기로 사전 합의한 제5차 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바 있다.

통인부 고위 관계자는 “북측이 미국 테러사건으로 남측이 취하고 있는 비상경계태세, 등에 대해 방문단의 안전상 문제가 있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의 발표는 당국간 회담은 그대로 진행하되 민간 차원의 협의만 연기하자는 뜻인 만큼 대화 기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측의 통보를 공식 전달받은 대로 관계기관 회의를 연 뒤 ‘북측의 태도는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항의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北, 離散방문 일방 연기

정부 강력항의... 식량지원 보류 시사

祖平統 “南 비상경계태세로 분위기 살벌”
洪統일 “합의위반”... 예정대로 진행 촉구

북한은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에서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로 비상경계 태세가 내려져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행사와 대한태권도협회가 20일로 제안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방한을 지연 연기했다.

▶관련기사 3·29면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삼엄한 경계태세하의 분위기에서는 대화와 내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도 없다”면서 “우리는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를 고려해, 4차 흠어진 가족·친척방문단 교환과 우리 측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파견을 부득이 담판간 머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담화는 그러나 오는 28일부터 열릴 6차 장관급회담, 23일부터 26일까지의 남북경협추진위원회 2차 회의, 18일부터 열리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은 예정대로 하되, “정소는 안정성이 보

장된 금강산에서 갖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열린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오찬간담회에서 “북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김형식 단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장관급 회담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시하고, 이산가족 방문단 행사들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홍 수석대표는 또 “남북간 중요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연기된다면 장관급회담과 경협추진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번 이산가족 교환방문 연기가 대북 식량제공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내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을 경우 식량지원 등을 늦출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金民培기자 baiba@chosun.com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朝鮮日報

2001. 10. 13 (토)

정부 “상봉없이 당국회담 성과 어렵다”

對北 이례적 ‘경고’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 방한의 일방 연기에 당혹해하면서 즉각 홍순영(洪淳瑛)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시하고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낮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오찬간담회에서 “북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통일부는 홍순영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청와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할 거쳐 강도 높은 경고성 대북전공문을 보냈다.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전문문의 ‘장관급회담과 경협추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소기의 성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표현을 눈여겨 봐달라”고 말했다. 이는 이산가족 행사들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당국 간 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북측에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같은 경고 조치들이 북측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 정부 대북정책의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에 차질이 생긴 데다,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북측의 이산가족 행사 연기가 장기화돼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형기 차관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조속히 이산가족 행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金仁執기자

南北 관계개선에 돌발 악재

北, 이산상봉 연기 파장

북한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과 관련한 남한 내부의 움직임을 빗미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반적으로 연기한 것은 이합인도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정부가 대북정책 추진의 제1순위로 삼아온 이산가족 문제에 북한이 장기간 조장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방문 취소도 결국 체제에 부단이 될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을 피하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탈려 법외와 관련한 금강산 관광 당국회담과 대북 전역 지원 문제를 다룬 김정은주위 2차 회의 등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 남북관계 개선에 제한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 나올 전에 갑자기 나온 북측의 이번 결정을 12일 오전 평양방송을 통해 접한 정부는 무척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반년 넘게 끌어온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를 넘어선 지난날 5차 장관급 회담 합의에 따라 10월 평안남도 남북 당국회담이나 민간교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일단 홍순영(洪淳瑛)장관 명의의 대북 전경문에서 "우리측 경제조치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런 문제가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는 항의의 뜻을 전했다.

김정기(金正基)통일부 차관은 이와 관

련, "(북측의 이번 공보가)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해 나가는 데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 비난의 초점이 돼온 '머주기' 여론 때문에 합력위하는 정부로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이다.

서울·평안 교환 개최 관계를 깨고 북측이 이달말 6차 장관급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카드가 주목된다.

통국대 고유환(高有煥·북한측)교수는

연구실장은 12일 "남북 당국대화 재개에도 불구하고 전역지원·금강산 관광 대가 분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군부 강경파의 반발을 아태평화위국이 무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건파를 떠받쳐온 금강산 탈려가 유입되지 않는 틈을 타 군부 강경파가 미국의 반(反)테러전에 공조하려는 남한 내 군사 움직임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물론, 한·미측의 내부시정을 감안한 조치란 지적이다.

최진욱(崔鎭旭)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갑자기 등에 대한 보수여권이 대두

北 권력내부 강온파 갈등 때문인듯 남북화해 바람 기대한 정부 당혹

"한 정부가 점차 남북 문제보다 국내 현안 해결에 힘을 기울이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북측이 간파하고 남한 내부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남측 관심사인 이산가족 문제는 외면하고 경제 실리만 챙기겠다는 북측의 카드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속사정 평가=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일부 일정을 연기한 속사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권력 내부의 강온파 갈등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종석(李鍾碩)세종연구소 남북관계

하고 DJP연합이 깨지는 등 남한내부의 전세가 여수선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일정에 타격을 준다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테러사태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어려워진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당국 회담과 민간교류가 빠르게 이뤄진 10월의 남북 일정이 북측에 지나치게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북한은 밀린 금강산 관광 대가에 대한 우리측 대응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등에 대한 국제정세를 지켜본 뒤야 이산상봉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영중 기자 <yilee@joongang.co.kr>

최근 남북관계 일지

- ▶ 1월 29-31일 3차 북식자 회담(금강산)
- ▶ 2월 7-10일 전역협력 실무협의회 1차회의(평양)
- ▶ 26-28일 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 ▶ 3월 13일 5차 장관급 회담(서울) 개시 무산
- ▶ 15일 이산가족 3명행 처신교섭
- ▶ 9월 15-18일 5차 장관급 회담(서울)
- ▶ 10월 3-5일 금강산관광 합심성 남북회담
- ▶ 12일 4차 이산가족 방문단 연기

▶ 10월 19일

- ▶ 10월 19일 금강산관광 2차 당국회담
- ▶ 20-22일 북측 태권도시범단 서울방문
- ▶ 23-2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
- ▶ 28-31일 6차 남북 장관급 회담

중앙일보

2001. 10. 13 (토)

北, 이산상봉 일방 연기

"남측 軍·警 비상경계 삼엄한 분위기" 이유 金대통령 "필요조치 강구"... 강경대응 시사

북한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돌연 일방적으로 연기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북측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를 고려해 4차 출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과 우리측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공연을 북측이 단번간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 5. 30면>

조평통은 "남조선에서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턱을 대고(근거를 두고) 진군과 검열에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져 예측할 수 없는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그러나 이달 월말 ▶6차 장관급 회담(28일)▶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23일)▶금강산 관광 당국회담(19일)은 "제 날짜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대응 시사한 정부=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관련 부처들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홍순영(洪淳瑛)통일부장관 등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조평통 대변인 담화내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오홍근(吳

弘근)대변인이 전했다.

남북 장관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장관은 북측 단장인 김영성 내각 책임장사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측이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유감 표명과 함께 "우리군의 경계강화 조치는 세계적인 테러위협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군의 당연한 기본임무"(黃典對대변인)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보유미 30만톤의 대북 식량차관 제공문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북한측의 향후 움직임을 국민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해 나간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진국·이영중 기자 <jinkook@joongang.co.kr>

對北 쌀 지원 野, 지지 친화

"모든 지원 재검토"

한나라당은 12일 북한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당은 쌀 지원 등 모든 대북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성명에서 "쌀 지원 문제는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일 전제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희정(李熙鼎)총재는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의약품 지원하는 데 찬성했으나, 북한이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식량 등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며 쌀 지원 지지 방침을 철회할 뜻을 분명히 했다고 韓대변인이 전했다. 이수호 기자 <hodori@joongang.co.kr>

北측 이산방문 돌연 연기 정부 對北지원 재고기로

祖平統 “南경계 살벌 순조로운 내왕 장담못해” “장관급-금강산 당국자 회담은 예정대로 하자” 金대통령 “北측에 우리입장 분명하게 알려라”

국방부도 유감 성명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2일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 서울 방문을 돌연 연기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항의 진본문을 보냄에 따라 향후 남북대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A3·4면에 관련기사)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남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장관들과의 정외대 오한 간담회에서 이산가족 방문 연기 폭보에 대해 듣고 “북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관련해 이처럼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방문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살벌한 경계 태세에 있는 (남한의) 분위기에서는 대화와 내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고 그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도 없다”고 말하고 “지금의 정세에서는 남조선에 마음 놓고 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어 “남한에서 비상경계 조치가 시급히 해제되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돼 이산가족과 태권도 시범단 교환사업이 조속히 이뤄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

과 평양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조평통은 그러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남북 당국자회담은 예정된 날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 회담의 장소는 “우리가 이미 제안했고 안전성이 담보돼 있는 금강산지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북측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예정대로 16일 실시하자고 촉구하는 한편 “이산가족 방문이 연기된다면 장관급회담이나 경험추진위 회의가 개최된다고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 이산상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식량 지원 등 대북지원을 재고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은 대규모 민간급 교류는 당분간 연기하고 대신 당국자 회담은 하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대테러 검제

태세 강화는 국민과 국내 상주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기본 임무”라며 유감 성명을 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世界日報

“北 판깨기 이번엔 그냥 못넘어가”

정부반응과 대책

정부는 북한이 4차 이산가족 상봉과 태권도 시범단 서울 방문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대해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이고 남북간의 중요한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북한이 등을 돌리는 것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뜻이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차 장관급회담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북한의 제안에 부정적이며 대북 식량지원 등도 재고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정부는 12일 오후 홍순영(洪淳瑛)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 김령성 단장 앞으로 전화통

지문을 보내 강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 대변인, 대한적십자사, 대한태권도협회 등에서도 항의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이 연기사유로 우리

“장관급회담 성과 없을수도” 경고 “식량지원 재고” 압박카드도 준비

내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순영 수석대표는 “우리측의 경계조치들은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제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이며, 북측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이날 오후 3시에 보내온 진본문을 통해 “귀측의 비상경계 조치를 해제해서 4차 출입진 가족의 상황이 조속히 진행되기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측의 비상경계 조치를 계속 거론할 것

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 저지세’, ‘과주기’ 등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무르게 대응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식량지원 등 연계전략 구상=정부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 홍순영 수석대표는 진본문에서 “만

약 중요한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연기된다면 남북 장관급회담과 남북 경험추진위원회 등이 개최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는 28일 6차 장관급회담, 23일 경험추진위 2차 회의 등의 주 의제는 식량지원과 전력협력 등이다. 사실상 북한에 대해 선물을 주는 회담인 것이다. 상황 진전에 따라서 회담을 우리측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정부는 압박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 식량지원도 국민의 의사를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며 식량지원을 재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상환기자 shyoan@sgt.co.kr

북, 이산상봉 일방연기

“남쪽 비상경계로 분위기 안돼” 통보

정부 “철회” 촉구... 장관급 회담 등 보류 시사

김대통령 “우리 입장 분명히 표명” 지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무산됐다. 북한은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16~18일로 예정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이를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대북 식량지원 방침의 재검토 및 제6차 장관급회담 보류 가능성 등을 내비쳐 남북관계가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3·18면

조평통은 이날 오전 대변인 담화에서 “남쪽에 조성된 정세로 인해 제4차 흠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16~18일)과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방문(20~22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남조선에서 비상경계조치가 시급히 해제되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돼 흠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살벌한 경계태세 하에 있는 (남한의) 분위기에서는 대화와 내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고 그러면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

으리라는 담보도 없다”며 “지금 정세하에서는 남조선에 마음놓고 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담화는 “대화 협상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제6차 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2차 회의,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제2차 남북 당국간 회담은 예정된 날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면으로 이어짐

박진수 정재권 권혁철 기자
jkk@hani.co.kr

북쪽은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이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황봉영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이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방문 연기를 통보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홍순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들과 오찬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북쪽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홍순영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이름으로 북쪽 김령성 단장 앞으로 전화통

지문을 보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사업과 태권도 시범단 방문 행사를 북쪽이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별도의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 “북쪽이 우리 내부문제를 연기사유로 거론한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전화통지문에서 “중요한 합의사항인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연기된다면 남북 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 등이 개최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이 담 말로 예정된 남북 당국간 대화의 보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형기 통일부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식량 40만t의 대북 지원방침에 대해 “식량지원도 국민적 공감대라는 바탕이 없으면 어렵다”며 재검토될 수 있음을 전했다.

한편, 비무장지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합의서 서명 교환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 양쪽 수석대표 접촉을 12일 열자는 남쪽 제의에 대해 북쪽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北, 이산상봉 일방 연기

정부 "합의 중대위반" 쌀지원 재검토 시사

조평통 "남측 삼엄한 분위기 조성" 이유 金대통령 "분명한 입장표명·조치" 지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16~18일로 예정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남측이 20일로 요청한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서울방문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북측이 지난달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보류함에 따라, 향후 예정된 각종 당국간 회담 등 남북관계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측이 이산가족 행사할 유보한 것은 지난해 10월 2차 방문 과정에서 명단교환 등을 지연 미룬 이후 두 번째이다.

★관련기사 3·26면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8분 평양방송 등을 통해 "남조선에서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가 내려

져 예측할 수 없는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교환 등 민간교류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북측은 그러나 금강산 육로회담(19일)과 제2차 경협추진위(23~26일),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28~31일)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금강산에서 열 것을 제의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 등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들과 오찬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동준기자 dilee@hk.co.kr

서울경제

2001. 10. 13 (토)

南혈육 맛을 北가족 이념교육 '시간벌기'

남북관계 정상화 보름 만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일정을 돌연 연기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북측의 진의와 정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대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남북간 합의사항 위반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

달려져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북 철회거부면 나머지 일정 거부=정부는 "약속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북측에 이산가족상봉 연기발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방문점 접촉을 통해 유감표명과 항의내용을 담은 전성문을 전달

■ 北 이산상봉 왜 연기했나
식량 지원규모 등 불만도 작용한듯

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수위로 북측을 비난했다.

◇북, 이산상봉 돌연 연기 배경=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과 테러전 가능성에 대비해 군과 경찰에 내려진 비상근무등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북측 상봉의 표면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장부 관계자는 "사실은 방문단을 맞이할 재북 이산가족을 교육시키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보류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측이 당국간 회담 개최지로 금강산을 내세우는 배경으로 현대측의 금강산 관광대가 9억4,200만 달러와 특히 미납금 2,400만 달러 지급에 대한 남측 당국의 보장 요구가 깔려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 북측이 내부적으로 김도중 인 식량 40만톤(쌀 30만톤 차관, 옥수수 10만톤 무상지원)의 대북 지원 규모에 대한 북측의 불만도

였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도 유감을 표명하고 "합의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관계자들이 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될 경우 나머지 회담에서도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정부는 북측이 장래남 회담 등 나머지 일정은 예정대로 제 날짜에 그대로 진행할 것을 제의했지만 이산가족 상봉연기 발표를 북측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회담일정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산가족 방문 연기 등 북측의 주장이 바래들 경우 향후 민간교류에 치명적인 담보할 거둬들 것으로 보고 신중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홍길기자

91anycall@sed.co.kr

한국경제

2001. 10. 13 (토)

北, 이산상봉 돌연 연기

남측 테러경계태세 트집

북한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제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연기한다고 12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북 합의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 향후 남북회담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조성된 정세로 인해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서울 파견을 당분간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담화는 "남에서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로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졌다"며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따른 남측의 비상대세 돌입을 연기사유로 지적했다.

북측은 그러나 장관급회담 등 각 분야 당국간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정태용 기자 redael@hankyung.com

北, 이산상봉 일방 연기

조평통 “남측 정세 때문” 발표...정부 강경대응 천명

金대통령 “필요한 조치 강구” 장관급회담·식량지원 재검토

북한은 12일 미 테러사태로 인한 남측 정세를 이유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북측 태권도 시범단 남한방문 행사등 연기하자고 일방공보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남북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뒤 북측이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남북 장관급 회담 등 각종 회담과 대북 식량지원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방침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열린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오찬간담회에서 “북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관련기사 3·18면

북한은 대남 전공문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살벌한

경제대세하에 있는 (남한의) 분위기에 서는 대화와 내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고 그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도 없다”며 “출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파견을 부득이 당분간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대화과 협상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6차 남북 장관급회담 등은 예정된 날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개 최장소를 금강산으로 제의했다.

정부는 오후 홍순영(洪淳瑛)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전공문을

북측에 보내 “우리측의 대테러 조치는 북측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북측이 이를 들어 이산 상봉을 연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중요한 합의사항인 이산 상봉이 연기된다면 장관급 회담 등이 개최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국민 의사를 존중해서 조치를 취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해 상봉 연기로 여론이 악화되면 이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김홍선·최재영기자

bsk@kuryngnyang.com

世界日報

2001. 10. 13 (토)

北, 이산방문 돌연 유보

조평통 담화 南측의 비상경제조치 이유로

태권도 시범단 방문도 - 장관급회담은 진행

정부, 즉각 강력 항의 - 對北쌀지원 연계시사

북한이 돌연히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유보한다고 12일 오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 표명과 더불어 쌀지원 연계를 시사하는 등 남북간에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관련기사 2-3·22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2일 오전 대변인 담화란 통해 남측에 조성된 정세로 인하여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서울방문을 보류한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보도로 밝혔다.

북한은 서울방문을 보류한 이유

에 대해 “살벌한 경제대세하에 있는 (남한의) 분위기에서는 대화와 내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고 그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보장)도 없다”며 “지급의 정세하에서는 남조선에 마음놓고 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일 오후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남북장관급회담수석대표 명의의 전화공문을 북측에 보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에 대한 일방적 연기에 강력히 항의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

구했다. 홍 수석대표는 관문집 인력관 접촉을 통해 김원성 북측 장관급회담단장 앞으로 전달된 공문에서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그동안 차질없이 준비되어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과 태권도 시범단 방문을 북측이 행사가 압박한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정진·윤상환기자 jjj@sgt.co.kr

이산방문 유보▶2면에 계속

이산상봉 유보

▶1면서 계속

특히 홍 수석대표는 “민약 중요한 합의사항인 이산방문단 교환이 연기된다면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개최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해 북측의 일방적 연기공보가 쌀지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대북식량지원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조치할 것”이라며 “(북측의 이번 통보가) 식량지원을 검토해 나가는 데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차관은 북측이 각종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1970년대 이래 우리는 회담을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북측의 입장과 회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정된 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게 된 데 대해 당사자들에

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 방법을 강구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은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와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 앞으로 전공문을 보내 “비상경제조치를 해제해야 이산가족 상봉과 태권도교류가 가능하다”고 제의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새벽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개시한 직후 국내 주요 시설과 주한 미군기지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北 이산상봉 일방연기 정부 식량지원 재검토

조평통 "남측 경계태세 강화로 불가피"

북한은 12일 오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따른 남측의 비상경계태세 강화할 이유로 16일로 예정됐던 4차 이산가족 상봉계획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물 통해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를 고려해 제4차 이산가족 친척방문단 교환과 우리측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파견을 당분간 머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19면

북한은 대변인 담화에서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남측이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를 내리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와 내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으며 우리측 당사자(방문단)들도 남조선에 미응봉고 가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나 "북남간 대화나 협상을 발전시키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

하다"며 "제6차 장관급회담(28일)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23일), 금강산 당국간회담(19일)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장소할 금강산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북측은 이어 대한적십자사와 대한대권도협회에 각각 전평문을 보내 북측의 방침을 공식적으로 전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홍순연(洪淳演) 통일부장관 이첩으로 전화문자문을 북에 보내 강력한 유감의 뜻과 함께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 "군의 조치는 외부의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한 뒤 "군의 대테러 경계태세 강화할 이유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등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에 보낸 전화문자문에서 "테러에 대비한 우리의 경계조치들은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태권도시범단 파견인정을 계획대로 진행, 남북관계가 원활히 진전되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측에 우리 입장을 천명하게 표명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홍순연 통일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남북은 이미 지난 9일 이산가족 최종명단을 교환한 데 이어 일정 협의까지 마친 상태이다.

정부는 북한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보류한 데 대해 40만 규모의 대북식량지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동원 기자 yunbr@kdaily.com

대한매일

2001. 10. 13 (토)

매일경제

2001. 10. 13 (토)

北, 이산방문 돌연 연기

나영필 기자

북한이 이산가족 방문 입장을 나흘 앞둔 12일 돌연 이산가족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 서울 방문을 연기했다. ▶관련기사 4면

북한은 그러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2차 금강산회담 등은 예정된 날짜에 진행되는 대신 회담 장소할 금강산

으로 하자고 재의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라"고 지시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남조선에 조성된 비상경계태세를 고려해 출연 가족방문단 교환과 우리측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파견을 당분간 머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19면

서울경제

2001. 10. 13 (토)

이산가족방문 北, 돌연 연기

북한은 오는 16일부터 2박3일간으로 예정됐던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북측 태권도시범단 서울파견 일정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4·23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물 통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우리측 태권도시범단의 서울 파견을 북측이 당분간 머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로 남조선에 조성된 살벌한 경계태세 분위기에서는 대화와 내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 육로관광회담(19일),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23-26일),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28-31일)은 예정대로 금강산에서 열리고 재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연기 발표와 관련, "북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도 이와 관련,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측의 이번 담화는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의 중대한 위반으로 유감"이라며 "(이산가족상봉 연기 발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황인선기자 his@sed.co.kr
김홍길기자 yanyall@sed.co.kr

‘人道’는 외면...돈되는 사업만 챙겨

北 합의파가...흔들리는 남북관계

北 ‘딴없는 교류 안한다’ 속셈 드러내

는 것 자체가 이번 이산가족 행사 연기가 받을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남북으로 부터 돈도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이산가족 재회 등 자신들이 하기 싫은 것을 왜 하느냐는 게 북측의 자세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런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남북관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는 국면이다.

/송민기기자 ginko@chosun.com

경협논의 당국회담 전망도 불투명
“결국 금강산 미수금 달란 얘기” 분석도

대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금강산 사업의 상징성을 강조하려 할 수 있다. 이번엔 남한내 비상경제 태세를 문제삼은 것은 북한 군부일 것이란 관측들이다. 북한이 회담 정소를 금강산으로 옮기는 것은

연월	내용
2001년 3.13	북한, 5차 장관급회담 발령 불참 종료
6.8	현대와 북한 이대평화위원회,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 회담 간의 협의
9.2	북한, 당국간 대화 조속 재개 제언
9.15-18	5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9.15-16	송호경 이대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용규 현대이산사업연대(금강산)
10.3-5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1차 당국회담(금강산)
10.12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산가족 교환방문(10.16-18)과 내년도 시범단 방문 일정 연기 발표

◇北 조평통 담화문(요약)

남조선에서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턱을 대고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제태세가 내려져 예측할 수 없는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칠종교는 안보태세에 역할하고 군부세력들은 우리 군대의 동향을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군의 대비태세, 송동태세를 강화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중단되었던 당국대화가 재개되고 발전하고 있는 때에 우리를 겁고 대결 분위기가 고취하고 있는 것은 6·15 북남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며, 우리를 심히 자국하는 위험한 행위다.

살벌한 경제태세에 있는 분위기에서 대화와 내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도 없다. 우리는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를 고려, 제4차 휴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과 우리 측 내년도 시범단의 서울 파견을 부득이 당분간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남 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10월 중에 하기로 돼 있는 제6차 북남 상급회담과 북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북남 당국회담은 제때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 회담들의 개최장소는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금강산 지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다.

지난 9월 제5차 장관급회담으로 잠시 회복되는 듯하던 남북 관계가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12일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행사와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방한을 일반적으로 연기하면서 미국의 대(對) 테러전쟁과 관련한 우리의 경제 태세 강화의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북측의 의도는 하기 싫던 이산가족 교환방문 행사를 안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북한의 태도는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그들의 전략을 드러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이날 북의 발표에 대해 즉각 남북 합의 위안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일부 당국자들이 대북 방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선 것도,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방증한다.

북한측은 28일부터 진행될 6차 장관급회담 등 이달 중 연기로 돼 있는 당국회담은 예정대로 갖겠다고 했으나, 우리 측이 이산가족 교환방문 행사가 연기된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도 불투명하다. 송호영(洪浩榮)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에 보낸 전화문자문에서 “중요 한의사항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연기된다면, 장관급회담과 경협추진위원회가 연기되고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측이 우리 측 경제태세에 이유로 이산가족 교환방문 행사를 연기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경기(金敬基) 통일부 차관은 “어제까지 방법이 이산가족 일정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해온 상황에서 북측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나왔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대가 미지급금(2400만달러) 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데 대한 반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5차 장관급 회담이 열리던 지난날 송호영(洪浩榮) 이대평화위 부위원장을 통해, 현대의 요청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재개한 것이라던 점을 밝히면서 금강산 관광대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표명했다.

북한 군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대가 들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朝鮮日報

2001. 10. 13 (토)

“離散상봉 가로막으면 人道的 쌀지원도 못해”

한나라 黨방침 급선회

12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발령 연기 발표로 대북 쌀지원을 여당보다 먼저 결정했던 한나라당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희창(李熙昌) 총재는 이와 관련, “쌀 지원 문제는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진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까지 파탄으로 끌고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쌀 지원 문제 등 대북관계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총재의 측근은 “쌀과 이산가족 문제는 별도의 사안으로, 쌀지원은 분배의 부연성과 김중보 장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이 총재가 이같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금강산 총재단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정하게 된다.

당내 일반적인 기류도 대북 쌀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쪽이 강하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자고 한 것인데, 북한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인 일을 일방적으로 짓밟은 상태에서는 관련하지 않으려는 반응이 많았다.

당내 진보파의 일부(李鶴榮) 부총재까지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연수에 대해지원 여부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이번 행동은 심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희창(李熙昌) 부총재는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도 대북 지원은 북의 태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이 어떻게 쌀 지원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재섭(金在涉) 부총재는 “우리 정부가 너무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에 기지고 노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대북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근태(朴根泰) 부총재도 “인도주의에 대해서도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저 쪽은 우리를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대북 지원은 받아 안된다”고 말했다.

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의 도입인 ‘대연 통일과 본연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심명길 발표, “피맛기 지원을 위한 남북회담을 즉각 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식량 지원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홍기정기자 as1234@chosun.com

野 “對北 쌀지원 재검토”

李총재 “離散악용 분노”... 굴욕적 정책 再考 촉구

12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일 방 연기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북 쌀 지원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쌀 지원 문제는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진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까지 파탄으로 몰고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쌀 지원 문제 등 대북관계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진행되어 온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북한의 처사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의 이러한 무례한 태도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대북정책에서 초래된 것인 만큼, 이 시점에서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어 “이산가족의 뼈아픈 심정을 헤아려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총재단회의 등 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확정하게 된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이 지난달 20일 대북 쌀지원 방침을 정할 때도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었다”며 “이번 이산가족 상봉 연기는 인도주의를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쌀문제도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崔球植기자 qs1234@chosun.com

한겨레

“우향우, 따라갈 건가”

김원웅의원등 4명, 이총재 면담 ‘친북정권 발언’ 입장표명 요구

안택수·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의 ‘색깔론’ 제기로 여야가 사색쟁이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김영춘 김원웅 김홍신 서상섭 등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12일 이회창 총재를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이 총재와 의원들의 면담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 휴게실에서 30여분 동안 이뤄졌다.

의원들은 “김용갑 의원이 현 정권을 ‘친북정권’ 운운했는데, 이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당내에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은 “김 의원의 발언은 당내 일부 세력을 대변하는 목소리인데도 마치 한나라당 전체의 이미지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당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 총재를 압박했다.

김원웅 의원은 “김 의원의 대정부 질문 원고 내용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러기보다는 파괴주의적 극우냉전 논리로 가득차 있다”며 “한나라당이 극우편향의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 냉전인사들이 교묘하게 지역주의와 결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상섭 의원도 “‘보수의원 모임’의 회장과 총무를 맡고 있는 김용갑

안택수 두 의원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연대 등 보수세력들의 발호를 틈타 신매카시즘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느냐”며 “당 지도부는 이들을 엄중 경고하고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총재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이 따로 모임을 갖거나 성명서 형태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이 총재와의 면담을 추진한 이유는, 김용갑 의원 등의 ‘색깔론’이 김대중 정권을 공격하는 동시에 최근 온건노선을 취하고 있는 이 총재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면담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이 총재도 많이 공감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화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北 '멋대로'... 南 또 끌려가나

북한의 돌연한 이산가족 교환 방문 연기로 남북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은 연기 이유로 '남한 내의 정세'를 들었다지만 이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북대화는 계속된 전례가 있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일단 아니고 이산의 한(恨)을 풀어주기 위한 상봉 행사를 연기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더욱이 장관급회담이나 접합추진위 회의처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회담에는 여전히 관심을 보여 남북

대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다분히 이중적이 아니냐는 의심도 갖게 한다. 어쨌든 공은 다시 남측으로 넘어온 감이 있다. 북측의 이 같은 회담 태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벌써 "굴욕적인 대북 저 자세로 인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예기와 함께 "더 이상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남과 북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향후 남북대화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당국대화는 지속 '두 얼굴' 실리만 챙기겠다는 속셈

北 북한이 불과 다음 앞으로 다가온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돌연 연기하는 '멋대로 식'의 행태를 또 다시 드러냈다. 북측은 '남조선에 조성된 정세'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득려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북측의 일방적 행태는 남북관계에 대한 약외한관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북한은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상을 줄 것이 틀림없다. 북측이 이번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산상봉 등을 연기한 배경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부의 입장에 대한 배려 등 내부 이견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다. 금강산 관광대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전력 등 대북 지원에 대한 남측의 화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에 응하는 것은 '안보'라고 보는 북한 군부의 태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

또 북측이 미국 테러사건에 대해 유감 표시하는 등 나쁜 의의 불 보였음에도 북한에 대한 남한 및 미국의 시선이 '긴급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강경세력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연구소 이종필(李鍾弼) 연구위원은 "금강산대가 미납금 등으로 대남협상을 주도하던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 담당비서의 입지가 약해지고 군부의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군 부를 더욱 거리기 위한 북한 수뇌부의 결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전형적인 '실리 챙기기 진술'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전력 등 각종 지원용 언어년 수 있는 장관급회담 △식량 지원을 위한 2차 접합추진위원회 △금강산대가를 위한 금강산 당국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

중국대 고유환(高有煥·북한외과) 교수는 "당국간 대화는 지속해 실리를 챙기되 이산상봉 등 북한 체제에 위협을 미치는 행사는

보류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또 '인색한' 남측의 대북지원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며 경고로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산상봉 약속이 깨질 경우 접합추진위나 금강산 당국회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북측이 이런 '위험'을 무릅쓴 것은 현재의 남측 분위기를 볼 때 여차피 자신들의 기대치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남측의 미온적 태도에 강력한

전력지원 지연등에 불만 南北합의 이행 강력촉구

경고로 보내면서 남북관계 악화에 대비한 명분도 댔다는 속내라는 것이다.

고려대 유호일(柳浩烈·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5차 장관급회담과 금강산 당국회담에서 남한으로부터 기대한 것을 못 받아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남측의 반응을 따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식·부형권기자〉
spear@donga.com

"쌀지원 밝힌직후에..." 당혹 정부 여론 악화될까 우려

南 정부는 12일 북한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민간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나서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북측 정부는 북측의 돌발행동에 대해 또다시 "언제까지 끌려만 다니 것인가" "얼마나 더 괴주어야 할 것인가"라는 등으로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표정이었다.

"정면 돌파"로 입장정리 南北합의 이행 강력촉구

북측의 연기 발표가 5차 장관급회담 및 1차 금강산 당국회담에서 견의선 연결 및 금강산 육로 개설 등에 대한 북측의 극히 무상당한 태도를 확인한 반면 남측은 식량 40만t 지원 구상을 밝힌 직후에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가 나온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 오찬간담회 및 NSC 관련부처 실무자 간 전화회의 등을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일단 정부는 북측에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단호한 조치도 준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 자체를 단절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당국간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도 '남측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돼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여유를 남겼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이 이산상봉 행사 등을 연기한 것은 북측의 준비시간 부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북한이 각종 당국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는 요구한 데 대해서는 북측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고 남북간에 합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이 남측의 대북경제 태세 등을 계속 문제로 삼으면서 당국회담 장소도 금강산만을 고집할 경우 대북식량 지원 재감도 등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김창기(金昌基) 차관은 "대북 전화통지문에서 이산가족 교환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장관급회담 등이 개최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한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며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한나라

“對北쌀지원 재검토”

민주당

“약속위반 납득못해”

● 東亞日報

2001. 10. 13 (토)

12일 북한이 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의반적으로 연기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역상당한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민주당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계기로 대북 지원 문제를 인접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왔다.

한나라당 소속 박명현(朴明煥) 통일외교중앙위원장은 “우리의 우방국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북한이 행사를 연기한 것은 납득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더 이상 북과 대화해 봐야 소용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의 가족을 만나지 못해 자살까지 하는 이산가족들의 열악한 처지는 북한에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대북 쌀 지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박경동(朴景東) 의원은 “북한이 금강산 유적 관광과 김의선 참도 연결 등을 수

행할 자선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트집 잡기”라고 말했다.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인 집권이 급속적 대북협상으로 일관한 김과”라고 비난 상민을 냈다.

관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더 이상 급속적 대북협상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당내에 비등하고 있다”며 “대북 쌀 지원 및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등 대북지원 전반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근태(金根泰)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행사는 남북 당국간 약속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약속”이라며 “북한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훈석(宋勳錫) 수석부총무는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의 발언으로 비롯된 국회 개행시대를 거론하며 “인인 재공을 한 사람들에게 비난이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대인기자>

edols@donga.com

정부가 보는 北의 '남한정세' 주장

“체제결속 겨냥한 핑계”

북한은 12일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연기 이유로 “남측의 상연한 분위기”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산 국무회의를 통한 우리 군내의 동향에 대한 대책 논의” “대공포가 하늘을 겨누고 아까 하면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실정인 경제대세” 등을 들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다분히 핑계거리로 찾기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9월11일 미국 테러사건과 8일 미국의 보복공격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군 당국에선 위기조치반을 가동하고 전군에 대북 경제 감축조치를 내리는 등 긴박하게 움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와 군 당국의 위기조치는 하루이튿에 그쳤고, 이후 지휘관용 통신축선에 대기로록 하는 등 “중간중 상환군부” 제제만을 취해 왔다. 대공조치의 주안점은 주한 미대사관과 주한미군에 대한 경비 강화와 대테러부대 출동태세 등

에 있었고 ‘방어준비태세(대포관)’도 평소대로 유지해 왔다는 것.

군 당국은 이 같은 조치는 세계 정세에 민감한 한반도 안보환경을 감안하면 자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1999년 코소보 사태 말기에 연평해전이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반입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테러사태가 발생한 직후 정부가 다소 요란스러운 대응을 했다고 해서 북한이 기분 나쁘다고 느낄 수는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군이나 경찰의 경제대세 강화로 남한 방문에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미국 테러사건 등 외부 위기를 남북주민 집중 중단의 명분과 체제 결속의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철희기자>

klm1@donga.com

DJ 이래적 '입장 표명 지시' 의미

경고일까 달래기일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북측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일방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도록 하라”고 즉각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물론 청와대는 “지극히 당연한 지시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지만 김 대통령은 그동안 북측의 잦은 회담 연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김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금강산관광 등 남북간 현안에 대해 북측이 보여준 불성실과 변덕에 대한 불쾌감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자주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나오면 남측의 입장이 어려워진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북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입각여신 김 대통령에 김정일 국

방위원장의 답방 문제 등과 관련해 언제까지 북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가 아나하는 다소 성급한 관측도 나온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 대통령의 이번 언급을 ‘대북 힘의’라기 보다는 북측에 대해 상의 있는 대화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기도 한다.

청와대측은 삼김 대통령의 ‘6·25 통일’ 발언을 둘러싼 여야 논란 △진북(靑北) 정권론 파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국회 대의원실에서 제기된 이종산, 테러 및 대한항공납치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선(先) 사과 요구 등이 북한의 신경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김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최근 남측 내부 시정이 복잡해 보일지 끌리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북측에 확실히 해주려는 뜻이라는 것이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남북관계 다시 냉각되나

■ 북 특연 이산상봉 연기 파장

'금강산' 실타래에 군부 임김 작용한듯 정부, 장관급 합의 위반 강경대응비처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은 12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4차 이산가족 방문단과 대변도 시범단 교환 사업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며 남북이 위한 진군-검찰 비상경계대세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정부는 북쪽의 연기 조치를 '장관급회담 합의 사항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로서는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5차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북진 기미를 보이던 남북관계가 다시 한계 속으로 빨라드는 형국이다.

◇ 북쪽 강화 배경-북한은 남북의 진군-검찰 비상경계대세 때문에 '대결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유의 진부한 것 같지 않다. 남북의 비상경계는 9·11 테러 뒤 바로 취해진 조치다. 북한은 그 뒤에도 5차 장관급

회담(9·15~18)과 금강산관광 협상 회담 위한 당국회담(10·3~5)에 응했다.

한편에선 북쪽의 이번 담화가 8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이후 외부 심 대변인의 비관적 논평과 맥을 같이 하는 감성기류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분석을 내었다.

그러나 김형기 통일부 차관은 "남북 협력은 11일에도 이산가족 교환 방문 사업을 위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며 "북쪽의 긴박스런 태도변화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전례없거나 금강산 관광 대가 문제 등이 원인으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군부 등 강경세력이 남북의 비상경계대세를 발리로 폭소리를 높인 것 같다"고 분석한다. 12

일은 남북이 경의선 비무장지대 안 공사 군사보장합의를 교환하기 위한 군사실무접촉을 하려고 제안한 날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북쪽이 6차 장관급회담 다른 회담을 '제 날짜에 열자'며 회담 장소로 금강산 지역을 못박은 것은, 금강산관광 대가지급 문제를 남북관계 해법의 선결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 정부 대응-정부의 대응 기조는 지난해 6월 '정상회담 이후 가장 강경대' 보인다. 남북의 비상경계조치는 북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만큼, 합의사항 불이행의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인식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쪽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속으론 북쪽의 대화의지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이산가족 교환 방문 연기로 남북에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쪽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한 당국자는 "장관급회담의 가장 구체적 합의내용이 이산가족 교환 방문인데 그것도 없었다면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강경기류는 6차 장관급회담 등의 연기 시시와 함께 대북 식량지원도 재검토할 수 있음을 비친 데서도 잘 나타난다.

◇ 남북관계 전망-북쪽은 이산가족 방문을 위해 남북의 비상경계가 해제되는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 조치가 북쪽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남북관계가 적잖은 시달 동안 냉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6개월의 대화 공백과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불이행이라는 '부담'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북쪽의 내부 강경기류 조율 여부의, 남북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처리 등이 앞으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훈 기자 nomad@hwi.co.kr

중앙일보 2001. 10. 13 (토)

이산상봉 연기엔 여야 함께 北성토

12일 북한의 긴박스런 이산가족 방문단교환 연기장보에 대해 민주당에선 "가족이나 대안관계도 거둬들이고 있는데 남북관계까지 꼬이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평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우리 군의 미국 테러사태 대응조치를 발리로 보류되거나 늦춰져선 안될 것"이라며 "이는 6·15 공동선언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용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은 당사자들의 연명과 집박한 심정을 고려할 때 어떤 이유로도 유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당국간 약속인데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나라당은 "남북간 신뢰를 훼손시키는 흉상식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북한의 이러한 무리한 태도는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대북정책에서 초래된 것인 만큼 이 시점에서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철현 대변인이 전했다. 조평통(趙平通)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진척지연 등 반대급부물 기대했으나 기대에 못이치자 이런 행

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보수파 의원 모임인 바른 통일과 흔들린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용갑)에선 "경협회담·금강산 당국회담 등 퍼주기식 지원을 위한 회담부터 당장 취소하고 대북 식량지원도 중단하라"고 호를 높였다.

자민련 장일 부대변인도 "업로당로 많은 이유를 대며 이산가족 상봉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햇볕정책을 비롯하여 남한에 긴장을 조성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가세했다.

김정희 기자 <wormhole@joongang.co.kr>

東亞日報 2001. 10. 13 (토)

색깔 공방 가열... 국회 또 공전

與 "사과 재발방지" 촉구 野 "失政 비뚤은 책무"

한나라당 안태수(安澤秀) 의원의 '대통령 사과 촉구' 발언에 따른 한나라당의 사과 내용에 대해 여야 총무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린 데다 여야간 색깔 공방이 가열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사흘째 공전했다.

(AS면애 관련기사)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총무 집회에서 한나라당 이재오(李宰

오) 총무에게 "아당 총무가 원내 대표로서 단순한 국회 파행이 아니라 안 의원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사과와 속기록 삭제,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단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철현(權哲顯)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신성

불가침 존재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이재오 총무도 "아당 총무가 유감 을 표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하겠다고 했는데도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대신부집분을 통한 현 정권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문철·송인수기자> fullmoon@donga.com

■ 北 이산방문 일방연기

북한이 12일 4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을 불과 다음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향후 당국간회담 등 남북관계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측은 특히 연기 이유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따른 남북 당국의 경계조치를 지적하며, 이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인적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전망

이번 사태는 북측이 남측의 정치적 문제집 이유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이산가족에 관한 합의집 위반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는 남한 내에 대북 불신 여론을 증폭시켜 그렇지 않아도 '퍼주기 논란'에 휩싸인 정부의 햇볕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태의 추이에 따라 여야가 묘치엄 공간대립형성한 대북 쌀 지원 문제도 전면 재검토될 수 있다.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각종 당국간회담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북측은 '당국간회담 민첩은 재남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산가족 문제집 관련 것처럼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북측이 남측의 참만한 정세집 이유로 2차 금강산 육로회담(19-21일), 2차 경협추진위(23-26일), 6차 장관급회담(28-31일) 등을 '인정성이 담보돼 있는' 금강산에서 일차로 제외한 정도 남북회담의 관례집 깨뜨린 것이다. 당초 약속대로라면 경협추진위는 서울, 장관급 회담은 평양에서 열리고, 금강산 회담은

못믿을 北...

화해 '찬물'

"또 北에 끌려가나" 여론 악화 정부도 강경... 당국회담 불투명

추후에 논의할 사안이다.

정부 대응

정부는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는 전통문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히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연기된다면, 장관급회담과 경협추진위 등이 개최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 당국간회담의 재고 의사까지 피력했다.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식량지원 문제도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히, 각종 경협사안을 이번 사태와 연계 시킬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또 북측이 금강산에서 각종 당국간 회담을 열 것을 재의한데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은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함께 이번 사태로 악화된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남측의 항의에 대해 '경계대 세부터 풀어야'고 맞서고 있는데다, 당국간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긴장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준기자 dje@hk.co.kr

북한은 '남조선에 조성된 불법한 정세'를 이유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이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러한 이유만으로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유보 입장을 밝힌 속사정은 준비부족일 것"이라며 "이번의 경우 이산가족 교환 일정이 빠듯했고, 태극기 교류는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이 남북교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시간 부족은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北 왜 돌변했나

"남조선 정세때문" 발표 불구 준비부족·기선잡기등 추측

않다. 때문에 북측이 향후 예정된 각종 당국간회담에서 이산가족 교환을 위한 속셈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북측은 이산가족 방문 등 민간행사는 연기하면서도 당국간 회담 등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는 자세를 보였다. 정세현(丁世鉉) 국정원장 특보(전 통일부 차관)는 "북측이 이산가족 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은 남북 당국을 압박, 향후 회담에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원 차관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경협추진위 등에서 기선잡기 미지급 금강산 관광대금, 전력지원 등의 문제에서 남북 당국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내 강경세력의 반발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신지호(申志鎭)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의 조치는 미국의 공습을 목격하고 생긴 불안감에서 비롯된 일종의 피해의식"이라며 "북한내 강경파가 협상파의 입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北 찬물에 ‘싸늘한 햇볕’

• 정부 강경대응 안팎

“끌러 다닐수만은 없다” 합의 조속한 이행 촉구

“놔두면 여론악화”강수 경색국면 가능성 우려

북한이 12일 일방적으로 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한 데 대한 정부의 반응이 진에 없이 강력하다. 정부는 이날 남북 장관급회담의 남북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 명의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의 조치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경우에 따라 장관급 회담과 김형주권위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북측이 이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향후 회담과 행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예기다.

북한에 보내는 진통문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쌀 등 식량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공개됐다. “대북 식량지원은 국민 의사를 존중해 조치를 취해나갈 생각”이라는 고위당국자의 자간담화 발언이 그것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이날 통일외교안보장관 긴급회의에서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한 당국자는 “지난달에 열린 5차 장관급회담의 가장 가치적인 성과가 4차 이산가족 상봉인데 그걸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이 이산 상봉 연기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대북 진통문도 “(태러사태와 관련한) 우리측의 경제조치들은 태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제반상황에 천저히 대비하기 위한 응징한 조치이며, 북측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문제가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대북 퍼주기정책’이나 ‘북한에 끌려만 다니는 정부’ 등 갈수록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국내 상황과 맥이 닿아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여론을 악화시키는 북측의 처사를 더 이

상 목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남측에서 상봉단에 포함되지 못한 이산가족이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 상봉 연기 통보를 수용할 경우 비난 여론이 더욱翻 끓어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을 것임 예방하지는 계산도 깔려 있다.

북한이 남측의 강경대응에 어떤 반응을 보인지는 미지수다. 지난 1월 마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오랫동안의 대남 및 대미정책 검토 끝에 대화에 나선 북측이 이런 정도로 대화 중단은 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일단은 우세하다.

그러나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남북이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쌓았으므로 쉽게 관계 중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한동안 잘 나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이 금강산 관광대가와 관련해 이산 상봉을 연기한 것이라면, 이 문제를 당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검색국면이 또다시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호연기자 chy@kyunghyang.com

각종회담 ‘협상카드’ 속셈

• 北 이산상봉 연기배경

북측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 표면상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 태러사건 이후 남측이 전 군과 경찰에 비상검찰 태세를 내리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해 자유로운 민간교류가 이뤄질 수 없으므로 “부득이 담분간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북측 조평통 대변인이 “대공포가 하늘을 거누고 아차하면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지역에 몇명도 아닌 술한 민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드나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한 데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북측의 진의는 다른 데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북측은 남측이 중시하는 이

‘금강산 대가’ 미해결 불만 ‘북한 군부서 제동’ 관측도

산 상봉을 일단 늦춤으로써 향후 있을 각종 회담에서 이를 협상카드로 쓰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산 육로 개선, 경의선 비무장지대 내 공사를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 등 군사분야와 관련된 민감한 시간을 제외하곤 앞으로 내용을 개별로 없는 북측이 이산 방문단 교환을 다시 합용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북측은 지난 3월 열기로 했던 5차 장관급회담을 6개월간 미룸으로써 회담 개최 자체를 협상용으로 사용했 바 있다.

북측의 돌연한 상봉 연기의 바탕에는 부진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달려’ 뜬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 3~5일 금강산 관광 협상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처음으로 가진 바 있다. 북측은 이때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산사업 주체인 현대 아산이 내지 못한 윤 2~5월 관광객이 2천4백만달리쯤 포함해 2005년까지 지불하기로 한 5억6천여 만달러를 정부가 ‘보장’하라는 예기였다. 그러나 당시 남측은 이를 거부하고 육로관광을 통한 금강산 관광 협상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북측은 10월에 각종 회담과 행사 등이 몰린데다 미국의 아프간 공격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 이어나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11일 구체적인 상봉 일정까지 합의해놓고 별과 하루만에 뒤집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연는 것도 없으면서 내주기만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군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최재영기자 cyyoung@kyunghyang.com

말은 '남한탓' 실은 '북한탓'

■ 北 이산상봉 보류 배경

상봉일정 촉박 시간별기용

북한이 갑작스레 이산가족 상봉을 보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12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회에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따른 남측의 경비대세 강화를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남측의 경비대세는 지난달 11일 미국의 테러 참사가 발생하면서 강화된 것으로 세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북측도 "미국의 참사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안된다"며 9월15일 5차 장관급회담에 응하는 등 남북 대화에 적극 임해왔다. 때문에 북측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는 다른 이유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아프간 공습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의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 당국자도 "미국의 테러전쟁은 러시아와 일본 등 동북아의 역학관계에 변화할 가져올 수도 있다"며 "당분간 국제정세를 관망하면서 대외전략을 새로 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강성희(姜成熙) 고려대 교수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잘 지켜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반면 북측이 조평통 담회에서 밝힌 대로 자신들을 의식한 남측의 안보태세 강화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오찬간담회에서 회의 주제에 앞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건 국가정보원장, 김 대통령, 이상주 대통령 비서실장, 임동원 통일부차관. ● 청와대 사진기자단

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2차 김연추진이나 금강산 당국간 회담 등에 대해 장소만 바뀌 예정대로 갔겠다고 한 점이 이렇듯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촉박한 상봉 준비일정에 따른 시간별기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방북단을 밋을 제북 이산가족을 교육시킬 시간이 부족해 갑작스레 보류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시각들을 종합할 때 북측의 갑작스러운 이산가족 상봉 보류조치는 ▲국제정세의 변화 가능성 ▲촉박한 상봉일정에 대한 부담 ▲대남관계 주도권 확보 등을 감안한 다목적용 호흡 조절로 풀이된다.

● 진경호기자 jade@kdaily.com

남북관계 당분간 먹구름

12월 북한의 제4차 이산가족 상봉 연기선언으로 순항하던 남북관계에 안운이 드리워졌다. 정부는 대북 쌀지원 방침의 전면 재검토까지 시사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북한의 의도 파악을 계신하느라 분주했다. 아울러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 이듬으로 대북 전화통지문을 보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합의 사항의 순조로운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전화통지문에서 "중요한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된다면 남북장관급회담과 경협추진위 등이 개최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이 향후 회담 등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쌀지원

문제도 포함돼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식량지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된 식량지원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는 최악의 경우 지난 3월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반년간 지속됐던 검색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의 고리톱 풀지 않는 한 우리 정부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북측이 남북 당국간 회담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점을 감안, 이날 보낸 대북 통지문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살피며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분간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싼 남북 당국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 진경호기자

"돌출자제" 對北 경고

■ 김대통령 '감경'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2월 북한측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태권도 시범단 방문 연기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북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북측에 일방적인 돌출행동을 자제하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이날 청와대에서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가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의 중대한 위반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신중하게 '일방적'을 지시한 것은 일단 대북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 즉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남북대화가 6개월여 동안 중단됐던 것과 같은 '쓰러린 경험'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용연기자

poonyrn@kdaily.com

느닷없는 상봉유보... 軍입김 들어간듯

韓-美결속 견제 주도권 잡기도 작용
北 대화 창구는 유지...향후 대응 주목

北 이산가족 방문 재동 속사정은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2박3일간 서울과 평양에서 갖기로 했던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20일 진주로 계획됐던 태권도 시범단 서울 파견을 갑자기 유보함에 따라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번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유보와 관련, '남조선에 조성된 정세'를 이유로 들었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에서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턱을 대고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져 예측할 수 없는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살벌한 경계태세 하에 있는 분위기에서는 대화와 래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도 없다"고 밝혔다. 즉 북한은 미국 테러참사와 보복공격으로 인한 국내의 긴장된 분위기에서는 민간교류를 못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비상경계태세란 미국의 아프간 공격이 있는 지난 8일 오전 2시 30분 합동참모본부 가 위기조치반을 소집함으로써 시작된 비상조치태세를 가리킨다. 군의 비상조치는 겉거나 상항군무를 강화해야 할 경우 초

기 대응반 소집, 위기조치반 소집 등의 순으로 발령되나 이날은 초기대응반 소집 없이 바로 위기조치반이 구성됐으며, 전군은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방문단과 태권도 시범단 교환이라는 민간 행사는 연기하면서도 장관급회담, 남북경제추진위원회,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당국간 회담 등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유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남북은 1992년 5월에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해 놓고 ▲핵문제 협회 ▲리인모씨 송환 ▲올지포커스렌즈 훈련 중지 등을 요구하며 방문단 교환을 무산시킨 바 있다.

지난해 제2차 방문단 교환도 북한이 생사확인용 위한 명단교환을 아무런 설명 없이 미뤄 일정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로 한달 가까이 연기된 일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번 조치를 각종 당국간 회담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북측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측이 담화에서 당국간 회담은 물론 차기 장관급회담 장소 역시 '교환 개최'라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금강산을 제외한 집으로 미뤄 볼 때 이런 분석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나아가 '민족 자주성'을 통일과 외교의 우선적 원칙으로 삼는 북한으로서 미국의 테러사건과 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으로 한반도에 각종 비상조치가 취해지고 파병을 결정하는 등 한미간 협조관계가 공고화되는 것에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아랍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으로서 한국의 친미적 성향에 만족을 걸음으로써 아랍권과의 유대를 과시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를 견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와 함께 북한 권력구조의 핵을 쥐고 있는 군부가 대화론자들의 기세를 꺾으려는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태도는 대화 자체를 중단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당국의 항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조정진기자 jjj@sgt.co.kr

매일경제

2001. 10. 13 (토)

이득 더 챙기기 전략?

니영필 기자

북한이 12일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해 오고 우리측이 강한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남북관계 견색이 불거져왔다.

갑작스러운 북측의 이산가족 방문 연기 통보는 현정부의 햇볕 정책을 또다시 시험대에 올려 김대중 대통령의 입지를 그만큼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40만 명의 식량을 지원키로 했던 대북 식량지원 방침도 북의 '내짜라'식 태도에 대한 우려를 여론의 악화로 지원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연기배경 - 온 때문?

북한은 이남 조평통 담화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연기 사유로 '미국 태러사태 이후' 남조선에 조성된 '질서'를 들었다.

조평통 내빈인 "미시일이 밤시될 수 있는 비상경계대세가 취해지고 있는 (남측)지역에 술한 민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드나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북측의 설명을 역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남한에 조성된 질서가 문제라던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 행사보다는 정부 당국간 회담이 영향을 받는 것이 그동안 남북관계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측이 또다시 돌연 이산가족 방문을 연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일단 건론가능한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려는 북한 특유의 협상 전략일 것이라는 점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

북측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한 대륙이 지급하지 못한 금강산 관광객이 미시급금 2400만달러를 요청했고 남측 당국의 보장을 요구해 왔다.

국정원 관계자는 "그 동안 북한과의 대남 협상전략을 살펴보면 무의미가를 요구할 때 오히려 막가파 식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금 북한에 가장 필요한

시간대별 상황진행

10:00	북한, 평양방송으로 연기 통보
10:30	통일부 긴급 간부회의
12:00	국가안전보장회의 오후 긴급회의
14:00	통일부 대변인 유감 논평
14:50	대북 전행행자문 발송

시간 빠듯 준비부족 가능성도 당국간 회담은 일단 "예정대로"

것은 '날라'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 사회의 경제적, 시간적 능력을 꼽을 수 있다.

수백만 명의 기아가 발생하기도 했던 북측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이산가족 행사의 태권도 시범단 서울방문을 준비하면서 '입히고 이동시키고' 하는 경제적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5차 장관급회담 당시 합의사항을 발표할 때 우리측에서도 제기했던 것처럼 물리적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는 점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남측의 정세불안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사정은 아마도 준비부족일 것"이라며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일정이 빠듯했고 태권도 교류는 합의

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측이 방남 행사를 치를 때 오랜 기간 준비과정을 밟는 것이 상례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문제는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진행 - 당국간 회담도 불투명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 연기와 함께 당국간 회담 개최장소를 금강산으로 못박고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측이 남북관계를 끌어버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측에서도 그 동안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없었던 장관급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금강산으로 변경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북측은 담화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 등 남북 당국간 회담만큼은 예정대로 "제 날짜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북측이 남북 당국 회담도 연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관급회담과 경협추진위는 그 동안 남북한간 회담원칙과 관련해 볼 때 개관장소를 금강산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전화 통지문으로 우리 입장을 밝힌 만큼 북측의 회신과 태도를 보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측의 태도변화로 남북한간 합의사항 이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남북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상황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상봉 없으면 식량없다"

북한이 12일 갑작스레 이산가족 방문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사실상 확정된 대북 식량 지원 방침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명시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북 식량 지원은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남 북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민약 중요한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연기된다면 (앞으로)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 등이 개최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측에 강력히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대북 식량 지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번 북한의 조치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측이 보낸 전화통지문 내용을 눈여겨봐 달라"면서 "현재 대북 식량지원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는 과정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식량 지원은 없다'는 통보인 셈이다.

■ 김형기 통일부차관 간담회

“식량지원 국민공감대에 악영향”

김형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북쪽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연기 통보는) 식량지원을 검토해 나가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쪽이 테러사태 이후의 비상경계 태세로 방문단 교환 보류의 이유로 내세웠는데.

=비상경계태세는 북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며,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아무런 연계 이유가 되지 않는다. 북쪽은 합의 사항을 무조건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북쪽의 보류 조치가 이달 말로 예정된 6차 장관급회담 등의 개최에 어떤 영향을 주니?

=남북간 합의는 지켜져야 하며, 예정된 회담은 일정대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쪽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연기된다면 남북 장관급회담과 남북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등이 개최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대쪽을 눈여겨봐 달라.

-북쪽이 앞으로 일일 6차 장관급회담과 2차 경제협력추진위, 2차 금강산 관광 단국간 회담의 개최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했는데.

=남북간의 오랜 원칙과 판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식량 40만톤의 대북 지원 방식은 변화가 없나?

=북쪽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식량지원은 국민적 공감대라는 바탕이 없으면 어렵다. 북쪽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정재진 기자 jjk@hani.co.kr

이산상봉 일정 연기 관련 국방부, 북측에 유감표명

국방부는 12일 북한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일정 연기 발표와 관련, "경제감화는 세계적인 테러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군 본연의 임무'라고 밝히고 북측이 다시 단국자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황진영기자 buddy@sgt.co.kr

국방부 "이산상봉 연기 유감"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대변인 성명을 내어 "북한 당국이 우리 군의 대테러 경제대세 강화할 이유로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등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밝혔다. 황 대변인은 "우리 군의 조치는 만약에 발생했지도 모르는 외부의 테러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내에 상주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실 기자 nura@hani.co.kr

與 "6·15선언 정신에 위배" 野 "굴욕적 對北협상 때문"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12일 북측이 이산가족 교환 방문 연기 통보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런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우리 군이 미국 테러사태 발발 이후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빌미로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북측이 남북장관급 회담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12일 이산가족 상봉 연기에 대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북한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며 유감을 표한다"며 "이산가족의 뼈아픈 심정을 헤아리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북한의 이 같은 굴욕적인 태도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대북정책에서 초래된 것으로 이 시점에서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대인기자>

codls@donga.com

한국일보

野 "굴욕적 대북정책 재고법"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12일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북한의 처사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무례한 태도는 정부의 굴욕적인 대북정책에서 초래된 것으로 이 시점에서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태희기자 taehcelee@hk.co.kr

이산상봉 유보
조평통 담화문

지난 9월 북남 상급(김관급) 회담이 재개된 이후 북남 사이에는 10월에만도 제6차 상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제4차 들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 서울방문 날짜도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턱을 대고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져 예측할 수 없는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나 비상국무회의나 하는 것들 중 중하여 질풍 같은 안보태세를 역설하고 있는가 하면 군부 세력들은 우리 군대의 동향을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군의 대비태세 출동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대공포가 하늘을 거두고 아차 하면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비상경계태세가 취해지고 있는 지역에 맞먹도 아닌 숲한 민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드나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이런 속에서 자유로운 가족-친척 상봉이나 태권도 시범단의 출현이 잘 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진다.

우리는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를 고려하여 제4차 들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과 우리측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파견을 부득이 당분간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남 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키 나가기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며 일관하다.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우리는 10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 제6차 북남 상급회담과 북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북남 당국회담은 제 날짜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 회담들의 개최장소는 우리가 이미 제안한 바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금강산 지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다.

아울러 우리는 남조선에서 비상경계조치가 시급히 해제되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들어진 가족-친척 방문단과 태권도 시범단 교환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남측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라고 확신한다.

2001년 10월 12일 평양

한국경제

2001. 10. 13 (토)

이달 당국자 회담 불투명

北, 이산상봉 연기 파문

북한이 12일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일방적으로 연기함에 따라 이달중 예정된 육도관공회담, 경제추진위 등 각 분야의 남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장관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측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후 열릴 장관급회담 등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거절되며, 삽지인도 국민여론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북측의 '쇼고르기' 전략이란 시각도 있다. 이산상봉에 대한 북측의 준비가 미비하거나, 대북 식량지원 규모(40만 t)에 대한 북측의 잠만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당국회담 전망=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산방문이 연기되면 다른 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국자 회담의 개최장소를 모두 금강산으로 하지는 북측의 요구를 일단 거부기로 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김대통령 "우리입장 분명히 전달"
정부, 합의 불이행때 쏘지원 재고
'모든 회담 금강산 개최' 수용못해

◇북의 연기 배경=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남에서는 천룡같은 안보태세를 역설하고 있는가하면 군부세력들은 우리(북) 군대의 동향을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 반테러전쟁과 관련, 남한내 안보태세 강화를 이산상봉 연기의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비상태세가 내려진 이후에도 남북은 이산가족 방문단 명단을 교환하는 등 양측간 현안을 계속 협의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남한내 안보태세 강화에 대한 북한 군부의 반향이 작용한 결과라는게 북한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관측이다. 북측 담화도 "비상경계조치가 시급히 해제돼 이산가족 방문단과 태권도 시범단 교환사업이 조속히 이뤄지게

정부는 나이가 때 북식량 지원과 당국자회담을 연계하며 북측을 압박한다는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김철기 통일부 차관은 "대북식량

지원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뒤 "(북측의 연기포기) 식량지원을 검토해 나가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회담과 대북식량지원을 연계하는데 반발하고 개최장소를 금강산을 고집할 경우 향후 모든 남북 일정은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점치권 반응=여야 3당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민주당) '엄중한 표집집기' (한나라당) '측심을 드러낸 것' (자유민주연합)이라며 일제히 비난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대북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redael@hankyung.com

“남북관계 인내심 가져야”

김대통령 밝혀... 北 '육로' 회담은 예정대로 개최 통보

이산상봉연기엔 강경대응

북한이 12일 돌연 이산가족 교환방문(16-18일 예정)의 연기할 요청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전북 진주시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2001 전주 세계 소리축제' 개막식에 참

석.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에는 자주 진중과 애로가 있지만 햇법정책 이외의 대안은 없다”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대통령은 또 “독일도 통일과정에 서 수많은 진통을 겪었으나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마침내 평화적 통일을 이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측은 13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19일로 예정된 제2차 금강산 육로개설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고 통보했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기로 했다.

그러나 북측이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통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당초 각각 평양과 서울에서 열기로 한 제2차 김집추진위(23-26일)와 제6차 장관급 회담(28-31일)을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측이 장소를 평양과 서울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측에 차관으로 제공키로 한 쌀 30만과 무상지원하는 옥수수 10만t 등 40만t의 식량지원도 다시 원집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태희·이현종기자
lh@munhwa.co.kr

國民日報

THE KUMIN DAILY & NEWS
2001. 10. 13 (토)

대북 쌀·전력지원 재고

정부 이산상봉 무산 강경대응... 금강산 미지급금 지불 연기

장관급회담 금강산 고집때 취소도 고려

정부는 13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일방 연기와 관련, 이산가족 상봉이 조기에 성사되지 않을 경우 식량 40만t 지원 유보 등 대북 지원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북한 지역 실태조사 후 지원 여부도 결정한다는 대북 전력지원 방침도 전면 재검토하고, 현대 차원의 금강산 관광대가 미지급금 지불도 일단 연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관련기사 3면>

또 북측이 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한 경우 모든 회담을 먼저 전면 취소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단분간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데 이어 김대중 대통령 주재 통일·외교·안보분야 오찬 간담회와 관련 부처 실무자 집회를 통해 강경책 위주의 이 같은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에는 군부의 압력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군부가 계속 남북 접촉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상당한 수준의 강경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강경 기조에

는 더이상 끌려다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어서 안 된다는 집과 야당의 반발도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김청기 통일부 차관은 “(북측이 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관례를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대북 식량지원도) 국민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해 식량지원 및 각종 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에 찬성했지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정상직인 남북 관계를 차단한다면 어떻게 식량 등을 지원하겠느냐”고 밝혔고, 권철현 대변인은도 성명을 통해 “우리 당은 쌀지원 등 모든 대북지원을 원집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이산상봉 연기-정부의 대응

배경과 전망

‘햇볕’ 엄두 ‘강경’ 교육책

국민·여론 분노 의식 “더는 안풀려 간다” 강경 北군부에 경고 경색 장기화 가능성



신군 국정위원장(왼쪽)과 임동원 총외대 외교안보팀장(오른쪽)이 12일 대통령 주재의 통일외교안보분야장관 오찬간담회에 앞서 북한의 이산가족방문 연기발표에 대해 심각한 표정으론 여기하고 있다. 김대철기자

북한이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대한 정부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여간(9월 장관급 회담때까지) 북측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했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햇볕정책을 최우선시해 온 김대중 대통령이 극히 이례적으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데서 정부의 강경의지를 읽을 수 있다. 홍순영 통일부장관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전평문을 북측에 보냈고 국방부도 현장부 들어 세번째로 군사단국자 회담 조속 개최를 촉구하는 대북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부처가 한 목소리로 강경 방침을 외치고 있다.

정부는 식량을 포함한 대북지원 전면 재검토와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 중단을 통해 북측의 이질대권인 경제적 측면을 압박해 달아간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여론 때문이다. 다이상 끌려간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줌 경우 햇볕정책의 기초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물론 강경조로 돌아선 아당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수십년을 기다려온 실랑민들의 분노도 고려됐다. 김항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대북지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어렵다”면서 “북측태도는 국민적 공감대 구축에 절대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해 여론의 항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서 북한 군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도 있다. 지난 3월 장관급회담에 이어 또다시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된다는 북한 군부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북한 군부의 강경태도가

북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산가족 상봉협의의 행을 둘러싼 남북한의 치열한 신경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연기 이유에는 준비 부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상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군부의 입김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남북경색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결국 북측이 남한내 군사력 증강을 문제삼은 만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일정부분 정리되면 남북대화 및 각종 교류행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김명석기자

北, 경제실익 챙기며 軍部불만 달래기

이산상봉 연기 속셈은?

북한이 협과 나눔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일방 연기함으로써 지난 3월 장관급회담 연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 통행식 구태를 재현했다.

북측은 연기 사유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따른 남측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내세웠다. 북한 조국통일위원회와 대외인 단회에서 “남조선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진군과 경찰에 비상 경계태세가 내려져 상안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남한 및 국제적 비난 여론과 경제의 이득을 내면개치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북측이 이산가족과 대군도

금강산 관광 회담 등 당국간 대화엔 애착 준비부족 등도 원인

시범단 교환이라는 민간 행사는 연기하면서도 장관급회담,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등 당국간 회담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 연기에는 우선 군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후 한반도에 공군력을 강화한 것에 대해 군부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하다고

느끼고 있는 북한 군부로서는 남측 군사력의 조그만 변화에도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준비부족도 한몫 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측 시장상 여러가지 회담을 동시에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대군도 교류 입장이 너무 빠듯했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장관급 회담 등 일련의 당국간 회담에서 아니 서티브를 쥐겠다는 북측의 의지도 드러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오는 10월로 예정된 2차 금강산 관광합의 회담에서 미지급금 확보 등 실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로관광회단은 물론 장관급 회담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북측이 금강산 관광대화에 대한 애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명석기자

北 민간교류 '한계상황' 이른다

이산상봉 연기 배경

南충격과 확산으로 "체제위협" 판단

내부사정 복잡... 김정일답방 어려울듯

또 북측은 그동안 3차례 실시된 이산가족 교환방문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서 이산가족은 성분불량자에 해당되는 그룹이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에 나왔던 북측 가족들은 그나마 답성이 강하고 성공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 이산가족들이 서울에서 직접 눈으로 본 것이나 남측 가족들이 살고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라며 "이들을 사 전사후에 철저히 사상교육을 하고 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남측 생활상을 전파하는 것은 북한 당국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측은 직선지회단에서 남측 가족들이 북측가족들에게 준 달리와 선물을 강력히 문제삼기도 했다.

/이현종기자 lochun@munhwa.co.kr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내놓았다고 12일 남측 정세평 문제삼아 동인 교환방문을 연기한 것은 우선 북한내 군부와 대남부서간의 갈등 등 복잡한 내부사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 내부 상황이 남북 교류를 더이상 확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했으며, 따라서 이산가족의 집단 상봉은 물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단기 간내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제5차 장관급회담을 연기할 때 당시 북·미관계 검색이 주요원인이었음에도 내부 문제'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밝힌 '외부(남측) 문제'보다는 북한 내부 문제가 크게 작용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부 교외직 출신의 한 인사는 "북한 당국자들의 비공개 발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 체제가 더이상 개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면서 "대규모 민간교류는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과장을 감수하면서 이산가족교환방문 연기를 주도한 집단은 군부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북한 군부는 그동안 노동당비서인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장이 주도하는 대남관계에 비판적이었다. 송초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도 지난 9월 김용규

한대이산사장과의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의 대가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데 대한 내부반발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 군부는 전력과 금강산의 대가가 들어오지 않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었고 테러시대 이후 남한 군과 경찰의 경계강화 움직임이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김용순 비서에게 남북대화 재개를 지시하기는 했지만 군부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산연기 단호대처

'햇볕' 기조는 유지

DJ 고심끝 對北 분리대응으로 가닥

김대중(열골) 대통령이 북측의 일방적인 이산가족상봉 연기조치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북측의 12일 이산가족상봉연기조치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다. 이어 13일 독일 통일과정의 여를 들면서 인내심을 가져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산가족상봉을 연기한데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햇볕정책의 흐름은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 오찬 간담회에서 홍순영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측의 이산가족상봉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북측이 우리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북한의 잠수정 침입, 서해교전 등 갖은 남북관계 악재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시안은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로 남북관계가 검색으로 치닫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대통령

은 13일 전북 전주시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2001 전주 세계 소리축제' 개막식에 참석, "남북관계에는 자주 진통과 애로가 있지만 햇볕정책 이외의 대안은 없다"면서 대북관계에 있어 인내심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북측의 이번 연기조치로 인해 ▲북·미관계 개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남북간 실질적 교류 및 경제증대라는 집권 후반기의 남북관계 구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으로 인한 우리측의 안보대세 강화될 가장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연기의 명분으로 삼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극보수편만 아니라 일반 여론도 등을 끌려 오리라 햇볕정책의 지지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이산가족상봉 후 남북경협추진위 2차회의에서 경협합성회와 함께 짜지 않은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북한이 '합상'을 걸어 찬 것"이면서 "남한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변하기 전에 짜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희기자 ih@munhwa.co.kr

문화일보

2001. 10. 13 (토)

“北 당초 식량 70만 t 요청 기대못미치자 이산상봉 연기”

외교소식통 밝혀

북한이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간 접촉 과정에서 남측에 식량 70만t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측은 지난달 중순 5차 장관급회담 때 남측이 쌀 30만t 이상을 북한에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이미 알고 이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40만t(쌀 30만t 포함)만을 지원할 것처럼 보였고 이것이 북측으로 하여금 이산가족 교환 방문을 연기하게 만든 한 이유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측은 특히 남측이 정부 보유미를 보낼 것으로 알려지자 오래 된 ‘재고미’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졌고 이를 남측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14일 북측의 구체적인 식량 요구량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黨政 오늘 對北지원 협의

한편 정부는 15일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북측의 이산가족 방문 연기에 따른 대북 쌀 지원 문제 등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이르면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10월에 열릴 각종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23일로 예정된 2차 경협추진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이 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차례인 만큼 북측이 끝까지 금강산 개최를 고집할 경우 쌀 지원과 회의 개최 여부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oear@donga.com

東亞日報

2001. 10. 15 (월)

중앙일보

2001. 10. 15 (월)

2차 남북 당국회담 개최지 갈등

정부, 北 금강산 제안 거부

정부가 14일 북측이 주장해온 금강산에서의 남북 당국간 접촉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남북 관계가 회담장소를 둘러싸고 중대한 교비를 맞고 있다.

북측은 지난 13일 판문점을 통한 대남 전화통지문에서 오는 19일로 잡힌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우리측이 제안해온 ‘삼익산 회담’을 거부하면, 그 이유로 ‘금강산이 안전성이 담보됐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4차 이산가족 상봉을 불투명하게 만든 머당에 그들이 주장하는 장소에서 금강산 관광회담과 경협추진위(23일), 6차 장관급 회담(28일) 등 당국대 회담 의미라 언다는 것은 정부에 적지않은 여론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 보유쌀 30만t을 포함한 대북 식량차관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된 만큼 이를 회담 개최 여부와 연계시키지는 않되, 국민여론을 감안해 시기문제를 조절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쌀30만t 北지원

野 반대로 차질

국회동의 어려울듯

한나라당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계기로 대북 쌀지원에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서 민주당과 정부

가 국회 동의를 거쳐 국내 쌀 30만t을 북한에 지원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14일 “북한은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마저 피탄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상회담 때까지 쌀을 지원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경향신문

2001. 10. 15 (월)

남북 당국회담 차질

정부 내일 ‘금강산’ 거부통보...쌀지원도 연기 할듯

북측의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행사와 연기 확보와 관련,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2차 회담이 연기되고 대북 식량지원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 권림기자 4면

정부 당국자는 14일 “북측이 13일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워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해 왔다”며 “우리는 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삼익산에서 열자고 하는 내용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16일쯤 북측에 보낼 방침”이라

고 밝혔다.

정부는 2차 남북 경협추진위(23~26일)는 서울에서, 6차 장관급회담(28~31일)은 평양에서 열지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주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이 보낸 이산상봉 연기 협의의 정통문과 관련해 북측이 이번 주 답신을 보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북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다른 회담도 순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최유규기자

cyoung@kuryong.com

北에 '설악산회담' 제의

거부땀 당국회담 연기

정부는 6차 장관급회담 등을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한 북측 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대북 쌀 지원도 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당국회담과 연계해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이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15, 16일 당정협의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부처회의 등을 잇따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정책을 최종 확정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4일 "북측이 '서울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

로 이산가족 교환방문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모든 당국간 회담을 금강산에서 갖자고 '고집하는 상황'에서, 회담을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해 ▲19~21일 2차 금강산 육로회담 ▲23~26일 2차 경협추진위 ▲28~31일 6차 장관급회담 등의 연기를 시사했다. /이동준기자 dilee@hk.co.kr
▶ 2면에 계속됩니다

정부는 북측이 13일 2차 금강산 육로회담을 금강산에서 제의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15일 '설악산'에서 갖자고 역(逆)제의한 뒤 북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담 자체를 보류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또 "대북 식량지원 문제도 인도적 시안이라는 하지만, 북측이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제의하지 않고 모든 당국간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겠다고 고집할 경우, 시기 등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매일

정부 "모든 남북회담 연기"

北서 설악산 개최 동의하면 응할것 쌀지원 시기 北측 태도와 연계 시사

정부는 북측이 남측의 비상경제를 이유로 남북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고집할 경우 이달로 예정된 각종 남북회담을 연기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북이 안전을 이유로 1차 회담에 이어 2차 회담도 금강산에서 열자고 한 제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측의 자세 변화가 없는 한 오는 19일 금강산 관광 협성회담 위한 제2차 남북 당국간 회담은 연기될 수밖에 없

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 당국자는 또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분위기에서 시기는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대북 쌀지원 역시 북측의 태도에 따라 상당기간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10일 금강산 당국간 회담과 23~26일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8~31일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등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인 각종 남북회담이 연기되면서, 당국간 남북간 소감국면이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우리측 제의대로 금강산 당국간 회담을 설악산에서 여는 데 동의할 경우 예정대로 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말해 북측 태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열이 이같은 내용의 대북정책 기초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진회풍지문을 보내 "오는 19일로 예정된 제2차 금강산 당국간 회담은 안전성이 담보된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해 왔다. ◆전경호기자 jado@kdaily.com

世界日報

정부 '금강산 당국회담' 거부

쌀지원-이산상봉 연계시사

정부는 금강산 관광 협성회를 위한 당국회담을 '19일에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금강산에서 열자는 북한의 제의를 거부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15-16일 잇따라 열

리는 당정협의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조율된 것"이라면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도 23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시안"이라고 밝히 이산가족 상봉과 쌀 지원 문제의 연계를 시사했다. /조정진기자 jji@sgt.co.kr

위기관리 태세로 전환했다"면서 "이는 우리 군이 위한 조치에 따른 반작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따른 첨단 병기 이동과 정유 비롯해 태평양지역의 병력이 동과 대체병력 증원 등에 특히 민감한 것 같다"며 "이런 과정들을 면밀히 분석해 기존 군 작전교리를 발전시킬 때 새롭게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함진영기자
buddy@sgt.co.kr

‘北쌀지원’ 與野公방 계속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 당초 예고했던 대북 쌀 지원을 계속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쌀 200만섬(30만 t)을 북한에 제공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한나라당이 북한의 ‘상봉 연기’에 따라 쌀 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은 14일 “북한이 상봉을 연기했다고 쌀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 이는 성급한 것”이라면서 “쌀 지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차관함대로 검토된 것으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도 전에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15일로 예정된 통일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은 인내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대북 쌀지원 문제에 대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남북문제마저 당략적으로 접근하려는 범비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

가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때까지 쌀 지원을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굴욕적이고 비원칙적인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與 “상봉연기 北의도 먼저 파악해야” 野 “거절당하고 쌀 주는건 굴욕적”

적 측면도 고려된 것이라는 점을 한나라당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대북 쌀 지원은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돼온 이산가족 상봉까지 파행으로 끌고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에 응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르다”며 “북한이 인도적 교류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쌀 지원은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崔秉默기자 bmchoi@chosun.com
/尹泳信기자 ysyoon@chosun.com

한겨레

2001. 10. 15 (월)

당국회담 금강산 개최 거부

정부, 설악산 고수

정부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을 19일 ‘안전한 금강산’에서 열지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회담이 자동 연기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정부의 방침은 15일 당정협의와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처럼 밝혔다.

그는 “북쪽이 어떻게 생각하는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에게 최우선 과제”라며 “이산가족 방문이 일방적으로 연기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회담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순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12일 보낸 전화통지문에 북쪽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기다려보자”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13일 김태룡 회담 북쪽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에서 19일로 예정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을 “이미 제기한 바 있고 회담 토의 의제에 맞으며 안전성이 담보돼 있는 금강산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설악산을 회담 장소로 거듭 제안할 것”이라며 “북쪽이 이를 받아들이면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 여론이 변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2차 경협추진위원회 회의(23~26일)와 관련해 북쪽이 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하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북 식량지원 시기도 늦춰지게 된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남북회담 나가기도... 안나가기도... 정부 딜레마

• 불참 방침속 '공은 北으로'

'나가기 하나, 밀어 하나, 정부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6차 장관회담 등 각종 남북 회담 참여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북측의 일방적인 4차 이산가족 상봉 연기에 맞서 '불참 카드'를 꺼내들지나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 같고 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미당에 북측 요구대로 금강산에서 회담을 하거나 국내 여론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다. 정부는 일단 북측에 다시 풍요 납골 방침이다. 북측이 이산가족 교환방문의 연기 및 각종 회담의 금강산 개최 이유로 짚은 남북의 경제대세 강화와 경제협력을 주장할 수 없다. 19인의 금강산 관광 사업 협상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설악산에서 열기로 주초에 역제약한 계획이다. 또

北요구 금강산회담 열때 국내 여론 악화 '상봉연기 항의' 답장은 뒤 대응수위 검토 北태도 파악하며 쌀 지원 시기 조절할 수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연 관례에 따라 23일의 2차 남북 경험추진위는 서울에서, 6차 장관회담은 평양에서 하기로 재차 강조할 생각이다.

정부의 고심은 1차적으로 북측이 회담 장소로 '인천성이 담보된 금강산'을 고집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이를 수용하면 '서울이 북한이다'는 북측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당국자는 "금강산 육로 조기 개설 등 회담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면 장소에 관계없

이 만날 수도 있지만 북측 태도로 미뤄 그렇지 않아 보인다"며 "북측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차 금강산회담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조는 2차 남북 경주위의 6차 장관회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장관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榮)과 통일부 장관 명의로 평양에 보낸 4차 상봉 연기 항의 전회통지문에 대한 북측의 답장을 기다린 뒤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북측이 남북 요구에 따르면 회담은 예정대로 하겠지만 그 반대라면 차라리 보류하는 게 낫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특히 2차 경험추진위 개최 여부는 대북 식량지원과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 차관 형식으로 제공된 쌀 문제를 논의할 무대기 갖추워야 한다는 협의의 관점에서 연계를 등 돌린 현안이 '쌀'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시안이 기본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사업인 만큼 이산 상봉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쌀을 주기는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그 시기가 늦어질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각종 회담이 열릴지, 대북 식량지원 40만 t이 조기에 이뤄질지는 북측 태도에 달린 셈이다.

최재환기자 chj@hk.co.kr

한국일보

2001. 10. 15 (월)

정부, 北·여론사이 해법찾기 고심

■ 포이는 당국간 회담

정부가 28-31일로 예정된 6차 장관회담 등 각종 남북 당국간 회담과 대북 쌀 지원 등 인도적 사업의 추진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산가족 교환 행사의 연기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당국간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지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1차적 고민은 북측이 회담 장소로 못 박은 '금강산 카드'를 수

용하기 곤란한 데 있다. 북측이 '남조선은 인정하지 못하다'며 금강산을 제외한 만큼,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측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는 남북지역을 서로 오가며 회담을 해오는 관례와 '상봉주의'에도 어긋난다. 장소 문제를 풀기 위해 북측 요구대로 테러 경제상대를 푸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금강산 회담' 하자니 비난여론 무산시키자니 北에 빌미 우려 당분간 南北 냉각기 갖기로

북측과 회담을 갖지 않으면 여야가 오랜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북 쌀 지원도 불가능하다. 더구나 북측의 대북 경제공조로 대북 쌀 지원이 쟁점이 될 때, 정부는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지원하려 해도 '피주기'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정부는 당국간 회담 장소 문제와 이산가족 연기를 이유로 이미 합의한 회담을 무산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1970년대 이후 각종 남북회담에서 먼저 결정을 선언한 전례가 없고 이번에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이다. 북측이 회담을 할 경우 '회담할 의사가 없다'는 빌미로 북측에 줄 뿐 아니라, 식량 지원이 연기 또는 취소돼 6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제국면에 빠질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3일 '전통과 예로가 있으나 햇볕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힌 것도 큰 틀에서 보면 '회담을 통해 풀어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때문에 정부는 어느 정도 '냉각기'는 갖되,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북관계가 이여갈 요구를 찾아보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북측이 이산가족 교환 방문과 당국회담에 대해 전방적 입장을 갖도록 설득해, 국민 여론을 되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lee@hk.co.kr

여야는 14일 북한의 남북이산가족 상봉 연기에 따른 쌀 지원 재검토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까지 파탄에 빠뜨리는 등 이후 기본적인 문제를 통과시키는 조정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 때까지 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에 대해 민주당 김원욱(金源旭) 정책위의장은 "대북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차라리대로 검토된 것"이라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했다고 쌀을 못 준다는 것은 성급하다"며 "북한의 의도를 먼저 파악한 뒤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李洛演) 제1정책위의장은 "원정이라는 게 남북뿐만 아니라 40년대로 돌아가는 것

野 "쌀 지원 재검토해야" 與 "상봉과 연계는 성급"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또 "이번 기회에 쌀 지원 등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쌀이 남아 돈다는 이유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쌀 지원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적이 없는 국제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재(金滿在) 정책위의장은 "쌀 지원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에 대한 북한의 특별한 조치와 별개 시안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북측의 행동으로 대북 쌀 지원은 일단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순수 이산가족 문제가 잘 해결돼야 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여론과 대북 전략에 따라 쌀 지원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정현(鄭正顯)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입관선 없이 오키라하는 것은 남북문제마저 탐탁치 않게 여기려는 것"이라며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과 쌀값 안정이라는 농업정책 측면도 고려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lee@hk.co.kr

회담장소 양보없다

정부, 당국간회담 설악산 고수 北 수용거부땀 회담연기 검토

나열된 기저

정부는 14일 이달중 열릴 예정이던 2차 금강산 회담(19일), 2차 김대중-김정일 회담(23-26일), 6차 장관급회담(28-31일) 등 남북한 당국간 회담을 모두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국내 여론이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며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북측이 회담 장소를 '안전한 금강산'으로 계속 고집하면 정부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당국회담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은 이번 주 초 임박 예정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남북관계 분수령

앞으로 남북관계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남북당국간 회담과 제2차 김대중-김정일 회담의 개최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

정부는 16일 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제2차 남북당국간 회담(19일)을 설악산에서 개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틀 북측에 건넬 회담 의제안을 이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국간 회담의 연기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오는 23일에 예정된 제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오전 전주 중수기업지원센터에 마련된 업무보고장에 유종근 전북지사와 함께 들어오고 있다. (한)

2차 경수위 회의 장소 역시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이 아니라 남쪽간의 관행에 따라 서울에서 열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5일 오전 민주당과 당정협의 하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대경도 시범단 교류 안기 등을 발표한 북측 조치에 대한 진의 분석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정부가 내부 검토중인 식량 40만 t 지원과 이월 회담일정용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DJ '인내심 갖자'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3일, 햇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전주지역 인사들과 오찬을 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의견한 자세를 가지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과거 중·서독은 (중일과성) 20년 동안 두 정상간 회담이 연기되고 동독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어려웠다. (그러나) 서독은 만·관 이 합쳐 400억달러를 19년에 걸쳐 지원해 중독으로써 안정력이 확대돼 마침내 통일일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50년 걸 기다려왔는데 10년을 못가다려졌느냐"며 북한 태도에 대해 조급해 하는 국내 여론을 다독이기 시작했다.

김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이상 통일부 등은 '강경세'를 동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북관계를 이어갈 요수를 찾아 보겠지만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정부 대북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민 여론인 만큼 이 부분에 유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 발전원칙은 유지되되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은 이산가족 상봉 사업의 조기 재개를 위한 대북 압박용으로 북측 태도에 따라 신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겨울속으로'

남북관계 검색기간 얼마나

이산가족 상봉 예정일을 내내 앞두고 북한의 일방적인 '유보 방침' 통보로 촉발된 남북관계 검색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지난 13일 제2차 금강산회담에 대해 '교환 개최'라는 그중언의 관례를 깨고 또 금강산에서 열리는 진화 풍자문예 보내와 관계당국을 관속스럽게 하고 있다.

게다가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금강산'이란 문구도 삽입, 마치 '남한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계속 장소문제를 금강산으로 고집할 경우 금강산관광 2차회담은 물론 함지암 문제 등이 논의된 남북김정일추진위원회(23~26일)와 6차 장관급회담

(28~31일) 등 당국간 회담도 거부하거나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를 비롯해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산가

표 직후 나온 통일부 대변인 논평과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의 강력한 항의 내용이 담긴 전화통지문은 눈여겨볼 만하다. 임동원 전 장관의 '해안건의 안' 국회 통과 이후 취임한 홍

정부, '北 이산상봉 일방연기' 국민분노 감안

식량지원 재고-장관급회담 거부등 '강경' 선회

美테러전 끝날때까지 정상화 노력 정지 우려

족 상봉문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유보함으로써 확산될 수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다.

즉 '배고고 밥맛은 식'의 반복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측의 유보 발

장관은 "정부로서는 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북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민여론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유의해 나갈 것"이라며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아가 북측이 각종 행사 유보와 회담의 금강산 개최 이유

로 제시하고 있는 남측의 '대테러 비상감시조치' 강세도 미국·국의 대이프키스탄 보복전쟁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사리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남북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남측의 항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회담을 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회담을 하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해 남북관계가 다시 중대 국면에 처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또 "국제정세가 호전되도록 하는데 남측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며 "김·국 대 테러전쟁이 수그러들 때까지 남북 양측의 관계 정상화 노력은 정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조정진기자
jjj@sgt.co.kr

한국경제

2001. 10. 15 (월)

北 남북대화 금강산 개최 고집맨

정부, 당국회담 연기 불가피

정부는 14일 '모든 남북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는 북측의 입장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이담종으로 예정된 각 분야 회담을 단계적으로 연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남북이 회의를 번갈아가며 개최했던 원칙과 관례에 따라 금강산관광 합성회를 위한 당국자회담(18일)은 삼악산, 검합추진위(23~26일)는 서울, 장관급 회담(29~31일)은 평양에서 각각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간 합의사항을 우리가 먼저 짚 수 없으므로 회담 장소를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북측이

개최 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할 경우 회담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 식량지원은 제2차 검합추진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검합추진위가 서울에서 열리지 않을 경우 40만 t 상당의 대북식량 지원도 재고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15일 민주당과 당정협의,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된 뒤 북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한겨레

2001. 10. 15 (월)

정부, 북 속내 몰라 속앓이

■ 북 연기통보에 고민하는 정부

해법 못찾은채 북 주시...국방부 이례적 공박 당국회담·경협 차질엔 식량지원 지연 가능성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욱하는 심정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갈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임박 연기 뒤 정부 당국자들은 답답한 심정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중대 국면에 접어들 듯한 남북관계의 해법이 잡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북측이 왜 갑작스레 태도를 바꿨는지 아직껏 명확한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이산가족 방문 연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토로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 당국자는 14일 "미국, 아프가니스탄 공습과 북핵대리 가능성 고조에 따라 한반도 주변에 F15기가 증편되는 등 비상경계대에 강화에 북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게 이유의 전부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입단은 12일 홍순영 장관급 회담 남쪽 수석대표 명의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공을 다시 북쪽으로 넘긴 만큼 반응을 지켜보자는 식이다. 그러나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정부의 고민은 북측이 문제삼은 군의 비상경계대세나 이산가족 문제가 정부의 선택 폭이 좁은 '악한 고리'라는 점이다. 당장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북정책 수행에서 최상위 가치는 국민적 합의"라며 "남북관계가 한동안 냉각기에 빠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가 1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의 주장을 강하게 공박한 것도 이례적이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남쪽으로 오기 불안하다"는 북측 주장에 대해, "군의 조치는 오히려 현재 남북 사이의 여러가지 교류사업을

진행할 때 관계자들의 인정한 양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한 것"이라며 공격적 반론을 폈다. 국방부 대변인 성명은 1999년 '서해교전'과 올 6월 북한상선 사건 등 남북한 군사관계에서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1~2년에 한번 나올 정도로 드문 일이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이담 중 예정된 남북회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19일로 예정된 금강산관광 합성회를 위한 2차 당국회담은 자동 연기될 게 확실하다. 2차 검합추진위원회 회담(23~26일)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검합추진위의 경우 "지난해 12월 1차 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만큼 2차 회담은 관례대로 남쪽에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합 일정이 늦춰지면 대북 식량지원 시기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6차 장관급회담(28~31일)도 북측은 금강산 개최를 주장한 반면, 남측은 관례대로 평양에서 열어야 한다는 쪽이다. 그러나 한 당국자는 "회담 연기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금강산 당국회담이 연기된다고 다른 회담들도 줄줄이 뒤로 밀린 거라고 여단할 필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재훈, 권혁철 기자 nomad@hani.co.kr

北서 이산상봉 성의보이면
남북회담 금강산개최 검토
당정 對北정책회의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40만t 규모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되 시기는 국민의사를 존중해 결정하기로 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제4차 이산가족 상봉과 사실상 연계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과 민주당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북정책 관련회의를 갖고 아같이 방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다만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경우 10월 2차 남북당국간회담을 북측 요구대로 금강산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호기자 jade@kdaily.com

경향신문

2001. 10. 16 (화)



쌀 지원·이산상봉 연계

黨政, 인도적 원칙속 北태도따라 시기·규모 결정

진남 부총리는 對北 구상무역 추진 시사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이산가족 상봉이 최대한 빨리 재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촉구하고,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연계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과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록을 열어 아같이 결정했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도 이날 국회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북 쌀 지원은 국내 쌀 수급사정 이외에 북한의 식량사정과 대북정책기조,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측과 협의해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남(陳龍) 경제부총리는 "북한의 광산과 어장 등을 연계시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이런 점이 남북협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중·장기적으로 대북 구상무역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제1정책위

원장은 당정책회의후 브리핑에서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기한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북측에 상기시키고, 여러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이 조기에 재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는 원칙은 인도적 견지에서 유지하되, 지원의 시기와 규모 결정은 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기로 했다"며 "식량지원 원칙 자체는 '불(不)연계'이지만, 시기, 규모는 '간접연계'라고 말해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쌀지원문제가 연계될 것임을 시사했다.

최우규기자

"4차상봉 오래잖아 될것" 서영훈한직총재 언급

대한적십자사 서영훈(徐英勳) 총재는 15일 기간간담회를 갖고 "쌍의대 교원관계자들 어제 만났는데 (연기된 4차 이산가족 상봉이) '오래지 않아 열릴 것 같다'고 했다"며 "(그의 말로 미뤄) 남북간에 접촉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서총재는 간담회에서 "북측은 지난 11월까지 평양에서 이산 방문단에게 교육을 더했다고 하는데 방문단들 시음로 안보낸다고 하니 아쉽다"며 "방문단 교환이 한달 이내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적십자자연맹 총회 이전에 이뤄지거나 아니면 (북이) 총회때는 결성할 해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재영기자

cyyoung@kyunghyang.com

쌀 60만톤 연계지원 검토

黨政, 이산상봉 안되면 보류... 30만톤은 구상무역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당정책회의를 열고 대북 쌀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되 규모 및 시기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연계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지원방법과 관련, 장기 차관 형식의 30만t 지원과 별도로 쌀 30만t 규모의 구상무역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동태(姜東太) 제2정책위원회장은 "대북 쌀지원과 별도로

내년도 정부보유 미곡 직장재고량을 초과하는 쌀 100만t 중 30만t을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동해 조인권과 불우교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재고량을 줄여 쌀값 하락을 막고 보관비용도 줄이는 한편 남북 협력을 활성화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진남(陳龍)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북 쌀지원을) 북한의 광산과 어장 등을 연계시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동태(金東太) 농림장관도 "대북 쌀지원은 천연자원과의 구상무역 같은 방법 등을 논의할 때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중기자 andyckim@spt.co.kr

世界日報

2001. 10. 16 (화)

“對北쌀지원 신중히”

李仁濟최고 등 與기존입장 비판

15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쌀 지원 신중론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기존입장은 13일 김영삼(金明燮) 사무총장이 주재한 당4역회의에서도 확인했듯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쌀지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야 한다는 아담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인제(李仁濟) 박상찬(朴相贊) 최고위원과 김영배(金永培) 상임고문 이 이날 이점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산가족 상봉 등과 연계협상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도록”**

이 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쌀을 주자, 말자’ 하지 말고, 북한이 재의해오면 그때 가서 협상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우리 측이 조건을 내놓고 협상해야 하며, 최대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원 조건으로 쌀이 굶주린 북한 주민에게 가는지 알 수 있는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금강산 육포관광·검석선 연결·이산가족 상봉 실현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북한의 식량난은 내년에는 올해의 부족분 150만t 보다 크게 증가한 250만t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협상과정에서 북한에 줄 것은 주되 우리도 받을 것은 받는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식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과 김 상임고문도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일정의 일방적 보류와 관련해 대북(對北) 쌀 지원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인도적 교원협력 사업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는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해 확고한 북측의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쌀 지원 문제를 성급하게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용학(田溶學) 대변인이 전했다.

/崔瑛蘭기자 jachoi@chosun.com

“식량난 동포위해 즉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먼저 풀어야”

對北 쌀지원 의견 제각각



여야는 15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연기에 따른 대북 쌀지원 여부를 놓고

인파으로 논란을 벌였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은 “쌀 300만섬을 북한에 지원해 고사위기에 처한 우리 농민을 구하고 이시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도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보내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쌀광석 등 원재료를 받아오자”며 “장기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남는 장사”라고 동조했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200만섬의 쌀은 한나라당이 먼저 주자고 했던 것”이라며 한나라당 태도를 비난했다. 반면 같은 당 조한천(趙漢天) 의원은 “이산가족방문이 연기된다면 대

북식량지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고 한나라당 이상헌(李相憲) 의원은 “돈을 줄 때만 햇볕 아래 나왔다가 그늘로 숨어버리는 북한에 햇볕정책은 조롱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김영배(金永培) 상임고문, 박상찬(朴相贊) 최고위원 등이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한 북측 입장이 확고히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쌀지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고를 걸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산가족 상봉의 합의사항 이행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 정부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광근(鄭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잘못된 버릇장머리를 고쳐놓을 때”라며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 남북관계의 가시적인 성과가 담보될 때까지 대북식량지원은 유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범구기자 hbk1004@sgt.co.kr

한겨레

이총리 “북 쌀지원 시기 재검토”

국회 정상화 대정부질문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의 ‘대통령 자진 사퇴’ 발언으로 파행을 빚어온 국회가 닷새 만인 15일 정상화돼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관련기사 5면

이에 앞서 여야 원내총무는 이만섭 국회의장 주선으로 총무회담을 열어 안 의원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본회의에서 국회 파행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내 쌀 수급사정 이외에 북한의 식량사정과 대북정책 기조,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제적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측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북한의 평산과 어장 등을 연계시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대북 쌀지원을 구상무역 방식으로 추진할 뜻을 비쳤다.

김동태 농림장관도 “대북 쌀지원은 북한 천연자원과의 구상무역 같은 방법 등을 논의할 때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재벌정책과 관련해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되 기업의 직접구제제를 완화하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영호 게이트 △한대건설-하이닉스 반도체 특허의혹 △대대리 전쟁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왕성우 일석규 기자 sky@hani.co.kr

한국경제

‘先이산상봉 後쌀지원’ 확정

黨政, 추가30만t 구상무역

정부와 여당은 15일 대북 쌀지원 문제와 관련,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지 않기로 한 당초의 방침을 변경, ‘先 이산가족 상봉, 후 대북쌀지원’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북 쌀지원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도 “공일부의 당최회의에서 대북 쌀지원 원칙은 유지하되 시기와 규모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간접연계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대북 쌀지원은 인도적 차원과 함께 쌀

값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적 측면도 고려된 것”이라며 이산상봉 문제와의 연계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에 장기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쌀 30만t 외에 정부 보유미 30만t에 대한 북한과의 구상무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최근 홍순인 통일부장관에게 이러한 당의 구상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남측은 쌀 30만t을 제공하는 대가로 명대대계 등을 북측 어장에 서 갈수 있는 조업권을 받거나 미그네사이트와 장식 등 북측 광물을 ‘바다(물물교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파국은 안돼”

정부 남북관계 매듭 풀기 나서

북측이 지난 12일 이산가족 상봉을 일반적으로 연기하면서 벗어난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16일부터 이산가족의 서울-평양 상호방문이 시작됐어야 하지만 북측의 연기 발표 후 뉴욕이 지난도북 북측의 정화한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북측에 회담 연기와 식량지원 보류할 시시하는 등 강경대응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안이 자칫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국면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이어 따라 북측이 이산상봉을 연기하면서 제2차 금강산 육로회담을 19일에 금강산에서 열지고 제의한 것에 대해 16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대체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북측이 금강산 육로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지고 제의한

‘금강산 육로회담’ 北제의 NSC열어 대응책 논의

데 대해 아직까지 신중 동의를 뜻의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된 마당에 북측의 분명한 해명 없이 회담에 응한다면 결국 북측의 의도를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북측이 회담을 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 따라 정부는 지난 12일에 이어 다시 한번 홍순영 통일부장관 명의로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회담장소를 금강산 대신 당초 우리측이 제의한 실악산으로 하지고 재차 촉구할 것인지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편 서영훈 한직총재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이 지난 12일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표명하기 하루 전인 11일에도 평양에서 방북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상봉단을 서울로 보내지 않은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안이하게 한 것”이라고 언급, 이번 상봉단 방문 연기가 김장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상봉 연기를 지시했다면 이를 푸는 것도 김 위원장이 해야 하는데 미국의 이프간 공격이 계속되는 등 상황변화가 없는 가운데서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현종기자 leshun@munhwa.co.kr

한겨레

2001. 10. 16 (화)

이산상봉 연기 강력대응

당정, 남북관계 대응책 논의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당정협의를 열어 북측의 조평통 담화를 통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의 일방적 연기 뒤에 남북관계 대체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각종 당국회담 등 남북간 합의사항은 기존 관례와 합의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관련기사 4면

· 당정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지속한

다는 방침을 견지하되, 국민의사를 존중해 지원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서울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2차 결합추진위에서 합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며 “북한이 결합추진위 개최 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하면 지원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협의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조기에 성사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익걸 이세훈 기자 nomad@hani.co.kr

國民日報

THE KOREAN DAILY GUMIN

2001. 10. 16 (화)

‘금강산관광’ 회담 설악산 개최 제의

정부, 이산-쌀 연계입장 정리
北은 경협추 금강산 제의

정부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잇따라 열고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일방 연기에 따른 향후 대처 방안을 조율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18~20일로 예정된 금강산

관광 합성회담을 위한 2차 당국회담과 관련, 16일 홍순영 통일부장관 명의로 회담을 설악산에서 열지는 대북 전회통지문을 보냈다.

또 이번 주말까지 북측의 태도 변화를 지켜본 뒤 남북경협추진위(23~26일)와 6차 장관급회담(28~31일)을 차례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 열 것을 제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윤리 대북 참 지원은 이산가족 상

봉 재개와 연계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박정권 결합추진위 북측 위원장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서울에서 열기로 돼 있는 2차 회의를 23~26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한편 서영훈 대한직접지사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남북간에 이산가족 방문교과와 관련한 접촉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남북간 비밀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석기자

매일경제

2001. 10. 16 (화)

“상봉연기 김정일이 지시”

서영훈 韓赤총재 北과 물밑접촉...내달 재개가능성

나영필 기자

서영훈 대한직접지사 총재는 15일 “북측에서 이산가족 서울 방문단이 안 온 이유는 한 사람(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밖에 없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연기됐음을 시사했다.

서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도 연기 하루 전인 11일까지 평양에서 상봉단에 대한 교육까지 마친 상태였다”면서 “갑자기 이산가족 방문행사를 연기한 것은 (북측에서) 한 사람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총재는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서 전해 들었다”면서 “현재 북측과 여러 경로로 통해



서영훈총재

김정일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산가족 행사 재개를 위해 남북 당국간 물밑 접촉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서 총재는 또한 “조만간 이산가족 방문 교환 행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 시점으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회의 개최 접촉을 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산가족 방문 교환 연기에 대한 북측 답변을 16일까지 기다린 후 우리측 조치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구도는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하고 그 이후 당국회담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담 개최장소는 당초 합의대로 추진키로 했다”면서 23일 결합추진위(서울), 28일 장관급회담(평양)의 개최 장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북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이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국민의사를 존중해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나 지원 규모(약 30만 t, 옥수수 10만 t)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과 물밑 접촉이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 “이는 바 없다”고 말했다.

“對北 쌀지원 규모·시기 남북당국 대화통해 결정”

이한동총리 국회 답변

이한동(李漢東)총리는 15일 대북 쌀지원 문제와 관련, “국내 쌀 수급 사정 이외에 북한의 식량 사정과 대북정책의 기초, 국민적 합의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2남아 대장부집문답면에서 “쌀 지원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은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측과 협의해 결정도 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안대수(安大洙)의원의 ‘대통령 사퇴’ 발언으로 파생됐던 국회는 여야 합의로 닷새 만에 속개됐다. <관련기사 4면>

이 총리는 또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추궁하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부패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인무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 기관장의 해임 문제를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진구 통신기자 ckpark@kdaily.com

▶ 1면에서

김영(金映)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동아일보 김병단(金炳鼎) 전 명예회장이 지난 08년 국제청 건부가 증여세 포탈 방법을 알려줬다고 법정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당시 상속세 조사담당 과장이 통상 수준에서 세법내용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탈세수법을 알려주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국회의원실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안 의원 발언에 따른 국회 피청과 관련, ▲이당 대표자격으로서 한나라당 이 총무의 유감 표명 ▲속기록 삭제 ▲이만갑(李萬甲) 국회의장의 주의 단기 발언 등 3개항에 합의했다.

北, 23일 금강산회담 제의

북측은 1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박창련 북측 위원장 명의의 진화통지문을 보내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관련기사 4면>

북측은 전통문에서 ‘회의장소를 안 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금강산 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현중기자 lochun@munhwa.co.kr

문화일보

2001. 10. 16 (화)

한국일보 2001. 10. 16 (화)

黨政, 이산상봉 北태도따라 쌀지원 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당정합의를 갖고 이산가족 행사에 대한 북측의 태도와 국민 여론을 감안해 기면서 대북 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대북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해야겠지만,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만큼 국민 의사를 존중해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측이 이산가족 행사를 제

개할 때까지 쌀 지원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정은 당초 정부 보유미 30만톤(차관), 옥수수 10만톤(무상) 등 식량 40만톤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북한에 지원할 방침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당정은 6차 장관급 회담 등 10월 중 예정된 당국간 회담도 남북회담의 관행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면서 북측의 ‘금강산’ 회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한겨레

2001. 10. 16 (화)

대북 식량지원 당정협의

“지원은 한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시기 등은 북측의 태도에 달렸다.”

통일부와 민주당은 15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이런 방침을 확인했다.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남북관계에 이산기류가 형성됐지만, 쌀 지원은 인도적 문제라는 기본 태도를 견지하기로 일단 의견을 모은 셈이다. 홍순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북측 조처로 대북 식량지원을 포함한 모든 남북관계를 백지화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며 “(식량지원 등은) 남북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은 식량지원이 가능하려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태도 뜻을 같이했다. 정부 당국자

“쌀지원 시기 북 태도 달려”

인도적 지원 방침 불변...북 서울회담 응해야 진전

는 “합의사항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합의한 사항들은 약속대로 지켜서 금이 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조속히 새 입장을 잡아야 하며, 북측이 금강산을 고집한 2차 금강산 당국간 회담 및 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등의 개최 장소 역시 ‘남쪽 한 번, 북쪽 한 번’의 관례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는 이미 1차 회담 때 장소

가 서울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식량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자는 “지난 당정협의에서 이미 윤곽이 나왔다”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40만을 보낸다는 정부의 애초 생각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일부언론이 북측이 70만톤의 식량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쌀 30만톤 구상부역 형태로 북측에 제공한다’는 정치권 일각에서의 제안을 정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1일 당정협의에서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

장이 북측에 쌀 30만톤 주고 대신 마그네사이트 등을 구상부역 형태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홍순영 통일부 장관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북 식량지원은 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의 개최 여부 등이 그 진행과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생각대로 23~26일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면 협의가 이뤄지겠지만, 서울로 오지 않으면 협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제협력추진위에 북측이 대표단을 보낸다면 연기된 북측의 이산가족 방문단이 뜻을 리 없고, 이에 맞춰 식량지원 분위기가 역시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권 김의겸 기자 jik@hani.co.kr

“설악산서 금강산관광 회담”

정부, 장소수정 대북 제의...성사여부 불투명

19일로 예정된 금강산관광 협상회를 위한 2차 당국회담과 23일의 2차 남북경협추진위는 남북이 회담장소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16일 오후 남북 장관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회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금강산 당국회담은 설악산에서, 경추위는 당초 합의대로 서울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또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일각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일정을 새롭게 마련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북측은 이날 오전 경추위 박창현 북측 위원장 이름의 전통문을 보내와 2차 경추위를 예정대로 23일부터 26일까지 열되 “안전성이 담보된”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지난 13일에는 금

강산관광 당국회담을 같은 장소에서 열자고 밝힌 바 있다.

남측은 전회통지문에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쌍방간에 약속한 사항들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담 장소 역시 남북이 서로 양려하면서 진행해오던 관례를 존중해야 하며 (북측의 주장과 달리) 우리

측 지역에 안전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가 현월히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평화공존과 번영의 공동체로 함께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기자

cyyoung@kyunghyang.com

“금강산회담 설악산에서”

통일부, 北에 제의

남북 장관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16일 북측 김영성 단장 앞으로 전회통지문을 보내, 북측이 연기한 이산가족 4차 교환방문 행사를 하루속히 추진하고, 19일로 예정된 금강산 관광 협상회를 위한 2차 당국회담과 23일 열기로 한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각각 설악산과 서울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송민희기자 ginko@chosun.com

서울경제 2001. 10. 17 (수)

“당국간회담 설악산서 열자”

홍통일장관 제의

장관회담의 남북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오후 금강산관광을 협상화하기 위한 2차 당국간 회담은 설악산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2차 회의는 서울에서 각각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또 지난 12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일방적인 담화로 무산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일정도 새로 마련해 추진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북측이 이산상봉 일정을 협의 등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측이 재의하는

모든 회담을 사실상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판문점 언론간 접촉을 통해 김영성 북측 단장 앞으로 보낸 전회통지문에서 “그동안 남북이 서로 양려하면서 회담을 진행해오던 전례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측 지역에 안전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제의했다. 앞서 북측은 이날 오전 박창현 남북경협추진위 북측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남측에 전달하고 경추위 회의일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안전성이 담보돼 있는’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해왔다.

/김홍길기자 j1anycall@sed.co.kr

남북회담 금강산개최 거부

“설악산-서울서 열자”

洪淳瑛장관 北에 逆제의

남북장관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16일 금강산 관광 협상회를 위한 2차 당국간 회담(19일)은 설악산에서, 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23~26일)는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자고 북측에 수정 제의했다.

홍 장관은 북측 김영성(金鏞成) 단장 앞으로 보낸 대북 전회통지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일정을 하루속히 새롭게 마련해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남측의 이 같은 제의는 북측의 금강산 개최 주장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일단 2차 금강산 당국간 회담의 연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날 홍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측이 이산가족 교환일정을 새로 제시하거나 연기 사유 등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민 질서 등을 감안해 금강산 당국회담 등의 개최가 어렵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에 대한 북측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남북간에 합의했던 각종 당국회담이 모두 연기되고, 대북 식량지원 문제도 이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북측은 이날 오전 박창현 남북경협추진위 북측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남측에 전달하고 “2차 경협추진위원회를, 23일부터 26일까지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해 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한국일보

정부, 금강산회담 北제의를 거부

설악산-서울개최 逆제의

당국간회담 연쇄연기될듯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16일 2차 금강산 육로회담(19일)을 설악산에서,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23일)는 서울에서 각각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정부가 북측의 금강산 개최라는 장

소변경 제의를 거부함에 따라 이 달로 예정된 당국간 회담이 연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5면

홍 장관은 특히 북측이 남측의 태러경제개발 이유로 ‘금강산’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우리측 지역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 뒤 “쌍방간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준기자 djlac@hk.co.kr

대한매일

2001. 10. 17 (수)

世界日報

2001. 10. 17 (수)

경협위 금강산개최 거부

정부, 北제의 일축... 남북회담 전면연기 가능성

북한이 안전문제를 이유로 남북간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 것을 주장하는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응할 수 없다고 맞서 이달로 예정됐던 각종 남북 회담들이 잇따라 연기될 전망이다.

북한은 1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박창현 북측 위원장 이틀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23일로 예정된 경협추진위 2차회의를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 관련기사 5면

북측은 남측 위원장인 김진표 재정부 경제부 차관에게 보낸 전통문에서 "회의 장소를 인천성이 담보된 금강산 지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평양에서 열린 경협추진위 1차회의에서 다음 회의를 2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남한의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간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오후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 이틀로 북에 전통문을 보내 "경협추진위는 당초 합의대로 서울에서, 금강산 당국회담은 설악산에서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 북의 금강산 개최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남북한인윤논의, 남북대화는 합의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주력하기로 했다.

◆전경호기자 jide@daily.com

“서울-설악산서 회담갓자”

정부, 北금강산회담제의 거부

북한은 16일 오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박창현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2차 경추위를 23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지역을 금강산지역으로 제의한 것은 지난 13일 2차 금강산관광 회담을 19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한 이래 두번째이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평양에서 열린 경추위 1차회의에서 2차회

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측이 서로 왕래하면서 회담을 진행해 오던 전례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측 지역에 안전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금강산관광 당국간회담을 설악산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역제했다.

/윤상환기자 shyoon@srgt.co.kr

한국일보

2001. 10. 17 (수)

남북이 당국간 회담 장소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남북이 이 달 중 열기로 합의한 6차 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회담 일정이 연쇄적으로 연기될 공산이 크다.

장소문제 자존심 싸움 당국회담 당분간 표류

남측은 16일 2차 금강산 육로회담과 경협추진위원 금강산에서 갖자는 북측 제의를 거부했다. 남측은 특히 경협추진위의 경우 지난해 1차 회의에서 서울을 2차 회의 장소로 합의했기 때문에 북측 주장은 합의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측도 '금강산' 주

한다. 남측도 '중대한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밝힌했지만, 회담의 끝은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있다.

남측이 우려하는 것은 장소를 둘러싼 신경전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회담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이

16일 역(逆)제의한 장소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측이

이산상봉 새로운 일정

北, 제시할때 재개될듯

장을 쉽게 거둬들일 것 같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조선 불안'을 이유로 금강산을 내세운 만큼, 남측이 테러 경제태세를 풀 때까지는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목되는 것은 남북 모두 회담을 열 것 같지는 않아보인다. 남측은 12일 이산가족 행사를 보류하면서도, 회담은 재개하겠다고 했다. 북측은 특히 남측이 마련 중인 식량 40만톤 지원을 포기하기 힘든 상

속 계속 었다면 국내 여론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남북관계는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새로 제시하는 등 전향적으로 나올 때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 장소는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니다"면서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지만 보이면 어떤 식으로든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lee@k.co.kr

朝鮮日報

2001. 10. 17 (수)

北 軍部 남북관계 제동거는듯

北 금강산서 회담 고집

북한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에 이어, 16일 이미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마저 금강산에서 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명시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지난 12월 이산가족 4차 교환방문 연기 때 밝힌 대로 "서울은 불안하고 금강산은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측이 이미 지난 12일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북측이 계속 금강산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금강산 관광대가 미남(未納) 등 대남사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진 북한 군부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으로 인한 남한 내의 '비상경계대세' 등을 내세워 남북관계를 틀고 있는 것이라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비무장지대 개방 등에 아직 소극적인 북한 군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늦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도 금강산 회담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민기기자 ginko@chosun.com

남북회담 또 헛바퀴

장관급회담 등 줄줄이 연기될듯

나열될 기지

남북한은 16일 당국간 회담에 대해 양측이 수용할 수 없는 장소를 확보해 금강산 육로 회담(19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23일), 장관급회담(28일) 등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제5차 장관급 회담 개최로 6개월 만에 본궤도에 올랐던 남북관계가 또다시 소강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홍순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를 열어 북측의 이산가족 협상 연기에 대한 대응 방침을 확정해 우리 측 입장을 북한에 통보했다.

정부는 홍 장관 명의의 전공문에서 "이산가족 방문 재개를 촉구한다"면서 "금강산 육로 회담은 설악산에서, 경제추진위는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이산가족 방문 교환을 조속히 재개하지 않는 한 모든 당국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는 북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금강산에서 갖자고 이날 오전 제의해 왔다.

남북 양측이 이처럼 '회담 연기'를 명시하지 않고 서로 다른 회담 장소를 제시하며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일시적인 회담 연기는 불가피하다고도 지속적인 대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그러나 회담은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가장 좋은 구도는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고 그 이후 당국간 회담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국간 회담)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입각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돌발접촉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 길어지나

북 "금강산서 회담" 고집 장관급회담이 중대 고비

신가족 방문단 교환의 새 임성급 마련하고 2차 금강산 관광 당국간 회담의 설악산 개최, 2차 김추위의 서울 개최 등을 다시 요구했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계속될 조짐이다. 당국간 회담은 '서울 한 번, 평양 한 번'의 순환 개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정부가 거듭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16일 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23~26일)를 금강산에서 열자고 다시 제의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김재경은 남북이 서로 대화제의의를 하면서도 정작 회담은 열리지 못하는 이상한 양상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태도를 보면) 당국간 회담이 어렵다고 말하는 듯 느껴진다"고 했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의 일방 연기에 항의하는 홍순영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의 전화홍지문에는 김복하면서 2차 김추위의 금강산 개최를 고집한 대목이 그렇다는 것이다. 북측은 특히 금강산을 제외한 이유로 '회의 장소의 안전성'을 재차 거론해 남북을 자극했다.

정부는 즉각 이에 대한 거부 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4차 이

이에 따라 2차 금강산 당국간 회담 및 2차 김추위는 일단 '공전'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측 군부 등 강경파들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남북관계 흐름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4차 이산가족 상봉 일정마저 다시 잡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당국간 회담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관계의 고비는 오는 28~31일로 예정된 제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차 장관급회담은 관례상 개최 장소가 평양이어서, 북측이 평양으로 내세운 '안전성'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북측은 이 회담 개최지도 금강산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6차 장관급회담의 성사 여부가 경색국면의 장기화 여부를 판단할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권 기자 jk@hani.co.kr

남북대화 '일단 멈춤' 北 "당장 얻을것 없다" 판단한듯 이산상봉·회담개최 연계 방침

■ 北의 호흡조절과 정부 대응

제4차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남북대화 마저 일단 멈춰서는 양상이다. 북측이 16일 '남한의 안전'을 이유로 향후 남북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바꿀 것을 공식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일축한 것이다. 상황 변화가 없는 한 19일 금강산 당국간 회담과 2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 등 남북대화가 한동안 미뤄질 전망이다.

남북회담의 연기는 북이 지난 12일 남한의 비상경계대세 강화를 내세워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보류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북측은 같은 이유로 남북회담을 금강산에서 갖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측의 여지 주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채 태도변화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북측이 16일 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

마저 금강산에서 열자고 주장하자 미연없이 남북대화의 끈을 놓았다.

당장 대화도 어렵고, 연다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북이 이처럼 남북관계 일정을 흔들는 배경으로 두가지점을 꼽았다.

하나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으로 국제정세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화할 필요가 당장 남측으로부터 얻을 게 없다고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 남측의 경제대세에 대한 군부의 반발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아프간공습 이후 남북관계의 새판짜기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당국간회담-남북경제협력추진위-장관급회담의 일정을 그대로 순연하는 게 차선책

이라고 말했다.

북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일단 대화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북의 여지 주장을 확인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회담 개최의 고리로 삼겠다는 것. 관심은 28일 평양으로 예정된 장관급회담 개최 여부, 남한의 안전문제와 관계없는 만큼 북측이 뿌리칠 명분이 없다.

● 김경호기자 jk@okdaily.com

산적한 남북 일정표

北일방연기로 '냉각'

북한이 돌연 이산가족 상봉과 태권도 시범단 파견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2차 금강산관광 회담 ▲서울-평양 이산가족 상봉 ▲북한 태권도 시범단 서울 파견 ▲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6차 장관급회담 등으로 숨겨온 한달로 예견되었던 10월이 씩씩하게 마무리될 것 같다.

16일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이 각종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는 북측 제의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남북 회담 일정의 연기 또는 무산이 불가피해졌다.

19일 열릴 예정인 금강산관광 회담은 설악산에서, 23일부터 열릴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서울에서 열자는 것이

정부 당국자는 "안전성 때문에 금강산에서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북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의 상태라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북측이 회담 개최지로 서울을 수용할 전망도 없을 뿐 아니라 남북 당국간 회담의 관례를 깨는 북측의 행위를 남측이 수용할 수도 없어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 당국간 회담의 정상화는 제6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열리는 차기 장관급회담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 현안

을 논의하는 총괄회의체라는 점에서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서라도 정부가 적극 성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

北 "모든회담 금강산서 열어야"

南 "설악산 개최를"-사실상 거부

28일 장관급회담서 가닥 잡을듯

라 이산가족 방문단 연기 이후 회담 개최지를 둘러싼 남북 양측의 팽팽한 공방은 오는 28~31일로 예정된 제6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가닥을 잡아 나갈 공산이 크다.

만일 그때까지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북측의 일방적 홍보로 비롯된 남북 당국간 공식 대화 단절은 의외로 깊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 회담을 연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북측이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는 테러 관련 비상조치 해제도 남측으로선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사실 정부는 지난 1차회담에서 2차회담 장소를 설악산으로 제의해 놓기는 했지만 북측이 금강산을 고집할 경우 수용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모든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는 입장을 밝혀 오히려 남측의 퇴로를 막아버렸다.

에서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서라도 정부가 적극 성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방문단 연기 이후 회담 개최지를 둘러싼 남북 양측의 팽팽한 공방은 오는 28~31일로 예정된 제6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가닥을 잡아 나갈 공산이 크다. 만일 그때까지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북측의 일방적 홍보로 비롯된 남북 당국간 공식 대화 단절은 의외로 깊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정진기자 jjj@sgt.co.kr

北 회담장소 금강산 고집

당국간 회담 25일 개최 제의

각종 남북협상 지연 불가피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金鏞成) 단장은 19일로 예정됐던 금강산 관광 협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25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김 단장은 18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낸 대남 진화통지문에서 "귀(남)측은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의했다.

북측이 이산가족 교환 문제에 대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고집함에 따라 각종 남북 당국간 회담은 당분간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또 이달 23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남북협력추진위원회는 다음달 5일에,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초 예정대로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자세 변화가 없는 만큼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북 "당국회담 25일 금강산서 열자"

경추위는 내달 5일 제의...정부, 부처간 협의뒤 결정

북한은 금강산관광 협성화를 위한 당국회담을 25일, 경험추진위 2차 회의는 다음달 5일로 일정을 조정하고 6차 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28일 모두 금강산에서 열자고 남쪽에 수정 제의했다.

김영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은 18일 오후 판문점 언락관 접촉을 통해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앞으로 보낸 진화통지문과 관영 <평양방송> 보도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나름대로 회담 의지는 있는 듯하지만, 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하는 등 북한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 협의끝 거쳐 북쪽에 답신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진화통지문에서 "금강산 당국회담과 관련해 귀측(남측)은 회담 의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장소 문제같은 이유로 회담 개최를 저해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측은) 어떤 형태로든 대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한국일보

금강산회담 내주개최 北서 수정제의

북한은 18일 금강산 육로회담을 25일, 2차 경험추진위를 다음달 5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수정 제의했다. 북측은 그러나 '남측의 테러 경계대세를 '적대행위'리면서, 이를 철회할 때 이산가족 상봉 등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날 오후 5시 판문점 언락관 접촉을 통해 보내온 김영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진화통지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6차 장관급 회담은 예정대로 28-31일 연다. 이 또한 금강산에서 열자고 주장했다. 북한이 당국간 회담의 금강산 개최 주장을 고수하고 남한 당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함에 따라, 향후 회담 개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동준기자 dilee@hk.co.kr

대한매일

이산상봉 연기 명분살리기

北 금강산회담 제의 배경

정부 조만간 대응책 모색

북한이 18일 진화통지문을 통해 남측의 비상경계대세 감화조치를 맹비난하며 남북 대화의 일정과 장소를 변경할 것을 요구해 와 그 진의와 향후 남북관계 추이가 주목된다.

북은 A4용지 2장 분량의 장문(長文)의 진통문에서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 이유로 남측의 비상경계대세 감화를 들어 남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남측이 북한군 동향을 놓고 대책을 논의한 다음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남측이 전력공백을 예언하는 미명하에 미국의 많은 공군무력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분명 적대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언론까지 동원해 사실을 전도하는 행위는 신의없는 행동"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그러나 향후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주장하면서도 '남한의 안전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등 '변화'의 징후도 내보였다. 이산가족 상봉을 일반적으로 연기한 북측 나름의 명분을 살리면서도 회담개최의 장애물은 제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측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대화의 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끝 통해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관건은 회담 개최장소로 오는 28일 6차 장관급회담 때까지 정부와 북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호기자 jade@kdaily.com

世界日報

北 '남북 당국간 회담' 25일 금강산개최 제의

남북 장관급회담 김영성 북측 단장은 18일 금강산관광 협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이달 25

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김 단장은 또 이달 23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다음달 5일 금강산에서 열고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말했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한국경제

오늘 남북 당국회담 무산 北, 25일 금강산개최 제의

북한은 18일 금강산 관광 협성화를 위한 당국회담을 오는 25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수정 제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19일 열기로 했던 이 회담은 무산됐다.

북한은 또 진화통지문을 통해 23일

로 예정된 제2차 남북협력추진위 회의를 다음달 5일, 제6차 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28일 각각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금강산 개최'란 장소 문제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태웅 기자 rednel@hankyung.com

북, 당국회담 수정제의 남 "이산방문 전제돼야"

북측은 18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남북당국회담을 오는 25일 금강산에서 열고 수정 제의했다. 또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3일 예정)도 다음달 5일 금강산에서 열고 제6차 장관급회담을 당초 예정대로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산가족방문(10월16~18일) 일정과 당국 회담 개최 장소 등 남북간 기존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수정제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 당국자는 이날 북측의 이 같은 회담일정 수정제의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장소 문제도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길기자 31anycall@sed.co.kr

北, 설악산회담 제의 거부

25일 금강산개최 수정제의

북측이 당초 19일로 예정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남북 당국회담을 이달 25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수정 제의했다. 또 23일의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는 11월5일, 6차 장관급회담은 합의대로 이달 28일 개최하되 장소는 금강산으로 하자고 밝혔다.

장관급회담 북측 김형성 단장은 18일 전화통화문을 보내 이같이 말하고 미국의 테러 사태와 관련해 남측이 비상경제조치를 완화한다면 언제라도 4차 이산가족 상봉을 할 용의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측은 지난 16일 2차 금강산회담과 경추위를 금강산에서 하자는 앞서의 북측 제안에 대해 관례에 따라 각각 설악산과 서

울에서 하자고 밝힌 바 있다. 또 6차 장관급회담은 평양에서 열자는 입장이다.

김단장은 전통신문에서 "4차 읍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의 서울 피견담 1주일 앞두고 귀국이 불의에 북한군 동향을 놓고 대책을 논의한 다음 전 군과 경찰에 비상경제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6.15 북한공동선언의 근본 정신 등을 위반한 일종의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측이 우리쪽에 책임을 전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장관급회담 정도는 해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영기자 cyoung@kyunghyang.com

北 '25일 금강산서 당국회담' 제의

경협위도 새달5일 개최 통지

북측은 18일 금강산당국회담을 오는 25일에, 남북경협추진위 2차회의를 다음달 5일에 각각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해 왔다. 북한은 이날 오후 김형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 이첩으로 남측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전화통화문에서 남측의 비상경제대세 강화조치를 비난한 뒤 이같이 제안했다. >관련기사 4면

북측은 오는 28일 평양에서 열린 예정인 6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해서도 회담장소를 금강산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북측이 강한 이주로 남측의 비상경제대세법 비난하면서도 그동안 세차례 보낸 전통신문에서 문제삼은 '안전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남북대화에 대한 나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협의할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kdaily.com

대한매일

2001. 10. 19 (금)

朝鮮日報

2001. 10. 19 (금)

매일경제

2001. 10. 19 (금)

남북 육로회담 끝내 무산

北 금강산 개최 주장 되풀이

나영필 기자

북한은 18일 금강산 육로회담을 25일, 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28일), 경협추진위는 다음달 5일 열자고 입장을 변경해 제의해 왔다. 그러나 이들 회담 장소를 모두 금강산으로 제의해 기존 주장된 뒤였다.

이에 따라 각각 19일, 23일 연립 예정이던 제2차 금강산 육로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는 자동 무산됐다.

북한은 이날 오후 김형성 장관급회담 북측단장 명의로 전통신문 보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제시하고 "귀측은 우리측의 상의할

터무니없이 견고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회담 무산의 책임을 전가했다.

전통신문은 이어 "귀측에 의해 조성된 현 난국을 지체없이 타개한다면 우리는 읍어진 가족 방문단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면서 "장소문제를 내걸고 회담 개최를 저해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마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금강산 육로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는 사실상 무산됐으나 장관급회담은 개최 여지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에서 모든 당국간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

다"면서 "(북측 전통신문에) 책임전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입장을 재조정하는 등 장관급회담은 계속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관 기관과 협의할 거쳐 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확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측은 그 동안 홍순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두 차례 전통신문을 발송해 "이산가족 교환 방문을 조속히 재개하고 금강산 육로회담은 설악산에서, 경협추진위는 서울에서 열자"고 제의했었다.

이에 앞서 북측은 남한 내 '안전선상'을 들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의 연기를 홍보하고 모든 회담을 '안전한' 금강산에서 하자고 제의했었다.

北, 회의장소 금강산 고집 2차 南北회담 무산 위기

북한은 18일 남북 장관급회담 김형성 북측 단장 명의의 전화통화문 홍순영(洪淳瑛)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보내, 양측 회담 장소에 이견이 있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원회 2차 회의의 각각 25일과 11월 5일로 연기하고, 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28일 개최하되, 모두 금강산에서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앞서 홍순영 수석대표는 이산가족 4차 교환방문을 조속히 이행하고, 19일의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과 23일로 예정된 남북경협추진위원회 2차 회의의 각각 설악산과 서울에서 갖자고 제의했었다.

/송민기기자 ginko@chosun.com

정부, '금강산 고집' 北 제의중 장관급회담만 선별수용 검토

정부는 10월에 예정된 각종 남북회담 가운데 북측이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열리고 제의해온 제6차 장관급회담만 선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북측이 역수경 제의해온 장관급회담 일정과 장소문제를 검토했으며 이르면 20일쯤 북측에 수용 여부에 대한 전화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관광 활성화 회담과 경협추진위가 서울에서 열릴 차례인 반면 장관급회담은 북측서 열린 차례"라며 "평양에서 열려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측이 계속 금강산을 고집할 경우 불가피하게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장관급회담은 모든 남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현재 국민 여론이 회담 재개에 부정적이지만 장관급회담을 통해 북측의 이산가족 일방 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개를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은 18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전화접촉을 통해 보낸 김영성 장관급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전통문에서 25일 금강산관광 당국회담, 28일 제6차 장관급회담, 내달 5일 경협추진위를 모두 금강산에서 열자고 수경 제의했다.

김영성기자 yskim@kmib.co.kr

南北경색 다시 풀리나

금강산 장관급회담 정부 수용 가능성

북측의 이산가족 교환방문 일방연기로 촉발된 남북 경색분위기가 다소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측이 18일 각종 회담의 금강산 개최장소를 되풀이하는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긴 했지만 회담의 날짜를 다시 정해 남측에 역제의하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정부도 장관급 회담만큼은 열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찾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북측 장관급 회담 김영성 단장 명의로 보내온 전통문에 대한 대책을 논의, 북측의 제의가 기존입장에서 별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회담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분 수용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北 "원래대로 28일 금강산서"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지만 중추적인 회담인 장관급 회담 만큼은 개최, 북측의 입장을 들어 보고 우리 입장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회담수용을 시사했다. 특히 회담 장소에 대해 이 당국자는 "당초 장관급 회담은 남측과 북측에서 번갈아 열게 되어 있고 3차회담은 제주도에서 열렸기 때문에 금강산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 부처간 조율을 거친 뒤 정리된 입장을 내주초 북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북측은 18일 보내온 전통문에서 "북남사이에 대화를 어떻게 하든 진전시켜나가기 한다"고 진제하고 "19일 일기로 한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은 25일, 경협추진위 2차회의는 11월 5일, 6차 북남상급회담은 예정대로 28일에 모두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이산방문 연기' 이유밝히

이날 전통문은 지난 16일 남측수석대표 홍순영 통일부장관이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일정을 새로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 당국회담은 설악산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는 서울에서 각각 예정대로 개최하고자 제안한 전통문에 대한 회담이다.

특히 북측은 전통문에서 이산가족 일방연기에 대해 "귀측(남측)이 이산가족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도적 방문을 앞둔 시기에 그 무슨 전례 공백을 메운다는 미명 하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공군무력까지 새로 끌어들이는 것은 분명히 우리(북)측을 자극하는 적대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 주목을 끌었다.

/이현중기자 loehun@umhwa.co.kr

정부, 장관급회담 평양개최 고수

北측 '금강산' 제의 거부

정부는 28~31일로 예정된 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지는 북측 제의에 대해 일단 평양개최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관계부처간에 향후 남북대화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일단은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

다"면서 "북측이 지난 18일 전화통지문을 보내 금강산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한 요구는 받아들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뒤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우리측 입장을 통보할 예정이다.

●진경호기자 jade@kdaily.com

世界日報

北 금강산제의 6차장관급회담 정부, 평양개최 고수키로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자고 북측이 제의한데 대해 정부는 일단 평양개최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주 초 홍순영(洪淳瑛)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금강산은 장관급 회담 개최 장소로 여러가지 면에서 부적절한 점이 많다"며

"북측이 안전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평양보다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각에서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수용 방침을 거론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정부가 북측의 제안을 검토하는 대전제는 남북간 회담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정진기자 jjj@sgt.co.kr

한겨레

정부 '장관급회담 먼저열자'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북측 단장의 전화통지문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결과, 6차 장관급회담을 먼저 열자고 북측에 제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추스리기 위해선 다른 회담보다 장관급회담(28일)을 먼저 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관례에 따라 평양 개

최를 북측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과 국민여론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북측의 반응에 따라서는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다음주 초 홍순영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장관급회담 정부, 수용검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후 모든 당국간 회담장소를 금강산으로 고집하는 북한 제의에 대해 정부는 19일 장관급회담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전남 북측이 역제외해 온 남북회담 일정(25일 금강산 회담, 28일 장관급회담, 다음달 5일 김형주추진위)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의 모든 현안을 논의하는 장관급회담만큼은 개최해 북측 입장을 들여보고 우리측 입장도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면서 "주말에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주 초까지 정부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지난 3차 장관급회담을 제주도에서 열었던 전례도 있어 회담장소를 굳이 서울, 평양으로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남북한 지역에서 번갈아 회담을 연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북측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므로 금강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일정을 새로 확정하기 전에는 모든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는 북측 제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東亞日報

장관급회담 평양 개최 정부, 北측에 제의키로

정부는 28일로 예정된 6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수정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북측이 각종 회담을 금강산으로 제안했지만, 우리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현재 상태로는 받아들여기 어렵다"며 "북측과 장소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당국간 회담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갖고 있다"며 "다만 금강산은 회담장 시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장관급회담 개최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DJ "남북대화에 한-미방위 중요" 부시 "월드컵 테러방지 적극 협력" 푸틴 "공치 한국어획량 보장 노력"

■ 한-미-중-러 정상 대화록

19일 오후 상하이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우리 친구'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는 지난 3월 첫 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을 '이 사립'이라고 지칭했던 것과 비교가 된다.

◇ 한-미 정상회담

부시 대통령=우리가 하는 대테러 작전은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반드시 테러범을 잡겠다. 테러가 일어나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지를 보여 주겠다.

김 대통령=부시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미국 국민을 단합시키고 국제적으로 연대를 끌어내 테러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미국의 팽방으로서 우리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

부시 대통령=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연락장교단을 파견기로 했으니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자.

김 대통령=부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한-중-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우리 대북정책을 지

지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부시 대통령=우리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한 끝에 대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는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한) 김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가.

김 대통령=9-11 테러사태 이후에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려 철도연결사업과 '육로관광사업' 이산가족 문제 등을 협의했다. 그러다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됐다.

부시 대통령=왜 연기됐는가.

김 대통령=미국이 대테러전쟁과 관련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경제체제를 강화한 걸 이유로 연기했다.

부시 대통령=연기 이유를 미국쪽에 돌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김 대통령=남북대화를 추진하는데서 한-미 연합방위가 가장 중요하다. 방위를 흔흔히 하는 가운데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부시 대통령=동의한다. 귀국하면 내년 (한국서 열리는) 월드컵과 이시안게임의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 한-중 정상회담

김 대통령=중국에 축하할 일이 많다.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고 경제도 잘된다. 지난 9월 방북이 남북관계에 기여한 걸을 평가한다. 현재 상당히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쩌민 주석=중국은 남북한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지난 9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우선 남북한 정상회담이 잡혔다고 얘기했다. 또 '가는 것이 없으면 도리에 맞지 않다'는 중국 격언을 인용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건의했다. 최근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는 일시적 현상이길 바란다.

◇ 한-러 정상회담

김 대통령=(지난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결과를 설명해 달라.

푸틴 대통령=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위원장도 동감을 표시했으며 김 대통령에 호의를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남북관계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통령=공치 문제는 한국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푸틴 대통령=남쿠릴알도의 한국 어선 공치조업 문제는 한국의 어획량 확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 우리는 이 문제를 (러-일간) 영토 문제와 무관한 상업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일본이 영토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과 윈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상하이/박찬수 기자 pcs@hani.co.kr

경향신문

'금강산 장관급회담' 수용검토

정부, 당국회담·경추위와 분리...내주 NSC회의서 결정

정부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6차 장관급회담을 북측 요구대로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활성화 위한 2차 당국간 회담은 오는 25일, 2차 남북경협추진위는 다음달 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북측 제의는 거부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장관급회담이 남북관계를 촉박하는 만큼 이를 넘어 4차 이산상봉 임진 등을 제조 장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입장"

이라며 "남북을 오가며 번갈아 회담한 관례에 따라 일단 회담 장소로 평양을 제시하되 북측 반응에 따라 금강산도 검토할 수 있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주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6차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 장소 등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해 북측에 전화통지문답 보낼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6차 장관급회담마저 연기될 경우 자칫 남북관계가 예상 밖으로 장기간 소강국면에 빠질 우

려가 있다"며 "6차 장관급회담의 개최가 이번에는 북측인 만큼 금강산 수용할 수도 있지만 회담 여건이 엄약하고 '북측에 또 끌려다니느냐'는 등의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김홍재(金弘宰) 공보관은 "회담 장소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검토된 게 없다"며 "6차 장관급회담 장소가 금강산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명기자

ciyoung@yungghyang.com

남북장관급 회담 28일부터 평양서 갖자

정부, 對北통지문 보내

정부는 22일 북측에 진화통지문을 보내 제6차 장관급회담을 관례대로 금강산이 아닌 평양에서 오는 28일부터 갖자고 거듭 재의했다.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 명의로 김영성 장관급회담 북측단장에게 보낸 진화통지문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4차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장관급회담 역시 상호성의 원칙과 관례에 따라 평양에서 열

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안전성을 내세워 금강산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남측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남북회담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금강산에서 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북측이 회담 연기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할가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조선직접지회 대변인은 단화통 통해 "남측은 무엇보다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태도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北, 당국회담 일정수용 촉구 조평통 "南 비상경계태세 완화하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일 남측에 대해 비상경계태세 등을 완화하고 북측이 제안한 당국 회담 일정수용을 촉구했다고 촉구했다. /권민기사 5면

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보도 제811호'를 통해 "남측이 진실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란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분위기를부터 일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중앙방송 등이 21일 전했다.

조평통은 북측이 지난 18일 장관급 회담 김립총 북측단장 명의로 진화통

지문 등에서 남측이 최근 '비정상적인 긴장조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음을 상기시킨 뒤 북측의 적극적 입장에 "남측은 아무런 호응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비방·중상으로 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기국은 이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남관계 개선에 나가기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사업은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하루 빨리 해결하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며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영기자 cyoung@kyunghyang.com

문화일보

28일 6차 장관급 회담

정부, 평양서 개최제의

정부는 22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명의로 북측에 진화통지문을 보내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방문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고 오는 28일부터 열릴 예정인 6차 장관급 회담은 평양에서 열자고 재의했

다. 정부는 이날 장관급회담 북측수석대표인 김영성 단장명의로 보낸 전문문에서 북측이 지난 18일 6차 장관급회담 2차 금강산 육로 회담, 고향추진위 2차 회의등을 모두 금강산에서 열자고 재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장관급 회담을 평양에서 열어 다른 회담의 일정등을 재조정하자"고 밝혔다.

/이현종기자 lchun@munhwa.co.kr

世界日報

北, 회담지연책임 南에 전가

조평통 "北서 제안한 일정 수용" 촉구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북측이 제안한 남북 회담 일정을 수용할 것을 남측에 촉구하며 회담 지연 책임을 전가했다.

조평통 서기국은 '보도 제811호'를 통해 "우리(북한)측은 남측이 진실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란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환경과 분위기를부터 일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평양방송과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노동신문은 20일 논

평을 통해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연기된 것은 남한이 긴장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 입장은 그 전에 나온 것과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한 것이며 우리 입장도 달라질 게 없다"며,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우리 입장을 전문문을 통해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측은 지난 18일 6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재의했으며, 남측은 평양 개최를 고수하고 있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한국경제

北, 남북회담 일정 수용 거듭 촉구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통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은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남측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분위기를부터 일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측이 제안한 남북회담 일정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자 논평을 통해 "북한이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수석(10월2일)에 하자고 재의했으나 남측이 10월 중순으로 미뤄 놓았다"며 남측을 비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주한美軍 전투기 추가 배치 대응 北 “경계강화·군사력 증강”

북한은 21일 미국의 한국 내 전투기 추가 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대세 강화를 통해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미군의 전투기 추가 배치가 한반도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경계대세 강화를 통해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전면적인 경계대세 하에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달 초 아프가니스탄 군사공격에 따라 중동으로 이동한 서태평양지역 항공모함과 일부 공군 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반도에 공군력을 증강 배치했다. /연

한겨레

2001. 10. 22 (월)

북, 장관급회담 일정 수용 촉구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북쪽이 제안한 장관급회담 등의 일정을 받아들일 것을 남쪽에 촉구했다.

조평통 서기국은 20일 '보도 제811호'를 통해 "우리(북한)쪽은 남쪽이 진심으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란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환경과 분위기부터 일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경양방송)과 (조선중앙방송)가 21일 보도했다.

연합, 정재권 기자 jik@hani.co.kr

① 중앙일보

2001. 10. 22 (월)

北, 돌연 對南비난 공세

祖平統 “비상경계조치로 대결분위기 조성”

북한은 6차 남북 장관급 회담 등을 금강산에서 하자는 자신들의 요구를 남측이 수용하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 당국을 직접 겨냥해 비난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2일 북한측에 유감 표명과 함께 당국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대북 전홍문을 보내기로 해 지난 12일 북측의 일방적인 이산상봉·회담 연기 통보로 빚어진 남북 당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20일자)를 통해 “전군(全軍)과 경찰에 비상경계 조치까지 취하면서 민족 내부에 대결 분위기를 조성한 책임이 남측에 있다”면서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남측의 부당한 처사는 결국 동족인 우리를 주적으로 취급하는 데 근원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경향신문

2001. 10. 22 (월)

東亞日報

2001. 10. 22 (월)

北, 곧 全軍경계령 中통신 “주한미군 증강 대응”

북한이 최근 한국 내 미군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전군경계령을 내릴 것이라고 중국의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전투병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북한의 조치라는 것.

신화통신은 미국이 최근 새로운 공군전투병력을 한국에 배치시키고 군사물자 등을 증강하는 데 대해 북한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측은 21일자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북한은 이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군사력 또한 증강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김정인기자)

credo@dcnga.com

조평통 ‘당국회담 수용’등 對南공세 계속

평행 달리는 南·北

북한이 4차 이산상봉 연기 및 각종 회담의 금강산 개최 이유로 내세운 남쪽의 비상경계조치를 두고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측은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보도문을 통해 ‘주적론’과 한나라당까지 거론하며 “민족 내부에 대결 분위기를 조성한” 남측은 “우리측이 납득할 수 있게 분위기부터 일신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북측의 주장은 외견상 ‘우리는 회담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남측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함으로써 대화의 지평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남측이 평양 개최를 고수해 6차 장관급회담 등이 연기된 경우 그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미국의 아프간 공격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금강산 관광대가 미납금 등 북측의 요구사항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자 시간을 두고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북측이 “부당한 처사” “도덕적 저열성”을 운하며 정부와 한나라당 등을 강도높게 비난함으로써 남측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북측은

北 시간두고 정세 추이 관망 南 곤혹속 北제의 수용 검토

이날 한나라당을 겨냥해 “북남 사이의 긍정적인 시대 발전급 비방증상하는 대만 매단려왔다”며 “북남관계에 끼여들 체면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제1당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급 한층 곤혹스럽게 만든 것이다. 자칫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정부는 현재 북측 제의대로 6차 장관급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찌꿍 북측과 만나야 이산 상봉을 늦춘 속내도 알 수 있고 회담 일정도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1일 방영된 중국편영 CCTV와의 회견에서 무어꼭질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선택의 갈림길에 선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재영기자 cijyoung@kyunghyang.com

장관급회담 평양개최 北에 제의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28일 평양에서 갖자고 북측에 수전 제의했다. 홍 장관은 22일 김영성 장관급회담 북측단장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2차 김협추진위 및 금강산 육로회담 등 당국회담 일정은 장관급회담에서 재조정해지고 밝혔다.

북측은 그러나 이남자 노동신문 논평에서 "장소문제로 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법도 되지 않는다"고 거듭 지적, 남북 제의의급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홍 장관은 진통문에서 "북측이 안전성 을 내세워 이산가족 행사를 연기하는 등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합의사항 이행 일정을 다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북측은 18일 2차 금강산 육로회담 과 김협추진위를 각각 25일과 다음달 5일 로 연기하고 6차 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28일 개최하되, 모두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장관회담 평양서 갖자"

정부, 北에 제의

남북 장관급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측 김영성 단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측이 '안전성'을 이유로 이산가족 교환 방안을 연기하고 당국회담 장소로 금강산만을 고집,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6차 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28일 평양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송仁희기자 ginko@chosun.com

중앙일보

2001. 10. 23 (화)

정부, 장관급회담 평양개최 제의

정부는 22일 금강산 판공 당국회담 무산 등으로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북측 단장인 김영성 내각 책임참사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북측이 안전성 문제라는 것을 내세워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기하는가 하면, 당국간 회담 장소

로 금강산만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장관은 "지난달 서울서 열린 5차 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일정을 다시 정하되, 특히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우선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남북대화 불씨 살려낼까

정부가 남북 장관급 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19일)과 김협추진위 2차 회의(23~26일)가 무산된 상황에서 당국협의를 주축을 이끈 장관급회담마저 무산될 경우 부임이 지지않기 때문이다.

남북 당국 대화는 지난 3월 북측의 일방적 불참으로 반년간의 공백기를 겪은 끝에 지난날 15일 5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향후 시나리오를 다시 짜는 데 성공했지만, 재 한담도 되지 않아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장관급 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이 22일 김영성 북측단장에게 보낸 대북 진통문에서 "지난 5차 회담의 합의사항 이행 일정을 다시 정하고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8

정부 "장관급마저 무산돼서야"

北 고자세- 당분간 호응 없을듯

일부러 평양에서 6차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 요구에 호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북측 안측은 지난 12일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를 시작으로 열흘간 판문점 전화통지문 등을 통해 '평화식' 입장관방을 밝히면서 상당히 강경이 상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참조>

특히 북측은 노동신문 20일자에서 "가짜 인도주의 모자를 벗어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5차 회담 비공개 합의과정까지 거론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무산책임을 남북에 떠넘겼다.

또 같은날 조평통은 대북 시각지원 동과 관련해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한, 치계 비중이 줄린 데다, 6차회담의 협력사업은 어느 일방이 선심이나 쓰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미국의 반(反)테러전에 대한 문제를 의식에 '장소(금강산)문제를 과민반응으로 정세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며 "북측이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무산조치를 취하고도 '대(對)북' 주장에 밀려 그냥 넘긴 게 장소 상을 보여줄 뿐"이라며 오히려 공세를 펼친다는 지적이다.

자성북도 제기된다.

5차 장관급 회담의 합의 내용은 ▶금강산 육로(528)관 ▶경의선(京義線)연결 ▶인진강 공동수방대책 ▶북한 군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비무장지대(DMZ) 관련 사항이 지난 10월 12일 판공 당국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인진강 공동수방대책 ▶북한 군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비무장지대(DMZ) 관련 사항이 지난 10월 12일 판공 당국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북한이 미국의 반(反)테러전에 대한 문제를 의식에 '장소(금강산)문제를 과민반응으로 정세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며 "북측이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무산조치를 취하고도 '대(對)북' 주장에 밀려 그냥 넘긴 게 장소 상을 보여줄 뿐"이라며 오히려 공세를 펼친다는 지적이다.

최근 남북간 입장공방

10월 12일	판공 당국회담	남측은 판공 당국회담을 위한 2차 당국회담(19일)과 김협추진위 2차 회의(23~26일)가 무산된 상황에서 당국협의를 주축을 이끈 장관급회담마저 무산될 경우 부임이 지지않기 때문이다.
10월 15일	5차 장관급회담	남북 당국 대화는 지난 3월 북측의 일방적 불참으로 반년간의 공백기를 겪은 끝에 지난날 15일 5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향후 시나리오를 다시 짜는 데 성공했지만, 재 한담도 되지 않아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10월 18일	장관급 회담	장관급 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이 22일 김영성 북측단장에게 보낸 대북 진통문에서 "지난 5차 회담의 합의사항 이행 일정을 다시 정하고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8
10월 22일	장관급 회담	장관급 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측 김영성 단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측이 '안전성'을 이유로 이산가족 교환 방안을 연기하고 당국회담 장소로 금강산만을 고집,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6차 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28일 평양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10월 23일	중앙일보	정부는 22일 금강산 판공 당국회담 무산 등으로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10월 23일	조선일보	남북 장관급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측 김영성 단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측이 '안전성'을 이유로 이산가족 교환 방안을 연기하고 당국회담 장소로 금강산만을 고집,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6차 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28일 평양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장관급회담 평양서 열자”

홍통일, 북한에 제의

정부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8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수정 제의했다.

정부는 22일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 명의로 북측에 전달한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이 제의하고, 북측이 이

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홍 장관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금강산관광 합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등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일정을 다시 정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제6차 장관급회담 평양서 28일 열자

정부는 22일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김령성 대표단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6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28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홍 수석대표는 전평문에서 “북측이 안전성 문제라는 것을 내세워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기하고 장관급회담 등의 장소로 금강산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6차 장관급 회담에서) 지난해 제5차 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일정을 다시 정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협의하자”고 북측에 촉구했다. 홍 수석대표는 특히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선차적 과제로 이를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산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남측이 6·15 공동선언을 함께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북한)측의 거듭되는 대화, 제의를 성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금강산 개최 요구를 되풀이했다.

redael@hankyung.com

경향신문

“장관급회담 28일 평양서 갖자”

‘금강산회담 불가’... 정부, 北에 수정제의 전통문

정부는 22일 남북 장관급회담 홍순영(洪淳瑛)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6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28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또 4차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금강산관광 합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기존 합의사항의 미이행에 유감을 표시하고 이번 장관급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문단 교환을 우선 실현하는 한편 다른 회담 일정을 재조정하자고 촉구했

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8일 6차 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담 개최지로 제시한 금강산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당국간 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홍 수석대표는 이날 김령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에게 보낸 전통문에서 “귀측이 안전성 문제를 내세워 이산상봉을 연기하고, 각종 당국간 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사이에 국제사회의 반

대러 움직임 등 최근 정세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6차 장관급회담에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측은 지난 18일 김령성 단장 명의로 전통문에서 2차 금강산회담은 25일, 6차 장관급회담은 28일, 2차 김주위는 다음달 5일 금강산에서 하자고 밝혔다.

최재영기자

cyyoung@kyunghyang.com

정부, 장관급회담 28일 평양 제의

북에 전화통지문 보내... 방문단 교환 우선 실현 촉구

정부는 22일 홍순영 남측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이름으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6차 장관급회담을 28일부터 평양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홍 수석대표는 이날 판문점 인라관 검측을 통해 김령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금강산 관광 합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등은 이 장관급회담에서 일정을 조정 하자는 뜻을 밝혔다.

홍 수석대표는 “북측이 안전성 문제라는 것을 내세워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기하는가 하면, 당국간 회담 장소로 금강산만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 사이에 국제사회의 반대러 움직임 등 최근 정세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제5차 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일정을 다시 정하고 향

후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선차적 과제로 우선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국제사회의 대 테러조치와 한반도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부시 미국 대통령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지지했다”며 “북측도 당국간 회담을 계속한다는 방침인 만큼 북측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대화에 성실하게 나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회담 장소문제로 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며 “북측이 북남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6·15 공동선언을 함께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북한)측의 거듭되는 대화 제의를 성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25일 금강산관광 당국간 회담, 28일 제6차 장관급회담, 11월5일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 모두 금강산에서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재진 기자 jik@hani.co.kr

정부 "평양서 장관급회담" 제의

北 "비상경계 해제" 또 주장

정부는 22일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오는 28일로 예정된 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관례에 따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 이듬으로 보낸 전봉문에서 정부는 "북측이 '안전성' 문제를 내세워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기하고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6차 장관급회담을 28일부터 평양

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당국간 회담, 남북경협추진위 등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의 일정을 다시 정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측은 그러나 지난 19, 20일에 이어 이날도 조선직업자회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강조하며 남측이 비상경계조치부터 해제할 것을 주장, 6차 장관급회담이 성사되지 미지수다.

●전경호기자 jade@kdaily.com

정부, 장관급회담 평양개최 제의

"28일 열자" 北에 통지문 보내 北선 금강산개최 거듭 주장

정부는 22일 남북장관급회담 홍순영(洪淳瑛)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6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28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홍 수석대표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경협추진위,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등의 회담일정은 장관급회담에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기하는가 하면 당국간 회담장소로 금강산만을 고집하고 있어 5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지 못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22일자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회담 장소 문제로 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며 "남측이 북남대화물소중히 여기고 '6·15공동선언'을 함께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북한)측의 거듭되는 대화 제의를 성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남측이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회담을 금강산이 아닌 설악산에서 하자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당국간 남북은 서로 회담을 제의하지만 회담장소 때문에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장관급회담 28일 평양서"

정부, 北에 제의

나영필 기자

정부는 제6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28일 금강산이 아닌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22일 북측에 거듭 촉구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 명의의 이 통지문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김령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앞으로 전달됐다.

우리측은 전봉문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등의 회담일정은 장관급회담에서 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홍순영 수석대표는 "북측이 안전성 문제를 내세워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기하는가 하면 당국간 회담 장소로 금강산만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 사이에 국제사회의 반테러 움직임 등 최근 정세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제5차 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일정을 다시 정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선차적 과제로 이를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18일 남측에 전달한 김령성 단장 명의의 전봉문에서 오는 28일 제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고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를 이달 25일과 다음달 5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朝鮮日報

2001. 10. 24 (수)

“장관급회담 금강산서” 北, 평양개최 제의 거부

북한은 28일로 예정된 6차 장관급회담을 평양에서 하자는 우리 측 제의가 있는 자 하루 만인 23일, 또다시 금강산에서 회담을 갖자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김원성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우리 측 홍순영(洪淳瑛) 수석대표 앞으로 보내,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이날 중으로 회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측 제의가 ‘남쪽은 불안하고 금강산은 안전하다’는 데서 출발한 것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仁執기자 ginko@chosun.com

“금강산서 장관급회담” 北, 평양개최 제의 거부

북한은 23일 김원성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6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다시 제의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에 대해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이날, 늦어도 25일에는 “평양에서 장관급회담을 하자”는 내용의 진중문을 제차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이날 홍순영(洪淳瑛)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전달된 진중문에서 “상(장관)급회담 자체를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2회씩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제주도에서 가졌던 전례에 비취널 때 금강산에서 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영기자

한겨레

2001. 10. 24 (수)

“장관급회담 금강산서” 북한 거듭 제의

북한은 23일 김원성 장관급 회담 북측 단장 이름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6차 장관급 회담을 28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거듭 제의했다.

북한은 낮 12시에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보낸 진중문에서 “우리(북) 쪽의 거듭되는 제안은 상급(장관) 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두 차례씩 하고 지난해 9월에는 남쪽 제주도에서 열었던 전례(3차 회담)에 비취널 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오늘(23일) 중으로 답을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24~25일께 북측에 답신을 보낼 예정이다. 이재훈기자 nomad@hani.co.kr

경향신문

2001. 10. 24 (수)

남북 회담장 지루한 ‘핑퐁게임’

전통문 8차례 ‘줄다리기’

남북이 6차 장관급회담 등 각종 당국 회담 장소를 두고 지루한 ‘기싸움’ 하고 있다. 북측은 모든 회담 개최지로 금강산, 남측은 평양(장관급회담), 설악산(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회담), 서울(2차 남북경협추진위)을 주장하고 있다. 남북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의 진중문을 내보냈다.

양측의 줄다리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가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무관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북측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북측은 지난 18일 장관급회담 김원성 북측단장 명의의 진중문에서 장관급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강조했다. 하지만 남측의 반발을 의식한 듯 “안전성이 담보된”이라는 표현을 썼다.

또 2차 경추위와 2차 금강산회담 날짜도 수정 제의했다. 23일 제차 금강산을 제시하면서도는 니콜의 논리도 내세웠다. 3차 회담을 제주에서 했으니 이번은 평양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예기했다

北측 목소리 조금씩 낮아져 南도 경색부담 오래안갈듯

정부는 이에 대해 일단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측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확고하다면 장소를 두고 다투기보다는 만나서 이산 상봉 등을 논의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합의사항 협의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에는 이같은 판단이 깔려 있다.

문제는 남측 내부의 여론이다. “이산 상봉도 안하면서 무슨 회담이나” “북한 요구대로 끌려가지 마라”는 비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금강산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정부는 장관급회담 일정 조정 등 북측의 수정 제의의 기조 완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여론 추스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남측이 금강산용 수용해 다음달 중순 전에 장관급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최재영기자 cyoung@kyunghyang.com

중앙일보

2001. 10. 24 (수)

“장관급회담 금강산서” 北, 기존 입장 再통보

정부 난색 표명

북한은 6차 장관급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22일·대북 진중문)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히고 오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열자는 기존 입장을 23일 제차 통보해 왔다.

<관련기사 7면>

장관급 회담 북측 단장인 김원성 내각 책임참사는 판문점을 통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측은 특히 “오늘 중으로 이에 대한 대답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이같은 중 북한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

<yilee@joongang.co.kr>

남북대화 이달 재개 어려울듯

北, 우리 제의 거부 금강산 고집

북한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남북 장관급회담을 평양에서 하지는 우리측 제의를 거부한 채 금강산 개최를 거듭 요구함에 따라 극적인 삼강변화가 없는 한 조만간 남북대화가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23일 김영성 장관급회담 북측단장 이첩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6차 북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하자는 우리(남)측의 거듭되는 제안은

상급회담 자체를 평양과 서울에서 2회씩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제주도에서 가졌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라며 금강산 개최를 거듭 주장했다. 북측은 또 이남측 이에 대한 대답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열어 북측의 금강산 개최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전경호기자 jade@kddaily.com

대한매일

2001. 10. 24 (수)

世界日報

2001. 10. 24 (수)

6차 南北 장관급 회담 北, 금강산 개최 제제의

북한은 23일 김영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6차 장관급회담을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다시 제의했다. (관련기사 8면)

북측은 이날 낮 홍순연(洪淳瑛)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전달된 진중문에서 "우리측의 거듭되는 제안은 삼강회담 자체를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2회씩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귀속 지역 제주도에서 가졌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는중으로 이에 대한 대답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진중문에서 북측은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유관 부처와 협의할 거처야 하는 만큼 이날중 북측에 답을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홍순연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제6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28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윤심희기자 shyoon@sgt.co.kr

한국일보 2001. 10. 24 (수)

北, 평양장관급회담 거부 금강산개최 다시 요구

북한은 6차 장관급회담을 평양에서 갖자는 남측 제의를 일축하고, 금강산 개최 입장을 23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평양 개최를 다시 재의할 것으로 알려지 남북 대화가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연(洪淳瑛)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내 온 전화통지문에서 "삼강(장관급)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2회씩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제주도에서 가졌던 전례로 볼 때, 금강산에서 하지는 우리(북)측의 거듭된 제안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또 이날(23일) 중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준기자 djlce@hk.co.kr

한국경제 2001. 10. 24 (수)

北 "장관급회담 금강산서" 회담장소 남북 기세싸움

북한은 23일 제6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다시 제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북측 제의에 대해 24일 '평양에서 열자'고 역제의를 방침이어서 회담개최 장소를 둘러싼 남북간 기세싸움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날 장관급회담 김영성 북측 대표단장 명의로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연 통일부 장관에게 진중문을 보내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금강산에서 하자는 제안은 장관급회담 자체를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2회씩 하고 지난해 10월(3차회담)에는 남측지역 제주도에서 가졌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태용 기자

redaei@hankyung.com

매일경제 2001. 10. 24 (수)

北, 장관급회담 또 금강산 주장

내영필 기자

북한이 23일 오는 28일 일일 예정인 제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또다시 제의했다.

북한의 전화통지문은 특히 "오늘 중으로 대답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회담이 불발에 그칠 경우 그 책임이 남측에 있음을 전가하려는 최후통첩 심격을 보였다.

북한은 이날 김영성 장관급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진중문에서 "그

동안 북남상급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2회씩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제주도에서 가졌던 전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며 장관급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새해 제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진중문에서 북측은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유관부처와 협의할 거처야 하는 만큼 이날중 북측에 답을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東亞日報

2001. 10. 24 (수)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北, 南측에 거듭 제의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金榮成) 단장은 6차 장관급회담을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23일 거듭 제의했다.

북한은 이날 김 단장 명의로 홍순연(洪淳瑛)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낸 진중문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오늘(23일) 중으로 이에 대한 대답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취재일기

‘오만한 북한’ 누가 키웠나

최근 남북한은 당국회담의 장소를 금강산에서 하나의 문제를 놓고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금기가 북측은 23일 6차 장관급 회담을 기존 주장대로 금강산에서 28일부터 열자는 대남 전통문을 보내면서 “오늘 중으로 답을 달라”고 고지서를 보냈다.

그동안 북한의 전화통지문과 대남 방송 등 10여건의 내용에는 상대를 때리려는 의도가 내세워져 있었지만, 이번처럼 최후통첩성 단서까지 있는 경우는 없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테러전쟁과 관련, 테러방지를 위한 우리측의 비상대비태세를 문제삼아 “언제 미사일이 발사될지 모르는 위험한 남측에 이산가족을 실은 비행기를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세기 넘는 이산의 아픔 끝에 ‘죽기 전에 한번 가족을 보게 된다’며 발정을 삼키던 2백명 이산가족의 발목을 잡아가는 너무나 근색한 핑계임은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한술 더 떠 지난날 서울 5차 장관급 회담 막사에서 인도적 지원의, 식량 지원을 해달라며 손을 내밀던 북측은 “어느 일방이 선심쓰는 죄 하지마라” (20일·조평통 서기국 보도)며 태도를 비쳤고, 심지어 ‘가짜 인도주의의

모자를 벗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문제는 북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남북간 합의의 손바닥 뒤집듯 해도, 우리측으로부터 ‘당근’을 얻는 데는 차질이 없고, 인제문 전통문 한장으로 남측 당국자들은 다시 회담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북한당국의 오만한함을 우리가 키웠다는 얘기다.

이산상봉 과정에 따른 국민적 심판감을 고려하겠다는 ‘금강산 회담 불가’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장관급 회담이

만약 깨지면 큰일”이라며 어떻게든 간을 놓지 않으려 연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외연한 자세를 기다리며 북측이 이성을 되찾고 회담장에 재발로 나올 때를 기다렸으면 한다. 회담장소를 둘러싼 시비는 결국 미국의 테러전쟁, ‘적절한’ 상봉대상자의 고갈 등으로 장고(長考)가 필요한 북측의 시간벌기 키드러는 점을 인정해주고 결코 서둘지 말라는 것이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남북관계 진전에 아무 보탬이 될 수 없다.

<yjlee@joongang.co.kr>



이영준 기자 통일외교팀

금강산 아니면 회담 못한다?

北, 이상한 트집잡기

북한이 지난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행사를 임박적으로 연기한 이후, 남북한 당국은 10여일 동안 장관급회담 등 3개 당국회담의 장소를 놓고 공방(攻防)을 계속하고 있다.

10여일 신경전 계속

북측은 지난 12일부터 23일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의 전통문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장관급회담과 금강산관광 합심화 회담,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의 등을 모두 ‘안전한’ 금강산에서 하자고 거듭 제의했으며, 우리 측은 16일과 22일 홍순영(洪淳瑛)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에서 장관급회담은 평양, 금강산관광 회담은 설악산,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의는 서울에서 갖자고 맞섰다.

‘남측 비상경계’ 이유

현 정부 들어 남북한이 회담 장소를 놓고 이치된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인 적은 없다. 이번 사태는 북측이 남한의 비상경계태세와 F15E 증강 배치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문제삼은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우리 측이 평양에서 갖자고 제안한 장관급회담마저 금강산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측이 ‘안전성’을 명분으로 한 금강산 당국회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북한 당국이 금강산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회담을 안하겠다는 것이란 분석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안하겠다는 태도”

한 당국자는 “남북관계에 불만을 가진 북한 군부가 비상경계태세를 구실로 제동을 걸고 있어 대남부서가 당분간 대화와 교류를 중단하려는 생각에서 계속 금강산을 내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석대로라면 남북관계는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동결될 전망이다.

/김민기기자 ginko@chosun.com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거부

정부 ‘평양’ 거듭제의

정부는 24일 오후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갖자는 북측 제안을 거부하고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거듭 제의했다.

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 명의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측이 5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평양에서 6차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경협협력추진위 등 당국간회담 일정을 새로 장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5면)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6차 장관급회담의 평양

개최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북측이 남측 지역의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확보해줄 경우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여는 방안을 수용하지는 의견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추후 정부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23일 김영성 장관급회담 북측단장 명의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6차 장관급회담을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단장은 전통문에서 “6차 북남 상급회담을 금강산에서 하자고 한 우리측의 거듭되는 제안은 상급회담 자체를 평양과 서울에서 2회씩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귀족지역 제주도에서 가졌던 전례에 비취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기자

장관급회담場 금강산 고집

北 노림수·속사정 뭇가

남북한이 제6차 장관급회담 장소를 둘러싸고 명분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안전성을 내세워 금강산을, 남한은 관례를 앞세워 평양을 고집하고 있다. ... 포문을 먼저 연 것은 물론 북한이다. ... 지난 12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시작으로 전화통지문과 노동신문 등 통일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금강산 개최를 외치고 있다. 23일 진통문에서는 작년 9월 제3차 장관급회담이 제주도에서 열린 전례가 있는 만큼 북한에 ...

는 북한 군부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를 지켜본 뒤 대화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거기다 평양 동자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지는 등 남한에 공개 하강 시련은 임박해, 발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남한과 고민도 크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일반적으로 연기한 미당에 북한 요구대로 금강산 회담에 응할 경우 ...

군부분만 의식 시간법기
평양등지에 비상경계령
공개못할 사정 있을수도

남한은 이에 맞서 북한이 일반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 미당에 남한지역의 안전성까지 문제 제기가 금강산을 고집하는 것은 수동할 수 없다며 관례대로 평양 개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북한이 제주도에서 제3차 회담이 열린 전례를 내세운다면 북한의 불만 제주도에서 회담이 열려야 맞다는 논리까지 동원하고 있다. ... 북한이 이처럼 남한이 선뜻 수용하기 힘든 금강산 회담장소로 고집하는 데에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속도조절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빠르게 진행되는 남북관계에 비해 얻은 게 별로 없다

어 여간 고민이 아니다. 양측은 그러나 대화의 끈을 다시 잡으려는 노력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8일과 23일 김영성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진통문에서 직접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남한에서는 대화재계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신중 대응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 이에따라 북한이 안전성문제와 일정 등에 대해 좀더 유연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경우 우리 정부도 이를 명분으로 금강산 회담을 수용하는 활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기자 yskim@kmb.co.kr

문화일보

6차장관급회담 연기될듯

北, 금강산 개최 거듭 제의 정부선 '평양 고수' 재확인

정부는 24일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전날 북측이 6차 장관급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고 다시 제의한데 대해 이번 장관급 회담은 평양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촉구했다. ... 이에따라 북측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초 28일로 예정된 장관급 회담의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진통문에서 장관급 회

담은 평양과 서울을 번갈아가며 열렸던 전례에 따라 이번 회담은 평양에서 열려야 하며 북측이 '안전성'이 보장된 금강산에서 열리는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 이외합계 정부는 이날 오후 총선연 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를 열어 북측이 장관급 회담 등 당국간 회담의 개최 장소로 금강산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논의, 이번 6차 장관급 회담은 평양에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중기자 lechun@munhwa.co.kr

北 회담장소 '금강산' 고집 무슨 속사정 있나

당초 숨기쁘게 돌아갈 것만 같았던 10일의 남북 쟁전이다. 공백으로 끝날 것 같다. 북한은 지난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답 통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방문 연기를 일반적으로 선언한 후 남북경협추진위원회(경추위)와 금강산관광 회담은 물론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언던 장관급회담마저도 금강산 개최를 요구해 급행연차를 탐 것만 같았던 남북관계는 계속 '멈춤' 상태다. ... 겉으로 드러난 북측의 주장은 남측의 '비상경계조치'로

하는 이유를 '대화의지 부족' 등 다른 데서 찾고 있다. 즉 북한 지도부가 '지금엔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대화를 계속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시간도 빔고 대화유보의 명분도 쏘으며 대화 자체를 피해보겠다는 '입석이조' 포석이 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등 이슬람권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렇 나라도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테러 공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평양공개 부담-대화의지 부족' 추측
"군부분만-對이슬람권 의식 속도조절"
쌀-전력지원 등 협안 손해 감수해야

남측과 입장 한 거리를 유지. 이슬람권과의 커넥션을 유지 하겠다는 의

신변위협이 있기 때문에 회담은 안전이 보장된 금강산에서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오랜 관례와 사전 약속,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금강산관광 회담은 설악산에서, 경추위 제2차 회의는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은 평양에서 열리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분간 해결해도 마땅치 않다. ...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회담 입장을 제조정하는 등 대화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 만, 금강산이라는 장소 문제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은 유감스럽다"며 "평양을 남측에 공개하지 못하는 북한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측이 받을 수 없는 카드는 것을 변히 알면서도 북측이 굳이 회담장소를 금강산으로 고집

교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다른 하나는 개방 여과를 우려하는 군부 감경파 등 내부 불만을 달래고 남측이 집착하는 금강산 육로관광을 의식, 금강산에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는 의도도도 분석되고 있다. 즉, 북한의 달려박스인 금강산관광 대가값 마지 받아내기 위해 회담장소로 금강산에 집착한다는 해석이다. ... 셋째로 비합-비공개주의 원칙으로 하는 북한의 행정 스타일상 일반 주민들로부터 격리되고, 북측이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는 남한 언론을 통제하는 데도 유리해 금강산을 고수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관광 대가, 함진락-영해봉과 등 '발을 깎'이 많은 북한으로서는 '잘못 둔 포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조정진기자 jii@sgt.co.kr

① 중앙일보

2001. 10. 25 (목)

남북 장관급회담 장소 "묘향산도 가능" 수정제의 정부, 北에 입장 전달

정부는 24일 오전 장관급 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제6차 장관급 회담의 평양 개최를 재차 강조하면서, 묘향산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장관은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중심협의체라는 중요성과 상징성, 그리고 회담 진행의 편리성을 고려할 때 평양 개최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북측이 평양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평양 인근인 묘향산에서 개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영홍 기자

<yjlee@joongang.co.kr>

● 東亞日報

2001. 10. 25 (목)

"장관급회담 묘향산서 열자" 홍통일, 북한에 제의

정부는 제6차 장관급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되 북측에 사정이 있다면 평양 인근인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에서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정부는 24일 장관급회담 남북 수

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 명의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뒤 "북측이 (대남전통문에서)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진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유익하면서 남북회담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朝鮮日報

2001. 10. 25 (목)

"6차 장관회담 묘향산도 무방"

洪통일, 北에 제의

남북 장관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은 24일, 북측이 23일 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갖자고 한 데 대해, 김경성 북측 단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평양 개최"를 재차 주장하면서 "북측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묘향산도 무방하다"고 제시했다.

홍 수석대표는 전공문에서 "남북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은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사'라면서 "장관급회담이 6·15 공동선언 이행의 중심 협의체라는 중요성과 상징성, 회담 진행의 편리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송仁執기자 ginko@chosun.com

한국일보 2001. 10. 25 (목)

남북회담 '묘향산카드' 묘안될까

■ 정부서 수정 제의 불씨 살리려 교육책 北 수용여부 불투명

정부가 24일 6차 장관급회담을 '묘향산'에서라도 열자고 수정제의 한 것은 어떻게든 남북회담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교육책이다. 정부의 묘향산 카드는 기존의 '평양 고수'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지만 일관되게 '금강산 개최'를 고집해 온 북측이 이를 수용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실 북측이 '남조선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내놓은 금강산은 실질적으로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 어려운 곳이다. 유일한 회담장인 금강산여관은 온수도 나오지 않는다.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진동한다. 1월 3차 직심자회담 때는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 놓고 민찬을 해야 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대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한 회담을 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는 북측과 회담장소를 놓고 승강이만 되풀이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6개월만에 합의한 2차 금강산 육로회담(19일)과 경협

추진위(23일)가 개진 상황에서 장관급회담마저 무산된다면,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산가족 행사 등이 아예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남측의 대북 불신 여론이 증폭돼 남북관계가 끝 없는 동면(冬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북측이 주장하는 '안전성' 문제를 비껴가면서, 회담의 끈을 놓지 않는 묘향산 '묘안'을 내놓았다. 묘향산은 평양에서 1시간 40분 정도면 갈 수 있고, 향산호텔 등 회담장소도 구비돼 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장관급회담 묘향산도 가능"

정부, 北측에 입장 전달

정부는 24일 6차 장관급회담을 평양 인근 묘향산에서 개최해도 좋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 개최 주장을 고수해 온 북측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 명의의 대북 전화통지문에서 "장관급회담이 6·15 선언을 이행하는 중심협의체라는 중요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평양에서 여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평양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묘향산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홍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장관급회담 등 남북 당국자 회담에 대한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한편 북측은 23일 '제6차 북한 상급(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다시 요구해 왔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정부 "평양 안되면 묘향산서"

북에 장관급회담 전통은

정부는 24일 남북 장관급회담 홍순영 수석대표 이듬의 전화통지문을 북쪽에 보내 6차 장관급회담을 평양에서 열지고 거둬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쪽이 평양 개최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평양 근처인 묘향산에서 여는 것도 무방하다는 뜻을 전했다.

홍 수석대표는 김명성 북쪽 단장 앞으로 보낸 전통신문에서 "장관급회담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중심협의체라는 중요성과 상징성, 회담 진행의 편리성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은 평양에서 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북쪽이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어가기 위한 진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유익하며, 남북회담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은 우리 거래는 물론 국제사회

의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전통신문에서 회담 개최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쪽이 시일이 촉박해 회담을 예정대로 28일 개최하기가 어렵다면 며칠 늦춰도 좋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hani.co.kr

"장관급회담 묘향산 무방" 북에 평양개최 재촉구

정부는 24일 남북 장관급회담 홍순영(洪淳瑛)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쪽에 보내 6차 장관급회담의 평양 개최를 재차 촉구하고 다만 이곳이 어렵다면 인근 묘향산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표는 전통신문에서 "장관급회담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중심협의체라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번 6차 회담은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한 뒤 "평양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평양 인근의

성과 상징성, 회담 진행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볼 때 평양에서 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북쪽이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어가기 위한 진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유익하며, 남북회담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영기자

cyoung@kyunghyang.com

"장관급회담 묘향산 개최도 무방"

정부, 북에 전화통지문

정부는 24일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6차 장관급회담을 평양이나 묘향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 이듬의 전통신문에서 "장관급회담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중심협의체라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번 6차 회담은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한 뒤 "평양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평양 인근의

묘향산에서 개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회담 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북쪽이 적절한 시기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묘향산 개최 제의는 북쪽의 거둬진 금강산 개최 주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북쪽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북쪽은 지난 23일 김명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이듬으로 보낸 전통신문에서 6차 장관급회담을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고자 제의했다. >전검호기자 jade@kdaily.com

대한매일

南北, 회담장소 '줄다리기'

회담장소를 둘러싸고 남북이 지루한 실랑이를 이어가고 있다. 북쪽이 지난 12일 제4차 이산가족 상봉(16~18일 예정)을 앞둔 시점에서 연기한 뒤 각종 남북회담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19일로 예정됐던 금강산 당국회담과 23일의 남북경협추진위 2차회의가 이미 무산됐고 28일의 6차 장관급회담도 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24일 장관급회담 장소로 '평양'이 어렵다면 묘향산은 어떨까 고 제3안을 제시했다.

회담장소 공방 북쪽은 지난 12일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연기한 뒤 23일까지 5차례 전화통지문을 남쪽에 보내 향후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주장했다. 미국의 대대러전경에 따른 남측의 비상경계조치를 구실로 삼았다. 남측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금강산에서 회담을 갖자는 주장이다. 다만 북쪽은 지난 18일 김명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이듬으로 보내온 전통신문 이후 남한의 안전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있다. 23일에는 "평양과 서울에서 2회씩 하고, 제

주도에서도 가졌던 만큼 이번에는 금강산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안전문제' 대신 '관례'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남측은 4차례 전통신문을 보내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향후 회담을 이전에 합의된 장소에서 열 것을 일관되게 촉구했다. 정부는

北 금강산 고집에 수정 제의

군부서 평양방문 제동 추정

경색국면 오래가진 않을듯

그러나 24일 6차 장관급회담 장소로 평양도, 금강산도 아닌 묘향산을 제시하며 북쪽의 의중을 타진했다.

북한의 속내와 남측 대응 북쪽은 5건의 전통신문에서 남측의 비상경계대체할 강도높게 비난하면서도 대화의지는 꾸준히 강조해 왔다. 처음엔 남한의 안전문제를 거론했으나 남측이 강력히 반발하자 슬며시 '관례'를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10여일간 무려 9건의 전통신문이 오간 점도 이례적이다.

정부 당국은 이런 정황이 북한 지도부 내 강은 길들에서 벗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대화의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품어온 군부 중심의 강경론자들이 제동을 걸면서 남북대화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북한전문가는 "북쪽이 원시교 금강산을 회담장소로 고집하는 것은 남측 인사들이 이른바 '혁명의 수도' 평양을 무시로 드나들 경우 주체사상의 순수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군부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24일 묘향산을 장관급회담 장소로 제의한 것은 이런 판단을 바탕에 두고 있다. 남북간 파행이 장기화해선 안된다는 점과 이산가족 상봉 치질에 따른 국민정서, 남북대화를 둘러싼 북한내부의 혼란 등을 두루 감안한 조치인 것이다.

'묘향산 카드'에 북쪽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다만 대화재개를 둘러싼 남북의 활발한 움직임을 비추 최근의 경색국면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전검호기자 jade@kdaily.com

10월중 남북간 회담장소 공방 일지

- 12일 > 북, 4차 이산가족 상봉, 태권도시범단 교환 연기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12일 > 남, 이산가족상봉 앞둔 연기 합의, 즉각적인 합의 이행 촉구 (홍순영 통일부장관)
- 13일 > 북, 금강산 당국회담 금강산 개최 제의 (김명성 장관급회담 북측단장)
- 16일 > 북, 남북경협추진위 2차회의의 금강산 개최 제의 (박성림 남북경협추진위 북측위원장)
- 16일 > 남, 금강산 당국회담 설악산 개최, 남북경협추진위 서울 개최 촉구 (홍순영 통일부장관)
- 18일 > 북, 6차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주장 (김명성 장관급회담 북측단장)
- 22일 > 남, 6차 장관급회담 평양 개최 촉구 (홍순영 통일부장관)
- 23일 > 북, 6차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주장 (김명성 장관급회담 북측단장)
- 24일 > 남, 6차 장관급회담 평양 또는 묘향산 개최 제의 (홍순영 통일부장관)

남 “대테러용”...북 “적대 행위”

■ 북 왜 '비상경계령' 문제삼나

정부 “북 불쾌할 수는 있지만 과민반응”

“북 처지에선 미군증강 실제 불안” 분석도

북한은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미국의 9·11테러사태에 따른 남쪽의 비상경계태세를 이유로 들었다.

이 때문에 장관급회담 등 각종 당국회담 일정이 삐걱거리고 남북대화 전반기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미군 전투기의 한반도 추가 배치와 한국군·경찰의 경계태세 강화 등 두가지다.

정부는 미국 테러사건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 직후 국방부 위기조치반을 가동하고 전군에 경계 강화조치를 내렸다.

군 관계자는 북한쪽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이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경계태세 강화로 남한 방문에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경계강화 조치는 세계적인 테러위협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당연한 기본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계를 강화했다고는 하지

만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정규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방어준비태세(대포관)과 주한미군의 부대방호태세는 평상시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 당국은 상황 발생 며칠 뒤 주요 지휘관에 대해 통신연락망을 확보하고 상황근무와 주요시설 경계를 강화하는 정도로 수준을 조정했다. 경계태세도 테러 이전과 비슷하고 군 장병들의 휴가·외박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쪽이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미군 전투기의 한반도 추가 배치부분이다. 한미연합사는 지난 2일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키티호크 전단이 출동하자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F-15E 전투기를 남한 내 공군기지에 추가 배치했다. 군 당국은 비슷한 사례가 99년 3월 코소보 사태 때에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이런 조치가 대북 적대시 정책에 따른 것으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9·11 테러사태 직후 한국군이 위기

조치에 들어가자 비슷한 경계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 초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언기’한 뒤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군사적 대응능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와 주한미군의 조치는 북한과는 관계없이 1차적으로 테러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를 남북관계 전반의 경색으로 몰고가려는 것은 과잉반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느끼는 불안이 남쪽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한 관계자는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에 따르면 유사시 미군전력증강을 1단계로 해 점차 북한에 대한 대응 감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다”며 “북한 처지에서는 미군 전투기 추가 배치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테러사태와 이어진 군사적 움직임이 북한 내부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면서 “북한 당국으로선 대미 적개심 고취를 통한 내부 통합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朝鮮日報

2001. 10. 26 (금)

“장관회담 금강산서”
北, 거듭 주장

북한은 24일, 우리 측이 23일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평양이나 묘향산에서 갖고 제의한 데 대해, “회담 장소는 주최 측이 선정하면 상대방이 이를 존중해 따르는 것이 북남간의 관례”라면서 “금강산 개최”를 거듭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남북 장관급회담 김원성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홍순영(洪淳瑛) 우리 측 수석대표 앞으로 보내, “쌍방이 한번도 마주앉아 본 바 없는 묘향산을 제기한 데 대해 이행할 수 없으며, 금강산도 산이고 묘향산도 산인데 금강산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6차 북남 상급(相級)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언제나 금강산 지역의 문을 열어 놓고 귀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회담장소 문제에 관해 입장을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송민기기자 jinko@chosun.com

정부 '금강산 회담' 검토

북한은 25일 오후 김원성 장관급회담 북측단장 이름의 전화통지문을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에게 보내,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일차고 거듭 제의하고 “남측이 회담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28~31일로 잡힌 회담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남북이 회담장소 문제로 계속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고 보고,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른 11월 초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전평문에서 “(남측이) 금강산은 굳이 반대하면서 쌍방이 한번도 마주앉아 본 바 없는 묘향산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이행할 수 없다”며 “금강산 지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남측이 회담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권 기자 jik@hani.co.kr

중앙일보

2001. 10. 26 (금)

장관급 회담 금강산 개최 수용때까지

北, 당국 대화 연기 통보

북한은 25일 6차 장관급 회담(당초 28일 여정)의 장소로 주장해온 금강산을 남측이 수용할 때까지 당국대화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남북간 회담은 장소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로 상당기간 소강상태를 맞는 게 불가피해졌다.

장관급 회담 북측 단장인 김원성 내각 책임장사는 판문점을 통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대남 전평문에서 “6차 북남 상급(相級·장관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언제나 금강산지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남측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호응해 회담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송단장은 “주최측이 회담 장소를 선정하면 상대방이 이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북남사이의 관례”라고 주장하고 “그동안 회담을 평양·서울에서 각 2회하고 남측 제주도에서 한번 진행했으므로 이번엔 북측 금강산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대화를 미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東亞日報

2001. 10. 26 (금)

28일 장관급회담 사실상 무산

北 묘향산 개최도 거부... 금강산 고집

북한은 6차 장관급회담을 평양 또는 묘향산에서 개최하자는 24일 남측의 수정제안에 대해 거부사실을 밝히며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이처럼 회담장소를 둘러싸고 남북이 10차례나 전평문을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변함없이 금강산을 회담장소로 고집하여 따라 28일로 예정됐던 장관급회담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김원성(金源成) 단장은 25일 판문점을 통해 전한 대남 전평문에서 “회담 장소를 회담 주최측이 선정하면 상대방이 이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북남사이의 하나의 관례”라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그는 “6차 북남상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하여 언제나 금강산 지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남

측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호응하여 회담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남북이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남한측이 금강산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북측이 당분간 회담을 뒤로 미루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신중하게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장관급회담 무산될듯

北, 묘향산 개최 남측 제의도 거절

내영필 기자

북한은 25일 오는 28일 워싱턴 예정인 제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또다시 제의했다.

이는 건담 평양 외에 묘향산 개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우리측 제의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어서 28일 장관급회담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오우 김령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여러 회담 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온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굳이 반대하면서 방향이 한 번도 마주앉아 본 바 없는 묘향산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어 "산은 금강산도 산이고 묘향산도 산인데 구태여 금강산을 반대할 이유가 있을 수 없다"면서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언제나 금강산 지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남측이 회담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또한 "회담장소를 주측이 선정하면 상대방이 그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북남 사이에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다"면서 "그 동안 장관급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2회씩,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 번 진행했으므로 이번에 금강산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제6차 장관급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평양 인근 묘향산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북한에 전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장관급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연기된 남북관계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북측이 평양과 묘향산 개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장관급회담의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8일 장관급회담 연기될듯

北, 금강산 개최고수

북한은 25일 6차 장관급회담을 묘향산에서 개최하자는 우리측 타협안(24일)을 거부한 채 금강산에서 열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오는 28일 일기로 합의한 6차 장관급회담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령성 내각 책임차사는 판문점을 통해 홍순영(洪淳瑛) 남측 수석대표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금강산도 산이고 묘향산도 산인데 구태여 금강산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회담장소를 회담 주최측이 선정하면 상대방이 그를 존중하고

따른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김령성 단장은 "6차 북남상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하여 언제나 금강산 지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남측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호응하여 회담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최종 입장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장소 문제에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측은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은 6차 장관급회담 개최 장소를 두고 10여일간 무려 10건의 전통문을 주고받았다.

윤상환기자 shyyoon@sgt.co.kr

한국경제

2001. 10. 26 (금)

북한 '묘향산 회담' 거부 장관급회담 사실상 무산

북한은 25일 장관급회담을 묘향산에서 열자는 남측 제의를 거부하며 "금강산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장관급회담 북측 김령성 대표단장 명의로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측에서 제6차 회담을 제주도에서 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측에서 조건없이 응한 사실을 보이도 이번 회담을 금강산에서 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특히 "금강산을 굳이 반대하면서 방향이 한 번도 마주 앉아 본 바 없는 묘향산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장관급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태용 기자

redael@hankyung.com

경향신문

2001. 10. 26 (금)

北, 묘향산개최도 거부

장관급회담 연기 불가피

남북 장관급회담의 북측 김령성 단장은 25일 남측 홍순영(洪淳瑛) 수석대표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6차 장관급회담을 평양 또는 인근 묘향산에서 열자는 남측의 제의를 거부하고 거듭 금강산 개최를 제언했다.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6차 장관급회담은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단장은 전통문에서 "귀측이 3차 북남 상(장관)급회담을 제주에서 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측이 조건없이 응한 만큼 이번에 귀측이 금강산에서 회담을 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반대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회담 장소를 주최측이 선정하면 상대방이 그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관례"라고 각조

했다. 김단장은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굳이 반대하면서 방향이 한번도 마주앉아 본 바 없는 묘향산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금강산도 산이고 묘향산도 산인데, 구태여 금강산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6차 북남 상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언제나 금강산 지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남측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호응해 회담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번 회담 일정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장소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영기자

ciyoung@kyunghyang.com

북, 묘향산 회담도 거부 남북관계 교착 길어질듯

북한은 25일 남측이 전날 6차 장관급 회담을 '묘향산'에서 개최해도 무방하다고 수정제한에 대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장기 교착국면에 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측은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낸 전문문에서 "금강산도 산이고 묘향산도 산인데 구태여 금강산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귀측(남측)에서 제3차 북남 상급(장관급) 회담을 제주도에서 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북)측에서 조건없이 응했다"고 밝혔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한국일보

2001. 10. 26 (금)

기자의 눈

이동준 정치부 기자



북북이 최근 당국간 회담을 싸고 벌인 공방을 보면, 한달 전에 장관급회담 합의문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남북은 25일까지 모두 10차례의 전화통지문을 주고 받으며 회담장소만 논의하고 있다.

사실 논쟁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다. 북한이 모든 당국간 회담을 북측 지역에서, 금강산에서 열

자고 고집하는 것은 남

해 경계태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불안한 남조선에 우리 인민을 보낼 수 없다'며 이산가족 행사를 일반적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은 장관급 회담에는 부적합하다. 유일한 회담장인 금강산여관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유령의 집'과 같다. 당분간 회담을 하지말자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회담이 가능한 평양 인근의 묘향산은 어떠한 우리측

제의에 대해서도 '금강산도 산이고 묘향산도 산이다'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북한에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남의 일'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미국이 침략할 수 있다고 실제로 믿고 있다. 남한에서 한미 양국

이 군사훈련을 할 때면

모든 북한 주민들은 지하 방공호에 숨어야 한다. 반미(反美)의식 고취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외부 일(테러사태)'을 걸어 불과 한달 전의 당국간 합의를 비튼 것은 자가당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 스스로 강조해온 '민족 자주'를, 여기서 이것이 때문이다.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6·15 선언 첫 조항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djlee@hk.co.kr

자가당착 '금강산 고집'

北 회담장소 금강산고집 왜?

걸으론 '안전문제' 속으론 '지연작전'

남북한이 제6차 장관급 회담의 개최 장소를 둘러싸고 지난 12일부터 25일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10차례나 전문문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북측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사태로 남측에 내리친 비상경계태세를 문제삼아 '안전성이 보장된' 금강산에서 회담을 열자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대해 정부는 북측의 정세인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회담을 평양에서 열거나 아니면 평양에서 시간 여정도 떨어진 묘향산에서 열자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북측은 25일 보낸 전문문에서 "금강산도 산이고 묘향산도 산인데 구태여 금강산을 반대할 이유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금강산을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북측이 비상경계태세로 남측 정세가 위험하다는 심황인식하여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일반적으로 연기하고, 각종 회담도 모두 안전성이 보장된 금강산에서 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北에 더 끌려다닐수 없다"

우리측 일단 냉각기 고려

금강산을 받아들일 경우 북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북측의 일련의 무례한 행동에 비관없이 끌려다니는 국민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회담도 아니고 6·15 공동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장관급 회담의 장소로는 최악인 금강산에서 하자는 것은 사실상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회담장인 금강산 여관은 이미 10여년이 넘게 사용하지 않은 건물로 그동안 응급수리를 해 직신자 회담, 금강산 육로 회담등 소규모 회담을 치렀지만 불편한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전기 시설이 좋지 않아 하루에 몇시간씩 정전되는 것은 예시이고 난방도 안돼 회담 관계자들이 추위에 떨면서 회담을 해야 하는 곳이다. 지난 1월에 일련 3차 직신자 회담때는 회담 대표들이 너무 추워서 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민찬애는 장전으로 햇볕을 쬐 놓고 식사를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는 '회담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은 금강산을 자주 고집하는 것은 당분간 회담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중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금강산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계속 삽입이만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북측과 다시 합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현준기자 loohun@munhwa.co.kr

정부 장관급회담 '고뇌'

北 금강산고집에 경고

정부가 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할지를 두고 경고에 들어갔다. 화해·협력작업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4차 이산상봉 일정 조정 통합의할 과제가 신더미같이 대회는 서급한 데 북측이 평양이나 인근 묘향산에서 회담하자는 남측 제의를 거부하고 그 대신 금강산으로 뜻을 박은 데 따른 것이다.

북측은 지난 25일 전희룡지문을 통해 "상급(장관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언제나 금강산 지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남측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호응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측의 태도로 미뤄 일단 회담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전희룡에서 금강산에서 회담해야 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밝힌 것은 지난달 5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대화의 끈'을 끊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북측은 전희룡에서 주최측이 회담 장소를 정하는 게 관례이며 3차때 남측이 제주를

내렸을 때 조건없이 응했으니 이번에는 자신들의 제의에 따르면이라고 촉구했다. 남측을 자극했던 "안전성이 담보된 금강산"이란 말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선 "아무래도 여유있는 우리가 양보하는 게 어떨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이에 대한 공감대도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기싸움을 하다 자칫 남북관계가 침체되는 니 얼굴을 빚대고 이산상봉, 금강산 육

로관광, 경의선 연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게 낫다 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안전성' 운운하는 바람에 장소가 최대 이슈가 됐지만 사실 이는 회담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경우 비관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당분간 북측과 남각각을 가지면서 내부적으로 여야와 여론 주도층 등을 상대로 장관급 회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펼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재영기자 cyoung@k.yunghyang.com

매일경제

2001. 10. 27 (토)

장관급회담 무산

정부 당분간 접촉중단

정부는 26일 장관급회담 개최장소로 금강산만을 고집하는 북한과 당분간 접촉을 끊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일 열릴 예정이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무산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금강산만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달 중에는 전화공지문을 보내지 않고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연기에 이어 각종 당국간 회담도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남북관계의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전날 김령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전희룡을 보내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거듭 제의하고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언제나 금강산 지역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남측이 회담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싸움보다 대화가 우선’ 여론 눈치보며 수용검토

국지는 "북측이 '안전성' 운운하는 바람에 장소가 최대 이슈가 됐지만 사실 이는 회담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경우 비관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당분간 북측과 남각각을 가지면서 내부적으로 여야와 여론 주도층 등을 상대로 장관급 회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펼칠 방침으로 알려졌다.

世界日報

정부, '금강산회담' 딜레마

정부가 6차 남북장관급회담 재개를 두고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져 있다. 남측은 회담 장소를 둘러싸고 10건의 전희룡을 주고받는 '핑퐁식 공방'을 벌인 끝에 북측이 지난 25일 금강산 개최를 수용할 때까지 당국 대화를 미루겠다는 최후 통보를 보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8일 열기로 합의한 6차 장관급회담이 무산됐다. 정부가 북측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뒤뚱러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눠야 갈등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는 각종 선거와 월드컵축

北 "수용거부때 대화 연기" 최후통첩 보내

우리측 여론나빠 "이럴수도 저럴수도" 고민

구 개최 등 국내 일정이 빽빽한 점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는 경의선 연결 등 굵직한 현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정부 내부에선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부담을 오래 안고 갈 수 없는 만큼 금강산 개최를 받아들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을 계속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는 원칙 속에서도 장관급회담 개최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문제는 국내 여론이다. 북측이 지난 12일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국민의 대북감정이 극도로 악화됐다. 여기에서 북측의 의도 대로 금강산에서 회담을 열게 될 경우 끌려간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4일 평양 개최 방침을 바뀐 묘향산으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금강산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부

담이다. 북측은 '남한내 비상경계 태세' 등을 빌미삼아 정치적 공세를 펼칠 것이 뻔하다. 또 금강산에서 유일한 회담장인 금강산역은 회담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최근 몇년간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수시로 정전까지 일어난다. 지난 1월 3차 적십자회담때 회담 대표들은 너무 추위 회담을 일시 중단했고 만찬 때는, 정전으로 촛불을 켜놓고 식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1~2주일쯤 냉각기를 가진 뒤 여론 추스르기에 나서 11월 중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담을 재개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전직 장·차관들이 보는 남북관계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에 따라 남북관계는 또다시 냉각기로 접어들게 됐다. 북한은 테러전쟁을 빙미로 "회담을 금강산에서 하지"고 압박적으로 고집했고 우리측은 평양에서 할 차례이며 금강산은 안이라고 해 답장을 찾지 못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역대 정부 안보분야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은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당분간 불가피하다"며 "끌려다니지 말고 '오고 싶으면 오라'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정부에 충고했다.

“교착상태 당분간 지속 대화 강박관념 벗어나야”

니영갑 기자

-재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됐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다?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우리가 묘향산에서 하자고까지 했는데 장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북한이 지금은 회담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



한승주

북한이 금강산을 고집하며 안으려는 것은 금강산 관광대가 미납금에 대한 보장 등 경제 지원일 텐데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기도 어렵다. 이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상당기간 교착된 것이다.

-정부에 조언한다면.

▶한 전 장관=정부가

북한에 대해 상의를 보일 만큼 보였다. 이제는 저쪽에 자부 속구한다고 해결할

“北·美관계 불투명 회담할 엄두 못낼것”

북한이 인센티브가 생긴다는가. (회담을) 할

수 없는 사정이 해소돼야 남북관계가 제 궤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남장에 그런 난관들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북미관계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인데 한반도에 관심이 있을 여유가 없을 것이다.

▶공로명 전 “회담무산 실망 일러 외교부 장관=장관급회담이 무산



공로명

北에 시간여유 주자”

했다고 입회할비

하며 흔들릴 필요는 없다. 72년부터 시작한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 항상

업연다운이 있었다. 이번엔 (남북관계가) 끊어질 것은 북한의 세력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닌

기 생각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런 재약용 남을 것같은 기대를 가졌는데 여전히

아닌 상태로 남



송영대

“테러대비 경계 강화 북서 시비결일 못돼”

다. 중국의 북한인

문자들은 북한에 시간유 주자조 안한다. 5년, 10년, 적어도 2-3년 정도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도 3-5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교착 국면이 오래갈 것이다. 북한은 서음이 긴장되고 있다며 경계 대세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테러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 입장에서 (경계 대세를) 해제 못한다.

중요하다. 회담 장소 문제로 인해 회담이 무산됐는데 쌍방이 당초 합의했던 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에서 북한 주장에 의해 끌려다니는 것은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 원칙을 포기한 회담이 되서는 안된다.

경계대세에 대해 북한이 시비를 거는 것도 지적해줘야 한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경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남북장관급회담 무산

개최장소 이견 못 좁혀

당초 28일부터 4일간 열기로 합의했던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최 장소를 둘러싼 남북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됐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유관부처 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당정 협의(11월2일) 등을 갖고 회담 재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연기된 4차 이산상봉 재개, 금강산관광 협상회합을 위한 2차 당국회담, 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일정을 재조정하기 위해 6차 장관급회담이 다음달 중에는 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측 주장대로 금강산에서 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당분간 북측과 남각국을 가지면서 미국의 아프간 공격 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북측의 태도변화 등을 지켜볼 계획”이라며 “다음달 중 장관급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12일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유보할 일방, 통보한 이후 전화통지문을 9차례 주고 받았으나 각종 회담 개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2차 금강산관광회담(10월19일), 2차 남북경추위(10월23~26일) 등이 열리지 못했다. 남측은 회담 장소로 장관급회담은 평양 또는 인근의 묘향산, 2차 금강산회담은 설악산, 2차 경추위는 서울을 각각 주장했고 북측은 모두 금강산을 고집했다.

최재영기자, cyoung@kyunghyang.com

대한매일

남북대화 시간이藥일까

회담장소 서로 '버티기' 양상 南北당국, 상대 자세변화 기대

회담 장소를 놓고 지난 10여일간 심리 양이불 해운 남북이 이제는 '버티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북측이 금강산을 고집하고 있고, 남측 역시 금강산 개최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북측의 자세변화를 기다리는 행국이다. 이에 따라 12일 이후 10차례 전화통지문을 주고받으며 벌어졌던 남북간 팽팽공방도 한동안 그러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6차 장관급회담까지 무산된 만큼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주 안으로는 별다른 상정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북측이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먼저 회담장소로 금강산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북측 역시 남북 및 북·미대외외 관련, 각종 언론을 통해 행부채치립 똑같

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 치의 양보없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내각의 기관지 민주조선은 28일 “남측은 외부에서 벌어진 일을 구실로 전의를 삼발한 비상강경대세화에 밀어넣어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며 “전쟁의 위험이 피도는 속에서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시기 북남대화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토미스 허비드 주한미대사가 관훈토론회에서 북한과의 진세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한데 대해 “북의 무장해제를 노린 대화에까지 응하라고 생각한다면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분간 북측의 이같은 정책기조가 유지되었지만 오레가 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에너지·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시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전경호기자 jacob@kdaily.com

남북장관급회담 무산

北, 금강산개최 고집
당분간 냉각기 불가피

당초 28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제6차 장관급회담이 개최 장소를 둘러싼 남북 양측의 공방 끝에 무산됐다. (관련기사 5면)
남북 양측은 지난 12일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단과 태권도 시범단 교환 유보를 일방적으로 봉보한 이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8차례에 걸쳐 회담 관련 전화통지

문을 주고받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6차 장관급회담(10월28~31일)을 비롯해 제2차 금강산관광 환성회를 위한 당국간 회담(10월 19일), 남북경협추진위원회(10월 23~26일), 2차례의 등이 열리지 못했다.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회담 개최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제6차 장관급회담은 자동 연기됐다"며 "다음달 중순까지는 회담을 개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정진기자 jjj@sgt.co.kr

北 “南측서 대화분위기 해쳐” 비난

북한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된 28일 조종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등을 통해 남한을 비난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인터넷 판에 게재한 '평양 리포트'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보수세력에 의해 초

래된 장애를 배제하면서 대화를 통해 긴장상태를 타파해 나가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라고 밝힌 후 "회담장소를 내세워 대화를 연기시키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조정진기자 jjj@sgt.co.kr

대한매일

2001. 10. 29 (월)

남북장관급회담 끝내 무산

28일로 예정됐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 장소를 둘러싼 남북 양측의 공방 끝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북측이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유보시킨 뒤 금강산 당국간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 장관급회담 등 이달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3개 회담이 모두 무산됐다.

●진경호기자 jade@kdaily.com

日, 식량 20만t 對北지원 검토

【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식량 20만t을 지원해 달라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을 최근에 받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신케이(産經)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WFP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40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국제적인 대북 지원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이같이 요청했다.

한편 도쿄신문은 WFP가 지난 9월 조사한 북한의 식량실태를 급주 초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mam01@kdaily.com

世界日報

2001. 10. 29 (월)

“南보수층이 외세와 야합...北 압살” 주장

北언론에 비친 남북경색

당초 28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무기 연기됨에 따라 북한의 속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 무산은 표면적으로는 회담 장소에 대한 남북 양측의 의견 대립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현재의 국내외 정세를 바라보는 견해 차이와 관계 진전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

문제의 발단은 9월 11일 발생한 미국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 그리고 남한의 군경에

내려진 대테러 비상경계조치에 기인한다. 지난 12일 북측이 내세운 최초의 이유는 남측이 취한 '비상경계조치' 때문에 신변위협이 있

南비상경계조치에 불만 北군부 입김이 작용한듯 전문가들 “정세오판” 분석

으므로 회담도 '안전한' 금강산에서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20일 '가짜 인도주의 모자를 벗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한 내의 '실벌한

시대'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남한이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구실 아래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들을 배치해 정세를 긴장시켜 '북도 경계태세 돌입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도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부시 행정부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정세가 바로 북남 사이에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24일과 26일 특정 정당과 군부 등을 거론하며 "일부 보수층이 북한을 '주적'으로 자목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모해 압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조종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28일 "(북한은) 비상경계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주한미군 공군전력의 한반도 추가배치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합의가 북한이 불만을 갖게 된 한 원인"이라며 "이는 국방부 성명에서도 나타났듯 북한의 과민 반응"이라고 말했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반테러 대비태세를 문제삼은 것은 "정세오판이자 북한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과민반응"이라며 북한 군부쪽 입김이, 막혀들어간 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해석했다.

/조정진기자 jjj@sgt.co.kr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정부, 수용방안 신중검토

재개방안 주내 집중 논의

정부는 개회장소로 둘러싼 남북한 야간으로 부산권 6차 장관급회담과 관련, 북측 주장을 수용해 금강산에서 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일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갖는 것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위원 회개부처 협의와 이번 주내에 잇따라 열고 회담 재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6차 장관급회담이 다음달 중에는 재개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북측 요구대로 금강산에서 회담을 갖는 방안도 논의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북측의 금강산

주장 수용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회담의 이점이 필요한 때가 이나"며 수용가능성을 내비쳤다.

북측은 모든 회담을 금강산에서 갖자고 고집한 반면 남측은 2차 남북 김담추진위는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은 평양 또는 요항산에서 갖자고 주장해왔다.

北 95년 이래 최대풍작 불구

식량 137만t 여전히 부족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 식량개발(WFP)은 29일聯合 北한이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351만t의 식량을 수확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약

137만t의 식량이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구에 따르면 北한의 구제식 수확량은 쌀 133만9000t, 옥수수 148만2000t, 감자 47만1000t, 기타 작물 7만4000t 등으로 추계됐다. 이 같은 식량 생산량은 지난 95년 407만7000t을 기록한 이래 최대 풍작으로 서, 지난해 수확량 257만3000t에 비해 38%의 증산량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식량당 392만9000t, 가축사료당 30만t, 총지용 141만4000t 등 국내 필요량 501만1000t에 비하면 146만7000t에 턱없이 부족하고 상업적인 차원에서 수입할 10만t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부족량은 137만t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일보

對北정책도 '레임덕' 오나

李 총재 "대선前 답방 정치악용 우려 반대"

남북협력기금법 한·자공조로 개정 방침

북측이 이산가족 교환방문권을 일방적으로 부산시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력도 이당의 견제로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정책이 이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28일 보도진 조찬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장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총재는 "남북문제와 관련해 이용되는 것은 싫다"고 반대한다고 전제하고 "남북정상

회담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내 신계를 앞두고 김정일 답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답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총재의 이같은 언급은 합기내에 김위원장의 답방을 심사시켜 평화정책의 제도화할 이뤄 내리는 김대중대통령의 구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 전문가들은 김위원장이 남측에 거대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답방을 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은 그동안 김위원장의 김호문제의 답방 반대분위기를 민감하게 생각해 왔는데 거대야당이 답방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서울에 옵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외집계 한나라당은 자민련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협력기금법은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할 받고 조성과 사용은 정부가 국회동의없이 전제적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야당이 재출발 개정안은 1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의 조성과 사용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

대북협상카드가 사실상 없어지게 돼 대북협상할 입장이 야당의 허락할 받고 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내에서는 이미 정부가 제6차 장관급 회담의 장소로 북측이 주장하고있는 금강산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북한에 끌려다니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 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내의 물론 미국도 최근 부시대통령이나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우리 정부와 사전조율 없이 대북정책을 밝히고 있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이 최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올해 초에 이어 또 김위원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인물"이라고 비난, 북측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북-미 관계 개선이 계속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황장엽 씨의 반미문제에 대해 미국 공화당 입법부와 야당이 정부에 함께 반미활동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한씨죽도 북한에 생화학무기에 대해 증언할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이회창기자 lchun@munhwa.co.kr

“인내 갖고 대화를” -

전문가 대담 / 꼬이는 남북관계 해법은...

미국의 '대테러 공격' 이후 북한이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남북관계도 답보상태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대담으로 남북관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짚어줬다. 조씨는 "정치군사적 칼림들의 제거가 절실하다"며 "남북의 두 정상이 다시 만나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씨는, "적대성의 해소가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방법으로는 "기존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실천하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해 시각차를 보였다. 대담은 25일 오전 본사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의 '대테러 공격'이 한반도 정세에 끼치는 영향

조명철=북한은 남북관계의 우선순위가 비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남쪽이 금강산관광·경의선·개성공단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보더라도, 북쪽에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체제보전이다.

최근 북한이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조직과 연계가 돼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뒤 유독 한반도에서만은 미군 병력이 추가 배치됐다. 미국이 아프간 문제를 해결한 뒤 언젠가 북쪽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당연하게 갖게 될 것이다. 당장은 남북관계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다. 체제에 가장 수호적인 세력인 군의 말과 행동이 절대화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위기상황에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동시에 진척시킬 내적 시스템과 인적 구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 북한은 어떤 중요 문제에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하는 시스템이다. 남북관계가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남북 모두 선택 폭이 좁았던 동해 잠수함 침투 사건 때와 달리 지금 북한의 반응은 남한이나 미국의 구체적 '도발'이 아니라 가상적 시나리오에 기초를 둔 것이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종석=미국의 대테러 공격이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은 일단 부정적인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상당기간 반테러 전쟁에 초점을 맞추게 돼 북-미 대화의 정책순위가 뒤로 밀리며 지체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남과 북이 국제적 도전을 극복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북한의 가능한 대응은 두가지다. 그냥 지켜보는 것, 아니면 테러 반대 뜻을 거듭 밝

북 이산상봉 보류는 강경파 반발 때문인듯 긴 호흡 교류 통한 적대감 해소 가장 중요

히며 국제협력에 지향하는 국가라는 점을 보여주지 위해 남북대화에서 등 자신에게 의의될 수도 있는 합의할 회색시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어느 쪽일지 판단하기 어렵다. 9월에 남북대화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이를 통해 미국의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적극적인 고려도 있었다고 본다.

■ 미국의 반테러, 전쟁을 북한과 연계한다면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 모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북한의 반테러 태도나 남북대화가 지속되고 오히려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면성이 있다.

■ 북쪽의 이산가족 상봉 보류 등 남북관계가 기우뚱거리는 이유

조=북한은 테러와 관련해 미국에 적극적인 협조 자세로 나왔을 때, 미국이 뭘 해줄 수 있나 생각해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하게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때문에 미

국의 반복적 의식이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군사적 능력까지 줄이는 것은 지엽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 즉 테러문제와 대미 관계를 분리해 미국의 반테러의 칼날이 북한을 향한 가능성을 낮추고 대미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이=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관련한 북한의 상황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보류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사태에 대한 북한의 걱정은 과거 팀스피리트훈련 때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이다. 옳고 싶는데 뻘 때린다는 얘기처럼, 이 미 옳고 싶은 생각이 있는 그릇이 북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관련한 일련의 비상감각 조처 등이 뻘 때리는 격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최근의 상황에서 남과 북이 얻어야 하는 교훈

이=이번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비유적으로 말해보자. 커피는 뜨거운 물이 필요하다. 찬물을 뜨거운 물로 대워야 하는 것 아닌가.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이전

- “정상들이 나서야”

조 명 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테러사태이후 북 체제보전에 우선순위 본질적인 정치군사적 걸림돌 해소부터

남북관계가 십여 년 만에 풀렸다면, 지금은 한 30년쯤은 될 거다. 일반 국민들은 지난 한해 남북관계가 발전했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의 30년 수준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론이 조성돼 있다. 이제는 예측 가능한 남북대화가 절실하다.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돼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번 사태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조-본질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의선·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은 상당한 정도로 정치·군사적 안정성이 담보돼야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이다. 경협과 사회문화교류에 앞서 정치적 신뢰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쌓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했다.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상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교통정리하고 신뢰를 그어주는 게 좋다. 정상회담 뒤 6개월 남짓 남북관계가 얼마나 박진감 있게 흘러갔나. 그런데 약속이 떨어지며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부분을 잠식해 불신이 생

기고 있다. 서로의 상황을 고려해 정상회담 장소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남한도 이제는 대내정책이든 대외정책이든 북한과 공감대 속에서 뭔가를 취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테러사태 대책만 해도 일방적으로 비상경계대세를 취하기보다 북한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면 모양도 좋고 구실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이해한다. 그러나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없이 다른 것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생각을 달리 한다. 체제 대립 등 정치·군사적 대립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의 사람들의 마음과 제도 속에 존재하는 적대성이다. 이 적대성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우리 이제 화해하자'고 선언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기나간 교류를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

정치·군사적 대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벤트성일 수 있고 한반도의 본질적인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데까지는 갈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정치·군사적으로 화해해야 하지만, 그건 남과 북의 적대성을 완화되며 해결돼야 한다. 정상회담도 너무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조-정치·군사적 구조가 결정적이다. 이걸 그냥 두면 오늘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된다. 이-이해한다.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

조-상호작용이지만 절대적 부분이 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장·단기 대응책

조-북한이 좀더 변해야 한다. 정상회담도 했으니 이전과 다른 상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 북한은 체제경영에서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연계하고 균형있게 하는 걸심을 해야 한다. 군사문제 등 한 가지에만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에서 탈피해 디지털력 속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북한이 협상에 잘 응하고 편한 대상이라면 평화나 대화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게 잘 안 되니까 평화와 대화를 말하는 거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남쪽의 시각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맞춰가야 한다. 북한 지도부는 그들의 일방적 행위가 남북 화해협력문제의 입지를 어떻게 좁히고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도 인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국민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효과가 큰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담방도 남북관계의 새 모멘텀이 되겠지만, 그걸 정책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조-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정상이 나서게 세계의 관례다. 특히 북한에선 최고지도자가 절대적이다. 다만 정상회담 상사를 국가 목표로 삼지 말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리/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사진/윤은식 기자 yws@hani.co.kr

“장관급회담 來週 금강산개최” 정부, 돌연 北요구 수용키로

내달1일 제의 방침... 비난 여론 예상

정부는 내주 중 금강산에서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갖기로 입장을 정하고, 내달 1일쯤 이를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동안 남북한

간 장소 문제로 공방을 벌여온 6차 장관급회담을 오랫동안 연기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돼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교환방문 행사 등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의 일정을 재조정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주 중엔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정부는 곧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확정해 1일쯤 북측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회담 장소는 북측이 제의한 금강산을 수용할 것으

로 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이날, “6차 장관급회담을 언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금강산 회담은 옹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을 뚜렷한 계기없이 번복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은 지난 9월 5차 장관급회담에서 6차 회담을 28일부터 열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남한 내 비상경제대세 등을 이유로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고 재의했고, 우리 측은 평양에서 하자고 맞서왔다. /송기희기자 ginko@chosu.com

“장관급 내달8일 금강산서”

정부 제의방침... 野 “北역지에 입장번복” 반발

정부는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다음달 8일부터 금강산에서 기질 것을 북측에 수정제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이번주 중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더이상 한민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금강산 회담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북측은 남측의 이같은 수정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지난 4일 금강산관광 협의회를 위한 1차 당국간 회담 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데

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일방 연기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다시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실제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금강산이 안전하다며 그곳에서 회담하자는 북측의 역주장에 정권이 꼬리질 내린 형국”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시행과 각종 회담의 교대 개최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원점에서 남북회담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변인은 “재·보선 기간 중 강경태도를 취하던 이 정권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태도를 바꾼 것은 찜찜지 못

하다”고 비판했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주요당파자 회의에서 “지난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했을 때 꿀먹은 벙어리같이 한마디도 못했다가 북한이 하자는 대로 쫓이간다”고 성토했다.

남북한은 지난 9월 5차 장관급회담에서 6차 회담을 28일부터 열기로 합의했지만 그후 북측이 남측의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회담장소를 금강산으로 고집한 반면 남측은 관례대로 평양이나 묘향산에서 열자고 맞서왔다.

6차 장관급회담이 열릴 경우 10월에 예정됐던 4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와 금강산관광 2차 당국간 회담 일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기자 yskim@kmb.co.kr

남북장관급회담 금강산 수용

정부, 이산가족·현안해결위해 '현실론'선택

일부선 "또 북에 끌려다녔다"비판

내달 초순이나 중순께 날짜 잡을듯

개최장소 문제로 실림이름 벌여온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과 관련, 정부가 북측 요구를 수용,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이르면 11월 초쯤 중단된 당국간 회담이 일립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와 2일 민주당과 당협회의를 잇따라 열어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평양개최 요구를 잡고, 북측이 요구한 금강산에서 장관급 회담을 여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표단의 속으로 사용할 금강산 해금강해상 호텔이 최근 단풍 성수기로 객실이 나지 않아 회담날짜가 중순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당초 남북이 합의한 날짜인 28일에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강산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지만 지난 25일 재·보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담 개최 수용을 다소 늦췄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북한에 대한 국민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급 회담도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부 여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10여차례나 북측과 전문문을 주고 받으며 실림이름 벌이다 결국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등 또다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장소문제로 회담이 더이상 열리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남북회담의 중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고 이산가족, 금강산 문제 등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른 회담은 몰라도 장관급 회담만은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최근 현대아산이 자금난으로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육로관광을 합의한 6·8협약서가 지켜지지 않아 협력기금도 지원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회담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생겼다. 현대아산측은 최근 정부에 장전항을 정부가 인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측 태도로 볼때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현중기자 leehun@munhwa.co.kr

"또 끌려다닌다" 비판 감수

北과 대화지속 교육책

금강산회담 수용 배경

정부가 30일 제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지는 북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해 일단 남북대화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비난 여론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북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남북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했다.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16~18일)을 비롯, 금강산관광 합성화 제2차 당국간회담(18~20일), 2차 남북경협추진위(23~26일), 제6차 장관급회담(28~31일)등 10월에 예정됐던 모든 남북대화 및 행사가 쪼갤어 무산된 상황에서 지체 소강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또 내년에는 인대 선거와 월드컵축구대회 등이 예정돼 있어 연말까지는 경의선 연결 등 굵직굵직한 남북현

현안등 소강 장기화 우려

장소양보로 회담우위 노력

가시적 성과 도출은 미지수

안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정부의 발걸음 재촉했다.

물론 강자의 입장에서 회담장소를 양보함으로써 실제 회담에서 우위를 잡히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포함된 결정이다. 금강산 회담을 수용한 데는 남측이 회담장소로 제시한 평양이나 묘향산을 북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북측이 이달 초 금강산 회담을 고집하며 내세웠던 안전성 문제를 지난 25일 전화통지문에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여

기에도 다소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담 장소를 놓고 합력투기를 하는 모양새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내 여론도 한몫했다.

아무튼 남북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되긴 했지만 실제 회담에서 의미있는 성과들이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북측이 남측의 안전성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측이 안전성 문제를 내세워 서울 개회가 예정돼 있는 남북경협추진위 등 당국간 회담 개최 장소를 금강산으로 계속 고집할 경우 남측으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평양지역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측의 일방적 연기로 미뤄졌던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일정도 잡기가 쉽지 않아 남북 당국이 회담태이법에 다시 나왔다는 데 만족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로서 더욱 고민스러운 것은 여론의 향배다. 북측의 가시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금강산에서의 회담을 수용함으로써 야당과 국내 보수층으로부터 또 다시 "끌려다닌다"는 비난 공세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회담에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국내 여론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묘수를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영석기자 yskim@kmb.co.kr

금강산 南北장관급회담 수용

野 “굴욕적 對北정책” 비판

“선거民心 벌써 잊었나” 再考 촉구 정부, 내달 9일쯤 회담개최 검토

정부는 30일 북한이 '안전'을 이유로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고집해 연기했던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북측 요구대로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번복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재고(再考)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3·4면

문일부 당국자는 이날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하는 게 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담의 연속성을 살리고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의 현안을 조속히 북측과 협의·해결하기 위해선 회담이 열려야 하고, 회담을 하기 위해선 금강산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주 중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북측에 구체적인 회담일정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강산을 오가는 현대 관광선박 일정과 우리 대표단이 숙소로 사용할 잠진항의 해상호텔(해금강호) 객실사정 등을 감안해 11월 9일쯤 3박4일 정도의 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측이 지난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에선 '안전성'을 들어 금강산에서 회담을 하자고 했으나, 최근 대남 전화 통지문에서는 '안전성'은 내세우지 않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30일 “굴욕적인 대북 정책을 질타하는 선거 민심을 벌써 잊었느냐”며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시행과 각종 회담의 남북 교대 개최를 당당히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남북회담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측의 평양 또는 묘향산 개최 제의를 거부하고 금강산을 고집하는 속내는 변하다”며 “금강산관광 대가 미납금을 받아내기 위해 현대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洪錫俊기자 udo@chosun.com

朝鮮日報

2001. 10. 31 (수)

東亞日報

2001. 10. 31 (수)

정부 금강산 장관급회담 돌연 수용

무원칙 對北정책 또 논란

내달 9일쯤 개최 계획

1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무산된 이후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해온 정부가 30일 전격적으로 북측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또 다시 '원칙없이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3면에 관련기사>

또 정부가 그동안 장관급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또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의 태도 번복은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6차 장관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 문제와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남북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금강산 개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남북장관급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 명의의 대북 전화 통지문을 따르면 금주 중 북한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금강산에서 회담을 하자고 한 주장을 현실적으

로 고려해볼 때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회담의 추진력을 이어가고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금강산에서의 회담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북측 주장의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1월8일 운항하는 금강산관광선 설봉호를 이용해 9일부터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나 속소로 사용할 잠진항 해상호텔의 예약이 모두 완료돼 시기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수용

① 중앙일보
2001. 10. 31 (수)

정부 오락가락 대북정책 논란

정부는 다음달 8일께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북한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대변인인 통일부 이봉조(李鳳弼) 통일정책실장은 30일 "합식과 접처에 문제가 있지만 남북 사이에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중 홍순영(洪淳瑛·통일부 장관)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 전문문을 통해 북측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주장해 온 회담 장소인 금강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부가

뚜렷한 근거없이 북측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계기사 5면>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정부의 금강산 회담 수용과 관련, '재·보선 기간엔 집짓 강경한 입장을 취하던 이 정권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태도를 돌변한 것은 떴떴지 못하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시행 등을 담당하 관철하지 못한다면 남북 회담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李실장은 "회담에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당국·민간 교류의 입장을 다시 잡는 데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면서 "회담 날짜를 포함한 구체적인 문제는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으며, 이에 따라 28일 열릴 예정이던 6차 장관급 회담도 남북의 '명인(인근 묘향산도 가능) 개최'와 북측의 '금강산' 주장이 맞서 10여차례 판문점 전봉문 등을 통해 입장 공방을 벌이는 난항을 겪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정부, 금강산 장관급회담 수용

한국경제

한국일보

2001. 10. 31 (수)

2001. 10. 31 (수)

빠르면 내달 8일께 열릴듯
野, "굴욕적 정책 반대" - 논란

정부는 제6차 장관급 회담을 묘향산에서 개최하자는 입장을 변경, 금강산에서 열리는 북측 제의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북측의 제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번주중 남북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담일자는 내달 8일이나 11일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를 "굴욕적인 대북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남북회담을 재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내달 장관급회담 개최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태용 기자
redael@hankyung.com

野 "선거 끝나자 돌변" 비난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30일 정부의 장관급 회담 금강산 개최 수용과 관련, "북한이 '평양 또는 묘향산 개최' 제의마저 거부하고 금강산을 고집하는 것은 관공대가 미납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재·보선 기간 중에는 집짓 강경한 입장을 취하던 이 정권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태도를 돌변한 것은 떴떴지 못하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시행과 각종 회담의 교대 개최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남북회담을 원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곤기자 hgong@hk.co.kr

경향신문

2001. 10. 31 (수)

금강산 장관급회담 수용

정부 "내달중 이산 상봉 꼭 이뤄져야"

정부는 30일 북한의 6차 남북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번주 중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낼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전문문에 4차 이산가족 상봉이 11월 중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의 추동력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북측 제안을 받아들일기로 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측의 입장을 들여보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5면 이 당국자는 "정확한 회담 재의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주나 늦어도 그 다음주에는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기된 이산가족 상봉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곧 겨울이 닥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2월까지는 협상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금강산 배편 등을 감안해 내달 8, 9일이나 11, 12일쯤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영기자
c.young@kyunghyang.com

한겨레

2001. 10. 31 (수)

'금강산 회담' 수용

정부, 다음달 8일 개최 제의키로

정부는 제6차 장관급회담을 북쪽 요구대로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으며 8일부터 4박5일 동안 회담을 열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4면

정부 당국자는 30일 "남북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북측이 주장한 금강산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회담에선 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5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한 북측 입장을 들여보고 우리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말쯤 이런 내용을 담은 전화통지문을 홍순영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 이름으로 북측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권철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평문 내고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시행과 각종 회담의 교대 개최를 담당하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남북회담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북한이 금강산만을 고집하는 속내는 금강산 관공대가 미납금을 받아내기 위해 한때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권 왕성우 기자 jik@hani.co.kr

'금강산회담 수용' 논란

정부, 평양개최 입장 반복
'8일 장관급회담' 제의키로

정부는 연기된 6차 장관급회담과 관련, 북측의 금강산개최주장을 수용하고, 내달 8일에 회담을 열 것을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기존의 평양개최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종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남북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북측의 제의를 받아들여기로 했다"면서 "내달 초 우리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우리의 이 같은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 금강산 육로회담 후 1개월 만에 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내달 1일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제의의 내용과 회담전략을 확정한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 일자와 관련, "장전향, 해상호첩의 여야가 완료돼 속소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회담이 내달 8일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연기한 4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10월 중 업기로 합의했으나 무산된 2차 경협추진위와 금강산 육로 회담 등의 일정 ▲대북 식량 40만톤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기자 djicc@hk.co.kr

한국일보

2001. 10. 31 (수)

대한매일

2001. 10. 31 (수)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수용

정부 입장선회 논란 예상

정부는 제6차 장관급회담 개최장소와 관련, 북측 요구대로 금강산을 수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주내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회담개최를 촉구할 방침이다. 회담일자는 속소 등 금강산 현지사정용 감안, 오는 8일이나 11일로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져야 한

다는 판단에 따라 북측 제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남한의 안전문제를 내세워 금강산 회담을 주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던 입장에서 전지 선회한 것이어서 대북정책의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시행과 각종 회담의 교대 개최를 담당히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남북 회담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경호 이지은기자 jade@daily.com

남북대화 엉킨 실타래 풀기

■ 금강산회담 수용 안팎

정부가 북측의 금강산 회담 제의를 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남북대화가 다음달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건격적인 방침선회에 대한 비판이론이 만만치 않아 후유증이 예상된다.

●정부의 선회 배경 북측이 절대 회담장소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어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기보다 대응적인 자세로 북측 요구를 수용, 남북대화를 풀어가겠다는 뜻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국제적인 긴장상황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남북대화를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담의 진척에 문제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

이산상봉등 현안해결 기회 활용

"北에 끌려다닌다" 비판 만만찮아

합의사당의 심천"이라며 "북측도 회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만큼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남북대화 전망 정부는 다음달 8일이나 11일에 6차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할 방침이다. 북측은 줄곧 금강산 회담을 주장해온 만큼 반대론이 의외가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의제와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측은 무산된 4차 이산가족 상봉의 즉각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나 북측은 남한의 비상경제대세부터 해

제할 것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금강산 당국간회담이나 남북경협추진위 2차회의 등 후속회담의 장소를 놓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성과없이 논란만 벌이다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북측도 식량지원 문제 등이 걸려있어 일정수준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화재개의 문제점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건격적인 방침선회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선 대

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남북대화의 기본원칙을 스스로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장관급회담은 관례나 원칙에 맞지 않다. 남한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한 금강산회담은 옹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이후 북측이 남한의 안전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예제 북의 '태도변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공색하다는 평가다.

북측이 지난 12일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이후 아무런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비난만 살 공산이 크다.

●진경호기자 jade@daily.com

“장관급회담 내주 금강산서”

정부, 北요구 수용... 금주내 제의키로

野 “왜 끌려 다니나” 비난

정부는 6차 장관급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금강산에서 열리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주중 홍순인(洪淳

成)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팀의 전화경지문을 북측에 보내 6차 장관급회담을 다음달 8일쯤 개최하자고 수정제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1차 당국간회담 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가 한달이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정부 당국자는 30일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북측 주장을 수용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선 장관급회담을 빠른 시일내 개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북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끌려다니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30일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시행과 각종 회담의 교대개최를 당당히 권할(權將) 것”이라며 “북한이 금강산만을 고집하는 속내는 관공대가 미납금을 받아내기 위해 현대를 속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갑(金容甲) 의원 등 “비탄 풍일과 분명한 안보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소속의 하당의원 52명도 성명을 내고 “현 정권이 다시 북한의 억지주장을 수용한다면 이는 우리 국민들의 지존성을 짓밟는 행위이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진·윤성희기자 jst@sgt.co.kr

對北정책 또 말바꾸기

장관급회담 금강산 돌연 수용...野 반발

나영필 기자

정부가 지난 8·15 통일대축전 불참 방침을 행사 하루 전 뒤집은 데 이어 30일 회담장소로 “금강산은 안 된다”는 방침을 전혀 철회해 대북정책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은 정부가 제6차 장관급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수용키로 결정하자 “재고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와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간 입거투기 양상마저 띠고 있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에서는 남북한간 한안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급적 이번 시합 내에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번주 중 장관급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북측이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주 중 안

전보장회의, 단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회담 일정은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권철현 대변인 명의로 반박 논평을 내고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시행과 각종 회담의 교대 개최를 당당히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남북회담을 재고해야 한다”고 금강산 개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북측은 남측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장관급회담은 금강산 지역의 속박 문제 등을 감안해 다음달 8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회담장소로 금강산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이병조 정책실장은 “금강산이 회담장소로 적절치 않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참

소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과제들을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더이상 남북대화를 소강 상태로 남겨두었을 경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선 전 답방이 물건건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내리건 결정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말바꾸기에 대한 비난과 함께 회담 성과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기하며 이유로 제시했던 우리측 비상경계 태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북측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서울은 위험하고 금강산은 안전하다”는 북측 논리에 동원되는 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관급회담 금강산개최 수용

서울경제

2001. 10. 31 (수)

정부 “이산방문등 현안 해결위해”

對北 저자세외교 논란 재연 우려

정부는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북측의 주장대로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회담 시기는 다음달 8일 또는 11일 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개최시기 등을 확정해 이르면 주말에 북측에 전화경지문을 통해 남북장관급 회담을 제의할 방침이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이날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북측의 제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장관급회담이 금강산에서 열리는 것은 적어도 맞지 않고 각종회담의 남북 상호제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북측의 금강산 개최주장을 완강히 거부해 왔다.

○정부 금강산 수용배경=정부가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금강산 회담 개최를 수용한 것은 주변정세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정부 당국자는 “테러시대 등으로 빚어진” 국제적인 긴장상황이 한반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최소한 회담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해 이번 결정이 테러시대 등 주변 악재의 ‘연관이 있음’을 들어 놓았다. 남북대화 기 중단될 경우 남북관계가 또다시 오랜 기간 소강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산

가족 상호방문 등 지난 5차 장관급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일정 재조정을 위해 정부가 회담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없다=정부가 재·보급 선거 전 국내 보수 여론을 의식해 북측의 금강산 회담 개최주장을 일축하다가 선거 후 일관성을 길어온 채 갑작스레 방침을 바꾼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남북관계는 역으로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이번 회담이 남북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칫 대북 저지세 논란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장관급회담을 통해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일정 등 각종 남북회담을 중단하고 있는 진의 파악하는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기자 anycall@sed.co.kr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수용

장소도 北 입맛대로... 또 끌려다니는 회담

정부가 30일 그동안 거부해온 '6차 장관급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국내 전문가들과 이담에서 "정부가 또 다시 북한에 대해 원칙없이 끌려다닌다"는 등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상담수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교향신문 등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의 주장대로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하는 것은 정부 수

용'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최근 연 '금강산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금강산 회담을 수용했다"는 공색한 변명까지 하고 있다.

제성호(諸成鎬) 중앙대 교수는 "나립적인 남북관계합 위해서라도 시설 등의 여건이 좋은 서울과 평양, 혹은 판문점 등에서 당국회담이 번갈아 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 "더욱

정부입장 돌변... 청와대서 '요청설' 당국 '회담가서 따질 것 따지겠다'

스로 회담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초 회담을 열기로 한 날(28일)에서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반대명분과 논리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결정과정에서 통일부에선 반대입장을 개진했으나, 청와대가 '수

족 교향신문 행사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 장관급회담을 수용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인대(宋煥大) 전 통일원 차관은 "금강산 장관급회담 수용은 결국 우리 스스로 '서울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북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며, 나아가 비상경계태세와 테러와의 전쟁도 잘못임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 바 없다"고 비판했다. 송대성(宋大星)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처음에 금강산 회담을 반대할 때, 회담 스타일에 대해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으로 기대했으나, 또 북측에 밀려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런에 우리 측이 회담 자체에 연연해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북한이 서울에선 회담을 못하겠으니 금강산에서 회담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이도 있었다(고위층 출신의 한 탈북자). 또 북측이 '안전'을 이유로 김진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약속을 차일 피일 미룰 경우, 미망한 대응방법이 없다는 지적(권민웅-權敏雄 전 인가부 북한국정)도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론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남북관계합 마냥 소강상태로 둘 수는 없고, 회담진소도 중요하지만, 회담을 계속해서 성과급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박한다. 그러나 북측이 애당초 회담에서 상의있는 내용을 내놓을 자세였다면 정소문제를 놓고 트집 잡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다.

/송仁기기자 ginko@chosun.com

'금강산 당국회담' 관련 정부 당국자 발언 日誌

▲"서울이 불안하다며, 금강산에서 회담을 하자는 데 어떻게 수용하느냐"(10.12 통일부 당국자)

▲"그동안 남북이 서로 왕래하면서 회담을 진행해 오던 전례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 측 지역에 안전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10.16 홍순영 통일부 장관, 대북전문분야서)

▲"귀족이 당국간 회담 장소로 금강산만 고집하고 있어,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10.22 홍순영 장관, 대북전문분야서)

▲"장관급회담이 6-15 공동선언 이행의 중심 협의체라는 중요성과 상징성, 회담 진행의 편리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24 홍순영 장관, 대북전문분야서)

■ 정부 금강산회담 수용 안팎

정부가 30일 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는 북측 제의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장소 공방으로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을 트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정부는 '북한에 또다시 끌려 다닌다'는 여론의 비난 속에 성과미지 불투명한 회담에 나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대화 계속" 교육책 北에 또 끌려간 셈

수용 배경 정부가 북측의 '금강산' 고집을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든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했다. 북측이 미국의 이프간 공습 후 남측의 비상경계 태세를 이유로 이산가족 행사 등 모든 합의 사항을 비준하고 있는 만큼, 직접 만나 진의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테러 보복전으로 이전보다 악화한 북미관계와 불안한 국제정세가, 한반도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 여기에도 내년에는 양대 선거와 월드컵이 예정돼 있어, 연

는 특히 재·보궐 선거 전에는 보수여권을 의식, 평양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선거 후 돌변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수용한 금강산의 유일한 회담장인 '금강산 여관'은 전가-풍산 시설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당국간 회담을 갖기에 부적합한 곳이다.

회담 전망 정부의 더 큰 고민은 회담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급 도출할지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북측은 '안전성' 문제급 평계 됐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 북측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도 '남조선이 불안하다'면서 '서울 개

정부 "형식보다 실천 더중요" 회담성과 불투명엔 큰 부담

말까지는 경의선 연결 등 굵직한 굵직한 성과급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정부의 발걸음 재촉했다. 정부 당국자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핵심"이라면서 "장소 싸움으로 허송세월하느니 직접 만나 '당신들 왜 그러느냐고 따지는 게 낫지 않느냐'고 설명하고 있다.

수용 과정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회담을 수용하기까지의 정책결정 과정은 허연지 않다. 정부는 북측과 10차례나 진통문을 주고 받으면서 입관되게 '평양 개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29일에도 "당분간 북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으나 채 하루도 안돼 입장을 번복했다.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도 "평양에서 하는 게 순리"라고 누차 밝혀 왔다.

때문에 정부의 대책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기보다는 '정치논리'에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회담 예정돼 있을 경우 회담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급 도출할지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북측은 '안전성' 문제급 평계 됐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 북측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도 '남조선이 불안하다'면서 '서울 개

회담 예정돼 있을 경우 회담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급 도출할지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북측은 '안전성' 문제급 평계 됐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 북측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도 '남조선이 불안하다'면서 '서울 개

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북측이 연 기했던 4차 이산가족 교향 일정도 집지 못할 수 있다. 북측은 관평객 감소와 현대, 신의 융통성 위기로 관광대가 지장이 크게 줄어 외회법이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측은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으로부터 중대 위기에 몰린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경제적 보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보일 공간이 크다. 그러나 대북지원에 관한 한, 거대 야당이 자리잡은 현 정국에서 정부가 우선할 수 있는 폭은 더 좁아진 상황이다.

정부가 북한에 정부보유미 등 식량 40만톤을 주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올 경우,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성공하게 회담 개최에 매달리기보다는 남북이 냉각기를 갖고 서로의 입장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준기자 dilee@hk.co.kr

“北에 언제까지 끌려다닐건가”

정부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수용 논란

6차 장관급회담의 개최장소를 둘러싸고 북한측과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온 정부가 돌연 북측의 주장을 수용하고 나섬으로써 다시 한번 '원칙 없는 방향선회'란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대 테러전쟁을 트집잡아 '안전'을 이유로 금강산을 회담장소로 고집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사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과연 실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도 증폭되고 있다.

▽불투명한 회담 전망=정부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이번 회담에서 과연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명분도 포기하고 금강산개회 요구를 수용한 마당에 성과마저 빈약할 경우 향후 추진하려는 각종 대북지원책도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 자신이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북한측은 '남한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장소로 북측이 불안정하다고 강조해온 서울을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은 셈이다.

또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의 경제강화조치 등 징세를 트집잡아 작년 12월에 일린 4차 장관급회담

“또 돌연 원칙없는 방향선회” 비판여론 이산상봉 재개등 회담성과도 불투명한 나라 “北역지주장에 결국 꼬리내려”

때처럼 우리의 국방백서에 나온 '주적(主敵)' 개념을 문제삼고 나올 경우 상황은 더욱 꼬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의제들 테이블에 올려놓기보다는 일단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2차 검합추진위원회 등 남북이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뒤 무산된 행사일정을 재조정하는 데 우선 중

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수용의 문제점=정부는 북한이 남한의 '비상경제대세' 풀 이유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후 북측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견지해 오다가 돌연 '명분보다 실리'라는 애매한 논거를 앞세워 입장을 선회했다.

물론 장소문제로 회담이 열리지

않을 번거울 것 같다.

게다가 정부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북측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대북정책을 변경한 데 대해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반발=박명환(朴明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30일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홍 장관이 평소 쏘대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봐야겠다"고 할난했다.

그는 또 "회담은 저쪽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뭐 받아낸 게 있다고 우리가 허겁지겁 따라가는 나"고 비난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한은 불안하니 금강산에서 회담을 해야 한다"는 북한의 억지 주장에 필적 뒤있던 정부가 결국 꼬리를 내렸다"며 "이산가족 상봉'시행과 회담 교대 개최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이에 회담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갑(金容甲) 의원 등도 "정부가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 언제까지 굴욕적 행태를 반복할 것인가"고 비난을 퍼부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남북회담 개최장소 관련 정부입장 변화

일시	발언자	주요내용
10.12	김형기 통일부차관	남북간에 오랫동안 형성된 원칙과 관계에 비추어 금강산개회요구는 적절치 않다
13	통일부 당국자	금강산을 수용한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남측 정세의 불안정을 인정하는 셈이다
16	홍순영 통일부장관 대북전문관	그동안 남북이 서로 원래하면서 회담을 진행해오던 전례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측 지역에 안전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
22		귀속이 안전성 문제라는 것을 내세워 당국회담 장소로 금강산만을 고집해,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4		이번 장관급회담은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요형산 개최도 무방하다
30	통일부 당국자	연세 금강산을 안 받겠다고 얘기한 적 있다. 정부가 금강산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선거 끝나자 정부태도 돌변 政局타개 北카드 활용 의혹”

野 '금강산회담' 수용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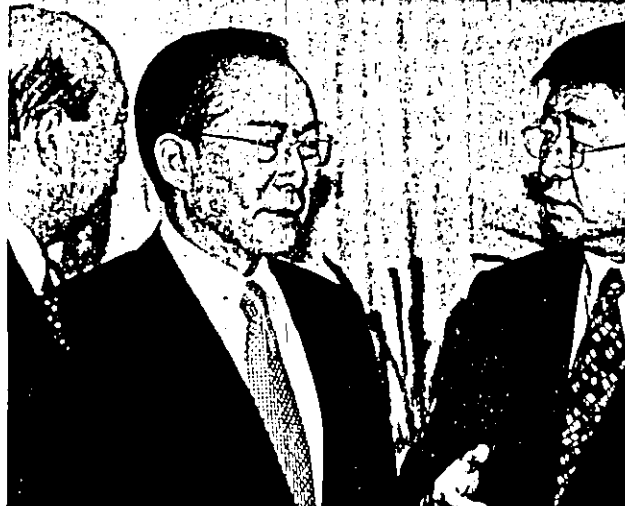
한나라당 의원들은 30일 우리 정부가 북측의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금강산개회 요구를 수용키로 한 데 대해 “북한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우리 정부가 질질 끌려만 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북협상의 상호주의 원칙과 명분을 강조,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에 성의를 보일 때까지 회담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개·보선 기간 중엔 회담의 평양 또는 도함산 개최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 정권의 태도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돌변했다”며 “벌어가며, 끌려가며, 퍼부어 쥐기며 북한 앞에 앞드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남한은 불안하니 안전한 금강산에서 하자”는 북한의 억지주장에 밀려 휘둘러던 이 정권이 결국 꼬리를 내리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각종 회담의 남북 교대개회 원칙이 관철되지 않으면 남북 회담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순봉(河淳鳳) 부총재는 “정부가 공백하게 굴욕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묻고 “정부의 자차 새 대북정책은 10·25 재·보선 참패로 이뤄진 국내 정치분쟁을 북한카드로 덮어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30일 주요당직자회의를 마친 후 김기남 시무총장, 권철현 대변인(오른쪽)의 보고를 받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李起元기자 kwyy@chosun.com

김창성(姜昌成) 의원은 “금강산에서 합 생각이 있었으면 진척에 받고, 안 된다면 끝까지 거부해야지 소신과 원칙도 없이 후퇴될 하면 북측의 버릇만 내뱉지게 된다”며 “남북협상을 조급한 태도로 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의원 52명으로 구성된 ‘비권

통일과 혼란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성명을 발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성의를 보이고 우리의 경제대세에 대한 시비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회담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洪銀復기자 udc@chosun.com

중앙일보

2001. 10. 31 (수)

또 ‘北 입맛대로’... 성과도 미지수

6차 장관급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기로 결정한 정부에 붙어지는 비판의 표적은 원칙없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대북 협상 태도다.

히루 전까지만 해도 “당국 차원의 남북회담을 금강산에서 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당분간 냉각기를 갖겠다던 정부는 30일 입장을 바꿔 북측 요구대로 금강산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반복과정에는 당국회담의 소강상태가 장기화돼 겨울잠에 들어가는 상황을 피하려는 고심의 흔적도 배어났다. 지난 3월 5차 장관급 회담이 무산된 이후 반년 동안의 공백기를 겪은 경험도 정부로 하여금 서두르게 한 요인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고유환(高有煥)동국대 교수는 “회담이 어떻게 마주었느냐보다 회담 결과를 놓고 평가해야 할 것”이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결정과정에는 최소한의 일관성과 실용적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강산 장관급회담 수용

“不可입장 확고” 하루새 번복

무엇보다 북측이 지난 12일 이산가족 상봉의 연기 이유로 미국의 반(反)테러전쟁에 따른 정부의 비상경제대세를 내세우면서 주장한 ‘서울=불안한 곳, 금강산=안전한 곳’이란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점이 됐다. 서울·평양 교차계획을 편철해 장관급 회담이 갖는 ‘상징적 지위’를 살리겠다던 다짐도 공언(空言)이 됐다.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원 차관은 “회담장소마저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협상과정에서 북한에 밀려들 수밖에 없다”며 “금강산 수용은 우리의 비상경제가 갑툭함을 인정하는 줄”이라고 말했다.

또 박명서(朴明錫·경기대 교수)

장관급회담 일지

10일	조영훈 대변인 발표	“남조선 태러 경제사태 고려, 이산상봉 연기”
12일	홍순연 통일부 장관	“일방적 연기에 유감, 강령 합의”
18일	김영성 북측 단장	“6차 장관급 회담 동모 두 금강산에서 갖자”
22일	洪正일부 장관	“5차 회담 합의 미이행 유감, 6차는 결의서”
23일	노동신문 논평	“장소문제로 회담 못 열리는 것 말도 안된다”
24일	洪正일부 장관	“광양이 어렵다면 인근 도함산도 가능”
25일	송영대 단장	“금강산 호응해 회담 나뉘 때까지 기다릴 것”

한국통일안보학회장은 “정부가 자꾸만 북측에 끌려갈 게 아니라 좀더 신중히 국민여론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비판여론 속에 회담에 나서는 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북한이 허심탄회하게 나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향후 남북관계 입장을 다시 짚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일단 만나서 풀자” 대화 불씨 살리기

금강산회담 수용 배경

정부는 북측에 풀러디난다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는 북측의 제의를 수용했다. 지난 12일 북측이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의 불씨를 어떤 상황에서든 살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이 회담 장소를 두고 더 이상 승강이를 벌일 경우 양측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에 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간 대화 기초가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북측의 제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이달 초 금강산 회담을 고집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지난 25일 전화 통지문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현재 남북간에는 4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 남

승강이 지속됐 南北 기본적 신뢰마저 훼손 北-美관계 악화등 한반도 주변상황도 고려

기고 남북간 소강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남북이 합의한 지난 28일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강산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재·보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담 개최 수용을 다소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한반도 주변정세도 정부가 먼저 양보하도록 동을 떠맡았다. 최근 북미 관계가 이전보다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한반도 주변상황이 불안하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간 긴장이 고조

북경제2차추진위원회 2차 회의 등이 줄줄이 열려 있다. 따라서 정부는 6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 안정을 다시 잡게 하겠다.

그러나 6차 장관급회담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북측은 미국의 대대러진행에 따라 비상관계임을 내리고 미국이 민영화 시대에 대비해 공군전력을 증강한 것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남북간 합의를 위한 성실한 이행이 '속구함'에 있어서는 양측이 공평한 벌이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윤성환기자 shyoon@spt.co.kr

‘北과 대화계속’ 교육책

정부 '금강산회담' 수용 배경

북측의 갑작스런 4차 이산가족 상봉 연기와 각종 회담의 금강산 개최 제의를 배격했던 남북관계가 일단 전체 국면을 면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고된 끝에 30일 북측 제의를 받아들여 남북간 회담을 총괄하는 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측이 "언제나 금강산 지역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으므로 시기조절

대목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입장이 본격화되면 정부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어둠 시인의 기둥을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정부가 "또다시 북한에 풀러디난다"는 한나라당 등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회담에 나서겠다고 작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이프칸 공습이 때때로, 정부는 북측이 "언제나 금강산 지역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으므로 시기조절

‘또 풀러디난다’ 비판감수 상봉등 숙제 풀기에 주력

만 회담에는 용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대선·지방선거 앞서 교착 남북 현안 가닥잡기

정부는 금강산 수용 결정은 본질

과는 무관한 점소분재로 더 이상 대화 불씨를 경우 어렵게 계속 오면 남북 관계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남북간에는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산방문단 교환, 금강산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2차 당국 회담, 경의선 연결 등을 논의할 2차 남북협력추진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최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북미 대화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부정적 평가와 관련해 대미 비난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회담이 열리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이번엔 늦춰진 이산상봉, 2차 금강산회담, 2차 경수위 등의 남북을 다시 잡기 위해 회담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북측 태도로도 미뤄 이산상봉 등에 실패할 위험이 높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대외적인

심이다.

최재명기자 cyoung@yungnyang.com

한겨레

2001. 10. 31 (수)

남북 교착상태 풀기 교육책

■ 정부 '금강산 회담' 수용 배경

정치적 부담 불구 '대화 필요' 현실적 판단 국제정세 불안감 한반도 영향 차단 목적도

정부가 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는 북측 제의를 받아들여기로 하고 조기 개최 방침을 정한 것은 교육정책의 성격이 짙다. 이는 "회담(합정 논의) 개최와 합의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토로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담을 지속하며 남북 양국간 합의시장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은, "일방적 풀러디난다"라는 비판이 예상되어도 정부가 금강산 회담을 수용하기로 했는지급 잘 보여준다. 북측이 금강산을 회담장소로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을 깨지 않기 위해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강산 회담을 수용한 것은 남북 양국간 대화의 탄력을 유지함으로써 겹쳐 높아지고 있는 국제정세의 긴장

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북측이 더 이상 회담 장소의 "안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당국 회담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도 결정의 배경이 됐다.

정부가 조기 개최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에는 주한미군(공여지)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다음달 15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협력안보합의 회담이 회담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안보협력을 논의하게 할 이 회담이 불발요하게 남북대화 영향에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줄곧 방안 개최를 고수해오던 정부가 금강산 회담 수용쪽으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해선, 남장 한나라당이 논평에서 "재보선 기간엔 정치

급나자마자 풀면 것은 몇몇이 못하다"고 지적한 것처럼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재안을 북측이 받아들여 회담이 열리려면 이산가족 상봉과 경협추진위 2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등의 일정 조정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담 진전은 밝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일정을 새로 잡기 위해 최대한 애쓰겠지만, 북측의 현재 태도에 비춰볼 때 성과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성과가 많다면 좋겠지만, 남북이 당국회담을 지속하며 서로 할 이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여러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정세의 긴장 고조와 북측의 위축된 태도 속에서 일단 당국 회담을 이어가는 것으로 상황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당국자는 "회담이 열리면 지금 북측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대북정책 '말바꾸기'

"장소 때문에 긴장 고조를 막아야 하는 과제들을 계속 미룰 수 없다"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30일 제6차 장관급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지는 북측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내세운 이유다. 남북관계 중 단점이 진전시켜나가야 한다는 '큰 틀'에서 볼때 사소한 장소 문제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3차 장관급 회담을 제주도에서 개최한 만큼 여차피 한번은 북측의 요구에 따라 평양 아닌 다른 곳에서 회담을 열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고려한 듯 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설명은 그동안 수차례 금강산 회담 반대를 표명해왔던 김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 북한은 지난 12일 미국의 테러전쟁에 따른 남한의 경제대체 강화를 이유로 이산상봉단 교환을 연기시켰고 각 분야 회담을 '인전성'이 담보된 금강산에서 열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내차례에 걸쳐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를 일축했으며 장관급 회담을 평양에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강산 회담을 수용할 경우 북측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꿨으니 '10·25 재·보선

을 의식해 강경자세를 보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포리를 내렸다"는 한 나라당의 비판을 처치하고라도 "매번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것 같다. 북의 요구를 거부하는 듯하다가도 곧바로 받아들이고 이는 정부의 '말바꾸기'가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제5차 장관급 회담 당시에도 북의 진려지원 요청 여부에 대해 "그런 너저분한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가 북측이 평양방송 등을 통해 요청사실을 밝히자 "거론했지만 의제로 다루지는 않았다"고 변명했다. 또 쌀 지원에 대해서도 "대표접촉에서 슬쩍 언급한 정도"라고 했으나 지난 10일 40만 t의 식량 지원방향을 밝히면서는 "북측의 공식요구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번에도 정부는 "그동안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계속된 '말바꾸기'가 오히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통일부 당국자들은 진정 모르는 모양이다. 정대용 정치부 기자

redael@hankyung.com

매일경제

2001. 10. 31 (수)

원칙 뒤집는 통일부

기자 24시

나영필

통일부가 원칙을 저버린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정부가 30일 제6차 장관급 회담 개최지로 금강산을 전격 수용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는 마치 상황이 변화된 듯 "최근 북한의 건봉분에서 '인전한 금강산'에서 '인전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며 변명했지만 이는 입주입 전 상황일 뿐이다. 다정히도 통일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문제가 있다"

장부는 그동안 북한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일정을 돌연 연기하고 당국간회담마저도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고집하는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방침이 급선회하기 전날 통일부 당국자도 "상황과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금강산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상황과 여론'의 변화를 내걸었다.

여기서 상황이란 북한 내부시정 변화나 테러전쟁 등 대외변수를 말하는 것이고 여론이란 '국민적 합의'라는 대내변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하룻밤 사이에 상황과 여론이 변했는가.

테러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시작 후 비슷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견고함(?)도 별다른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여론도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쪽에서 변화가 없어 보인다.

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세운 논리는 더 큰 원칙을 위해 작은 원칙을 희생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 남북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묻고 싶다. 정부는 우리가 이끄는 대로 북한이 따라올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며칠 전 본지는 안보분야 장관을 지낸 인사들에게 남북관계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에 시, 간을 쥐라. 그러나 우리는 원칙을 지키며 회담에 임하라"고 정부에 충고했다. 북한체제 기준으로는 '담하게 먹다 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경우도 다만 한두 달이라도 기다리며 길게 보았으면 어땠을까.

한 정부의 조급한 대북정책이 '대선용'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부/philip@mk.co.kr

상봉-쌀 연계 다시 논란

이산상봉 실현 못하면 비판 고조

햇볕정책 근간 지키기 '교육지책'

北태도 보여 결정... 逆비판론 비등

정부가 수면 밑으로 가리앉아 있던 대북 쌀지원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11월 개최 예정인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상사시키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우선 이당을 비롯한 일부 국내 여론이 대북 쌀지원 연계를 부추기고 있다. 이당과 보수단체들은 북측의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주장 수용에 대해 '몰라다니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맹폭을 가하고 있다. 이당은 한달 더 나아가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경제추진위 등 각종 회담의 남북교대 개최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남북대화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압포까지 전면에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아당과 여론의 집중포화로 인해 햇볕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아래 대북 쌀지원과 연계시켜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북측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담겨 있다.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일방 연계에 대한 비판 여론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여론 등에 입지 않고서는 대북 지원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6차 장관급회담에서 대북 쌀지원 카드를 먼저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 태도를 지켜본 뒤 최후의 카드로 제시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당국자는 "식량지원문제가 거론되더라도 이산가족 문제 등에서 진전이 없으면 지원, 따른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경제추진위 2차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남측지역의 안전상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정부 보유미 30만t과 옥수수 10만t 등 모두 40만t의 대북지원은 상당기간 연기될 공산도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대북 쌀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 것인 만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이당 비판에 정부정책이 흔들리지는 안된다"면서 "또다시 대북 쌀지원 기초가 흔들릴 경우 정권지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식기자 yskim@kmb.co.kr

“내달 장관급회담서 이산상봉-쌀지원 연계”

정부 고려... 논란 가능성

정부는 다음달 개최될 6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쌀지원 중단 등 이산가족 상봉과 쌀지원 연계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져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도 우려의 비상경계태에 강화를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당장간에 이미 합의한 정부 보유미 포함 40만t의 식량지원을 연기하는 것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이르면 다음달 20일 전후에 실시하거나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재추진할 것을 북측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1일 홍순연 남북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에 진화용지문을 보내 이같은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남북경제추진위 2차회의와 금강산 관광 협상회를 위한 2차 당국간 회담을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이후 1주일 간격으로 열어 늦어도 12월 초순까지 모든 회담을 재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주 중 홍순연 통일부 장관이나 정부 대표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보내 6차회담의 금강산 개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등이 대북전문에서 제시할 회담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6차 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따른 남북의 비상경계태에 강화를 문제삼아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만큼 정부 뜻대로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추진위 등 각종 회담에 응하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김영식기자 yskim@kmb.co.kr

러, 北에 전력 유상공급

러시아가 초과 생산된 전력을 북한에 유상공급한다.

러시아와 북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30일 양국은 초과 생산된 전력을 북한에 유상공급하겠다는 러시아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며 다음 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무협상을 열어 공급되는 전력의 양과 가격, 지불방법 등에 관해 논할 계획이다. 모스크바=뉴데

野 “굴욕 외교” 금강산서 회담 與 “작은 양보”

與 일각 “정부 돌연 태도변화- 국민에 뭐라 하나” 개탄

한나라당은 31인 정부의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수용을 대박 굴욕외교라며 10·25 재·보선 이후 대외공세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한 정부의 고뇌에 찬성했다고 맞받았다.

한나라당=권철현 대변인은 “굴욕적인 대북정책을 철회하는 선거민심을 벌써 잊었느냐”면서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 시행과 각종 회담의 남북 교대 개최를 담당하 관철하지 못한다면 남북회담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 52명으로 구성된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의원모임’(회장 김용강)은 성명읍 내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느닷없이 남한내 경계태세를

함께로 무산시키고 후속회담 장소를 제멋대로 바꾸는 행패를 부렸다”면서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끌려다니기만 하는 굴욕적 행태를 반복할 것인가”고 따졌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관급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현대아산의 10월분 금강산 관광대가 45만달러 송금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현대아산측이 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450억원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말쑥한 독에 팔뚝기식 사업에 국민세금을 더이상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성당하 관측소려위하고 있다. 장관급회담 장소로 평양이나 묘향산을

요구했던 정부가 갑자기 방침을 바꿔 북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야당 주장대로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학 대변인은 오전까지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남북문제로 야당과 성명전원. 밭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면서 전대변인은 “우리 입장을 아무리 밝혀도 야당 주장이 국민에게 먹혀온다”고 개탄했다.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은 “정부가 금강산 회담을 수용한 것은 고뇌의 선택이며 한나라당은 남북대화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교류활동 남북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은 것을 양보한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다. 이흥우 박주호기자 hwlee@kmib.co.kr

남북관계 활로 ‘안개속 모색’

이산상봉·경계령해제등 의제 대립 ‘어려운 만남’

6차 장관급회담 전망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8일쯤부터 3박4일간 금강산에서 일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6차 장관급 회담은 기로에 서 있는 남북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담이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2개월여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북측이 남측의 비상경계태세접 문제분야 5차 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연결 이행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열리는 회담에서 남북한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신경전과 살전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의제도 우리측은 북측의 입법적 인기로 무산된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및 5차 회담 합의사항 이행등을 우선 과제로 잡고 있는 반면 북측은 미국테러사태 이후 취해진 남한내 비상경계접 해제, 금강산 관광 미지급금 지급 등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6차 회담에서 남북과 북측은 초반부터 이같은 쟁점사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즉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미 거의 매일 10차례 걸쳐 통문문을 주고 받으며 전초전을 벌였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을 설득해 이른 시

일안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합의사항들을 이행시키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회담에 대한 국내 여론도 과거 어느때보다 열악하다. 한나라당 권철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본적인 원칙마저 내동댕이쳐버린 걸치려 회담을 열어 본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시행과 각종 회담의 교대 개최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원점에서 남북회담을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회담장소도 장관급 회담으로서의 최악의 상황이 다. 회담장인 금강산 여관은 시설이 낙후돼 남북 대표단 35명의 숙소로 사용할 수 없어 잠정형 해상호텔을 이용할 예정이지만 단종관광객들 예약때문에 객실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금강산 여관엔 전전이 잦아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문제다. 통신시설도 열악할 뿐 아니라 북측은 그동안 금강산에 위성화면송출장비인 SNG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현장 회담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현중기자 lechun@munhwa.co.kr

“北, 금강산회담 金正日지시”
洪淳瑛 통일부장관 밝혀

북한은 6차 남북 장관급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는 것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뜻이라고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5차 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측에 밝혔다고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이 31일 말했다.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홍 장관은 이날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5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서 6차 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제의했으나 나는 평양을 주장했었다”면서, “그랬더니 북측의 김영성 단장이 ‘이번(6차)에는 금강산이 좋겠다’고 김정일 장군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송민희기자 ginko@chosun.com

“南北회담 금강산 요구
金正日 지시에 따른것”

정부 고위당국자 밝혀

정부 고위당국자는 31일 “북한이 남북장관급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주장한 것은 9월에 열린 5차 장관급회담 때였다”며 “당시 북측은 (금강산 개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뜻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5차 장관급회담시 정부는 6차 장관급회담의 평양개최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북측 수석대표

인 김영성 내각책임참사가 금강산을 고집해 회담장소를 합의하지 못한 채 공중보도문을 발표했다”며 그간의 경위를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16일로 예정됐던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무산된 이후 북측과 회담장소문제를 고민하다가 회담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북측의 금강산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한국경제

2001. 11. 1 (목)

장관급회담서 이산상봉 최우선 요구

정부, 식량지원과 연계도 검토

정부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식량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11월초께로 예상되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식량

지원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이산가족 문제 등에 진전이 없으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등 각 분야 당국회담의 일정을 재조정하고 ‘반테러 선언’ 합의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용 기자
redael@hankyung.com

朝鮮日報

2001. 11. 1 (목)

‘北 주장 수용’ 발표 6일전에 결정

NSC 상임위 “금강산으로...” 24일 이미 결론
실무진 “이번만은 베풀자” 의견 묻혀버려

정부는 30일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갖자는 북측의 주장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히기 6일 전인 지난 24일쯤 이미 내부적으로 그 같은 방침을 정했으나 발표 시기를 미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측이 우리의 거듭된 평

안개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대남 전문에서 “3차 회담을 제주도에서 했으니 이번엔 금강산에서 하자”고 나오자, 하루 뒤인 24일 남북 장관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 명의로 “6차 장관급회담을 평양이나 묘향산

에서 갖자”고 한번 더 제의를 했다. 그러나 이미 이 제의를 할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부처 사이에선 “북측이 이 제안마저 거부하면 회담을 계속하기 위해선 금강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31일 말했다. 이후 북측이 25일 대남전문에서 “금강산 회담”을 고집하자, 홍순영 장관과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대표 등 NSC 상임

위 멤버들은 주말과 휴일, 전화 혹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금강산 회담’ 수용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는 것.

NSC 상임위 멤버들은 이어 20일 오전 “회담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날 오후 통일부의 고위 간부가 청와대 참모, 임동원 특보와 이반 회담의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실무자들은 “이번만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베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으나, ‘조기 개최’ 방침이 이미 결정돼 있어 묻혀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희기자 ginko@chosun.com

北 “南군사훈련 대화 저해”

노동신문등 잇단 비난...장관회담 지연 가능성

남측이 다음주중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재의할 방침인 가운데 북한이 잇따라 남측의 '독수리 훈련'을 문제삼아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노동신문은 31일 논평에서 남측이 10월29일~11월3일 실시하는 독수리 훈련을 거론한 뒤 "이같은 남조선 군 당국의 무분별한 군사행동이 당면한 남북대화의 앞길을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다.

조선중앙TV도 이날 시사는평을 통해 독수리훈련을 거론하며 남한 군당국이 북한과의 대결지세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반북고압 압살책동에 적극 강조하는 점을 목격할 수 없다며 "이것은 동족인 우리를 주적으로 보고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보당국자는 "북측이 장관급 회담이 임박한 상태에서 남측의 군사훈련과 남북대화를 연계한 것은 좋지 않은 징조"라며 "당분간 남북대화를 소강국면으로 가지는 북측의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금명간 이와

관련한 좀 더 분명하고도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니면 남측이 장관급회담의 9일 금강산 개최 재의를 하기를 기다려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개최시기를 더욱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재영기자

cyyoung@kyunghyang.com

매일경제

2001. 11. 1 (목)

① 중앙일보

2001. 11. 1 (목)

“이산상봉 이뤄져야 北에 쌀 제공”

홍순영 통일 밝혀

홍순영(洪淳瑛)통일부 장관은 31일 “북한에 쌀을 주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장관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구상해온 30만t의 정부보유 쌀을 포함한 대북 식량지원과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일정 제시 등을 사립상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장관은 이날 낮 언론사 간부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전기는 기술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남북경협도 민간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북한에 투자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기사 5면>

그는 “6차 회담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현안의 스케줄을 다시 잡고 7차 회담을 약속받는 것이나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북측이 회담을 또다시 지연하거나, 다음번 회담도 테러 운운하며 북한지역 개최를 주장할 경우 당분간 회담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장관은 현대가 요구해온 정전항 부두시설의 정부인수와 관련, “현대측에는 미안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지원은 어려워 시장원리에 입각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kimseok@joongang.co.kr>

北쌀지원 이산과 연계

정부 장관급회담 대책

내영필 기자

정부는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위한 일정 재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또한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지를 서울로 못박고 북측에서 또다시 금강산에서 하지도 할 경우 이에 활용키로 했다. 남북회담을 계속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홍순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중앙인문사 정치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테러 문제로 야기된 비상관계대세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에서 현대의 금강산관광대가 미저금에 대한 정부 보장을 요구하면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며 민간부분 부채를 정부가 대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 대북 식량지원 방침은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연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수용으로 국민적 정서가 더욱 악화될 마당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일정 재조정 등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부에 쏟아질 비난은 없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일째 전광문을 통해 이루어질 회담제의를 북측이 수용해 상사되더라도 회담성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연기, 모든 당국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주장했던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측의 비상관계 조치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으며 회담 연기 책임을 떠넘길 공산이 크다.

특히 북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나설 만한 ‘쌀’도 비녀나 가는 상황이라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화는 먼 현실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만약 하나 북측이 다음주에 회담을 열지는 우리측 재의를 또다시 연기시킬 경우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금강산행을 결심한 우리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회담 금강산 수용 정부, 내일 北에 전통문

정부는 2일쯤 북측이 홍순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전화문지문을 보내 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금강산 개최 수용 방침과 회담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오후 한승수 외교담당 부장관이 귀국함에 따라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와 관계부처 협의할 것과 회담전라 등을 논의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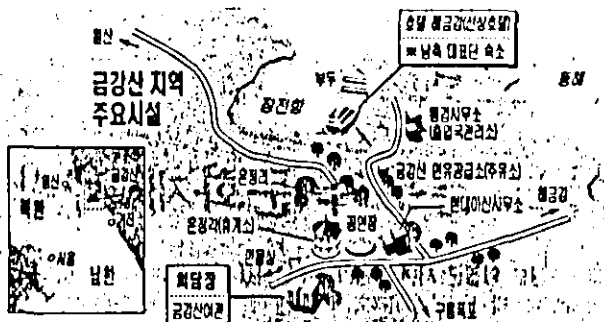
계획이다.
장부 관계자는 "회담일정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 동안 어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귀환때는 금강산 관광인인 실태조사를 이원하지 않고 추가로 선박을 투입하는 방안도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장관은 31일 연변사 간부들과 만나 "북한에 쌀을 주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말해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쌀지원 연계방향을 밝혔다.
김영석기자 yskim@kmb.co.kr

國民日報
THE KOREAN DAILY

2001. 11. 1 (목)

중앙일보

2001. 11. 1 (목)



北 금강산 고집은 '장군님 슈'

정부 우왕좌왕에 낭패 자초

교통·통신망 열악 돌발상황 대비해야

정부가 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개최장소로 북측이 주장해온 금강산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한 공공중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홍순영(洪順英) 통일부 장관이 그 배경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홍장관은 31일 연변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회담개최는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라는 얘기를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렸던 5차 장관급 회담 때 북측 단장이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홍장관의 언급은 북한이 이때부터 장관급회담의 개최장소로 '금강산 이외의 대안은 없다'는 뜻을 우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이 미국 테러에 따른 우리의 비상경계 태세를 빌미로 삼아 '비행기를 통한 원래=협안정한 지역'이라며 배를 타고 오가는 금강산에서 장관급 회담을 하자는 주장을 펴자 정부는 '그런 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며 평양개최를 고수해 왔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정부가 '평양개최'를 밀어붙이면 혹시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가 '예상대로' 북한이 금

강산 개최에서 물러서지 않자 결국 양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명백한 의도가 지난 9월에 드러난 이상 금강산 개최에 정말 수용할 수 없는 논리가 있다면 이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금강산 개최를 초기에 수용하는 게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같은 정부의 원칙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왕 없던 회담이려면 금강산 개최에 따른 문제점을 정부가 꼼꼼히 짚고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통신·교통망이 열악하다. 이곳 회담에 다녀온 당국자는 "양측 모두 서울·평양에서 훈련(訓令)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은데 통신문제로 지장을 받은 적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 열린 4차 직입자회담 때는 한동안 서울-평양-금강산간 남북 직통전화 두절때 우리 회담 관계자들이 속을 태우기도 했다.

또 나중에 한번 운항하는 폐쇄선(실통호)을 이용해 남북하기 때문에 회담장소나 문건이 든 행낭을 제때 전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런 불편보다도 회담의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에 회의가 있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실질적 고민이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한국일보

2001. 11. 1 (목)

"금강산회담 수용은 北에 끌려간게 아니다"

이희호여사 이례적 현안언급



정치문제나 현안에 대해 언급을 지제해 온 대통령 부인 이희호(李姬浩) 여사가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금강산 개최 수락에 비판이 쏟아지자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다. 김대중(金

大中) 대통령이 창원의 경남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던 31일 오전, 이 여사는 인근에서 열린 '여성농업인 격려 간담회'에 참석, "정부가 북한에 끌려간다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여사는 "그동안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두 번, 제주에서 한번, 평양에서 두 번 했으니 금강산에서 한번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산술적 균형의 논리로 설명했다. 이여사는 또 "이산가족의 연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얼마 전 두 분을 기다리다 지쳐 자살을 했다"면서 "하루빨리 그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할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여사는 "왜 통일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하느냐"는 한 여성농업인의 질문을 받고 "남북문제는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여사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취소 등에 대해 "그 쪽도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을 방문한 북한 이산 가족들은 북한 당국이 수십년 동안 전전한 것과 영 다르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 지는데 북한도 위엄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여사는 "서울에 오는 비용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지도 모른다"면서 "북한이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이영성기자 lccys@hk.co.kr

이희호씨 햇볕정책 '외조' 나서

**"이산가족 상봉위해
금강산회담 수용한것"
간담회서 이례적 발언**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씨는 31일 정부의 남북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수용에 대해 "(북한에) 끌려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씨가 공개석상에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여성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산가족들의 연세가 점점 많아지는데다 이미 두 분의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기다리다 지쳐서 자살을 했다"며 "허투루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금

강산 개최를 수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취소하고 회담을 지연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고충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솔직하게 다 털어놓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아예 불신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쌀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쌀을 지원해서) 북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같이 살아야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본다"며 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씨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진와 대에선 요즘 손님이거 국수를 내놓더라도 쌀국수를 내놓는다"며 "심지어 내가 수제비를 좋아하지만 요즘은 밀가루 수제비 대신 쌀떡국을 먹는다"고 말해 간담회장에 웃음이 터졌다.

창원/박찬수 기자 pcs@hani.co.kr

김정일위원장 답방 내년초 時限

**2월 환갑행사계기 파격제안 가능성
野우려·보수층 반대로 성사 미지수**

지난해 남북장관회담에서 합의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미국의 대 테러전쟁이후 움츠러든 북한 의 태도로 보아 올해안에 답방이 이루어지

기는 힘들 것이라는데 일반적 분석이다.
다만 역대 정권 중 자신들에게 가장 초의적인 김대중대통령 임기내 답방을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객관적인 정세판단이나 내년 남북간의 정치 일정 등을 살펴볼때 답

방을 한다면 2002년 1-2월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2002년은 오 김일성주석의 90회 생일(4월 15일)과 김위원장의 환갑(2월16일)이 겹치는 해로 이미 몇해전부터 북한내에서는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군중대회가 열리는등 벌써부터 경축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을 김위원장의 성과로 선전해온 북측으로서는 주민들에게 남북관계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부

담감을 안고 있어 김위원장 생일 이전에 남북대화에 파격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에서는 한·일 공동월드컵(5월31일-6월30일), 지방선거(6월13일), 대선(12월19일) 등 바쁜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북측의 내부 일정과 비교해보면 1, 2월 답방 확률이 가장 높다.

다만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답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러가 있다면 답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처럼 야당이 답방의 정치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품지 못하고 있는데다 남한내 보수세력의 반대로 민만치 않아 김대통령 임기중 답방이 실제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유병권기자 ybk@unhwa.co.kr

문화일보

햇볕정책 '구름' 걷어낼수 있나

국민의 정부, '임기내 마무리' 어떻게

경의선-이산가족 면회소-금강산 육로개설 제도화 심혈

내년 잇따른 선거-北·美 관계개선 불투명등 난관도 많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의무적으로 추진해 온 대북 햇볕정책이 김대통령 임기(2003년2월) 내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은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큰 성과를 얻고 남북관계도 활성화 되었지만 1년4개월여를 지난 현시점에서는 지금 남북대화가 다시 중단되고 합의사항도 이행되지 않는 등 중대한 시련을 맞고 있다.

제6차 장관급 회담은 정소본질을 둘러싼 공방전에 정부의 알보로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10-25 제-보선 패배 이

후 정부 여당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정부의 입지가 더욱 축소되고 있다. 북-미 관계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태평 회상을 수상한 김 대통령의 임기에서는 임기 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일보한 조치들을 합의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사실상 시간과의 싸움에 돌어들어왔다.
내년에는 5월의 월드컵과 8월의 지방선

거 등 중요한 일정이 겹치며 예정되어 김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햇볕정책을 이끌어가기에는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당초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김정일 위원장 답방-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 회담-남북경협 활성화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가 후퇴하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중단할, 동 상황변화가 생기면서 경의선연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금강산 육로개설

과 같은 남북관계제 제도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라도 성사시킨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장관급회담만 계속 진행시킬 경우 김 위원장의 답방은 힘들고 현재 상태만 유지하자는 예시지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면 2차 국장장관회담이 열리는 등 교류 협력을 넘어 군사분계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측으로서는

영향만 시간인 만큼 그에 합당하는 남북 내부 분위기 조성과 심리를 얻어갈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남한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극적으로 성사되지 않은 이상 남북관계는 현재와 같이 긴장 완화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힘들다는 것이 당국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현정기자 leehun@unhwa.co.kr

北軍部 임김 작용 對南사업 '멈칫'

내부에 무슨 일 있다

북한이 올들어 양국간회담(지난 3월 5차 장관회담)과 이산가족 방문단교향(지난 10월 4차 방문단교향)을 돌연 연기시키고,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를 지키지 않는 등 여측 할 수 없는 행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김종일 국방위원장은 연초 상하이(上海)를 시찰하면서 '천지개벽'이라고 강담하고 국제사회와 외대라 수교하는 등 개방적 자세를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공제활동마저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당국과 견문기들은 북한내 온건파 및 대남사업 파트의 입지가 줄어들고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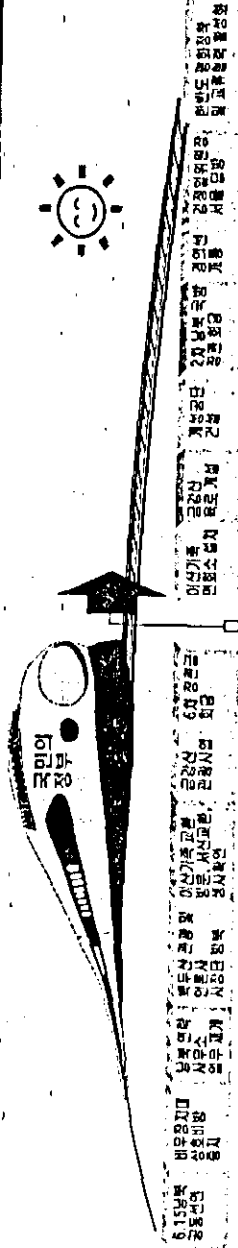
이중석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전리원과 금강산 미지급금 문제로 남북관계에 불만을 갖고 있던 군부가 반대를 전횡시 정부가 내린 조처를 구상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용순 노동당비서의 경우를 살펴 보면 김용일 위원장의 현저시달에 수행하지 않고 군부 인사만 동원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대규모 남북교류에 따른 후유증이 북한 권력 내부와 사회에 퍼지면서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발동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남측에 내려오는 북측 인사가 많아지고 식량·비료지원 등을 통해 남북 생활상이 북측에 앞지르면서 북측 내부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남측에 사람을 더 이상 내려보내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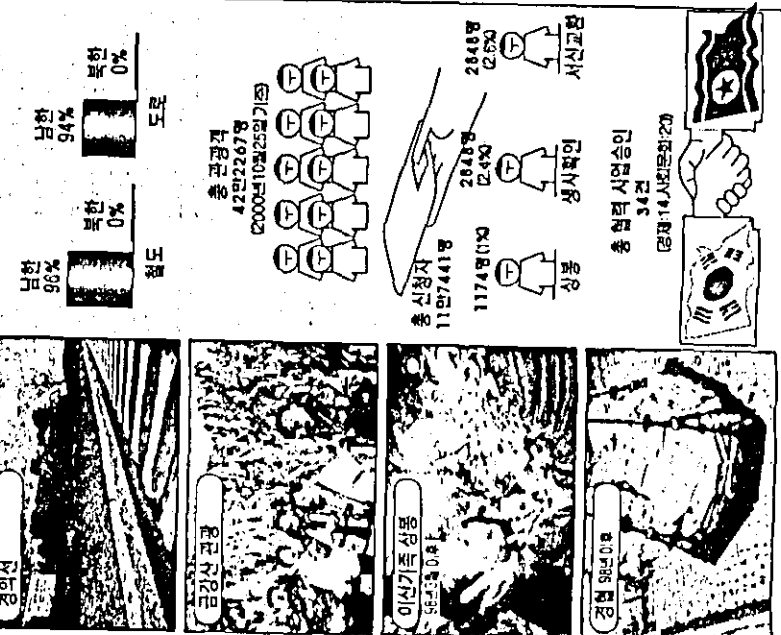
북한에 옥수수 재배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김순권 박사는 최근 북한서 돌아온 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상표가 편한 비료나 쌀 포대는 북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며 변화상을 전했다.

김석기 기자 suk@munhw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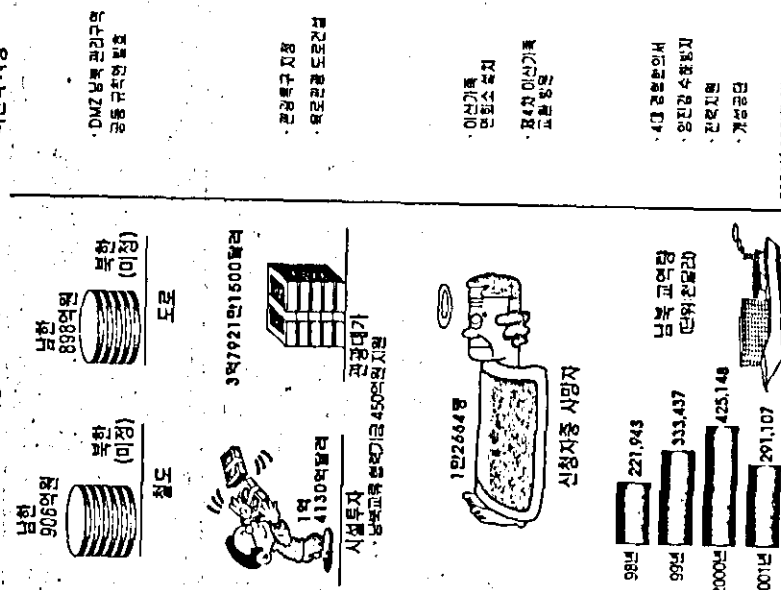
국민의 정부 남북정착 진척도



경과



미진척 사항



2001년 10월말 현재 통일부 자료

9.11테러시대 이후 북한과 미국간 실전



북한

유엔인권국으로서 모른체제의 (테러, 그리고 테러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 (9.12 외부실 발언)

우리는 테러조직과 지원, 선동, 복원 등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테러인권을 강력히 반대한다. (10.5 이영실 유엔주재 대사)

미국은 아직도 테러니 뭐야 우리를 염연히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놓고 국제사적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 (10.9 외부실 발언)

한나라의 국가수반이라는 사람이 연석도 없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 무턱대고 이런저런 지리멸렬 시비부터 하는 것 자체가 실망할 것이다. (10.23 외부실 발언)

미국 행정관들이 우리를 잘 못 견드셨다가는 전례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10.26 조선중앙 방송)



미국

일본 직군참가 8명 부제를 이유로 테러단체에 속한 것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5 바부시 미국주재 대변인)

말라카가 북아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결국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10.11 에이타지 국방부 장관)

북한이 단순한 선명 발표를 넘어서 (큰 기회를 불간심 한하며, 테러와의 전쟁에 동화하기를 바란다. (10.17 허버드 주한미 대사)

경찰청 위원장이 미국을 수습하지 않고 지나치게 의심하고 비밀스런다는 점이 실망스러울 뿐이다. (10.18 부산 대총영)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진동없이 견딜 것이고, 북의 오판에 대해 학교엔 (대학을 이해해 놓고 있다 (10.23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

테러이후 북·미관계 전문가 10인 진단

개선
유지
악화

“관계정상화로 컨트롤”

“테러戰 집중 자극피해”

“핵·미사일 압박 가중”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이후 교착 상태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 관계가 미국 테러시대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문가 10인의 의견을 들어본다.

◆관계개선론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대(對)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는 미국이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진라구사차원에서 테러지원국이라는 의혹만 가지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더이상 검색되지 않을 것이다.

▲조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세계 중심추가 미국에 기울어져 있는 만큼 양보의 시작은 북한측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부시 행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기만 하면 미국의 군사적 강간책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먼저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미국으로서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테러그룹이나 테러지원국을 줄여나가기 하기 때문에 북한을 끌어안아 판을 깨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단기적으로 검색국면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북한은 관계정상화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미관계를 늦출 이유가 없다.

◆현상유지론

▲서동만 심지대 교양학부 교수=테러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미관계는 현상대로 유지되는 것이 최선이다. 북한도 부시행정부가 클린턴행정부 당시 북·

미공동선언의 반대선언을 끊임없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만큼 북·미관계는 당분간 현상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현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현재 상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나 생화학무기에 대해 거론하기는 하겠지만 북한을 막다른 곳으로 좁히는 않을 것이고, 북한도 맞대응해 공지에 돌리는 자중수는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영권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현재 미국이 테러에 몰두해 있고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이대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악화론

▲송영대 전 통일부차관=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미국은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외에 생화학무기 개발도 중지하도록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크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미국은 북한을 '배드 게이(Bad Guy)'로 규정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규정하에서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북한도 내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환갑을 계기로 자주노선을 강화하며 압박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미국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 수출 중지, 핵프로그램 동결과 핵확산사단, 생화학 무기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가시적 조치를 취하면 북·미관계는 급류를 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검색국면은 장기화될 수 있다. /김석기자 suk@munhwa.co.kr

장관급회담때 김정일면담 추진

'9일 금강산개최' 제의

정부는 6차 장관급회담에서 홍순연(洪淳瑛) 남북 수석대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위원장 면담이 이뤄진 경우 2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김의신 인견,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 면회소 신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일 북측에 전 회장지문을 보내 6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9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하면서 이미 대리 시대 이후의 국제 정세와 남북 인식 스인기원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금강산관광 활성화 등 위한 2차 당국간 회담, 2차 남북김 위원장추진위 등의 일정 조정 등 회담의 제할 미리 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회담에서 최우선과제로 잡고 있는 4차 이산성분이 국내 여론과 맞물려 대박 식량지원과 큰 몫에서 연계된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영기자
cjoying@kyunghyang.com

대한매일

2001. 11. 2 (금)

금강산서 이산상봉 검토

정부 '8일 장관회담' 제의 방침

정부는 2일 북한에 전회통지문을 보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회담기간 중 홍순연(洪淳瑛) 통일부장관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일 "이번 회담은 향후 남북 관계에 대단히 중요한 고비로, 원안에 구애없이 없다

포괄적으로 남북관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산가족 상봉이 이번 회담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지 않는 한 다른 부속회담 일정을 합의하지 않을 뜻을 시사했다. 정부는 북측이 끝내 북한 이산가족 상봉단의 서울 방문에 난색을 보일 경우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호기자 jade@kdaily.com

한국일보

2001. 11. 2 (금)

장관급회담때 김정일면담 추진

"8일부터 금강산 개최"

北에 오늘 전통문 보내

정부는 6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추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방침을 전하고, 2일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

인 홍순연(洪淳瑛)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금강산에서 8일부터 3박4일간 회담을 기질 것을 북측에 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담에 앞서 다시 전통문을 보내 ▲국제 대리 정세 ▲4차 이산가족 교환 등 합의사항 이행 ▲향후 남북교류 추진 방향 등을 회담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회담 전에 의제할 미리 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

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수석 대표간 비공개 접촉을 통해 김 위원장 면담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지난해 8월말 2차 회담에서 박재규(朴在圭) 전 통일부 장관이 김 위원장을 면담했고, 북측은 9월 5차 회담에서 김명선 단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南보수세력이 문제” “대화노력 다할것”

北 ‘두 목소리’ 속내는...

‘남북대화’ 北태도 분석

최근들어 북한의 대남(對南)관계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군부 등 강경-보수세력과 대외관계 개선을 주도하는 온건세력간 갈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대화가 걸리는 상황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회담을 이끌기 위해 양면전략을 펼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厚) 담비서가 남북관계 침체와 함께 대내합동이 위축된 것도 강경파의 독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단국에 대해 직접 비난을 피하면서 대화란 비라는 속내를 곳곳에서 내비쳤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는 지난달 31일 “우리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남대화쯤 구원하고 협력과 교류를 이어나가기 위해 앞으로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대외의 지탄 피력했다. 장관급회담 김령선 북측 단장은

군부등 강경파와 온건세력간 갈등 추측 “회담 입맛대로 이끌겠다” 南압박도 노려

북한이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인기한 이후 남한의 특정 부류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달 31일 남한 군단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대화의 분위기를 해치고 그 앞길에 더욱 복잡성을 조성하는 고의적인 반(反)대화 행위”라고 트집을 잡았다.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달 24일 남한의 특정 정당과 군부급 비롯한 일부 ‘극우의 보수세력’의 반민족적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20일과 22일에도 남한의 경계태세를 문제삼았다. 이는 군부 등 강경세력이 미국의 대대적 전쟁에 따른 위기의식에 휩싸여 남한 입상적인 군사활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남사업총괄관 김용순(金容

은 지난달 25일 남측에 보낸 전화 중지문에서 “6차 북남상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하여 언제나 금강

산 지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남측이 회담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건세력이 강경세력의 독재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론 계속하는 화해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6차 장관급 회담 등 남북 단국간 대화를 금강산에서 열자는 북측의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일부 세력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여 남한 정부가 부담을 주는 것이다.

정부 단국지는 “북측의 제안을 수용해 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기로 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 못해 비난 공세를 펼치는 것”이라며 “2일 관문접을 통해 전공문을 보내면 북측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金正日 비공식면담 추진

6차 남북장관급 회담서

정부는 2일 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8일 금강산에서 3박4일간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한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전공문에서 국제 대외 정세,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향후 남북교류-추진 방안 등 의제들 미리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회담 기간중 홍순연(洪淳英) 통일부장관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면

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9월 5차 장관급회담에서 김령선 북측 단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예방할 바 있다.

또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정부는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단의 서울 방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김정일 답방 촉구할듯

정부, 오늘 北에 전풍문

니영필 기자

정부는 다음주 금강산에서 열린 예정인 제6차 장관급 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촉구하고 홍순영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와 김 위원장의 빈담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일 제6차 장관급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조율하고 다음주 제6차 장관급 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풍문원 2엽 전달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전풍문에 남북이 논의할 의제를 제시해 그 동안 기조연설문을 읽던 형식의 회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의제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일정 확정, 테러에 대한 우리측 입장, 남북관계

진전 방향 등이다.

종일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전풍문에는 논의할 의제를 먼저 제시해 '군부의 위안급 못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밝게 획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제에는 포함하지 않더라도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해서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담에서 '대선용'이라며 우리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나 남북관계는 민족분쟁이므로 대선과는 별개로 서울 답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이 같은 요청은 공식석상보다 수석대표 접촉 등 비공개 접촉 등을 통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홍순영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와 김 위원장의 빈담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정부는 모든 '제언'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상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강산서 장관회담"

정부, 北에 전풍문

정부는 2일 남북장관급 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 명의로 북측 김영성 단장 앞으로 대북 전풍문을 보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동안 금강산에서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재의했다.

정부는 이날 전풍문에서 북측이 남북의 비상경계선을 이유로 금강산에서 회담을 열지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조속히 회담을 열어 중단된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침중기자 lochun@munhwa.co.kr

장관급회담 내주 열릴듯

정부, 9일부터 금강산개최 재의... 김정일 면담도 추진

이산가족 금강산서 상봉은 전혀 검토안해

정부는 2일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 명의로 된 전풍문지문을 북측에 보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금강산에서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수정제의했다. 북측도 장관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남북 대화가 다음주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김영성 북측 단장에게 보낸 전풍문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 재개를 촉구하고 금강산 관광 합성회 2차 당국간 회담 및 남북합동추진위 2차회의 일정 재조정, 국제테러 문제 등을 이번 6차 회담에서 다루자

고 제안했다.

정부는 회담기간 중 수석대표간 비공개 접촉을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추진, 서울단방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위원장과 면담이 성사될 경우 회담인장을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말 2차 회담에서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위원장과 면담했고 북측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5차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된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과 평양에서 이

뤄지던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할 경우 남북한 수천명이 동시에 금강산에 가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금강산 장관급회담 9일 열자”

洪淳瑛통일 北에 제의

정부는 2일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9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북측에 제의했다.

정부는 이날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 명의의 대북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산가족방문단 상호교환을 비롯해 남북간 미이행 합의 사항들의 추진일정을 새로 정하는 문제와 쌍방이 제기하는 현안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회담 의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남측의 회담인정을 수용할 경우 남측 대표단은 8일 금강산관광선 실행호를 이용해 방북한 뒤 9일부터 본격적인 회담인

정이 돌입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면담을 적극 추진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시기를 타진하는 등 남북간의 현안타진을 시도할 계획이어서 민담의 시사여부가 주목된다.

홍 장관은 진통문에서 “내외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남북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홍통일, 김정일 면담추진

9일 금강산회담 제의

니영필 기자

정부는 2일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홍순영 수석대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적극 추진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시기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신청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홍 수석대표 명의로 된 진통문에서 “남북 사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회담 주최측이 장소를 정하면 상대방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남북 사이의 관례라는 북측 주장에 유의해 북측 제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표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방문단 상호교환을 비롯해 남북이 합의는 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의 추진일정을 새로 정하는 문제와 쌍방이 제기하는 현안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의제를 제시했다.

홍 수석대표는 또한 “내외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남북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측이 이번 진통문에서 ‘사전준비’를 강조한 것은 ‘군부 진위를 못봤었다’는 등의 ‘회담 진행의 장애요인’에 대한 암시인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2001. 11. 3 (토)

“9일 장관회담” 北에 공식제의

정부는 2일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연기된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오는 9일부터 12일간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홍순영(洪淳瑛)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는 진통문에서 “남북 사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회담 주최측이 장소를 정하면 상대방은 존중하는 것이 남북간 관례라는 북측 주장에 유의하여 (금강산에서 개최하지는) 북측 제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이산가족 방문단 상호교환을 비롯 미이행 합의사항의 추진일정을 새로 정하는 문제와 쌍방이 제기하는 현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회담 의제를 제시했다.

최재영기자 cyoung@kyunghyang.com

한겨레

2001. 11. 3 (토)

정부, 9~12일 금강산회담 제의 북에 전통문 “방문단 교환등 불이행 사항 논의”

정부는 2일 오전 홍순영 회담 수석대표 이름의 전화통지문을 북측 김명성 단장에게 보내 9~12일 금강산에서 6차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홍 수석대표는 진통문에서 “회담에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쌍방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비롯해,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는 사항들의 추진일정을 새로 정하는 문제와 쌍방이 제기하는 현안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회담에서 대러정세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를 좁히는 한편, 홍 대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남북 간 약속은 차질 없이 이행돼 왔어도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예정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외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남북 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사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회담 주최측이 장소를 정하면 상대방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라는 북측 주장에 유의해 북측 제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훈기자 nomad@hani.co.kr

한국일보

2001. 11. 3 (토)

금강산 장관급회담

9~12일 개최 北에 제의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2일 제6차 장관급회담을 9~12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북측에 제의했다. 남측은 특히 회담 대표단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추진, 성사될 경우 회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 장관은 진통문에서 “남북 사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회담 주최측이 장소를 정하면 상대방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라는 북측 주장에 유의해 북측 제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쌍방이 제기하는 현안들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회담 의제를 제시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제의
정부, 北에 전화통지문

정부는 2일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의했다.

회담 남측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 이집의 진흥문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5차 회담의 합의사항들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내외의 우려가 높다"면서 "6차 회담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와 화해협력의 길을 지향하는 쌍방의 의지를 확인토록 하자"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특히 "이산가족방문단 상호교환을 비롯, 남북간에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합의사항들의 추진일정을 새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회담의 재담 미리 제시했다.

●진경호기자 jkd@kdaily.com

남북관계 일단 '숨통'

■ 금강산회담 수용 이후

정부가 2일 제6차 장관급회담을 북측에 정식 제의함에 따라 조만간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측이 우리 제의대로 오는 9일 회담에 응한다면 지난달 12일 4차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뒤 한달동안 계속됐던 교착상태가 일단 전기를 맞게 되는 셈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반테러전쟁 이후 형편이전 남북관계를 추스르고 원 정부 김권 후반기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변수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정부는 회담기간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심사여부가 주목된다. 이를 통해 서울 답방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사표 타진 한 방점이어서 결과에 따라 지지않은 미장이 예상된다.

이번 회담은 그러나 국내의 상황을 감안할 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대테러전쟁 및 남북의 비상경계대세 등 국내외 정세등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의 비상경계대세와 맞물려 있어 접진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키며 남북의 비상경계대세를 이유로 들었던 북한이 심사시 태도를 비호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타결짓지 않고선 다른 후속회담의 일정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후의 카드로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회담 자체를 다소 늦출 가능성도 진치고 있다. 당초 회담장소를 금강산으로 고집한 이유도 남북대화 상담기간 늦추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있다.

●진경호기자 jkd@kdaily.com

① 중앙일보

"장관급회담 9일부터"
정부, 北에 제의

정부는 2일 오전 판문점을 통한 대북 진흥문에서 6차 장관급 회담을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금강산에서 개최하고자 제의했다. 장관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진흥문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상호교환을 비롯해

남북간에 합의는 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의 추진일정을 새로 정하는 문제와 쌍방이 제기하는 현안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홍순영(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나 서울답방 의사를 재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면담 심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世界日報

"장관급회담 9일 금강산서"

정부, 北에 제의... 이산상봉등 의제도 전달

정부는 2일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정부는 북측이 즐기치게 고집했던 금강산 회담이므로 우리측 제의를 수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 겸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는 김권 상 북측 단장에게 보내 전화통지문에서 "남북 사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회담 추진속이 장소를 정하면 상대방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남북 사이의 관례라

는 북측 주장에 유의하여 북측 제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홍 장관은 "이산가족 방문단 상호교환을 비롯해 남북이 합의는 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의 추진일정을 새로 정하는 문제와 쌍방이 제기하는 현안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회담 의제의 방향을 전달했다. 홍 장관은 "남북간의 약속은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예정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국간 회담들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내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남북은 지난달 28일 6차 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회담 장소를 두고 북측은 금강산, 남측은 평양을 고집해 그동안 10여 차례의 '장소 공방'을 펼쳐왔다. 한편 정부는 회담기간중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면담을 추진, 서울 답방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말 2차 장관급회담에서 박재규 당시 통일부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을 이끌어냈다.

/조정진-윤상환기자 jjj@sgt.co.kr

한국일보

2001. 11. 5 (월)

北, 9~12일 장관급회담 수용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9일부터 3박4일간 금강산에서 열린다.

북한은 3일 대남 진흥문에서 "북과 남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 방일의 길로 나아가 한다"면서 우리측이 2인 제한한 회담일차 장소 등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대러 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4차 이산가족 교환 등 협의사항 일정 재조정 ▲대북 쌀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측이 남측의 대러 경계대세 해제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합의 도출이 어려워질 것을 전망했다.

/이동준기자 dlee@hk.co.kr

매일경제

2001. 11. 5 (월)

이산상봉 제3장소도 검토

정부 6차장관회담 준비

나영필 기자

북한이 제6차 장관급 회담 개최를 수용함에 따라 정부는 5일 서울 삼정동 회담사무국에서 모의 회의를 갖는 등 회담 준비에 돌입한다.

정부는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5명이 참가하는 모의 회의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장관급 회담 전략을 점검하고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관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장소, 형태 등에 대해서도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기초반

연 중심의 전체회의를 갖는 것 외에 진지한 의견교환이 가능한 수석대표 또는 대표간 단독접촉을 통해 남북간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구상이어서 북측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우리측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반드시 잡기 위해 서울·평양 교차 방문이 아닌 금강산 등 제3의 장소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간 현안을 풀기 위해 북측 최고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적극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돌연 연기 당시와 비교할 때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世界日報

2001. 11. 5 (월)

경향신문

2001. 11. 5 (월)

9일 장관급회담 北 남측제의 수용 금강산서 개최 확정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오는 9일부터 4일간 금강산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미워진 4차 이산상봉을 비롯해 금강산관광, 양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 2차 남북경협추진위 등 각종 회담 일정이 이번에도 다시 잡힐지 주목된다.

장관급회담 북측 김영성 단장은 3일 홍순영(洪淳瑛)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지난 남측이 제의한 9~12일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를 수용했다. 김단장은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결과 풍요의 넓은 길을 열어나간다"며 "이같은 입장에 기초해 북남 상급회담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귀측에 통지한다"고 밝혔다.

최재영기자 cyoung@kvhgnyang.com

남북 장관급회담 9일부터

北, 금강산개최 제의 수용

정부는 남북이 오는 9일부터 3박4일간 금강산에서 6차 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돌입했다.

김영성 장관급회담 북측단장은 지난 3일 전화통지문을 보내 9일부터 금강산에서 6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는 남측 제의를 수용했다.

김 단장은 통지문에서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결과 풍요의 넓은

길을 열어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일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홍순영(洪淳瑛) 남측 수석대표를 비롯, 대표단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관급회담 전략을 검토한다. 또 이날 관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장소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차 회담에서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연기된 방문단 교환이 연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등 각종 남북관계 일정 재조정

에 주력할 방침이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南北장관회담 9~12일 개최

北 남측제의 수용

정부는 9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 5차 장관급회담 일정의 재조정을 비롯해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이번 회담에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및 대련도 시범단 교환 연기에 대해 북측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연기된 방문단 교환과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등 각종 남북관계 일정을 조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북측은 3일 김영성 북측 대표단장 명의의 대남 전화통지문을 보내 9일부터 금강산에서 6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는 남측제의를 수용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한겨레

2001. 11. 5 (월)

금강산회담 9일 개최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9월15일 제5차 회담 이후 거의 두달만인 오는 9일부터 3박4일간 금강산에서 열린다. 김영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은 3일 오전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9~12일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열자는 남북 제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 전통문에서 전남 남쪽이 제시한 회담의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대한매일

2001. 11. 5 (월)

남북 장관급회담

9일 금강산 개최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9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린다. 장관급회담 김영성 북측 단장은 3일 홍순영(洪淳瑛)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측의 제의대로 9~12일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자고 통보했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전통문에서 "북과 남은 어떤 경우에도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과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6차 장관급 회담은 9월15일 제5차 회담 이후 거의 두달만에 재개된다. 당초 합의한 지난달 28일보다는 12일 늦춰졌다.

남북은 장관급 회담에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일정을 비롯,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개최 시기 등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특히 이번 회담 때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 면담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시기를 타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5일 판문점에서 남북 협력관 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회의 장소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전경호 기자 jade@kdaily.com

한국일보

2001. 11. 5 (월)

9일 남북장관급회담 전망

남북은 9~12일 금강산에서 6차 장관급회담을 개최기로 합의, 4차 이산가족 교환 등 미이행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길

단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국제 테러정세에 대한 남북간의 견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북측의 주적론(主敵論)과 남측의 합의이행 요구로 설전만 벌인 4차 회담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비판론도 직지 않다.

테러경계 등 현안 시각차 '빈손' 회담 그칠 가능성

남측은 북측의 일방적인 합의 불이행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연기된 2차 경험추진위 등의 일정 재조정을 최우선 의제로 삼을 방침이다. 특히 이산가족 행사 일방 연기를 강력히 항의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북측은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해제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남측이 6·15 선언을 위배했다고 몰아붙일 공산이 크다. 북측은 3일 국제 테러 협약에 추가적으로 가입결정을 내리는 등 반테러 입장을 강조했지만, 남측의 경제대세가 지속되는 한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북이 테러정세에 대한 인식의 폭을 좁히지 못할 경우 합의사항의 실천은 요원해진다. 때문에 남측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의 면담을 적극 추진, 서울 답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답판을 짓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북측이 회담 장소로 평양을 회피한 이면에는 남

■남북 장관급회담 일정

차수	일시	장소	주요 합의 및 비이행
1차	2000. 7.29-31	서울	홍순영도 고함방문, 경의선 연결 합의
2차	2000. 8.29-9.1	평양	이산가족 교환, 군사당국 회담 개최 ■남측 수석대표 김정일 명단
3차	2000. 9.27-30	제주도	경협추진위 설치, 이산가족 서신교환 협력
4차	2000.12.12-16	평양	이산가족 교환, 경험추진위 운영 ■북측 전직지원 요청
5차	2001. 8.15-18	서울	경의선 연결 통 13개항 합의 ■북측 단장 김대중 대통령 예방

南 "상봉등 실현" 집중거론 방침 北은 경제실리 확보에 주력할듯

남측의 김 위원장 면담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북측은 오히려 중단 위기에 떨어진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경제적 보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북측은 관광객 감소와 현대이산의 유동성 위기로 관광대가 지에 대해 답판을 짓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북한에 끌려 다닌

다는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번 회담에 임하는 만큼 정부

의 태도는 매우 단호하다. 정부내에선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 중인 정부보유미 30만달러와 육수수 10만톤의 대북지원물 이산가족 행사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산가족 행사 등 성과를 갖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2001. 11. 7 (수)



“죄송합니다” 홍순영 통일부장관이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남북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와 중국에서 치형된 한국인 신세사건에 대한 이당의원들의 질책과 추궁이 이어지자 사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고 있다. /지차수기자

한겨레

2001. 11. 7 (수)

“식량-이산문제 무관안해”

홍순영 통일

홍순영 통일부 장관은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답변에서 “5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안곡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북 식량 지원은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4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 무산과 관련해 “9일부터 열리는 6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단호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9월12일까지 주중 대사들 지낸 홍 장관에 대해 중국 신이무개씨 사건과 관련한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홍 장관은 “지휘 책임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자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홍순영 통일부장관이 의원들과 남북장관급회담 등 대북정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식량지원-이산상봉 연계”

홍통일 北요청-장관급회담서 상봉무산 추궁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은 6일 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무산과 관련,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단호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안곡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북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사실상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6차 회담을 위해 북한

방문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을 만나면 할 얘기를 마음속으로 정리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면서 “6차 회담에서 대(對)체려, 남북공동선언 채택에 대해, 북한의 동조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문제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정정기자 jhj@sgt.co.kr

朝鮮日報

2001. 11. 7 (수)

통외통위 '회담장소 수용' 攻防

6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그간의 입장을 돌연 바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는 북한 요구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 박명환(朴明煥) 위원장은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에게 “(북에) 일방적으로 권려다니기만 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남한의 비상경제태세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했다는 북한의 억지론을 통일부가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통일부는 초지일관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변하게 된 것은 누구의 결정인지 대답하라” (박관용·朴寬用), “처음부터 금강산을 정했으면 모르되 일단 반대했다가 북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국민들은 ‘결국 김정일 뜻대로 가는

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유용수·柳興洙)며 홍 장관을 몰아세웠다.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특보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근거로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정성민(鄭誠敏)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연기는) 미국 테러로 긴장이 고조돼 북한 군부의 입장이 강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북한 군부 강경파의 독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 안목에서 보면 (금강산 수용은) 다행스런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개최 장소의 선택권은 주최측에서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장소 문제로 소모적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금강산 수용은 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결정이고, 그것이 대통령부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가 “회의록을 보지”는 박관용 의원 요청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협의해보겠다”고 회답을 피했다. 홍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무산과 금강산 회담 수용에 대한 야당측의 사과 요구에 “같은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崔秉默기자 bmchoi@chosun.com

남북장관급회담 장소변경 공방

국회 통의통위

여야는 6일 홍순업 통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통일외교통상
위원 열어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장
소 변경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정부는
회담장소 결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녔다"며 "북한의 '남
한 길들이기' 진술에 탄압받았 아니냐"
고 밝혔다. 김용갑 의원은 "누가
강권이 되던 북한에 끌려다니긴 미안
가지라는 게 시중의 평가"라며 "청와
대의 지시로 '금강산 회담 불가' 방침
을 갑자기 철회한 것 아니냐"고 다그
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북한내 군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
지는 시점에서 회담이 중단되지 않고
열린 것만도 다행"이라며 "중요한 것
은 회담장소가 아니라 회담이 계속되
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순업 장관은 답변을 통해 "이산
가족 상봉이 무산되고 회담장소 문제
로 국민에게 심리불편 끼친 점을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의 한
국인 시정집행과 관련한 외교부의 인
이한 대처에 대해서도 "사건 진행단
시 외교부 장관과 주중대사를 역임한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뉘우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한 홍순업 통일부장관이
이방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곤
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김병연 기자
misaeon@hankyung.com

임동원씨 NSC 주도?

국회통일위 추궁

황동헌 기자

지난 9월초 국회에서 해인건의안
이 기결된 후 임동원 장관에서 물러난
임동원 대통령 특보가 국가안전보
장회의(NSC)에 참가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홍순업 통일부 장관은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임
동원 씨가 아직도 국가안전보장회
의에 참가하느냐"는 김용갑 한나라
당 의원의 질문에 "의장 초청항식
을 서배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반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6차 장관급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결정한 것은 임동원 대통령 특보가
개입 내지는 주도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결
정이 통일부의 뜻인지, 김대중 대
통령의 뜻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금강산 회
담은 남북대화의 계속성 유지를 위
해 통일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
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의를 거쳤
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뜻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9일부터 금강
산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을
놓고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은 "장관급
회담 장소가 결정되기까지 과정은
깜깜하다는 굴욕적 자세의 전향"이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홍순업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의 추궁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라며 "끌려다니더라도 상처가 있다
면 이해할 수 있지만 상처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성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회담은 어떤 장소에서 개최되
느냐보다 국제 테러정세 하에서 한
반도평화와 남북화에 기초를 유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회담
이 성사된 것은 큰 안목으로 볼 때
다행스러운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매일

2001. 11. 7 (수)

“대북 식량지원·이산상봉 연계”

홍순업 통일장관 국회 답변

홍순업(洪淳煥) 통일부장관은 6일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양곡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북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문제
는 사실상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5면

홍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
위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4차 남
북이산가족 상봉 무산과 관련, "오는 9
일부터 열리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에서 (이 문제를) 단호히 추궁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차회담에서 김정일(金
正日)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희망한
다"면서 "김 위원장과 할 얘기가 마음
속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고 말해 김
위원장의 답변문제를 논의할 뜻이 있
음을 시사했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위에서 "신후조리원을 조산
원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곧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최경
원(崔慶元) 법무장관이 이날 법사위에
서 한국인 신모씨에 대한 중국의 시정
집행과 관련,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
난 98년 국내 마약 관련부처 협의에서
신씨 등의 사건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에 대해 "외교부는 물
론 법무부 등 시범당국도 이번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
지 못해 사형에까지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6일 운영·법사·국방·
통의통위 등 11개 상임위를 개편, 112
조 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소관부처별 심의를 계속했다.

● 이진우기자
jwkday.com

‘성과’보다 ‘만남’에 무게

정부 “이산상봉 최우선 논의”...테러정세 등 줄다리기 예고

■ 6차 장관급회담 전망

“회담할 때마다 어떤 가지적인 합의사항이 있어야 성과 있는 회담은 이나라고 생각한다.”

홍순영 통일부 장관이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6차 남북 장관급회담 전망에 대해 보고하면서 한 말이다. 홍 장관은 “남북대화는 입차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현안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련의 긴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요컨대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이번 회담이 지금까지의 장관급 회담과 다른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는 따라서 9·11테러사태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으로 조성된 ‘테러정세’에 대한 남북의 한지한 인식 차를 좁히는 입찰 회담의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남북의 비상경계 조치 등은 국제사회의 대테러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이고, 미국 F15 전투비행대의 한반도 증편

도 키티호크호의 이동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북쪽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쪽이 정부의 이런 설명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테러정세’를 놓고 남북이 실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남쪽은 난국 타개를 위해선 회담 수석대표인 홍 장관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추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5차 회담에선 거론치 않았던 김 위원장의 조속한 답방도 어떤 형태로든 촉구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일정 재조정을 이번 회담의 우선 의제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4차 방문단 교환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는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쪽 태도에 비춰볼 때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 당국자는 “백방으로 노력하겠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체면을 살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상호교환 방식이 아닌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도 고민

하고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식량지원 문제도 예민한 쟁점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다른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경험적 수준에서 차관합상을 벌여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태도다. 요컨대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했으나 뒤로 밀린 당국회담의 입점이 재조정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쪽의 이산가족 상봉 일방적 연기에 대한 남쪽의 끈두신 여론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북쪽의 진전된 태도가 없다면, 식량지원 입점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북쪽은 위기에 봉착한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남쪽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육로관광로 개설과 특구지정이 선결과제”라며 “금강산관광은 시장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회담은 앞으로 남북관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지만, 회담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하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l.co.kr

‘장관급회담 수용’ 도마에

■ 통일동향, 與野공방

국회 통일외무인 열리면 대북정책을 놓고 타격대격화한 여가 6일에도 여김이 같은 풍경을 되풀이했다. 이날은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북측 요구대로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이날 홍순영(洪淳英) 통일 장관을 상대로 “남측 김일성이라는 북측 의도에 또 밀려들었다”며 “굴욕적”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국제적 테러 상황을 감안할 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회담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압박을 쳤다.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은 “정부가 ‘금강산이 좋다’는 김정일의 한마디에 끌려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회담 장소를 바꿨다”며 “도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느냐”고 꼬이세웠

다.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정부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금강산 개최를 수용한 것은 이 정권의 한심한 대북정책을 보여준 실례”라고 고지세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제 테러정

野 “北에 끌려다녀 굴욕적”

與 “평화유지위해 불가피”

洪장관 “韓人 처형 책임통감”

세가 한반도에 불용을 뒤집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한반도의 평화유지라는 측면에서 이번 회담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선 평가해야 한다” (장성민·張誠敏 의원은 ‘긴장완화론’으로 반박했다. 같은 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일방 연기 등 북측 태도는 신뢰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이당 비판을 수

용하면서도, “인도적 측면, 한반도 평화조성 등의 관점에서 회담수용은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홍 장관은 이당 공세에 다소기가 위인 듯 “굴욕적이라 국민 비판을 잘 안다”면서 “모든 얘기를 국민에게 솔직히 보고하고 지지할 받았다”는 답변으로 비켜나갔다.

이에 앞서 홍 장관은 오전 업무보고에서 주중대사 및 외교부 장관 시절 일어난 중국의 한국인 처형 파문과 관련, “책임을 지라”는 이당에 진판을 올렸다.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김덕룡(金德龍) 의원은 “국제적 망신에다 국민 자존심까지 짓밟는 중대한 사건이 홍 장관의 재직시 있었다면 미망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홍 장관은 “지위책임을 제대로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몇 차례나 사과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장관급회담 대표단 오늘 방북

내일부터 금강산서 세차례 회의

남북은 9일부터 3박4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리는 6차 장관급회담에서 모두 3차례의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7일 "남북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9일부터 사흘간 날마다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전체회의 말고도 수석대표와 실무대표 간의 다각관 형태의 접촉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회담장 감속소는 금

강산이관, 남쪽 대표단 규모는 39명으로 정해졌다"며 "대표단은 8일 오후 발방호편으로 금강산에 도착한 뒤 같은 날 저녁 8시 김경남 북쪽 단장이 금강산이관에서 주최하는 환영 인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순영 남쪽 수석대표는 7일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관련 부처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김준필 자민련 총재를 예방해 회담대책 등을 설명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경향신문

2001. 11. 8 (목)

정동塔

남북관계 '初心으로'

요즘 남북회담에 관여하는 당국자들을 만나보면 기운이 많이 빠진 것을 느끼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9일 다시 북측과 얼굴을 맞담 장관급회담 대표들도 기백이 없다. 여기저기서 '잘 안된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다. 도무지 흥이 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고백이다.

회담 성과 도출에 자신이 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한다. 호기롭게 성과를 자신했지만 그만 못한 성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경험을 의식한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남북관계가 위축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남북의 정세를 감안하면 이런 정서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울근곶곶하던 남북간에 대화가 시작됐지만 정략적이고 타산적인 남쪽 여론과 체제유지를 배경으로 한 북쪽의 어깃장 놓는 태도가 발목을 잡아 남북관계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남북의 내부상황은 이를 더 잘 보여준다. '남한에 친북세력이 많고 있다고'는 남쪽 내부 일각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북쪽에는 '연남(連南)세력이 평안남도에만 30%가 넘는다'는 분석이 있다.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남쪽 야당의 목소리는 '대남정책 해서 얻은 건 환색비라밖에 없다'는 북쪽의 남 선 비판과 맥락이 닿아 있다. 보수와 진보세력간 남북감동의 끈이 끊어진 남쪽과 개방과 대남 강경파간 북북감동의 북쪽은 변화할 거부하는 측면에서 닮은 꼴이다. 남쪽 보수파들의 '우리끼리 살자'는 말은 '개방하지 말고 우리식 사회주의로 살아나가자'는 북쪽 강경파들의 고집과 비슷하다.

남북의 내부감동은 지금 정점에 이른 듯하다. 남북관계가 고비관 맞고 있다는 예기도 된다. 여기에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간 공격으로 골격을 갖춰가고 있는 '반테러와 반반테러'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함께 얽혀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국제질서와 한반도질서가 방황정립을 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남북간에는 되는 일보다 안되는 일이 더 많아졌고, 성사돼도 흠집을 동반한다. 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개최장소 논란으로 얽힌 뒷맛을 남긴 것이 좋은 사례다.

비등가(非等價) 비동시(非同時)로 대표되는 '헛발질적 상호주의'도 끼치고 엄격한 상호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산



조호연
정치부 차장

상봉을 하지 않으면 싸움 줄 수 없다는 식이다. 남북관계에서의 등가와 동시성 회귀는 남북의 국력차이, 북쪽의 고립주의와 은둔지향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양측이 쌓은 신뢰의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간 화해·협력은 50여년만의 민족의 대역사다. 이만한 반동성(反動性) 때문에 주저 않거나 낙담할 일이 아니다.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다시 뛰어야 할 때인 것이다. 역시 남북관계를 정략적 눈으로 보지말 것을 주문해 온 회담 관계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정치논리에 함몰된 것은 아닌지, 정권 담기쯤 적당히 지내지는 보신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회담 관계자들이 하루 빨리 '마음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chy@k.yunghyang.com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린 금강산에 도착한 홍순영(왼) 남측수석대표와 김영성 북측 단장이 8일 저녁 회담장인 금강산여관에서 정점으로 춧불을 켜 채 환담하고 있다. <관계기사 2면> 금강산-공동사진취재단

대한매일

2001. 11. 9 (금)

김 단장 "금강산여관 오래비어 남아져"
홍 대표 "우리청년들 조강하면 좋겠네"

■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환담

8일 남북장관급회담의 홍순영(洪淳瑛) 남측 수석대표와 김영성 북측 단장은 금강산여관 앞마당과 여관 2층로비에서 두차례로 나눠 30여분 가까이 환담했다. 다음은 환담요지.

□ 금강산여관 앞마당

김영성 단장 반갑습니다.
홍순영 수석대표 아주 건강해서 좋습니다. (이때 정전됐음을 북측 관계자가 김 단장에게 알림)
김 단장 지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전에 현대에 넘겨 주었는데 탐 비워놔서 좀 남아있어요.
홍 대표 내일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조강하면 참 좋겠네.
김영성 금강산려관 지배인 금강산려관(여관)은 모두 7호동으로 이뤄졌는데 이게 1호동입니다. 현대에 임대해준 지 3년 됐는데 무슨 연고인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홍 대표 (현대기) 임대료는 냈니요.

김 단장 (그것 때문에) 지배인이 끝을 알고 있어요 차라리 임대하지 않았으면...
홍 대표 우리 폐고는 북측책이 없겠네요.
지배인 없습니다.

□ 2층 로비

지배인 온천 한번 하세요.
김 단장 현대에 임대해 주기 전엔 내외국인이 많았습니다. 밤 예약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지배인 (현대기) 말쑥하고 해놓고 3년간 방치해서 난리났습니다.
김 단장 건물이라는 게 비워두면 못 합니다.
지배인 9사 72안자라고 금강산에 절이 많았죠. 유진사, 11해사는 지금도 있고, 신계사는 난리문에 없어졌습니다.
홍 대표 금강산이 다 개방되면 볼도들이 행렬을 이뤄 올 겁니다.
● 금강산 공동취재단·진검초기자

6차 장관급회담 주요 의제(예상)

남측 입장	의 제	북측 입장
비상경제조치는 통상적인 테러대응책으로 북한 거부할 것이 아님	미 테러사태 이후 한반도 및 국제 경제	남측의 대해 대결분위기 고취 불러 촉각 좋지, 테러 반대 입장 재현명
이달말 실시	4차 이산가족	조속 실시 합의불의, 단행 정세하에서는 곤란
2차 경주위 서울서 조기 개최, 식량차관과 경의선 연결 등 협의	대북 식량지원 및 2차 경주위	조기 식량지원 논의하되 경주위는 금강산서 열어야
실약산서 열되 금강산 검토 가능	2차 금강산회담	금강산관광을 논하는 만큼 금강산서 개최
추진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대표단 소관 사항 아니다

'南정세' 인식차 해소에 장관급회담 성과 달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6차 장관급회담의 출발점은 미국의 9·11 테러 사태와 아프간 공격이다. 북측이 여기에서 비롯된 남측의 비상경제조치를 이유로 4차 이산방문단 교환을 연기하고 각종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양측의 인식차란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회담의 성과가 달려 있다.

남측은 그런 만큼 현재의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북측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군·경의 경제강화가 통상적인 테러 대응책으로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주지시킬 예정이다.

이 시안은 남측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 이산상봉과도 맞물려 있다. 남측의 조치와 관련해 북측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답보상태 상봉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북측이 '아치하면 미사일이 반사될 수 있는 불안한 정황'을 내세울 것이 뻔해서다. 금강산관광 합성회를 위한 2차 당국회담, 경의선 연결 등을 협의할 2차 남북경협추진위 등 늦춰진 각종 합의사항의 이행 역시 마찬가지다. 남측은 금강산회담은 실약산에서, 2차 경주위는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남측 상황이 그동안 답라진 게 없어 북측의 태도 변화할 기대하기 어렵는데다 남측이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이산상봉이 대북 식량차관과 큰 힘에서 연계돼 있다"고 굳이 밝힌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 당국자는 8일 "남북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역설했다. "큰 틀에서 6차 회담의 성과를 평가해 달라"고도 했다. 이번에 구체적인 합의도움이 쉽지 않음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남카드 마땅치않아 합의도출 쉽잖을듯

최재영기자 cyoung@kyunghyang.com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저녁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영성(오른쪽) 북측 수석대표가 홍순영 남측대표가 선물한 액자를 들어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금강산 통일부사진기자단

서울경제

2001. 11. 9 (금)

오늘 남북 장관급회담 이산상봉·답방등 논의

남북은 9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남북은 이날 첫 전체회의에서 기초연설을 통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등 테러시태에 대한 국제정세를 비롯해 연기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지난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남북관계 일정 재조정에 대한 기본입장을 각각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후 한반도 안정과 남북관계 진전 등에 대한 기본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측이 남측의 경제강화 비난 등 경직된 테러시태 인식을 되풀이할 경우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측은 이번 회담 기간에 홍순영 수석대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복안인 것으로 알려져 면담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또 북측은 식량지원 문제를 남측에 공식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측은 이달 내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와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2차 회의 일정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다시 집을 방치이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오늘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39명 금강산 도착

상봉 재추진등 집중 협의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 39명은 8일 금강산에 도착, 오는 12일까지 4박5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5시중 금강산패션 선 살봉호 편으로 장전항에 입항, 북측 대표단의 영접을 받은 뒤 숙소인 금강산여관으로 옮겨 여장을 풀고 오후 8시부터 금강산여관에서 북측 김영성 단장 주최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남북 대표단은 9일 오전 9시 금강산여관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달 무산된 4차 이산가족 상봉과 2차 금강산 당

국간회담, 남북경협추진위 2차회의 등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만찬에서 김 북측 단장은 만찬사를 통해 "북 남상급회담은 당국의 책임적인 의사결 대변하는 고위급회담으로서 좋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원만히 리행(이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해 합의의 이행을 지를 밝혔다.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는 답사에서 "예정대로라면 (5차 장관급회담의) 귀중한 성과들이 이미 상당부분 실천에 옮겨져 지금쯤은 활인 좋은 분위기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보람을 느끼야 할 시점"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니 섭섭한 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진경호기자

경향신문

2001. 11. 9 (금)



금강산 / 통일부사진기자단

금강산 '춧불 환담'

홍순영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왼쪽)가 8일 저녁 금강산호텔에서 정전으로 인해 춧불을 켜놓고 김영성 북측단장과 현담하고 있다.

오늘 남북 장관급회담 이산가족 방문등 논의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주요 남북 현안을 협의할 6차 장관급회담이 9일부터 금강산에서 시작된다. /관련기사 5면

남측은 회담에서 4차 이산상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강산관광 활성화 위한 2차 당국회담, 대북 식량지원 등을 논의할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등 미이행 합의사항의 일정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최재영기자



“잘해봅시다”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석 중인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오른쪽)와 김영성 북측 수석대표가 9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1차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웃으면서 악수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이산상봉 재개 본격 절충

남북 장관급회담... 김정일 면담 타진

남북한은 9일 북측 금강산여관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놓고 본격 절충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3박4일간의 공식회담 일정에 들어갔다.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북측이 우리측의 비상경제대체할 문제상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기하고 우리측 지역에서 회담도 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즉각적인 제1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북측에 촉구했다.

홍 수석대표는 특히 이산가족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회소 설치와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를 위한 4차 직십지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반면 북측은 남측의 비상경제대체 강화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며 즉각적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위해 먼저 비상경제대체 해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대표는 이후 김영성 북측 단장과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 등에 대한 북측 의사표시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7일 칠보산 유원지를 현지지도하는 등 현재 함경북도 일대를 돌아보고 있는 것으로 북한 언론들이 보도함으로써 금강산에 있는 홍 수석대표와의 면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칠보산과 금강산은 승용차나 업차편으로 이동할 경우 3~4시간 거리다. 한편 홍 수석대표는 출발 하루 전인 지난 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김위원장의 서울답방 일정 등에 대한 김대통령의 구두메시지할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면담이 성사될 경우 이에 대한 김위원장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성기자·금강산=공동취재단

한겨레

2001. 11. 9 (금)

이산가족 상봉 논의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은 9일 오전 10시 북한 금강산여관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 첫날 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과 테러관련 내외 정세 등을 논의한다. 남북은 이날 첫 전체회의 기초연설을 통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등 테러 관련 국내외 정세, 연기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에 대한 기본대응을 서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남북 수석대표를 맡은 홍순영 통일부 장관은 8일 오후 금강산으로 가는 피속산 설봉호에서 공동취재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이번 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테러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측의 비상경제대체에 남북 양쪽의 시각차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권희철 기자 nura@hani.co.kr

東亞日報

2001. 11. 9 (금)

장관급회담 이산상봉 집중논의

대표단 어제 금강산 도착

남북은 9일 강원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여관에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열어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남북간 현안문제만 논의한다. 남측 대표단 30명은 8일 오후 북한 장전항에 도착, 회담장 겸 숙소인 금강산여관으로 이동한 뒤 북한 김영성 단장이 주최하는 환영연회에 참석했다.

남북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출발에 앞서 “테러와 전쟁 등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교환하고, 남북 간에 안정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대북 전력 및 식량 지원에 대한 남측의 결단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성기자〉 spear@donga.com



오늘 南北 장관급회담

남북한은 9일 오전 금강산에서 6차 남북 장관급 회담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12일까지 예정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9월 5차 회의 때 합의하고도 북측의 일방적인 거연으로 이행되지 않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 회담▶남북 김제 협력추진위원회 추진 등을 다룬다.

이영종 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yjlee@joongang.co.kr>



남북 장관급 회담 오늘 금강산서 열려

남북한은 9일 금강산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남북현안을 협의한다. 남북은 3박4일간의 회담일정을 통해 세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비공식 수석대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홍순영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식량지원과 연계해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hankyung.com

이산상봉등 본격 절충

장관급 1차 전체회의

남북은 9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갖고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에 나섰다.

남측은 이날 회의에서 6차 장관급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즉각적인 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북측에 촉구했다.

대표단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 방안으로 면회소 설치와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4차 남북직접자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이승제 기자/openeye@ned.co.kr

이산상봉 중단 배경 싸고舌戰

남북장관급 회담 표정

지난 9월15일 서울에서 5차 장관급 회담이 열린 이후 55일만인 9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6차 장관급회담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일정들이 이행되지 않은데다 잠소문제로 10여차례에 걸쳐 전화통지문을 통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열려서인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초 오전 9시에 열리려다 북측의 준비문제로 1시간 늦춰 10시에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양측은 기초 발언을 통해 테러사태에 대한 시각차로 설전을 주고받았다.

먼저 기초발언을 한 북측은 테러사태를 이유로 남측이 북측을 겨냥해 비상경계태세를 갖추고 미군 전투기가 추가 배치되는 등 6·15 공동선언 정신에 어긋나는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남측의 조치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등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남

회담장 정전-온수 안나와 온천가서 샤워

측의 상의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측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후 내리진 비상경계태세는 외국인에 대한 테러에 대비해 인명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남측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하루 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8일 오후 폐쇄선 철방호편으로 금강산에 도착한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8시10분쯤 금강산여관 식당에서 열린 북측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에서 김영성 북측 단장은 만찬사를 통해 "북남 상급회담은 당국의 책임적인 의사를 대변하는 교위급회담으로서 좋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원만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해 합의의 행의지를 밝혔다.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는 답사에서 "예정대로라면 (5차 장관급회담의) 귀중한 성과들이 이미 상당부분 실천에 옮겨져 지금쯤은 훨씬 좋은 분위기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보람을 느껴야 할 시점"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회담장인 금강산여관은 전력이 부족하고 온수가 공급되지 않는 등 불편 점이 많았다.

8일 오후 남측 대표단이 금강산여관에 도착하기 직전 정전이 돼 홍순영 수석대표와 김영성 단장간의 환담이 촛불을 켜놓은 채 30여분동안 진행됐다. 또 남북 연락관은 여관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새벽과 밤 두 차례에 걸쳐 인근 온천장을 이용해 샤워를 하기도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이현종기자 leehun@munhwa.co.kr

南 "이산방문 조속 재개"

北 "비상경계 먼저 해제"

장관급회담 1차회의

남북은 9일 오전 북측지역인 금강산여관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교환 등 이행되지 않고 있는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놓고 본격 절충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와 김영성 북측 단장등 양측 대표단 1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홍수석대표는 기초 발언을 통해 북측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히 이를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홍수석대표는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회소 설치와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를 위한 제4차 남북직접자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의 비상경계조치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이산가족 방문단의 즉각적인 교환을 위해 먼저 이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현종기자 leehun@munhwa.co.kr

北 전례없는 '독설' 출발부터 '먹구름'

• 남북 장관급 첫날 회의 안팎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출발이 좋지 않다. 양측은 첫 회의가 열린 9일 미 태리시대에 따른 남북의 비상경제조치를 두고 실질을 법이느라 현안은 거론조차 못했다.

북측은 이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모두 쏟아내듯 조목조목 짚으며 독설을 높였다. 결론은 남북의 경제강화조치가 해제되어 이산상봉과 각종 회담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그 어조는 전례 없이 강경했다.

북측은 특히 보기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거론한 듯한 비난을 해 주목된다. 북측은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다.

"개방유도 국제무대 청탁" 北 DJ 우회적 비난 '촉각' '대화 계속'에만 의견일치

북측 김경성 단장은 기조발언에서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을 늘어놓았다"며 "이는 우리의 체

제에 대한 용납 못할 압중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김단장이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김대통령이 최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북측이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김대통령을 거론했으면서도 내놓고 거명할 경우 남북관계가 급랭할 수 있어 '남측'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밖에 나가' 외국 정상들에게 남북관계 진전노력을 당부한 남북 인사가 사실상 김대통령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북측은 그동안 김대통령을 제외한 장관급 인사의 발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거명해 비판해왔다. "우리 군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말로 용역을 치른 조성태(趙成台) 전 국방장관이 한 예다. 한 당국자는 "김단장의 발언은 강경과 목소리가 큰 북한 내부정세의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당국자는 "어쨌든 북측 태도가 완강해 회담이 난항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당국자는 "회담에서 '어쨌든 대화는 계속하자'는 데 양측의 의견이 일치한 점이 중요하다"며 "회담이 계속되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이산상봉 문제부터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영기자 cyoung@kyunghyang.com

대한매일

2001. 11. 10 (토)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오른쪽)와 북측 김경성 단장이 9일 오전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금강산 통일부 사진기자단

'이산상봉 연기·비상경제' 논란

남북 장관급회담 1차회의

北 "남측이 개방청탁" 비난

【금강산 공동취재단·진경호기자】남과 북은 9일 오전 제6차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열고 4사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군사 당국자간 회담 개최 등 남북 연인문제를 놓고 실질을 벌였다. > 관련기사 5면

홍순영(洪淳英) 남북 수석대표와 김경성 북측장관 등 양측 대표단 1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미국의 태리시정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의 비상경제조치와 남북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연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북한 방송에 따르면 북측 김 단장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을 늘어놓았다"면서 "이는 6·15 공동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존엄을 해치며 체제를 건드리는 용납 못할 압중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기간 한·미 정상회담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으로 회담 진양을 어둡게 했다.

김 단장은 이어 "남측의 비상경제조치는 북측을 거론한 것으로 6·15 공동선언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이봉조(李鳳朝) 북측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는 "남측의 비상경제 조치는 국제적인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북측이 이를 문제삼아 이산가족 방문단 시업을 연기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우리측은 이와 함께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의 조속 재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군사보장협약서 발효를 통한 경의선 김포·도로의 조속한 연결,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유류 개설 ▲개성공단사업 추진 등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의 토대가 되는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을 재언했다.

양측 대표단은 10일 오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제1차 회담 일정을 중심으로 상호작업을 계속한다. > jade@kdaily.com

장관급 회담... 머나먼 협상 테이블



이번엔 풀릴까 9일 오전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가한 남북대표단이 1차 전체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금강산=통일부사진기자단

北, 작심한듯 불만 토로

장관급회담 첫날부터 진부

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출발이 순탄치 않다. 김영성 북측 단장이 9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듯한 비난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 북측은 미국의 테러전쟁에 따른 우리측의 비상경제태세, 주석론, 군사훈련 등 남측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내 향후 남북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 이례적이다. 특히 북측은 4차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합의사항이 이행되기 위해선 비상경제태세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홍순영(洪淳瑛) 남측 수석대표는 우리측의 경제대세를 문제삼는 북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4차 이산가족 상봉 등 미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자고 촉구했다.

홍 수석대표는 "남북은 미국의 테러시대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전환기적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

경제태세 - 군사훈련등 시비 '毒舌'

이례적 金대통령 비난... 파문일듯

김영성 단장은 기초발언에서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든 북측도 달리고 청타돌음을 밟았다"며 비난했다.

이는 지난날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때 김대중 대통령의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당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대령은 "미국이 과거 국가이익을 위해 소련과 관계를 유지했듯 우리도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비난은 북측이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일당' 등으로 호칭했던 관공에서 벗어나 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삼가 왔다는 점을 고려할

며 "한반도가 국제적 긴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설득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회담에 참석한 남측 대표는 "북측의 발언수위가 예상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10일 2차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단 북측의 입장에서 언행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관계자들은 북측이 식량 지원 등을 위해 회담에 응한 만큼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속내를 드러내고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장소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9일 서울회담 이후 50여 일 만에 열린 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첫날부터 미국의 반(反)테러전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로 꼬이고 있다.

김영성(내각 책임장사) 북측 단장은 "테러사태와 관련한 남북의 비상경제 조치는 북측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홍순영(北77재·문인부 장관)남측 수석대표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해 분위기가 밝아졌다.

북측이 평양방송을 통해 김단장이 남측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대목을 부각해 보도한 점도 미관가지지다.

할에서 가장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는 홍수석대표의 언급(8일·기자회견)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이날 하순제 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자고 북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남측이 불안해 비행기를 못보낸다던 북측이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데 이를 번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북측이 금강산을 상봉장으로 제안해 볼 가능성도 점치지만 사실·교용이 여의치 않은데다 신뜻 수용해도 쉽지 않을 거라다.

군사당국 회담과 김의선(京義線)연결, 금

이산상봉 논의조차 못해

금강산 육로개설 성과 등도 불투명

회담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북측이 남측의 해명이 있어야 김접 등 다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들고 나와 출발부터 여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새로운 의제를 꺼내거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재개 등 합의어진 남북관계의 일정표를 다시 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적어도 5차 회담 때 합의한 수준에는 도달해야 본전을 찾을 수 있지만 북측의 태도를 감안하면 그 정도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데 정부의 고심이 있다. '40년 외교 성

강산 육로 개설 등 다룬 의제들도 모두 북한 군부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 시원한 대답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여기에서 이미 한겨울인 금강산여관은 낮은 정전에 온수조차 나오지 않아 대표단이 인근 온천장에서 세면할 하는 등 불편까지 따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보에 식량요청했다 거절당한 북측으로서 정부의 30만t 쌀 지원 카드 등을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10일 회의부터는 제한적으로나마 회담 협의를 위한

구체적 논의에 호응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9일 오전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 전체회의에 앞서 남측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사진 위, 오른쪽에서 둘째)과 북측대표인 김영성 내각책임사(사진 아래, 왼쪽에서 둘째)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부사진기자단

“개방유도 언급은 체제 도전”

北, 金대통령 발언 비난

남북 장관회담 난항

북한은 9일 북한 금강산 지역 금강산어관에서 6차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를 가졌으나, 북측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난달 아시아대만강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부시 미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비상경제개태설 해제를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 일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다.

북측 김원성 단장은 '기반발전' (기초연설)에서 남한 내 비상경제개태와 F-15E 중량제거를 거론, "남측은 삼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결상태를 격화시켜 제5차 상급(相級)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북남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1년 반이 되지만 남측이 우리들 주적(主敵)으로 간주하고 통일운동단체와 애국인사들을 이적(利敵)으로 몰아 체포·무속하는 등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어, 김 대통령의 이침은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북측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를 개화·개방으로 유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淸託)을 번인 것은 공동선언을 무시하고 우리의 체제를 건드리는 용납(容納)할 입중(立中)한 도전"이라고 주장, 김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기간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단장은 "제반 사태는 우리로 하여

금 5차 상급회담 합의사항 이행 문제가 아니라 북남 공동선언의 운명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남측이 비상경제개태 해제를 비롯해 현재의 살벌한 환경과 분위기를 인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답부터 명확히 하고 중단된 합의사항 일정을 재조정하는 데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 홍순영(洪淳英) 수석대표는 비상경제개태가 북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우리 지역에 안전상 아무런 이상이 없고, 반(反)테러 문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 뒤, 4차 이상가족 교환방문의 즉각 재개와 함께 장관급회담 정례회 등을 제의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全仁희기자 ginko@chosun.com

北, 6·15후 첫 金대통령 비난

■ 금강산 장관급회담 개막 APEC때 발언 문제삼아 테러경제 해제도 요구

북한은 9일 제6차 장관급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남측의 테러경제개태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회담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해졌다.

평양방송 등 북한 언론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금강산어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초연설문을 통해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를 개화·개방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淸託)을 받았다"면서 "이는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과 완전히 배치된 것이며 용납(容納)할 입중(立中)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북측의 비난은 지난달 중국 상하이(上海) 아·대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북한을 대화로 끌어 변화시켜



9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오른쪽에서 두번째)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원성 단장이 악수하고 있다. /금강산=박서강기자

이 한다"고 밝힌 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지난달 6·15 정상회담 후 김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 북측은 또 "남측이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테러 사태)을 놓고 전시에 가까운 긴장상태를 조성했다"면서 "이런 사태의 근원은 남측의 대미 추종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이어 "남측의 이런 조치 때문에 6·15 공동선언의 5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남측은 "우리측의 비상경제개태 조치는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인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뒤, "국제적인 반테러 흐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동준기자 dilee@hk.co.kr

금강산=공동취재단

한국경제

2001. 11. 10 (토)

남북장관급회담 첫날 진통

남북한은 9일 금강산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 첫날 회의할 일교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 현안에 대해 접충에 나섰다.

북측은 이날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지 않은채 남측의 '테러 비상경계 조치'를 문제삼고 나와 진통을 겪었다.

남측 홍순영 수석대표는 "우리측 조치는 북측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국제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김경성 대표가 9일 금강산여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금강산=통일부사진기자단

매일경제

2001. 11. 10 (토)

서울경제

2001. 11. 10 (토)

이산상봉 중단 남북 서로 네 탓

어제 장관급회담 1차회의

남북은 9일 제6차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남측은 거의 두달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6차 장관급 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즉각적인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북측에 촉구했다.

반면 북측은 남측의 비상경계 조치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이산가족 방문단의 즉각적인 교환을 위해 먼저 이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기자 shlee@sed.co.kr

北, 김대통령 간접 비난

남북장관급 회담...이산문제 논의 못해

나영필 기자·금강산=공동취재단

남북은 9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남북간 현안을 놓고 접충을 벌였다.

그러나 북측은 이에 다른 의제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비상경계태세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이 밝혀져야 다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북측은 기초연설에서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능움을 벌인 것은 우리의 존엄을 해치며 체제를 건드리는 용납하지 못할 엄청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북측은 청탁능움의 주체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북측이 회담석상에서 우리측 국기원수를 비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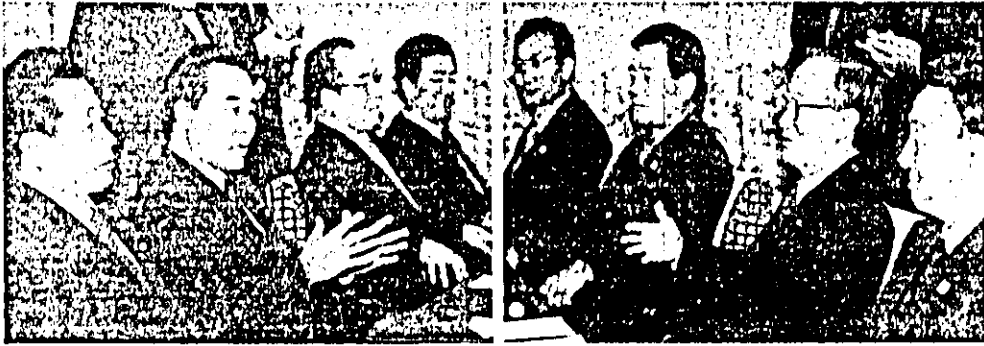
김경성 북측대표는 이날 기초 방

언을 통해 "남측이 비상경계조치 해제를 비롯해 심각한 환경과 분위기를 일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답부터 명백히 하고 중단된 합의사항 이행일정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주체성을 상실한 남측의 대미 추종정책에 있다"며 "남측은 지금도 통일운동단체와 애국인사들을 제로 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는 "남측의 비상경계조치는 테러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며 "북측이 이를 문제삼아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기하고 우리측 지역에서 회담도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홍 수석대표는 이어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조속히 재개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육로 개설 등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의 토대가 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9일 오전 금강산리관에서 열린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첫날 전체회의에서 김영성 북측 단장(왼쪽)과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가 서로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금강산/통일부 사진기자단

금강산리관 새단장 불구 또 정전...온수도 안나와

북측은 금강산에서 회담을 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남측의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회담장 겸 숙소인 금강산리관을 새로 단장했다. 특히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제3차 직접 자회담 때 촛불을 켜고 만찬을 했던 금강산리관 식당 등의 실내 전등과 형광등을 손질해 실내를 훨씬 밝게 했다.

객실의 난방시설도 손질해 하룻밤을 잔 남측 회담 관계자들은 "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 방이 춥다는 이야기를 해 걱정을 했는데 따뜻했다"고 말했다. 방 침소와 침구 정리도 말끔하게 해놓았고 세면도구가 지 모두 평양에서 가져오는 등 장관급회담급 앞두고 상당한 성의를 보였다.

하지만 북측의 이런 세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8일 밤 남측 대표단이 금강산리관에 도착하자마자 정전이 돼 회담 대표들이 30분 촛불을 켜놓고 이야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또 객실에는 더운 물이 나오지 않아 남측 대표단은 아침저녁 하루 두차례 차량으로 2분 거리의 금강산 온천으로 가서 씻고 있다.

북측 회담 관계자는 "3년 전 현대그룹이 금강산리관을 입찰한 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 시설이 더러워졌다"고 문제를 현대측으로 돌리고는 "부족하지만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1958년에 지어진 금강산리관은 11개층에 16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북 강경 발언 팽팽한 긴장감

■ 남북 장관급회담 표정

남북 양측은 9일 오전 1차 전체회의의 기초 발언을 통해 미국 테러사태 이후 남측의 경제태세와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입방적 연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가 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순영 수석대표와 김영성 단장은 테러 경제조치를 놓고 공방을 벌인 첫 전체회의를 마친 뒤 회담 내용과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고 "이제 시작이니 두고보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남측 회담 관계자는 "남북간 대화 풍조를 깨지 않고 화해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서로에게 할 말을 해야하는 회담이라 양측 대표들에게는 어려운 회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단장 계속 상기된 모습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렸던 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세련된 매너와 수려한 화술, 여유있는 표정으로 눈길을 모았던 김영성 북측 단장은 그동안의 부드러운 인상과는 달리 시종 일관 긴장되고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 김 단장은 첫날 기초발언을 통해 미국의 테러사태를 계기로 취해진 비상경계조치와 미 공군전력의 한반도 추가배치 및 남한 군당국의 군사훈련 그리고 개혁·개방 권유 등에 대해 북측의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 대한 안중환 도발" "공동선언의 근본정신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는 최근 북한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거친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

그러나 김 단장은 이번 회담에서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히 남북관계가 아직까지는 희망적임을 시사했다.

◇...김 단장은 남측 대표단이 금강산리관에 도착한 8일 오후 정전이 되자 환담을 나누는 도중인데도 당황스러움이 낯빛에서 떠나지 않았고 환영 만찬에 앞서 식당문에서 검침이 발견되자 담당자에게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이날 만찬에서 홍 수석대표가 지난 5차 장관급회담 당시 참덕궁에서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건네며 포장을 풀어보라고 권했지만 김 단장이 포장을 뜯지 않는 바람에 홍 수석대표가 직접 열어보이는 등 부자

연스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홍순영 수석대표 등 남측 대표단은 9일 오후 3시 보습비가 내리는 가운데 금강산온천, 해상호텔해금강, 온정각, 교여극장 등 현대그룹의 금강산 사업장을 둘러봤다.

온정각에 들린 홍순영 수석대표는 현대측이 방명록 서명을 요청하자 잠시 생각을 한 뒤 "남북간에 자유왕래가 오는 날이 평화공존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 날을 바라봅니다. 2001. 11.9 홍순영 통일부 장관"이라고 적었다.

북, 현대사업장 시찰 불참

◇...현대 사업장을 둘러볼 때 북측 대표단은 참여하지 않은 채 차량만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남측 업체인 현대사업장을 참관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북측 대표단이 동행할 필요가 없었고, 일정보다 남측 대표단이 상의해 현대측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관계자는 "평소에도 북측 사람들은 사업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만찬일이 있으면 사업장 밖에서 불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라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22일 이산상봉' 北에 제의

남북 장관회담 진통... 北 '개방 유도' 비난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석중인 남측 대표단은 연기된 제4차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오는 22일부터 2박3일간 갖자고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면

장부 관계자는 9일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산상봉은 추진해야 한다"며 "가족들이 대체로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상봉행사는 가급적 추후시기 전에 해야 하며 그 시기는 회담 열흘 뒤쯤이 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경 남북은 이날 금강산어관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남측의 비상경계조치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평양방송에 따르면 김정성

북측 단장은 전체회의 기초연설을 통해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은 공동선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용납못할 엄청난 도전"이라고 말했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이 발언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간접비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대통령은 최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중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한다"며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바 있다.

당국자는 그러나 "북측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남측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므로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김단장은 회담에서 또 "남측의 비상경계조치로 6·15 공동선언은 물론 5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이 어렵게 됐다"며 "(남측은) 현재 조성된 환경과 분위기를 일신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영(洪淳瑛) 남측 수석대표는 "우리의 비상경계조치는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호연·최재영기자
chy@*yunghwang.com

한겨레

2001. 11. 10 (토)

북 "남쪽서 개방유도" 비난 장관급회담 난항 예고

이산상봉·비상경계 공방

남북은 9일 오전 6차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연 데 이어 10일 오전 2차 전체회의를 속개하기로 하는 등 연기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북측은 9일 오전 전체회의 기초발언에서 남측이 북측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도록 외부에 청탁한다고 비난하는 등 이번 회담의 난항을 예고했다. 북한 방송에 따르면 북측의 김남성 단장의 기초발언을 통해 "이것은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고 두 제도의 공존에 기초한 통일로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6·15공동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용납못할 엄청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대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때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임무에 둔 것으로 북측이 남북회담에서 남측 최고위 책임자를 간접적으로 비난하기는 지난해 6·15공동선언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단장은 또 "최근 테러사태와 관련해 남측이 취한 비상경계조치는

북측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다"고 민족공조를 하자는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어긋난다"며 "남측이 비상경계조치 해제를 비롯해 현재 조성된 환경과 분위기를 일신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는 "남측의 비상경계조치는 국민적 태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내에 상주하는 수많은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측과 무관함을 강조하고 "북측이 이질문제 삼아 이산가족 방문단교환을 연기하고 남측에서 회담도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홍 수석대표는 "남북은 테러사태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전환기적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한반도가 국제적 긴장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즉각 교환을 촉구하는 한편 면회소 설치 및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과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를 강조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北개방 유도 청탁 높음 南측서 6·15정신 무시”

장관급회담 첫날부터 난항

북한은 9일 강원 고성군의 금강산 여관에서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따른 남측의 비상경제조치 및 군사훈련이 6·15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김영성 단장은 기초발언에서 “남측이 비상경제조치 해제를 비롯하여 현재의 실변한 환경과 분위기를 일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답부터 명백히 하고 중단된 협의사항 이행일정을 재조정하는 대로 나

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관영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특히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도록 청탁높음을 벌였다”며 “이는 공동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존엄을 해치며 체제를 건드리는 용

납 못할 엄중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발언자를 거명하지 않은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19일 중국 상하이(上海)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과거 국가이익을 위해 소련과 관계를 유지했듯 우리도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말한 것을 임두에 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영식기자·금강산=공동취재단〉
spear@donga.com



굳은 얼굴의 北단장

금강산=동원부시진기자단

9일 강원 고성군 금강산여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장에 들어서는 김영성 북측단장(왼쪽)의 표정이 진득 굳어 있다.

北, 김대통령 간접비난

장관급회담서 “밖에나가 개방유도 청탁높음 벌였다”

양측 설전... 당국간회담 일정등 조정 난항

남북한은 10일 북측 금강산여관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당국간회담 일정 조정 등에 대해 접촉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양측은 북측이 전날 1차 전체회의의 기초발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한 것을 둘러싸고 심전을 벌이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는 4차 이산가족 방문단의 즉각적인 교환과 면회소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4차 적실

자회담 및 군사당국자간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의 비상경제조치가 먼저 해제돼야만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김영성 북측단장은 1차 기초발언을 통해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높음을 벌였다”며 김대통령을 간접 비난했다.

이와 관련, 남측 회담관계자는 “북측의 발언이 생각보다 세다”면서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일정 재조정 등에 주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주한미군 계속주둔 필요”

방한 부시 前美대통령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9일 “미국은 필요없게 될 때까지 한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현 미국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 전대통령은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 주최 ‘세계 지도자와의 대화’에서 강연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구기자

北냉랭... 남북관계 얼어붙나

장관급회담 표정

北, 6·15후 첫 DJ 비난... 정부선 "판은 안깔것"

남북한은 10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제6차 금강산 남북 장관급회담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으나 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고 나서며 남북관계가 좁혀질 풀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방송들은 9일 장관급회담 관련 보도를 통해 "우리(북)측 단장은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는데 대해서 까맣혔다"며 "이는 공동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존엄을 해쳐며 체제권 건드리는 용납 못할 일종의 도전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침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발언은 지난달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이대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김대중총리와 조

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발언을 일투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그동안 남측 군사당국이나 야당, 그리고 최근에 정부를 비난하기는 했지만 김대중령을 겨냥해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 남측 대표단은 이같은 북측의 기초발언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경하다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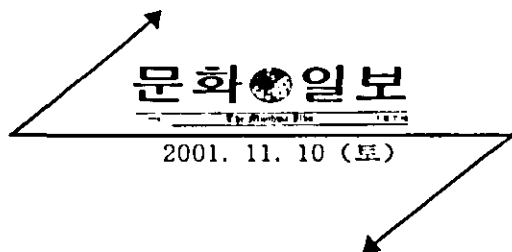
북측의 이같은 강경발언에 대해 당국과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남북 및 북·미관계가 북측이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남측 내에서 이담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금강산 관광대가, 전라지원 등 북측이 해결을 요구했던 시안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프가니스탄 공습으로 한반도 군사적 균형을 위해 미군 F15E편대가 새로 배치되는 등 군사적 상황이 북한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이 이침 법미로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다. 최근 김원도 일대의 수해 등으로 북한 식량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인데다 일본이 최근 식량지원을 유보했고 세계식량계획(WFP)도 이프가니스탄 지원으로 인해 북한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는 등 주변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회담 관계자는 "북측 발언은 판을 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의 불만을 쏟아낸 수준으로 이해된다"며 "회담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대화가 오고 갈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현종기자 leehun@munhwa.co.kr



이산상봉등 절충 난항

北, 비상경계·대통령발언등 트집잡아

남북장관급회담 이침째

남북양측은 10일 오전 금강산 지역의 금강산 여관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 이침째 회의를 계속했으나 북한이 남측의 비상경계대세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 난항을 겪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남북은 북측이 지난 김영삼 단장의 기초발언을 통해 김대중 대

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상하이(上海) 이대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과 나눈 대화내용을 문제삼아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을 받았다고 비난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북측이 6·15 공동선언 이후 김대중령을·겨냥해 공식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측은 비상경계대세가 북한을 겨

냥한 것이 아니며 국내에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설명하면서 중단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군사적 긴장 해소문제를 논의할 군사당국간 회담을 재차 재의했다.

남북은 이어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이견합충에 나섰지만 의견차이가 심해 이산가족 상봉등 다면 의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등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는 내일(11일)이나 가능한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강산·공동취재단·이현종기자 leehun@munhwa.co.kr

남북 장관급회담 난항

北, 경제력 해제요구-金대통령 비난도

남북은 9일 오전 북한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리관에서 6차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북측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발언을 거냥한 듯한 비난을 제기해 난항을 겪었다. 북측이 김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놓음을 벌인 것은 공동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존엄을 해치며 체제를 건드리는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말해 지난달 중국 상하이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김 대통령이 북한 개혁개방을 거론한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관련기사 5면)

김 단장은 "남측이 비상경제조치 해제를 비롯해 살벌한 환경과 분위기를 일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답부터 명백히 하고 중단된 합의사항 이행일정을 재조정하는 데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혀 남측의 비상경제조치 해제를 4차 이산가족 상봉 등 미이행 합의사항을 진행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國民日報

THE KUMMIN DAILY

DJ겨냥 작심한듯 '독설' 北, 장관급회담 뜻없나

"주체성 상실 對美 추종정책" 회담선 처음-냉각기 불가피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남측 대표단은 '필리핀다'는 비난 여론까지 감수하며 금강산을 찾아갔지만 예상 밖으로 거센 북측의 독설에 당황하고 있다. 특히 북측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성 북측단장은 1차 전체회의(9일) 기조발언에서 작심한 듯 남측의 경제대타 강화를 감도 높게 비난했다. 김단장은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놓고 무력을 증강하며 전시와 가까운 긴장상태를 조성한 것은 오직 남측밖에 없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우리에게 유감이나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또 "이런 사태의 근원은 주체성을 상실한 남측의 대미추종 정책에 있다"면서 "북남관계를 위험한 상태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단장은 이어 설명을 거부하진 않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거냥한 듯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단장은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놓음을 벌였나"며 "이는 우리의 체제에 대한 용납할 엄중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김단장 발언은 지난달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때 김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내용을 앞두고 든 발언이다. 당시 김대통령은 "미국이 과거 국가이익을 위해 소련과 관계를 유지했듯, 우리도 대화봉 등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측이 지난해 6월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1년반 동안 '김대중 일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김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단장 발언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남북회담 석상에서 김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처음이어서 남측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남측 대표단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면서



굳은 남북대표 북측장관급회담 김영성 북측 대표단장이 9일 전체회의에서 강력한 대남 비난발언을 한 뒤 굳은 표정으로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도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려 애쓰는 눈치다. 한 회담 관계자는 "큰 맥락에서 보면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이는 이미 예상한 상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분위기는 금강산에 있는 남측대표단의 희망과는 시뻐 달라 보인다. 북측의 기조발언만으로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내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대통령을 거냥함으로써 남북간 냉각기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10일 전체회의에 이어 수석대표 접촉, 11일 전체회의 등이 예정돼 있지만 회담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김영석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離散상봉 年內 금강산서

시기 계속절충... 南 “이달중”·北 “내달” 주장

北 ‘南 비상경계’ 해제요구는 洪淳瑛대표 발언통해 풀기로

금강산 장관급회담

남북한은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마지막 남인 11일 북한 금강산 지역의 금강산여관에서 밤늦게까지 실무접촉과 회의를 갖고, 우리 측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을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12월중에 갖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상봉장소로 서울·평양이 아닌 금강산으로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봉 시기와 관련, 우리 측은 이달 하순을, 북측은 12월을 각각 주장해 집중을 계속했다. ▶관련기사 3면

양측은 이 가운데 북측이 요구한 ‘남한 내 비상경계대세’ 해제문제는 우리측 홍순영(洪淳瑛) 수석대표가 12일 회담을 끝내면서 갖는 전체회의의 ‘회담 종결발언’을 통해 풀기로 의견을 모으고 새벽까지 발언 수위(水位)와 문안 협상을 벌였다. 우리 측 회담 관계자는 “홍 수석대표가 비상경계대세와 관련, 해제한다든가 이담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겠지만, 북측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우리 측은 당초 합의한 ‘서울·평양 교차 방문’을 주장했으나, 북측이 “비상경

계대세 상황에서 남쪽지역에는 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금강산을 상봉장소로 수용하는 대신, 상봉 절차를 보완해 교차방문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7차 장관급회담 개최에도 합의, 시기와 장소를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계속했다. 양측은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북측은 10일 전체회의에서 이담 중으로 비상경계대세를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이산가족 교차방문 등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보도문’(초안)을 내놓은 데 이어, 11일 접촉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송仁희기자 pinko@chosun.com

한국일보 2001. 11. 12 (월)

이산상봉 연내 금강산서

장관급회담 합의... 7차회담개최등 오늘 공동보도문

테러 경계태세 관련

洪통일, 공식해명키로

남북은 11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6차 장관급회담에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행사를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다음달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측은 북측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테러경계태세 해지에 대해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이 공식 해명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5면

남북은 12일 오전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 수석대표는 이 자리에서 남측의 강제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남측은 이산가족 행사를 전례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측이 남측 지역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금강산 단일 장소 개최를 수용했다. 남측은 대신 금강산 지역의 수용규모 등을 감안해 남북 이산가족이 순차적으로 상봉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또 당국간 대화를 이어간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7차 장관급회담과 2차 경협추진위 등의 개최를 공동보도문에 담기로 했으며, 시기와 장소 문제를 놓고 철야 협상을 계속했다.

북측 김영성 단장은 이날 저녁 공동 민찬에 앞서 “남북이 토론을 하고 있으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협상이 이날 오후부터 급진전됐음을 시사했다. 남측 대표단은 예정대로 12일 귀환한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산상봉 年内 금강산서

장관급회담 합의 北에 식량 30만t 주기로

지난달 16일부터 치르려다 북측의 거부로 무산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재개된다.

상봉 장소는 남북한이 그동안 이산가족 임시면회소 장소로 검토해온 금강산으로 결정됐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관계기사 5, 7면>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들의 여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일각에선 '또다시 북한에 끌려다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은 11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6차 장관급회담에서 늦어도 12월 중 상봉을 다시 갖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방선 협상을 통해 5개항 인권의

공동보도문안 작성 작업을 벌였다.

양측은 이남 실무접촉을 통해 그동안 김립들이 돼온 미국의 테러사태와 관련한 남측의 비상경계태세 해제 문제는 12일 오전 열릴 3차 전체회의에서 홍순영(洪淳瑛·통일부 장관) 수석대표의 발언 등을 통해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측은 대러 경제태세한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 대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조속히 열어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은 또 수석대표 단독접촉에서

30만t의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했으며 우리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성(내각 책임참사)북측 단장은 이남 밤 남측 기자들과 만나 "현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이산가족들의 희망을 풀어줄까 논의하고 있으며 긍정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보도문안에는 이밖에 9월 5차 회담 때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못한 사안들이 일부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홍수석대표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은 12일 전체회의에서 공동보도문안을 발표한 뒤 설봉호 편으로 귀환한다.

이영중 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yilce@joongang.co.kr>

대한매일

2001. 11. 12 (월)

“이산상봉 이달말 재개”

장관회담서 원칙 합의... 새달2일까지 금강산서

'비상경계 논란' 3차 전체회의서 절충기로

1 금강산 공동취재단·진경호기자 | 남북은 11일 제1차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다음달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5면

이산 상봉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잡아 금강산에 남측 방문단 이면회소를 설치하는 순차교환 방식으로 재개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6차 장관급회담에 참가중인 남북 대표단은 이날 김립들이 돼던 비

상경계조치 논란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양측 수석대표 종결방안으로 풀기로 의해하고, 12일 새벽까지 막바지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문제결정 중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12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 등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작성, 발표할 예정이다.

한자로 계속된 이날 협상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장소의 관련, 논란을 벌인 끝에 금강산으로 결정했다.

남측은 당초 서울과 평양을 교차 방문토록 한 것을 제외했으나 북측이 뜻을 굽히지 않자 금강산을 수용하는 대신 상봉 절차를 보완, 교차 방문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됐던 남측의 비상경계조치와 관련, 남북은 12일 3차 전체회의에서 양측 수석대표 종결방안을 통해 풀기로 의견을 모으고 새벽까지 접촉을 벌였다.

남북은 아울러 남북간 대화를 이어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7차 장관급회담 개최를 공동보도문에 담기로 합의했다. 다만 시기와 장소를 명시하

는 문제를 놓고 첨예협상을 이어갔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이날 남북 대표단 공동석상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토론을 하고 있으니 긍정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협상이 이날 오후부터 급진전을 이었음을 시사했다. 북측은 이날 오후 실무접촉에서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비상경계조치를 원칙적으로 해제하면 안전할 수 있다"고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과 현안 논의의 분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대표단은 정전협을 떠나 속초를 거쳐 12일 오후 서울로 귀환할 예정이다. > jade@kdaily.com

이산상봉 年内재개 합의

6차 南北장관급회담 서울-평양 교차방문아닌 금강산서

오늘 공동보도문 - 7차회담 장소-시기 협의

남북은 11일 4차 이산가족 방문 교차방문 아님 이단 허용 늦어도 다음달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장소가 서울과 평양의 교차방문이 아닌 금강산으로 결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6차 장관급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남북대표단은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막후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집중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12일 오전 3차 전체회의를 열어 4차 이산가족

상봉 등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작성,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합의로 계속된 이남 현상에서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 장소와 관련, 논란을 빚던 관에 금강산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측은 단초 서울과 평양을 교차 방문로 할 것으로 재의했으나 북측이 뜻을 굽히지 않자 금강산을 수용하는 대신 상봉절차를 보완, 교차방문의 효과와 거두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됐던 우리측의 비산경계

조치와 관련, 남북은 12일 3차 전체회의에서 양측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풀기로 의견을 모으고 새벽까지 접촉을 벌였다.

양측은 이와 함께 남북간 대화틀 이어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7차 장관급회담 개최를 공동보도문에 담기로 합의했다. 다만 시기와 장소를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합의협상을 이어갔다.

김형성 북측당장은 이날 남북대표단 공동석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토론을 하고 있으나 긍정적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협상이 급진전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윤상원기자 shyoon@sst.co.kr

世界日報

2001. 11. 12 (월)

한국경제

2001. 11. 12 (월)

매일경제

2001. 11. 12 (월)

이산방문 年内 재개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장소는 금강산

나영필 기자·금강산=공동취재단

제6차 장관급회담을 진행중인 남북은 11일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위해 인에 금강산에서 재개토록 하는 등 3-5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대표단은 회담 시종례를 맞아 12일 새벽까지 실무대표 접촉을 갖는 등 막후 접촉을 통해 접촉작업을 계속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산가족 방문 재추진 시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 △남북당국 대화 계속 등의 원칙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 동안 북측은 남측의 견제태세 해

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어떤 위제에도 응하지 않아 두 달 만에 열린 제6차 장관급회담은 난항을 거듭했다.

그러나 남·북 양측은 이날 저녁 실무대표 접촉에서 비산경계대세 해제 문제는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의 전체회의 종결방언으로 마무리 짓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대표단은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내에 금강산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시기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계속했다.

우리측은 이날중 개최를 제의했으나 비산경계조치 해법, 추진절차 등과 맞물려 다음달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면에 계속 □

남북합은 11일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속개, 지난달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로 무산됐던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올해중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봉장소는 금강산으로 결정,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은 또 이날 밤늦게까지 실무접촉등을 통해 7차장관급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4차 이산가족 상봉 연내 금강산서 재개

南北 순차적 방문 추진
오늘 공동보도문 발표

남북은 12일 오전 대표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봉 장소와 관련, 남측은 당초 서울과 평양의 교차 방문을 재의했으나 북측이 끝까지 금강산을 주장, 이를 수용하는 대신 남북이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이산가족 상봉이 늦어도 올해중 실시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남북은 '테러 비산경계 조치'로 발생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날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됐다. 그러나 지난 9월 5차장관급회담에서 합의했던 금강산관

광 협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이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등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남북관계의 정상화까지는 '남아아 합산'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초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의 '테러 비산경계'를 강하게 문제삼고 나와 회담전망이 막판까지 험투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막판에 감경자세에서 한발 후퇴,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키로 한것은 테러 공방전만 벌일 경우 남측이 지원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식량 40만을 제때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강하다.

금강산공동취재단·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상봉이 우선” 北에 장소 양보

“테러경계” 실마리... 한밤 협의 급진전 “南이 안전안해” 北의 주장 수용한 꼴

■ 남북장관급회담 안팎

북측이 남측의 테러 경계대세 해제 및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6차 장관급회담이 11일 밤 급진전했다. 남측은 9일 이후 거론조차 못했던 4차 이산가족 행사 재개, 2차 경제추진위 개최 등 미야경 협의사항의 실현 입장을 본격 논의했다.

실전으로 끝날 것 같은 회담이 갑자기 활기를 띤 것은 무엇보다 최대 걸림돌이던 남측의 경제대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남측은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이 12일 3차 전체회의의 종결발언을 통해 테러 대응과 경제대세에 대해 공식 태명을 꺼렸고, 북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남측은 이날 전체회의의 집지 않고 실무접촉만 벌여 답변을 지었다. 남측 모두 테러정세도 놓고 공방만 벌일 경우 그야말로 무의미한 회담이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거론

입장에 신중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집은 용 장관의 발언 수위다. 용 장관이 경제대세에 대해 조만간 협회를 확인했거나 시과 혹은 재발방지책을 언급했다면, 또 다시 ‘북한에 끌려다녔다’는 여론의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겉코 대북 저지세척 언급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북측과 합의한 발언 수위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남측이 경제대세에 대해 일정 수준의 태명을 할 것이라는 분석은 회담 전에도 어느 정도 감지됐다.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회담을 수용한 데 대해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미주 앉으면 핑거 풀리지 않겠느냐”면서 “이산가족들이 제3국에서라도 상봉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측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산가족 교환 행사를 금강산에서 일괄적으로 갖자는 북측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강산에서 남북의 상봉 대상



남북 장관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홍순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형성 단장이 11일 금강산여관에서 인찬을 마친 뒤 민족한 표정으로 각자 숙소로 향하고 있다. /김강산·박서장기자

지가 한꺼번에 모임 경우 1,000명이 넘는다는, 이를 수용할 시설도 부족하다. 때문에 남북한 이산가족이 금강산으로 순차적으로 이동, 상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측이 ‘금강산 상봉’ 카드도

반이었던 것은 ‘남조선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북측 주장을 다시 수용한 셈이다. 때문에 이 또한 ‘북측에 끌려다녔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동중기자 dlee@hk.co.kr 김강산=공동취재단

한겨레

“대화 단절은 막자” 막판 절충

■ 금강산 장관급회담

‘비상경계’ 싸고 사흘간 평행선 대처 북 “우리 겨냥”-남 “평화 위한 것” 논란

남북 장관급 회담은 시종일관 협의 사항 이행에 촉박하는 남측과 테러 대비 비상경계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북측이 팽팽한 논리를 펼쳤다. 9일 첫 전체회의에서 남북 대표가 기초발언을 통해 밝힌 주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게 시종일관 계속 제지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김형성 북측 단장은 10일 2차 전체회의에서 “남측의 비상경계조치가 없었다면 5차 장관급 회담 합의 사항 이행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전체 “비상경계조치가 북쪽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남측의 주장은 변명해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는 “비상경계대세는 북쪽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남측 내부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이산 가족 상봉 등 남북 합의 사항을 빨리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또 북측이 “남측이 대외의존적이고 빈국성조를 과거했다”며 문제 삼는데 대해

남측은 “대외활동은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게다가 북측이 9일 오전 첫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감점 비난성 발언을 하는 등 예상보다 발언 수위가 높아 남측 대표단은 긴장하는 표정이었다.

북측이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비상경계조치의 해제를 거듭 촉구함에 따라 11일은 3차 전체회의의 일정을 못잡았으며 실무접촉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 실무접촉에서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해 공동보도문도 발표하지 못했게 반론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북측의 안전성 담보 문제와 우리쪽의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행이 모순하지 않는 김중환에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보인다.

예초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비상경계 조처에 따른 안전성 담보문제와 교수하면서 5차장관급 회담의 합의 이



손 맞잡은 남북 11일 북쪽의 비상경계 조치 해제 요구로 평행선을 달리던 남북 장관급 회담의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와 김형성 북측 단장이 이산가족 문제에서 절충 가능성이 엿보이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 /김강산·공동취재단

행급 거부할 경우엔 남북 이산가족 방문 단행이 아닌 남측 이산가족의 북쪽방문 형식으로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는 처선책을 준비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남측 대표단 관계자는 “남북 사이에 상당 인식이 돼 차이가 있지만 남

북 모두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같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면서 “실무접촉을 통해 쌍방의 주장을 최종 조율하고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산/공동취재단 권혁철 기자 nura@han.co.kr

이산상봉 이달말께 재개

남북장관급회담서 금강산개최 합의

남북은 6차 장관급회담에서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이르던 이달 하순, 늦어도 내달 안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5면에 관련기사〉

북한 금강산여관에서 진행 중인 6차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11일 오후까지 남측의 '비상경제대세' 해제 문제를 놓고 맞섰던 남북은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막후 실무접촉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공동보도문

문안 작성에 들어갔다.

남측은 당초 서울과 평양을 교차 방문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측이 뜻을 굽히지 않자 금강산을 수용하는 대신 상봉접차분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회담 선전조건으로 내세웠던 '이달 중 남측의 비상경제대세 해제' 요구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여, 남북 대표단은 비상경제조치와 관련된 문제를 12일 오전에 열한

3차 전체회의에서 양측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또 대화를 이어가고 7차 장관급회담 개최를 공동보도문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시기와 장소 문제를 두고 협의합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대표단은 12일 오전 금강산 관광선인 '남봉호'를 이용해 북한 장전항을 떠나 서울로 귀환할 예정이다.

〈김영식기자·금강산=공동취재단〉
spear@donga.com

경향신문

2001. 11. 12 (월)

4차 이산상봉 연내 실시

南北장관급회담 전격 합의...장소는 금강산 유력

오늘 공동보도문 발표

남북은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이르던 이달 하순, 늦어도 다음달 내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상봉 장소는 금강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5면

제6차 장관급회담에 참석중인 남북 대표단은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막바지 접촉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12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 등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작성, 발표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 개최장소와 관련, 남측은 종전대로 서울과 평양을 교차 방문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안전한

지역"이라는 이유를 내걸어 금강산을 고수했으며, 협어로 받아들인 협상에서 남측이 북측의 뜻을 받아들였다.

다만 남측은 상봉 접차분 보완, 교차 방문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마련해 북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 이외엔, 남북은 금강산에서 하위 북측 지역인 금강산여관과 남측이 관할하는 해상호텔에서 각각 상봉하는 방식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또 금강산여관과 해상호텔의 수용능력을 감안, 각 100인씩 한꺼번에 하기보다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남북은 또 남측의 비상경제조치 논란과 관련해선 12일 열릴 3차 전체회의에서 양측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풀기로 의견을 모으고 새벽까지 진중을

법었다.

이와 함께 남북간 대화를 이어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7차 장관급회담 개최를 공동보도문에 담기로 합의하고 시기와 장소문제를 계속 협상중이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11일 남북 대표단 공동석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토론을 하고 있으니 긍정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협상이 이날 오후부터 급진전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최재영기자·금강산/공동취재단
cjyoung@kyunghyang.com

한겨레

2001. 11. 12 (월)

이산가족 금강산상봉 의견접근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은 6차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늦게까지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렬을 막기 위한 막바지 접촉을 벌여 비상경제조치 아래서도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의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4면

남북은 또 이날 공동보도문 초안으로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7차 장관급회담의 서울 개최와 관련해 남측과 장소 등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북측이 전날

내놓은 공동보도문 초안이 대대라 대비 비상경제 조치의 해결을 남북합의 이행의 조건으로 삼고 있어 공동보도문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남측은 애초 이달 하순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조속한 시일 안에 제4차 적십자회담개최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제도화를 공동보도문에 담으려 했다. 그러나 북측의 안전선 담보물 요구하는 완강한 태도를 감안해 서울 평양을 오가는 이산가족 방문단 형식이 아니라 금강산에서 상봉을 하되 상봉접차분 정해 교차방문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북측과 문

안을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앞서 김영성 북측 단장은 남북 대표단의 공동 저녁석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 조건(비상경제조치) 아래서 어떻게 하면 이산가족들의 희망을 풀어줄 수 있을까 논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진전이 있었음을 비쳤다.

남북은 12일 새벽까지 실무접촉을 벌여 공동보도문안 작성을 벌였으며, 12일 오전 3차 전체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권혁철 기자

hara@hani.co.kr

北 '南경계태세' 카드로 식량·금강산 상봉 관철

이산상봉 합의 배경

북부가 11월 6차 장관급 회담 막판 결혼식 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 하기로 합의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산가족 상봉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국의 테러사태와 관련한 비상경계 태세 문제상 북측이 "언제 미사일이 날아들 모르는 남북에 비행기를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취한 교육책이라는 게 김 당국자의 설명이다.

홍순영(洪淳榮·통일부 장관) 수석대표도 앞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산가족을 만나고 '제3국에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북측이 금강산 상봉 장소로 허용할

경우 수용할 뜻을 이미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는 남북 양측이 이산가족 면회소 자리로 고강(高岡)이 이뤄진 금강산에서의 상봉이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숙박·행사 진행 등 열악한 환경에서 각 1백명의 고령 이산가족들을 어떻게 체류토록 하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게다가 아무리 이산가족이 원한다고 하지만 이번 합의는 '북한과의 대화 끈을 유지하기 위해선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또 다른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아무튼 북측은 우리가 염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카드로 우리측을 압박, 그동안 개방 차원에서 꺼림칙했던 '서울·평양 교환 방문'을 무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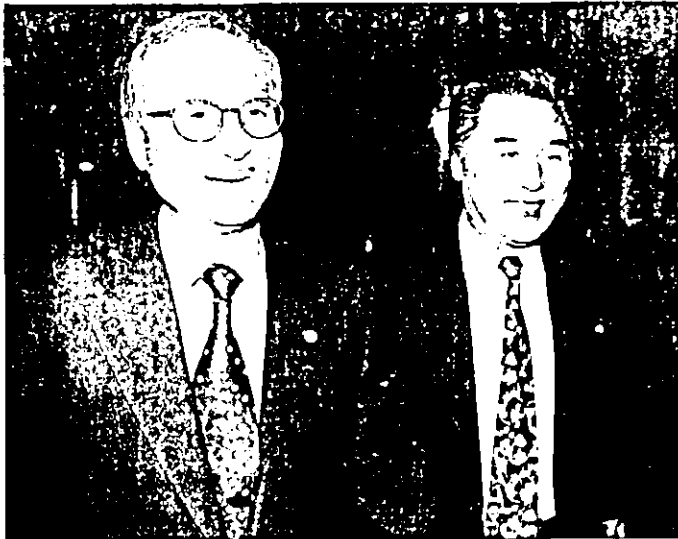
또 테러 관련 경제태세를 문제삼아 수석대표 단독 접촉 등 비공식 만남에서 식량 지원 등의 실리를 쟁겼다.

특히 다른 교류·협력사업을 재촉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열리던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조속히 열어 식량 등 대북 지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강조해 북측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냈다.

공동보도문에는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 회담 등 5차 회담 공동보도문에 담겼던 9개 협력사업 중 일부가 명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의선(京義線) 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 등 북한 군부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서울에서 열릴 차례인 7차 회담 시기도



이산가족상봉 재개원칙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저녁 홍순영 남북수석대표(왼쪽)와 김영성 북측단장이 저녁식사 후 밝은 표정으로 속수로 악하고 있다. 금강산=통일부사진기자단

남측은 12일 중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북측이 응할지 의문인 이상 결국 서울·평양 교차 개최의 관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금강산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은 항쟁이었던 남북관계

일정할 다시 짜는 데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금강산 상봉 등에 따른 새로운 과제들 어떻게 이룰지나 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회담 이모저모

말 부드러워진 北 단장

"뭔가 있다" 분위기 급진

북측이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해지를 강력히 요구해 결국 조짐을 보이던 6차 장관급 회담이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연내에 재개하기로 하는 등 막판에 극적 반전을 이뤘다.

○...남측의 비상경계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던 북측 김경삼 단장은 11일 막후접촉에서 의견집진이 이뤄지자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표현을 바꾼 눈치를 줬다. 김단장은 공동석상에 앞서 인천의 미사일 오발 사건 등을 들면서 "비상경계 조치로 침관 무기가 배치되는데, 침관 정밀무기일수록 오동작이 많다"는 논리를 펴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시사했다.

○...난항을 거듭하던 남북 대표단은 북측이 11일 늦게 남측에 공동보도문 초안을 요구하면서 회담의 전조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3차 전체회의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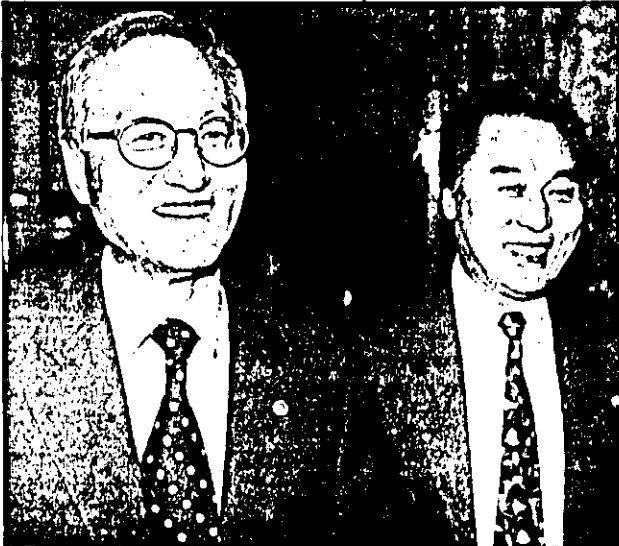
이영중 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남북관계 정상화 계기 마련

□면서 계속

이산방문 年内 재개



남강산 / 통일부사진기자단

환한 南과 北

제6차 남북장관회의장의 홍순영 남북수석대표(왼쪽)와 김영성 북측단장이 11일 금강산에서 저녁 식사 후 밝은 표정으로 속소로 가고 있다.

'과국 피하자' 공감 답보 협상 급반전

• 장관회담 안팎

제지리걸음을 먼저 못하던 6차 남북장관 회담이 마지막 순간에 돌파구를 찾았다. 미국의 9·11 테러 사태와 아프간 공습에 따른 남북의 비상경계 태세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던 양측이 한발씩 물러섬으로써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양측이 이처럼 합의를 이룬 바탕에는 어렵게 깨고도 올려놓은 남북관계와 과국으로 끌고간 안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측으로선 이산상봉이 안되면 대북 식량지원이 힘들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그 단초는 북측이 먼저 마련했다. 남측의 경제 강화가 재해되지 않으면 4차 이산 상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꿔

상봉장소 금강산 양보 해금강호텔등 유력시 '비상경계' 北입장 완화 식량지원 염두에 둔듯

'금강산 상봉'을 제시한 것이다. 남측은 평양·서울 교환 방문을 주장했으나 북측이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 장소를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하루 빨리 북녘의 피골이집 만나기를 원하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남측의 비상경계 조치에 대해서도 북측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남측은 11일 밤늦게까지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상봉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다. 구

체적으로는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시간을 두고 차례로 금강산을 찾는 '순차 상봉'과 남측이 관할하는 '해금강 호텔'과 북측지역인 '금강산 여관'에서 및 차례로 나눠 만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곳 모두 숙박시설 등이 부족해 동시에 수백명이 거거히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회담이 진전될 기미는 저녁 무렵에 나타났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대표단 공동 식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현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산가족들의 희망을 풀어줄 수 있겠냐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이

"남측의 공동보도문 초안을 달라"고 해 반이간 지 얼마 안 돼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서울 동안 비상경계조치를 내세워 남측을 압박한 것이 '금강산 상봉'을 원아내기 위한 협상전략이

아니었다 심을 정도의 급전환이었다. 북측은 지난 10일 제시한 공동보도문 초안에서 이산상봉 장소로 금강산을 내놓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4차 이산상봉은 남측의 비상경계조치와 무관한 금강산에서 하게 됐다. 북측은 "인전하지 못한 서울에서 상봉행사를 갖지 않겠다"는 뜻을 관철했고 남측은 회담 결렬위기에선 이산상봉 행사 지속이라는 성과를 얻어내는 선에서 장관급회담을 마무리한 것이다.

최재영기자 cyyun@kuryang.com

상봉 장소는 우리측은 서울·평양 교차 방문을 제안했으나 북측이 난색을 표명해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대신 상봉절차를 보완해 교차 방문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이 마련됐다.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도 남·북 양측은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개최 시기와 장소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다.

김령성 북측 단장은 대표단 공동 식사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토론을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듯하다"면서 "현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이산가족들의 희망을 풀어줄 수 있겠냐를 논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관계자는 "공동보도문만 합의가 늦어져 전체회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발음 새워서라도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서 "북측이 비상경계 조치에 대해 '침단무기가 배치되는 데 오직동이 많아 안전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면서 "북측의 태도가 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회담이 급진전된 배경으로 북측 태도 변화를 꼽았다.

남·북양측이 회담 막바지에 어렵게 합의점에 도달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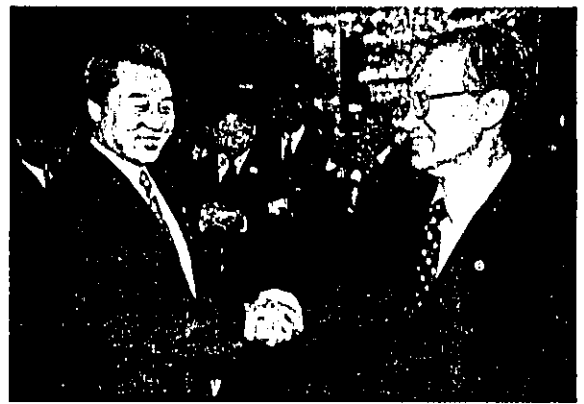
정상화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남북간간 테러사건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커 단기간 상봉을 건는 듯한 불안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으로 들어가면 이 같은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이산가족 문제는 북측이 행사에 동원할 수 있는 지원이 비다나 가는 상황이라 몇회를 더 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면회소 설치 등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북측 사정을 감안하면 '산넘어 산'이라는 것이다.

금강산 육로 관광, 개성공단 조성 등에 따라 남북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비무장지대 개방문제도 북측 군부의 완강한 태도를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간의 핵심 쟁점도 북측 군부의 완강한 태도를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굳이 이번 회담의 수확을 꼽자면 북측의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모처럼 미소 11일 저녁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 원리에 합의한 가운데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오른쪽)와 김영성 북측 단장이 저녁식사를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금강산·통일부 사진기자단>

北에 떠밀려 금강산으로

이산상동 年内재개 합의 안팎

남한의 비상경제대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 채 팽팽한 신경전 끝에 벌어진 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이 11일 저녁 이산가족영접 등 일부의 제에 대한 의견 집중 작업에 들어감으로써 분위기가 반전됐다.

‘남비상경계’에 北 고집 안쪽어

북측은 당초 남측의 비상경제조치가 이날 중 해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일부의 제를 합의하는 등 태도 변화가 보였다. 북측의 태도변화가 감지된 것은 이날 오후 평양에서 긴급하게 내리온 훈령을 받은 이후였다.

그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라지지 않았지만, 남측 대표단이 공동보도문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12일 서울로 귀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진남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 대표단도 비상경제대세 조처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의사 표시도 할 수 없어 고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이 그동안 이산가족 방문이 시골과 평양에서 동시에 실시됐던 관례와 달리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금강산으로 합의해 준 것은 비상경제대세 해세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으로서는 이산가족 방문단을 서울로

보낼 명분이 없다는 뜻을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제는 금강산 지역이 이산가족 상봉장소로 적합하지 여부가 미지수라는 점, 이미 겨울로 접어드는 상태에서 대부분 고령자인 이산가족들을 금강산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편도 이의치 않은 데다 전력 및 난방사정이 악악한 금강산 지역에서의 이산가족 방문은 이산가족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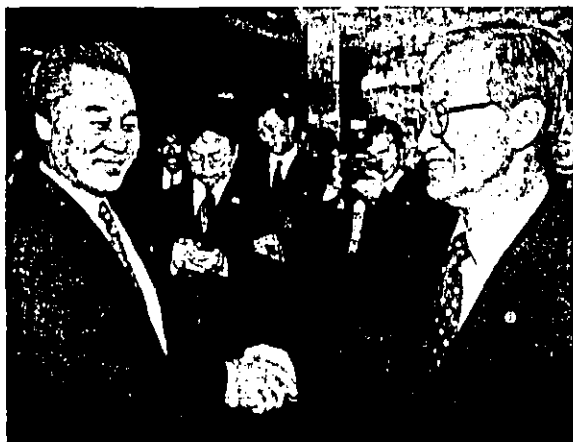
정부도 금강산에서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방문단을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측 대표단이 5차 장관급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도 제대로 관찰시키지 못했다든 점에서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한 비관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北입장만 감안” 비난 일듯

회담 시작 전부터 ‘남측 지역의 안전성’ 문제로 논란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입간선을 감안하는 정부의 회담준근 방식에 대한 재검토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회담결과와 무관치 않다.

(김영식기자) speare@donga.com



“잘해봅시다”

김강산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한 황순영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김영성 북측 수석대표가 11일 저녁시식을 함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6차 장관급회담 남북간 입장 비교

남	주요 내용	북
평화 유지 위한 조치	비상경제조치 인식	북측을 겨냥한 것
발이적 성격의 훈련	남측의 군사훈련	북측 주적으로 간주할 도발
11월 하순 통시 교환	4차 이산가족방문 일정	이산가족 교류를 원칙에 합의
조속한 재개	5차회담 합의사항 일정	비상경제조치 해결후 조처
12월 서울 개회	7차회담 계획	남북대화 재개절기에 동의

한겨레

북 “비상경계로 미사일 오발 우려”

■ 장관급회담 이모저모

◇...남측의 비상경제 조처가 북측을 기만할 것'이라고 주장하던 김영성 북측 단장은 11일 남북 미추 심무 접촉이 진행되면서 미사일 오발 위험을 강조하는 등 표현을 바꿔 눈길을 끌었다.

김 단장은 남북 대표단이 이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기에 앞서 남측 기자들과 만나 침담무기입수료 안전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경제조처로 (남측에) 침담 무기가 많이 배치됐는데, 인천에서 미사일 오발 등 사례와 잘못 발생된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여객기를 격추시킨 사례가 있다”며 “비상경제조치 상황에서는 이런 우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6년만 거리가 기대하니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친 조건속에서 이렇게 하면 이산가족들의 회담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을 남북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순영 남측 수석대표와 김영성 북측 단장은 11일 같이 저녁 밥을 먹으며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황 대표는 “남북관계가 시정경제개혁에 입각해서 경제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평화할 담보하는 것”이라며 “간접과 교류를

확대해 우리가 민족공동체이면서도 경제공동체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5차 장관급회담에서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를 합의한 뒤 북측 경제 실무자들이 개성공단 문제와 경의선 철도 연결 문제 등 각 분야별로 깊이 토론하면서 민전의 준비를 했다”고 응답해 회담에 대해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앞서 10일 남북 장관급 회담 남측 대표단의 이봉조 대변인은 10일 2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김영성 북측 단장은) 회담이 공리공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측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2차 전체회의에서 남측은 다시 한번 북측 정세 인식이 잘못되었으며 많은 오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측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부당성과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비상경제조치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는 없다. 비상경제조치가 부당하다는 것과 남측만 만한 조치를 취하면 합의사항 이행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북측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김강산/공동취재단

■ 북측 대표단 ‘기조발언’ 안팎

간접비난 형식 ‘의도적 언급’

남 공개 회담에 북 방송 밝혀

김영성 북측 단장은 9일 첫 전체회의의 기조발언을 통해 남측의 비상경제대세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을 ‘간접’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9일 오후 8시 북한 《중앙방송》은 “제6차 북한 상급회담 진행”이란 보도를 통해 “우리측 단장은 특히 남측이 최근 뒤에 나가 그 누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 높음을 발언해 대해서 까맣했다”며 “이는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고 두 제도의 공존이 기초한 통일로 지향해 나갈때 대한 공동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존엄을 해치며 체제를 건드리는 용납 못할 엄청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남측 대표단은 공동취재단에 회담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북측은 발언 장소나 발언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pec) 정상회의때 김대

중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과거 국가이익을 위해 소련과 관계를 유지했듯, 우리도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김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해 준 것이라면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1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셈이다. 게다가 북측은 남측 대표단이 이 사실을 밝히지 않자 방송을 통해 북측 단장의 기조발언을 공개해버렸다.

비록 간접 비난 형태를 갖췄지만 제도의 공존이 기초한 통일로 지향해 나갈때 대한 공동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존엄을 해치며 체제를 건드리는 용납 못할 엄청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황순영 남측 수석대표는 “최근 대북 관련 발언들을 아무리 검토해보봐도 북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 대통령에 대한 간접비난 여부를 ‘중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순영 남측 수석대표는 “최근 대북 관련 발언들을 아무리 검토해보봐도 북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 대통령에 대한 간접비난 여부를 ‘중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강산/공동취재단
권혁필 기자 nura@hani.co.kr

남북관계 중대 고삐길

남북관계 중대 고삐길

▶ 1면에서 이어짐

남 비상경제·정권말기 발목 잡혀 대화진전 주춤...민간교류도 벽에 상호이익 '경협토대' 재점검 필요

남북관계가 고삐길에 서 있다. 북쪽은 이번 6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의 비상경제 해제를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긴박적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향한 북한의 개혁개방 발언을 겨냥해 침박놀음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김영삼 북쪽 장관급회담 단장이 밀한 그대로 "북남 공동선언의 운명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북쪽은 앞서도 남북

의 비상경제 조치 등을 들어 6·15 이전으로 회귀를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의 이런 자세를 이제 김대중 정부로부터는 기대할 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틈을 빗잡기 꺼리는 한 남북문제 전문가는 북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권과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민족주의적 신념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출발한 (김대중 정부의) 대단한 실험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벽에 부딪친 건 분명

하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 모두 걸림은 원하지 않고 있지만 여측 가능한 대화의 틀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남북 당국간 대화의 정체만이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의 위기양상이다. 지난 8월15일 민족통일 대추전을 통해 합의했던 각종 민간·사회단체법, 부분법 교류도 "사정상 당분간 미루자"는 지난 9월 북쪽의 일방적 통보 뒤 전면 중단상태. 최근 북한을 다녀온 기업인이나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이 준전시 상태와 같은 분위기이며, 중국 쪽에 나와 있던 관계 일꾼들도 상당 부분 소환된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금감안 관공뿐만 아니라 민간경협도 반사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한 기업인은 "6·15 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 2면으로 이어짐

김태호 기자 kankani@hani.co.kr

경제특구의 내역을 찾아서 24·25면

한겨레

2001. 11. 12 (월)

대한매일

2001. 11. 12 (월)

北 '비상경제' 시각 교정

▷ 장관급회담 급변전' 입박

【김강산 공동주재대·전경호기자】 남북 양측은 새 6차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11일 저녁 저녁식사를 겸한 3차 전체회의를 계속,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과 새 7차 장관급회담 개최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려졌다. 김영삼 북측 단장은 이날 저녁 회담에 앞서 남측 기자들에게 "전 조건에서 이산가족들의 의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논의하고 있다"고 회담 상황이 급변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5일상은 비상경제조치 해태문제로 난공불투 거듭했으나 북측이 11일 오후 늦게 남측의 공동보도문 초안을 요구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잡혔다. 남북 양측은 오후 실무 접촉을 통해 공동보도문의 초

안을 서로 제시한 뒤 각각 서훈과 방영의 훈령을 받아오기를 기다리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남북 대표단의 공동 식사는 막바지 접촉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시간이 오후 7시부터 7시30분, 다시 8시부터 차례로 지연된 끝에 이뤄졌다. 이산가족 상봉 날짜와 장소, 비상경제조치 해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막후입박이 그만큼 긴박하게 전개됐기 때문이라는 게 회담 관계자들의 분석. "북측의 비상경제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던 김 단장은 막후 접촉을 통해 남북의 의견

견집안이 이뤄지지 비상경제조치에 대한 표현을 바꿔 눈길을 끌었다.

김 단장은 남측 기자들에게 헌신의 메시지일 오발 사건과 우크라이나의 메시지 오발로 인한 러시아 여객기 격추사건 등을 들면서 "비상경제조치로 침단무기가 배치되는데, 침단 정밀무기일수록 오동작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홍순영(洪淳瑛) 수석대표와 김 단장은 공동식사에서 남북경제협력 문제를 놓고 담소했다.

홍 수석대표는 먼저 "남북관계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 경제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평화를 담보하

"침단무기 오작동 우려" 논리로 입장 바꿔 긴박한 막후 실무접촉... 경협확대 재확인

는 것"이라면서 "김일과 교류를 확대해 우리가 민족공동체이면서도 경제공동체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5차 장관급회담에서 경협추진위 제2차회의 개최를 합의한 뒤 북측 경제 실무자들이 개성공단 문제와 견의선 천도 연결문제 등 분야별로 깊이 토론하면서 만전의 준비를 했다"고 회담했다.

●연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양측 대표단은 회담 막바지 막을 새워가며 공동보도문안 작성에 들어갔다. 남북회담 관계자는 "회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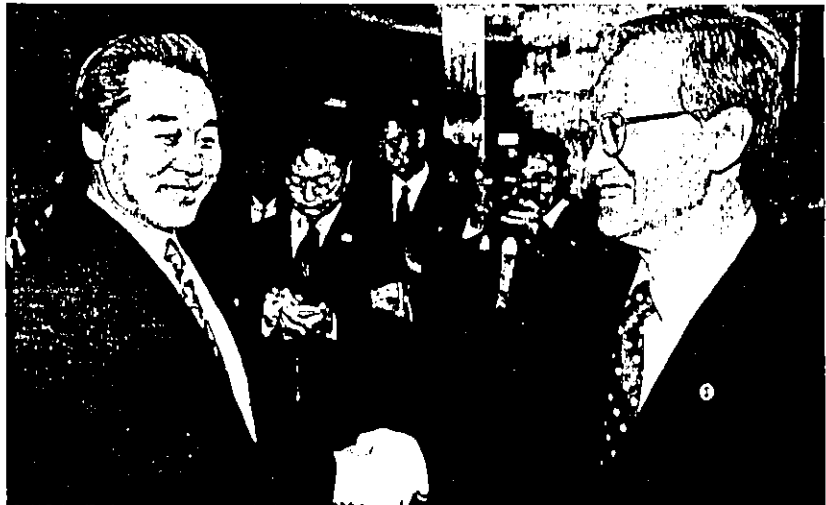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홍순영(왼쪽)과 북측 김영삼 단장이 11일 만찬을 끝낸 뒤 밝은 표정으로 속소로 향하고 있다.

●김강산 통일부 시진기자단

이어서야 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남북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ydk@kdaily.com



남북대표 악수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11일 저녁 이산가족상봉 재개원칙에 합의한 뒤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오른쪽)와 김립성 북측 단장이 친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금강산=통일부사진기자단

‘비상경계’ 뚫고 한발 앞으로

6차 장관급회담 합의 의미

남북관계가 협로를 뚫고 어렵게 한 발 진전했다. 6차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11일 남북은 우리측의 비상경계태세를 둘러싼 시종간 합력투기를 끝내고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봉 장소가 시종과 평양을 동시에 교차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 지역으로 정해졌다. 상봉 방식은 우리측 방문단과 북측 방문단이 순차적으로 금강산을 방문하거나 방문단을 여러차례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아니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

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현대 살리기'를 위해 남북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합의는 우리측이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남북은 미

北에 떠밀려 '동시 교차방문'원칙 후퇴 이산상봉 '금강산 면회소' 논란거리로

국의 대대러전쟁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남북관계마저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 이산가족 상봉 동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측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경우 우리측 대북여론이 극도로 악화, 식량지원 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고

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지원을 연계한다는 우리측의 전략이 사실상 성과를 거둔 셈이다. 북측이 우리측 대표단을 '빈손'으로 돌려 보낼 경우 당분간 남북관계의 냉각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측이 가장 원하는 4차 이산

가족 방문단 교환 등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한 것이다. 반면 우리측은 상봉 장소에서 양보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걸림돌인 우리측의 비상경계조치 문제도 돌파구를 찾았다. 홍순영(洪淳瑛) 남북 수석대표가 '3차 전체회의의 수석대표 겸겸 발안'을 통해 우리측의 입장을 해명하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장관급회담 이모저모

우리측의 비상경계조치 해제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던 남북 양측 대표단은 북측이 11일 오후 늦게 우리측의 공동보도문 초안을 요구하면서 회담이 급반전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3차 전체회의의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논란을 풀기 위해 의견을 접근시키기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현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남북 양측 대표단은 상대측의 안을 시종과 평양의 본부에 전달하고 훈령을 기다리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밤 새워 공동보도문 조율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양측 대표단은 회담 마지막날 밤을 새우며 공동보도문안 작성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밤샘작업을 재연했다. 남북회담 관계자는 "회담이 이어져야 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며 "밤을 새우더라도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남측의 비상경계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던 북측의 김립성 단장은 이

날 막후접촉에서 남북의 의견접근이 이뤄지자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표현을 바뀐 눈길을 끌었다. 김 단장은 만찬에 앞서 남북 기자들과 만나 인천의 미사일 오발로 인한 러시아 여객기 격추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비상경계조치로 침담무기가 배치되는데, 침담정밀 무기일수록 오동작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오늘 洪대표 발언水位 주목

“비상경계 해제” 北요구 어디까지 수용하나

금강산 장관급 회담

9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린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이산가족 상봉을 늦어도 12월중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 남북관계가 일단 파국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이 걸림돌 경우, 자칫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게 우리 측 회담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그러나 북측이 ‘남한 내 비상경계 내세움’을 이유로, 이산가족들이 서울

에 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당초 합의한 ‘서울·평양 교향방문’이 ‘금강산 상봉’으로 변경됐다. 상봉 방법은 서울로 오려 왔던 북한 이산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남한의 가족·친척들이 금강산에 가는 시기와 평양에 가기로 했던 남한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으로 가는 시기를 달리 하거나, 남북 이산가족들의 상대측 지역 가족·친척 상봉을 동시에 하되, 각각 100명으로 돼있는 규모를 나눠 하는 방안 등을 계속 협의중이다.

우리 측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절기피한 상황

논리를 들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상경계대세로 서울이 불안하다’는 북측의 주장을 인정해 준 셈이나 다름없어, 정부가 또 다시 북한의 강공(強攻)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우리측 홍순영(洪淳瑛) 수석대표가 12일 ‘회담 종결발언’에서 ‘비상경계대세’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하느냐가 주목된다.

북측은 막판 이산가족 상봉에

에게 한 발언 내용을 비난하기도 했다. 북측은 “비상경계대세는 북과 무관하다”는 등의 우리 측의 실망에 대해서도 ‘변방’, ‘캐번’ 등의 용어를 구사하면서 이에 들으려 하지 않았다.

북한 입장에선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아프간 공격으로 시작된 ‘대(對)테러전쟁’ 국면이 쉽게 끝나지 않고, 그 불꽃이 북한에까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한의 경제지 지원 역시 금강

‘南北관계 장기냉각’ 우려 이산상봉 접근 “서울은 불안” 주장 인정한셈... 또 논란일듯

합의하긴 했으나, 처음부터 이번 회담을 최근 남북관계와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선들의 입장을 살피는 장(場)으로 활용하려는 인상이 짙었다. 지난 9일 첫 전체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북측은 비상경계대세와 P-15E 중공제치뿐만 아니라, 우리 측이 미국에 추종하고 ‘북=주적(主敵)’이란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공격했다.

북측은 또 회담장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김 대통령이 APEC기간 중 부시 미대통령

산 관광사업의 위축 등으로 예견되지 않으며, 또 작년부터 전라지역을 요청했으나,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또 북측 내부사정상 이산가족들을 계속해서 서울에 내보내려고, 남쪽 이산가족들을 평양에 불러들일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북한이 지난 달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통 통해 배운 ‘남한 내 비상경계대세 해제’ 카드는 일단 성공했으며, 앞으로 북한은 이같은 ‘남측 끌고 다니기’ 카드들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송仁희기자 gnhk@chosun.com

北 ‘비상경계’ 표현 완곡해져 눈길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또 다시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타협점을 찾는 양상을 보였다. 양측은 실질적인 회담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까지 북측의 ‘선(先) 비상경계대세 해제, 후(後) 이산가족 상봉 등 일점 이행’ 입장 고수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다가 이날 저녁부터 심바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남북 양측 대표단은 11일 실무접촉을 통해 막판 절충을 시도하느라 속소인 금강산여관 내에서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남측 대표단 일부만 삼남포와 해금강을 다녀왔을 뿐, 홍순영(洪淳瑛) 수석대표와 김영성 북측 단장 등 양측 대표단 대부분이 호텔에 남아 회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장관급회담 표정

‘平壤혼령’ 기다리다 공동만찬 1시간 지연

우리 측은 오후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일정 합의를 요구하면서 “내일 예정대로 금강산을 떠난다”고 일종의 ‘최후 통첩’을 했으며, 이에 북측이 우리 측의 공동보도문 초안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양보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북측 대표들이 ‘평양의 혼령’을 기다리느라 공동만찬도 당초 7시에 시 8시로 늦춰지기도 했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만찬 직전, ‘비상경계대세’에 대한 표현을 완

곡하게 사용해, 뭔가 막판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하게 풍겼다. 그는 인천의 미사일 폭발(暴發) 사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오발사건 등을 거론, “비상경계 조치로 침단 무기가 많이 배치되는데, 이런 무기일 수록 오작동이 많아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을 뿐, 북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회담장 주변의 북측 안내원들은 남측 지원요원과 취재진에게 금강산을 본 소감을 묻는가 하면, “재·보신 이후 한나라당은 어미느냐”는 등 남한 내 정치상황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안내원들은 ‘비상경계대세’를 문제삼기도 했으나, 별다른 논쟁 없이 우리 측 지원요원들의 설명을 들은 모습을 보였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저물 녘 장전함을 떠난 금강산 관광선이 공해에 이르러 선수를 남으로 뺏지마지 눈에 들어오는 해안풍경은 현란한 불빛이다. 금강산 남쪽자라 좁으로 어렴되는 곳에 휘황한 불빛이 긴 띠를 이루며 산 허리를 감고 넘어간다. 그보다 좀 왼쪽으로 집점이 이어진 불빛들이 거친 대진 화진포 같은 어항인 것으로 보아 산허리를 감고 넘는 그 불빛 행렬은 휴전선 탐조등임에 분명하였다. 거기에 대립해 있어야 할 북쪽 분계선 자리는 막막이었다.

■ 몇 달 후 평성산 등산을 다녀오는 길에 임진강변을 달리다 같은 풍경을 목격했다. 저문 강가 철책에는 휘황한 조명등이 열병을 하듯 긴 행렬을 이루었고 끝 없는 가로등과 행락 차량 불빛이 자유로이 현란하게 뿜뿜었다. 직막강산 같은 강 건너 북녘 땅과 나무 대조적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 개성직할시가 있으면, 어찌 그리 어둡기만 한지 가슴이 아렸다. 전력 사정이 나쁘디더니, 남쪽과 면한 곳에 전시용 외등 하나 켜지 못할 정도인가.

■ 얼마 전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그런

의문을 발끈히 씻어주었다. 인공위성이 찍은 동북아시아 야경은 북한만이 잠잠한 밤중인 현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다. 미국 항공 우주국 위성이 장기간 촬영한 수백장의 밤 사진을 컴퓨터 편집한 사진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동해안과 대만 해안의 불빛이 지도처럼 정확한 해안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땅은 평양과 남포 원산 함흥 청진 정도만 희미한 점으로 나타나 한국이 마치 섬처럼 보였다.

■ 엇그제 신문에서 본 금강산 촛불회담 사진이 일깨워준 잠재 영상들이다. 우리측 홍순영 수석대표와 북측 김형성 단장이 촛불을 밝히고 앉아 환담하는 모습에는 정취가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정전으로 그렇게 됐다는 사진설명을 읽으면 기분은 달라진다. 전력사정이 어떻게 회담장의 전기가 나갈 수 있을까.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장관급 회담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모양이다. 다시 냉전시대처럼 남북관계가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다. 북한이 언제까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cjmoon@hk.co.kr

취재일기

北에 끌려다니 장관급 회담

"미국 테러사태와 관련한 남측의 비상경계를 이달 내로 안 풀면 이산가족 상봉 등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금강산에서 열린 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한때 얼어붙게 했던 김영성 북측 단장의 10일 발언은 하루가 지나자 다소 기세가 꺾였다.

비상경계조치 해제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의제할 논의할 수 없다던 그의 말 한마디에 회담 대표단은 한동안 당혹해야 했고, 상황 낱짜를 고대하던 이산가족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다.

그러나 늦게나마 양측이 이산가족 상봉 시기·장소와 검합 추진 방안, 차기 회담 날짜 등을 논의해 공동보도문안 작성에 다가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원칙과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의 숙제를 남겼다.

회담 장소를 둘러싼 논란 끝에 북측 주장에 끌려 금강산으로 향했지만, 북측의 '억지주장'에 밀려 5일간의 회담 일정 중 나올 가까이들 허송세웠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정부는 회담 내내 북한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9일 금단장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북한 개혁·개방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침략놈음'이라

고 비난한 사실을 브리핑에서 빠뜨렸던 남측 대표단은 평양방송 보도가 나온 뒤에야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 않으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북측이 비상경계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시한을 '11월 중'으로 못박은 대북도 애써 외면하려 했다.

남측 대표단은 남북 회담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또 한장의 공동보도문을 가지고 12일 귀환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 없이 지난 5차 회담 때 합의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 수준이 될 게 확실시된다.

결국 임월(회담)엔 관심 없이 금강산 관광 대가 미지급금(2천4백만달러)이나 밥·전력 지원 같은 잣대에만 쏠려 있는 북측의 근본적 태도 변화 없이는 금과옥조 같은 합의문안도 공수표가 돼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회담 과정을 보면서 "이번 금강산 회담을 수용하면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던 통일부 당국자의 언급이 안타깝게 외눈다.



이영중 기자 통일외교팀

‘비상경계 해제’ 막판진통

남북장관급회담...이산 年内 금강산 상봉은 접근

北, 발언수위 불만... 회담일정 하루연장

남북한은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장관급회담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 금강산에서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을 갖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남한의 비상경계조치 해제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12일 끝난 예정이던 회담 일정이 하루 연장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막후 접촉을 계속했다.

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의 이병호 대변인은 1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선(先)비상경계조치 해제 요

구 문제가 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일정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 장관의 회담종결 발언 수위와 관련한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11일 밤 늦게까지 북측은 비상경계조치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측 해법에 대해 별다른 이의표현을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측 공동보도문안을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본안 협의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데 북측이 12일 새벽 남측 수석대표의 종결발언 표현에 불

만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측은 홍장관의 종결발언을 북측이 수용하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한은 당초 시골·평야를 교린방분하기로 했던 이산상봉 장소를 금강산으로 바꾸고, 12일 마지막 회담 때 홍장관이 비상경계조치 문제에 대해 일종의 ‘유감표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측 실무자들은 12일 새벽까지 홍장관의 발언 수위를 놓고 접촉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영석기자·금강산=공동취재단

한마당

춧불

춧불의 이미지는 다양하다. 얼핏 껌이빠도 여유로움, 포근함, 자기희생, 사랑, 연대, 지평, 의지 등 많은 단어가 꼬리틀 된다.

오랜 빗줄기와 모임에서라면 역시 춧불이 제격이다. 심지에서 사방으로 번지는 온은한 불빛 가운데 있었던 추억도 저절로 떠올라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커져야 할 세월의 고갯길은 자연스럽게 여유로움과 포근함으로 한데 어우러진다.

부활주일 새벽, 캔들서비스(춧불에)의 춧불에는 감전함이 때어 있다. 스스로 제 몸을 대위 빛을 내는 춧불의 모습에서 인류를 위해 진히 화육(化肉)하여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과 무한한 사랑을 본다. 참여하는 이들은 마음을 비우고 춧불의 빛과 함께 흘러내리는 추농의 열기를 느끼고 십자가와의 연대됨,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졌다는 의지됨 다짐한다.

춧불은 또 불의에 대한 저항도 담고 있다. 예컨대 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희생자들을 위한 춧불 추모제는 테러에 대한 저항을 의미했다. 그것은 폭력에 대한 공분(共憤)을 확인하는 연대의 자리였고 평화를 회구하는 의지표명이었다.

이번에 열린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에도 춧불이 화제가 됐다. 8일 저녁 회담 장소인 금강산어련의 정전으로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와 김영

성 북측 단장이 춧불을 켜고 환담하는 사진이 9일자 조선신문에 일제히 실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례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춧불 사진은 마치 지금의 한반도를 상징하는 듯했다.

50여년간의 분단과 대립 끝에 겨우 대화의 필요를 느끼 시작한 남북한은 지난해 6월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정상회담까지 치러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여전히 비좁아 선 춧불이다. 대화는 비좁거나 기 일우고 의제는 늘 대립적이다.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만 해도 지난 달에 열기로 한 것임 북측이 일방적으로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변경하였고 시비 끝에 남측의 양보로 겨우 개회했다.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이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이산가족 상봉문제에는 물론 경제협력력을 필두로 한 각 분야의 교류재개 등 남북간에 단장 풀어야 할 임은 산적하다.

춧불의 의미는 다양하면서도 그 속에 공통적으로 스며 있는 이미지는 연약하다는 점이다. 분명히 춧불은 햇불보다 조용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춧불 시위의 결연한 의지만은 그 무엇에도 뒤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춧불에는 약한 자들의 연대함 유도하는 부드러운 여유가 녹아내려 있기 때문이다.

갈지자 행보함 보이는 남북대회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한반도의 춧불은 아직 빛나고 있으니 희망은 남은 셈이다. 이 늦가을 춧불의 뜻을 다시 새겨볼까...?

조용래 논설위원 choyr@kmib.co.kr

國民日報

THE KOREAN DAILY GMB

2001. 11. 12 (월)

北 다목적 벼랑끝 전술?

군부 달래며 '더 많은것 얻어내자' 속셈 '금강산 상봉' 굳어질 가능성... 논란 예고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협상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남북 대표단이 12일 캐나다 압초를 찾았다.

북측이 남측의 비상경계태세에 대한 홍순영 남북 대표의 발언 수위를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북측은 홍수석대표의 종결 발언에 대해 '표제에 문제가 있다'면서 계속 버티고 있다. 남측 역시 홍수석대표의 발언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할 수 없다.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협회끼리 상당한 진통

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발언 수위에 의미를 제기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남북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왜 태도를 바꿔본안 협의가 아닌 우리측의 비상경계조치를 문제삼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북측 대표단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대해 북측 최고위층의 불만이 섞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더 많은 것을 얻어내자는 벼랑끝 전술로도 받아 들여지고 있다.

북측으로서는 합의점을 찾기 못하더라도 비상 경계태세까지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써 남북협상 지체에 불만이 큰 북한 군부층 달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남측이 받아들일 경우에도 우선 북측 인민들을 통제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던 서울·평양 교환방문을 우선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금강산 상봉을 이뤄냄으로써 계속 좁아지고 있는 관광 대가금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된 대책 발표 지원도 얻어 낼 수 있게 됐다. 여기에서 면회소 설치 장소로 금강산을 주장해 왔던 북측으로서는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남측 대표단으로서는 합의 여부에 상관 없이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북측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일종의 '유감 표명'을 할 경우 비상경계태세 때문에 각종 회담과 이산상봉을 서울에서 하지 못하겠다는 북측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북측에 불만을 집었다는 비난을 면치 어렵다.

이들 통해 얻어낼 것으로 보이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역시 북측의 계산대로 향후 남북관계 안정이 북측과 계산대로 금강산으로 일원화됨 소지하지 남겼다.

금강산 상봉은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특히 대부분이 고령인 남측 이산가족이 추운 날씨에 배를 타고 금강산까지 가야 하며 체대로 된 속도도 없어 불편하다.

합의점을 찾기 못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지정성거와 대신이 예정된 내년 말까지 남북관계 진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될 공산이 크다.

김영석기자 yskim@kmi.co.kr



대책 협의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2일 아침 회담장인 금강산여관 주변을 산책하던 중 실무자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금강산=시진경동원취재단

비상경계 발언수위 막판 트집

"표현에 문제" 새벽 급반전 입장 늦춰 "마지막 시도..."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12일 반전의 변곡점을 가졌다. 양측은 남측의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의 종결 발언 수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은 회담 하루 연장을 이어 밤초 오전 8시부터 예정보다 제3차 전체회의도 미룬 채 미추합곡을 계속했다.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었던 회담장 분위기는 12일 새벽 급반전됐다. 북측이 홍수석대표의 종결 발언 수위를 관련 '표현에 문제가 있다'며 의미를 제기하고 나선기 때문이다. 남측

대표단은 "북측이 남측 주장을 수용하는 모습이었다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듯 남측 대변인은 오전 7시30분쯤 급히 공동취재단 기자실을 찾아 회담 일정 연장 사실을 알렸다. 홍수석대표는 이산가족 상봉 합의라는 서울의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받은 뒤 "회담이 오라기라하다보니 보도도 오라기라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홍수석대표는 "북측이 저렇게 나오니 'one last try(마지막 시도)'

를 해 보자"며 "지난 밤 수시로 보고를 받느라 잠을 서너번씩이나 깨야 했다"고 말했다.

남측 대표단은 12일 오전 9시 살병호전으로 돌아오기 위해 잠을 정리해 놓은 상태였다. 남측 상황실은 필수경비물 제외한 기자재뿐 일부비행 상자에 포경계 장비넣었고 부식물로 가져간 음식물도 금강산 여관에 근무하는 북측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북한외 언론팀들은 장관급회담 사용제한 11일과 니콜레인 12일 회담소식을 일정보도하지 않고 있다.

김영석기자·김강산=공동취재단

野 "계속 끌려 다닐거냐" 與 "긍정적 측면도 있다"

장관급회담 '2색 반응'

금강산에서 일고 있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는 방안이 양측간에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은 "북한에 더이상 끌려다니는 건 안된다"며 강하게 재고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냉정한 여론을 조성하는 논치다. 한나라당은 이직 회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성이 없어 재개할 자격이 없다고 금강산 상

조치에 대해 일종의 유감표명을 할 경우 대해 정처에 대한 비판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회담이 하루 연장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데 대해 북한외 여론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세오 총무는 "남북관계를 한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생각하는 마당에 북한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며 "남북문제에 대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중규 국회 통일외교 통섭의 기사는 "서한이 너무 주머니" 지루시까

를 것"이라며 정부의 저지세 협상을 비판했다. 그는 "한-미연대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비상경계 태세에 대해 북한이 물고 늘어지는데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적대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처럼 신임 대변인은 "남북 모두 태극장세를 놓고 공방만 벌일 경우 무의미한 회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기존 입장에 신속성을 보완한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장소가 서울과 평양이라는 제한된 장소를 벗어나도록 남북관계가 한단계 진전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의봉외 소속 정당인 의원은 "북측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햇볕정책이 퍼져가 정세로도 오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의원은 이어 "타라시타 이후의 남측 비상경계태세를 중지시키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처면 정세 조율과 여론을 고려해 사조적 격조제가 하"고 주류했다

北 '비상경계 해제' 고집... 다시 원점

정부도 끌려다니기 비난의식 첨예하게 대립

장관급회담 연장 배경

지난 9일부터 금강산에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남북이 당초 12일 끝날 예정인 회담일정을 하루 연장하면서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남북의 시각차가 좁혀질 줄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장소를 금강산으로 양보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만은 조기에 성사시켰다는 입장이나 북측이 대대려 비상경계태세 해제 문제를 고집해 '끌려다니기' 비난과 '이산가족 상봉 성사'라는 틈새에 끼여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다.

12일 새벽까지만 해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듯 당초 이날 오전 9시 대표단을 태우고 돌아올 예정이었던 설봉호 출발 시간을 1시간여 앞두고 우리 대표단이 하루 더

회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이후 정부가 내린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시각차이다.

남북은 12일 새벽까지 진행된 막후 실무접촉을 통해 연내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비상경계조치는 회담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남측 수석대표 종결발언을 통해 해결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고 발언내용과 수위에 대한 협상을 진행시켰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측은 서울과 평양을, 북측은 금강산을 주장했고 남측은 북측이 비상경계태세에 대한 남측 수석대표 발언에 동의할 경우 금강산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양보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측이 제의한 발언의 '표현'에 대해 북측이 불만을 표시, 밤새 진행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남북은 회담의 성과

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회담을 하루 연기하게 됐다.

북측은 남측 수석대표의 종결발언에서 남측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비상경계조치 해제문제를 시사하는 내용을 언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남측은 비상경계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밝히는 수준에서 제시하자 다시 감강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북측과 협상을 벌여나가지만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비상경계조치의 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 주장대로 금강산을 수용하면서 비상경계조치에 대해서도 북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할 경우 쏟아질 비판여론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

/이현종기자 lechun@munhwa.co.kr

남북장관급회담 하루 연장

비상경계 해제놓고 진통

이산상봉은 연내 재개

금강산에서 일리고 있는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해제문제를 둘러싼 남북간의 이견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던 끝에 회담이 13일까지 하루연장됐다. <관련기사5면>

남북은 이날 새벽까지 이산가족 상봉은 연내에 재개하고 비상경계조치 문제는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의 회담 종결 발언을 통해 해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홍수석대표의 발언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남북의 의견이 엇갈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남측 대표단 이병조 대변인은 12일 오전 기자들에게 심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측의 선 비상경계조치 해제 요구 문제가 여전히 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회담 일정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의 종결발언 수위와 관련된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8시부터 예정됐던 3차 전체회의도 연기됐으며 남북은 이날 오전중 막후 실무접촉을 계속할 계획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현종기자 lechun@munhwa.co.kr

'뉴욕 추락' 돌출... 南도 北도 '원위치'

'장관급' 마지막날 안팎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5박 6일이라는 짧지 않은 회담기간 내내 남북의 비상경제대화에 대한 북측의 유엔 경제위원회 의제에 반목이 깊어 회담거리다 13일 막을 내렸다.

반면에 반전을 기대하던 북측은 대표단이 회담대로 진행을 함께 하는 소식을 전해온 것은 12일 저녁. 실무접촉에서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의 종결 발언 수위에 대해 상당한 의견 차이를 이뤘었다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비상경제대에 실무접촉 외에 별도로 가능하면 남북간 회담장소 회상방은 남북협력수진위 장소인 평리학교 시골(남측)과 금강산(북측) 수장이 잇달아 난항을 겪었다.

북측은 회담이 최대 걸림돌인 홍순영 대표의 종결 발언을 원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조문제는 우리측이 금강산 수위이라는 유언장을 발췌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전제로 회담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김동식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대리사대 간사 이후 취재진 분의 비상경제대화가 단계적으로 원상대로 복귀 수순"이라고 밝힌 것도 남측 반발에 힘을 보탤었다.

남측 관계자는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된다면 남북간 일정 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희망적인 기대를 표시했다.

이런 두개의 실무접촉이 중단된 시각은 13일 새벽 3시. 중단의 공식 이유는 장시간 회담으로 인한 실무진의 피로와 비상경제대회 및 강조문제를 이견 등에 대한 내부조율을 위해 서로 쉬게끔 갖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뉴욕에서 미국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과도 무관해 보여진 않는다. 남측 대표단으로서는 여객기 추락과 관련, 회담 진행에 대해 대비한 경제강화지사가 내린지 장래에서 정부의 새로운 훈령이 유관성으로 남북과 발언수위를 정했다가 남측 반발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음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제' 발언수위 한때 의견접근 국제정세 급변으로 결국 발목잡혀

다 보듯 회담 간헐하게 전개되는 국제 정세에 대해 외교위성과 지경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회담 관계자는 "여측 불허"라는 말도 회담 분위기가 표현했다.

회담 7주에 다시 열기로 했던 실무접촉도 남측의 긴장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다시 오전 9시 이후로 늦춰지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한국 남북의 비상경제대회 문제는 종결 발언 수위 조율로 일단 교미할 남기는가 했다나 뉴욕 여객기 추락사고로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회담이 었다.

김영석기자·김강산=공동취재단



고심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오른쪽)이 12일 아침 회담장인 금강산여관 주변을 산책하던 중 실무자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김강산=사진공동취재단

이산상봉 내달10~16일 금강산서

남북장관급회담 타결

7차회담은 서울서 개최

남북회담은 13일 금강산여관에서 막후 실무접촉을 갖고 제6차 장관급회담의 최대 쟁점인 남북의 비상경제대회 문제에 대한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

의 종결 발언 표현 수위를 놓고 마지막 조율 작업을 벌였다. <관련기사 4면>

남측 대표단은 비상경제대회 문제에 대해 북측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산가족 상봉 및 경제추진위 등 당국간 회담 일정 협의에 이어 곧바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뉴욕 여객기 추락 사고에 따라 남북의 비상경

계대회가 다시 강화됨으로써 이에 대한 북측의 태도변화 여부에 따라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담 관계자는 "비상경제대회 문제와 관련, 양측간에 일부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이산가족 문제 등 현안 논의가 연계되어 있어 회의 결과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김영석기자·김강산=공동취재단

남북 '비상경제' 등 막판조율

장관급회담 막후 실무접촉

오후 공동보도문발표 귀환

남북은 제6차 장관급회담의 마지막 날인 13일 오전 막후 실무접촉을 통해 핵심 쟁점인 비상경제대회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수진위 서울 개최 등을 놓고 막판 타격을 시도했다. <관련기사 5면>

비상경제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접근을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상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날 오후 2시 남측 대표단이 귀환할 심봉호 출발시간 전까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회담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 아래 협상을 계속 밟아오고 있다.

남북은 이날 제1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금강산에서 갖는 것으로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으나 김현추진위 제2차회의 개최장소 문제는 남측은 여(남측) 서울에서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금강산 개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은 비상경제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가 3차 전체회의의 종결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김강산=공동취재단, 이현중기자 loehun@munhwa.co.kr

문화일보

2001. 11. 13 (화)

남북관계 '겨울잠' 오래갈듯

장관급회담 결렬 인부

'테러 경계조치' 인식차이 못잡혀

홍대표 "北강경태도 때문에 무산"

예정(3박4일)보다 이틀을 더 연장하고 합의협상을 하면서까지 타결을 시도했던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결국 이견집중에 실패함에 따라 경색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러사태로 내리긴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북측의 인식이 강경대국체정사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북측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북은 14일 오전 6시50분 금강산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양측 대표가 회담 종결발언을 하고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이튿날 집을 지지 못해 괴로한 모습으로 회담장에 들어선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김영성 단장은 별다른 인사말 없이 전체회의에 들어갔다.

김영성 단장은 "귀측 대표단이 빨리 가야 한다고 하니 회담에 바로 들어가자"고 말했다고 홍 수석대표는 "주최측의 뜻대로 하자"고 맞받았다. 25분만에 양측 입장만 확인하고 회담을 마친 남측 대표단은 곧바로 장전장으로 출발하는 버스편으로 이동해 심봉호에 승선했다.

홍 수석대표는 심봉호선상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을 이틀이나 연장했지만 테러사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컸다"며 "시간이 가면서 이번 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표는 또 "이번에 합의가 안된것은 우리 주장이 확고한데 비해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남북간의 구분이 풀릴 때까지 시간이 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남측 대표단 관계자는 13일 밤 11시쯤 기자회견을 만나 "조금전(밤 10시40분쯤) 마지막 남북 실무대표 접촉을 시작했다"며 "회담 종료수순을 밟아야 할 시간이 되어간다"고 처음으로 회담 결렬을 시사했다.

실무접촉에 이어 수석대표 단독접촉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남측 대표단은 전날 속초에 갔다가 대표단을 데우기 위해 밤새 장전장으로 되돌아온 심봉호가 새벽 4시쯤 잠박하는대로 승선기로 하고 준비를 서둘렀다.

13일 오전까지만 해도 비상경계조치에 대해 북측이 홍 수석대표의 종결발언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12월10일부터 일주일간 금강산에서 순차 교환방문한다는데 합의하는 등 타결분위기가 무르익었으나 결렬추진위 개최장소와 7차 장관급 회담 개최시기를 놓고 들어갔다.

●--13일 오후 심봉호가 대표단을 기다리다 결국 태우지 못하고 당초 예정보다 2시간 가량 늦게 오후 8시30분쯤 속초에 도착하는 비행에 승객들이 하선을 거부하고 현대 이산속에 보상을 요구해 결국 승객 570여명 전원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현경기자 hachun@munhwa.co.kr

北, 기회놓치면 '5년' 잃을수도

우리쪽결집에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국 아무 합의도 이루지 못한채 결렬됐다.

회담결렬로 향후관계 불투명

우리 정부는 제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고자 한 북측의 제의를 수용한 것은 북측과 직접 만나 현재의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풀기 위한 것이다. 원래 제6차 장관급회담은 북측지역에서 열리기로 돼 있기 때문에 북측지역 어느 곳(금강산지역)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담을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상봉사업이 유보된 상태에서 북측에 끌려 다니기만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당초의 입장을 바꾼 우리 정부가 장관급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수용한 것은 수렴종단의 유일체제인 북한사회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최고지도자의 결정을 하유아함에 다시 반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과 회담에 나가서 따갈 것은 따지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우리가 이번 제

6차 장관급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상당기간 정체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최대 쟁점은 비상경계대태와 관련한 남북간의 입장차이와 남북대화의 장소문제였다. 홍순영남측 수석대표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유보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측의 비상대태태세는 '국제적인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내에 상주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북측은 남측이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경계대태에 들어간 것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이산가족방문단의 즉각적인 교환을 위해서는 먼저 이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북측이 남측의 비상경계대태가 먼저 해제돼야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렬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금강산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난항을 겪었고 일정도 이 급진이나 연장됐다.

비상경계대태에 대한 남북간 인식의 차이는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강추위 회담장소문제는 북측이 금강산을



고 유 환
<동국대학교수·북한학>

고집하여 난항을 겪었다. 남측은 이산가족방문단 서울-평양 교환을 12월 10일에서 16일에 걸쳐 금강산에서 순차방문하는 것으로 양보한 대신, 비상경계대태로 남측지역이 불안하다는 북측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추위 2차회의와 제7차 장관급회담은 반드시 서울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체제이완 우리 '금강산' 고집

북한이 남북대화와 이산가족상봉 장소로 금강산지역을 고집하는 것은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체제이완 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당국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남북 주민들간

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집단주의사회)에 대한 남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개인주의사회) 시조의 유입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남북 접촉·대화의 장구를 금강산으로 일변화하여 자본주의 '향배비람'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당국이 외화벌이의 지속을 위해 금강산지역의 관광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전축의 장구를 금강산으로 일변화하려는 것은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회담은 우리측이 '완전 양보하지 않는 한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북측이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 이행을 유보하거나 약속을 어김으로써 우리 정부와 햇볕론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도 불투명하게 됐다. 북한은 남북대화에서도 미국의克林턴정부 말기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북시정변후 출범 이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지난 시기의 노력이 '잃어버린 10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남북관계에서도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상당기간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현 정부의 대화 시기를 놓친다면 북한은 또다시 '잃어버린 5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심사숙고해줘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냉각 위기

장관급회담 '경협위 장소' 이견 결렬

내달 이산상봉 백지화- 추가회담 불투명 정부 "인식 합의점 많아 대화 계속될것"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6박7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할 이끌어 내지 못한 채 14일 끝내 결렬됐다. 장관급회담이 지난해 7월 1차회담 시작 이후 합의 결렬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남북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아당의 반대에도 금강산 회담을 강행한 정부로서도 회담 결렬로 인해 향후 대북 포용정책 수행에 있어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회담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한 남북한 대표단은 이날 새벽까지 금강산어관에서 수석대표 및 실무진족을 잇따라 갖고 남북간담추진위 2차회의 개최장소 및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등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 일정을 논

고 막판 질책을 받았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북측은 마후합의를 깨고 남측지역의 안전성 문제를 내세워 대북 쌀지원과 김의선 연결 등을 논의할 경우 2차회의를 금강산에서 갖자고 고집한 반면 남측은 관례를 내세워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을 주장,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후 실무진족에서 합의했던 다음달 10일부터 1주일간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과 7차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도 백지화됐다. 홍순영 수석대표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은 오전 7시 북측과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종전발언을 한 뒤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않은 채 실행호 특

별편으로 정전함을 떠나 속초항에 돌아왔다.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는 귀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타 없이 서로 입장을 교환했다는데 뜻이 있다"고 평가했고, 이봉조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인식의 합의를 본 점은 남북대화를 계속 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대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기자·금강산=공동취재단 yskim@kmb.co.kr

"대북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한나라·자민련 촉구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14일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에 대해 "원칙 없이 오로지 북한 달래기의 눈치보기로 일관해온 정부의 허술함은 햇볕정책이 자초한 결과"라면서 "국민 자존심과 국가이익을 도외시한 망국적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문화일보

남북장관급회담 완전 결렬

내달 이산상봉 백지화... 다음 회담도 불투명

지난 8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14일 별다른 성과물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됐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열린 장관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하고 합의 없이 결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남북은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실무 접촉과 수석대표접촉에서 강제협력추

진위안화 2차 회의와 7차 장관급회담 개최 시기 및 장소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오전 6시50분 북측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양측 수석대표의 종전발언을 거쳐 회담 일정을 끝낸 뒤 오전 8시쯤 실행호 편으로 정전함을 떠나 이날 오전 속초항에 도착했다. 홍순영남측수석대표는 실행호선상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은 테러시대로 귀한 조치와 관련된

인식이 우리 설명으로 좁혀지긴 했지만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다소 냉각기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수석대표는 그러나 "국제사회가 대테러전쟁으로 긴박해지고 있는 만큼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당초 잠정합의했던 12월10일부터 일주일동안 이산가족 상봉단이 금강산에서 순차 방문기로 한 입장이 백지화 됐다. /금강산=공동취재단·이현중기자 lochun@munhwa.co.kr

北 박판의 번복... 이산도 경험도 후퇴

'빈손南北' 다시 흑한

장관급 합의실패 안팎

정부입장 난처... 햇볕 위축 불가피

몰밀접촉 통한 최상층부 대화 필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빈전여 반전을 거듭하다 11일 끝내 좌초되고 말았다. 남북인은 귀한 일정을 두차례나 연기하는 등 일주일동안 협상을 맞았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심지어는 7일간의 회담은 남북관계에 오랜 기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이다.

○정중사황=회담시작 전부터 예상했던 대로 북측은 9일의 1차 전체회의에서 남측의 비상경제대세 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진행을 어렵게 했다. 북측은 비상경제대세의 우선 해결을 주장한 반면 남측은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인은 이후 막후접촉을 통해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의 종결방안에 중립적인 내용을 담은 선언서 해소키로 한다는 묘안을 찾아냈다. 곧이어 다음날 10일부터 1주일간 금강산에서 4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7차 장관급회담 서문개최, 남북경협추진위 2차 회의(김주위) 다음날 개회 및 장소 추후 협의 등 성과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의 출발 직전 다시 터져나온 것이 김주위 개최장소 문제. 북측이 막후협의를 뒤엎고 대북식량차관과 경역선 연결문제 등을 논의할 김주위법 금강산에서 갖자고 나오면서 모든 게 뒤엎렸다. 남측은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금강산을 고집하는 북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서울 개최를 계속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7월 1차 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했고, 실무협의 협의이던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개최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남북관계 전망=일후 남북관계 기상은 상당 기간 추운 겨울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6차 회담에서 차기 장관급회담 및 김주위 등 향후 남북대화 입장을 전혀 잡지 못했다. 또 회담 결렬의 근원인 이이 미국의 9-11 테러 사태에 이은 남북의 비상경제조치였던 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가 13일 밤 금강산여관과 무리 속 심혈을 기울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 듯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김경산=사진공동취재단)

남북한 정점사안 입장비교

남북한 정점사안	남측 입장	북측 입장	합의 결과
경협추진위	선내내로 서문개최	인정성 내내 금강산 주상	합의 실패
남측 비상경제대세	해제 불가	해제 선행	중립적 내용 종결방안에 합의키로 회담결렬로 무산
이산가족 상봉	서울·평양 교차방문	금강산 순차방문	남측 금강산 수용임보 회담 결렬로 무산
7차 장관급회담	서울	금강산	서울개최 합의 회담결렬로 무산

남측이 북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는 한 남북간의 관계개선은 요원해보인다. 이에따라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졌다. 우선 민주남 총재직까지 내던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 같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층은 금강산에서의 회담 자체부터 반대해왔던 터라 회담 결렬을 무기로 햇볕정책 지체에 대해 공격세를 펼칠 게 뻔하다. 남북경협의 후퇴도 불가피해졌다.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과 연계돼 있던 남북 복지원도 무기한 연

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은 존재위기로 몰릴 전망이다. 육포관광을 전제로 남북협력기금용 지열발전 사업용 거주구역 해왔던 현대아산은 정부로부터 더 이상 지원받을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역선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도 임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제 남북한 모두 평양을 협상전 라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사전 돌발접촉을 통한 최상층부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김영식기자 yskim@kmib.co.kr

“평화공존외 대안없어 대화 계속돼야”

홍순영 수석대표 문답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는 11일 귀환에 앞서 서울로 선상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다소 낙담하기는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도 “국제사회가 대대리전명으로 압박해 왔는데 만큼 계속 대화해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왜 여기서 그치려 한다고 생각했나.
-회담을 이첩이나 연결했다. 테러사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7년간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남북간의 의구심이 풀릴 때까지 시간이 갈릴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남측의 비상경제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평화공존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 평화공존은 대결의 시대만큼 편리하기 쉽다는 것을 강조했다.
-북측이 합의도출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북측은 전장으로 뒤엎어놓을 가련할 수도 있고 회해협력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북한 내에 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이번에 합의가 안된 것은 우리 주장이 옳고 현대 비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등 북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시장경제는 북한에 정치공통체로 가는 것이다. 경제이외의 상호이익에 바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김일성 북측단장의 불만은.
-삼남의 테러조치, 외교행위, 군사훈련이 중요한 불만이고 무리 속 입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김영식기자·김경산=공동취재단

南北장관급회담 난항

南대표단 하루 더 체류

남북이 금강산에서 9일부터 13일까지 가진 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북측이 제기한 남측 비상경제조치 문제에 대한 인식차 등으로 인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A4면에 관련기사>

남북 대표단은 회담 일정을 하루 연기한 13일 밤늦게까지 수석대표 및 실무 접촉을 갖고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 일정 재조정에 나섰으나 2차 경험추진위원회 개최 장소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에서 북측은 2차 경험추진위원회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재차 요구했으나 남측은 서울 개최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남측 홍순영(洪淳瑛) 수석대표가 북한 김영성 단장과 심야 단독접촉을 통해 남측의 최종합의안을 통보한 뒤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도 없지 않다.

남북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12월 10일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또 최대 쟁점이었던 남측 비상경제조치 문제에 대해 남측 홍수석 대표가 회담 종결발언에서 '중립적 표현'을 언급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7차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대표단은 당초 예정보다 이틀 늦은 14일 서울로 귀환할 예정이다.

<김영식기자·금강산=공동취재단기자> spear@donga.com

서울경제

2001. 11. 14 (수)

내달 1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장관급회담 하루도 연장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 나선 남북은 13일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달 10일부터 일주일간 금강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판 실무접촉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장소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해 최종적으로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에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담이 길어짐에 따라 사실상 회담이 종료된 상태에서 일정이 하루 더 연장돼 14일 회담이 끝날 예정이다.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제7차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되 시기는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측에서 열기로 남측이 이미 합의한 경추위 제2차 회의 개최 장소를 놓고 막판 의견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금강산을, 남측은 서울을 개최장소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남북은 이번 회담기간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북측의 남측 비상경제조치 해제요구 문제에 대해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가 회담 종결발언에서 '중립적 표현'으로 언급하는 선에서 타협, 공동보도문 작성이 예상됐다.

/이상훈기자 shlhc@sed.co.kr

朝鮮日報

2001. 11. 14 (수)

남북장관회담 밤새 진통 '經協회의장소' 계속 異見

북한 금강산여관에서 13일 밤을 넘겨가며 진행된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남한 내 비상경제조치' 문제에 이어, 남북 경험추진위원회 2차회의 장소 문제로 난항을 계속했다. <관련기사 4면>

'비상경제조치' 문제로 회담 일정을 하루 더 연장했던 양측은 13일 오후까지 회담을 완전 타결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자정무렵까지 경험추진위원회 2차회의 장소를 놓고 우리 측은 서울을, 북측은 금강산을 각각 고집해 끝내 합의할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날 밤11시쯤 우리 측 회담 관계자는 "10시40분부터 양측이 마지막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회담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이 구체적인 합의 없이 끝날 수도 있다"고 결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양측 수석대표 접촉에선 회담이 합의사항 없이 끝나도, 서로 의견이 모은 사람들은 합의해 실心地 웃기자는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남한 내 비상경제조치' 문제는 홍순영 우리 측 수석대표가 회담을 끝내면서 갖는 전체회의 '중립발언'을 통해 풀고, 지난 10월 16일 '서울·평양'에서 교환키로 했던 이산가족 4차 상봉을 12월 10일부터 두 차례로 나눠 금강산에서 갖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송민희기자 ginko@chosun.com

새벽까지 합의-결렬 오락가락

장관급회담 진통 거듭

금강산 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합의 임박과 결렬 위기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14일 새벽까지도 회담 진통을 장담할 수 없는 막바지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13일 오후에는 회담 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측에서 '합수'와 '회담 계속'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선 양상을 보였다.

△타결 왜 지연되나=남북한은 12일 밤부터 실야 협상을 계속해 13일 오전 합의문안을 놓고 항목별로 조율 작업을 하는 등 한때 타결에 바짝 다가섰다.

양측은 남북의 비상경제 대세와 관련된 문제를 공동보도문 1항에 명기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뿐만 우리측은 "중립적 내용이며 집대 우리가 없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회담이 다시 꼬이기 시작한 것은 결종된 공동보도문안을 양측 수석대표가 최종 점검한 뒤 오후 1시50분쯤 재차 실무 접촉에 들어가면서부터다.

북측은 이번 회담 초반부터 지난날 23일 일러다 무산된 남북 겸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우리측에 촉박 요구했는데, 비로 이 접촉을 어디서 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맞붙힌 것이다.

북측은 "앞 30만t 차관 제공 문제를 논의해 시명해야 할데, 북측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남측은 비상경제 문제로 북측이 '서울=철안한 지역'이란 주장

을 퍼온 점을 합식하기 위해서라도 서울 개최라는 미지노선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오후 10시40분쯤 시작한 수석대표 접촉을 1시간 만에 마치고 14일 새벽까지 막후 접촉을 이어가며 타결을 시도했다.

△홍수석대표 '서울 귀환' 배수진=이 과정에서 이날 오후 한때 '회담 하루 연장' 설이 나뉘었으나 정작 홍수영(洪守英) 수석대표는 오후 3시 30분쯤 "배를 잡아라. 나는 서울로 돌아가겠다"며 집을 써서 상황실에 니다

나 '회담이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이날 밤에는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금강산 회담 관계자), "북측이 수용하면 합의한다"(서울 상황실)며 엇박자를 내는 혼란도 빚었다.

결국 남측 대표단은 회담 일정(9~12일)을 하루 늘린 13일에도 협상에 실패하자 여론 부담을 의식해 "공식 회담 일정 연장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금강산에 머물면서 북측과 밤샘 협상을 갖는 등 유연적인 회담 운영 태도를 보였다. 이영종 기자

수석대표끼리 단독접촉 담판 시도

이모저모

6차 남북장관급 회담장인 금강산 여관은 14일 새벽까지 막판타결을 위해 남북 양측이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 접촉을 잇따라 벌이고 연락관들이 오가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13일 협상의 쟁점은 오후 10시 40분부터 11시36분까지 열린 홍수영 수석대표와 김영삼 북측 단장의 수석대표 단독접촉.

북측 수석대표는 접촉 직후 남측 기자들에게 "귀국 수석대표에게 물어보라"며 굳은 입술로 답해 양측이 최종 입장을 상대측에게 전달한 뒤 서울·평양의 혼란을 남겨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남측 회담 관계자도 "우리 것은 모두 내놓았다.(북측이)안반으면 결렬"이라며 회담이 막바지에 달했

음을 강조했다.

앞서 남측 대표단은 접촉을 위해 현대 설봉초의 출장까지 인가시켜 6백 20여명의 관광객이 합의하는 소동을 보였다. 관광객 50명은 속초 귀환 뒤에도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선상 농성을 벌였으며, 이에 따라 대표단 귀환을 위해 14일 새벽 정진항에 설봉초를 재차 무인화하던 계획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북측 안내원들은 미국 뉴욕에서 12일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 안내원은 남측 취재자에게 "테러에 의한 사고나" "사립은 일어나 죽었느냐"는 등 질문공세를 퍼부으며 남측 기자들이 알려준 내용을 일일이 북측 상황실에 전달했다.

이영종 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yjlee@joongang.co.kr>

世界日報

2001. 11. 14 (수)

남북, 경험적 회담장소 이견

장관급회담 합의실패

7차회담 일정도 못잡아

금강산에서 계속된 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나흘간의 협의 끝에 합의 도출에 실패해 사실상 결렬됐다. (관련기사 2면)

남북 대표단은 13일 막후 실무

접촉을 통해 4차 이상가족 상봉과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등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했으나 장소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근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심야까지 이어진 이날 협

상에서 남측은 겸합추진위 2차회의를 다음달 중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금강산 개최를 고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남북은 특히 7차 장관급회담 일정을 잡는데도 실패함으로써 지난 9일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빚어진 남북간 검색국만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조정정기자 jjj@sgt.co.kr

남북 장관급회담 막판 진통

'경추위' 개최장소 팽팽한 대립 합의 안될 뻔 회담결렬 가능성

남북한은 13일 금강산에서 6차 남북 장관급 회담 실무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등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으나 안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14일 새벽까지 막판 질충을 벌였다.

남북한은 이날 오전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달 10일부터 금강산에서 치르는 방안을 포함한 5개항 안팎의 공동보도문 초안을 만든 후 후속 협상을 했다.

그러나 대북 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남북 김일주진위위원회(김추위)'의

개최 장소를 둘러싸고 우리측은 서울을, 북측은 금강산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합의문안 최종 조율 과정에서 김추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렬 위기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담 관계자는 홍순영(洪淳瑛)수석대표와 김영삼 북측 단장이 십여 단독 접촉을 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김추위의 서울 개최는 우리의 미지노선"이라

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북한은 회담 합의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측의 남한내 비상경계 조치 해제 요구 문제는 공동보도문의 1항에 명시하는 선에서 매듭짓는다는 데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와 함께 제7차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되 시기는 추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남측 대표단은 당초 13일 오후 2시 설봉초점으로 장전환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을 계속하는 우리측 대표단 때문에 출발이 2시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이영중 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yilee@joongang.co.kr>

한국경제

南北장관급 회담 결렬 위기

남북은 13일 장관급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을 오는 12월10일부터 일주일간 금강산에서 두차례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남북 김일주진위위원회 2차회의 개최장소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 공동보도문을 마련하지 못해 밤새 진통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5일간 지속된 이번 회담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음 것으로 관측된다.

◇막판 걸림돌은-이날 남북간 최대 쟁점은 김일주진위 2차회의 개최장소 문제였다. 남북은 이날 일정을 하루 연장하며 5일째 협상을 속개, 최대 현안이었던 '대리

금강산 이산상봉 잠정합의 경협위 장소등은 이견여전

'비상경계' 해명수위에 대한 접점을 찾는데 이어 이산가족 상봉일정도 합의했다.

그러나 남측은 남북경협 추진위원 당초 예정대로 서울에서 열자고 제안한데 대해 북측이 '안전한' 금강산을 주장, 또다시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양측은 밤늦게까지 수차례에 걸쳐 막후 실무접촉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공동보도문 마련에 실패했다.

◇남북관계 어떻게 되나-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잠정 합의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도 불투명해졌다.

남측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남북이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현재로서는 2차 남북김일주진위 및 7차 장관급회담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냉각상태에 빠져들 위기에 처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장관급회담 일정 또 하루 연장

이산상봉 내달 10일부터 두차례 실시 합의

경협위 장소는 이견

남북은 13일 6차 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금강산에서 내달 10일부터 일주일간 2차례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차 김일주진위 개최 장소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다. ★관련기사 5면

남북은 이날 밤 금강산 여관에서 미지 박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경계대세 논

란 ▲7차 장관급 회담 동 양후 당국간 회담 일정과 장소 등을 놓고 입박타격을 시도했다. 남측 관계자는 "협상이 난항 중이어서 공동보도문 발표가 불투명하다"면서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으나 합의는 오늘로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 대표단은 당초 예정보다 일정을 이틀 넘겨 14일 귀환할 예정이다.

남북은 북측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해제 문제

를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의 전제 회담 종결발언으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또 7차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되, 시기는 추후 합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한편 남북은 공동보도문 작성 과정에서 김일주진위 개최와 관련, 시기는 내달로 합의했으나, 장소에서 서울과 금강산 문제로 난항을 계속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금강산=공동취재단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

경추위 개최지 합의 실패
다음달 이산상봉 백지화

금강산에서 계속된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나흘간의 합의결 달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해 결렬됐다.

▶관련기사 3면
남북 대표단은 13일 막후 실무접촉을 통해 4차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 등 5차 장관급 회담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했으나 장소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끝내 실패했다.

자정까지 이어진 이날 협상에서 남측은 경추위 2차 회의장 다음달 중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금강산 개최를 고수해 접견을 찾지 못했다.

남측은 특히 7차 장관급 회담 인장을 찍는데도 실패함으로써 지난 3월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북한의 이산가족에 대해 해제 요구로 빚어진 남북간 검색국면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 대표단은 애초 이날 오후 2시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깊어지자 장진형을 떠나 속초항으로 가는 실봉호를 타지 않고 금강산려관에 남아 북측과 막판 접촉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북 대표단은 14일 새벽 홍순업 남측 수석대표와 김영성

북측 단장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회담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부터 나흘간 계속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남측의 비상긴계조치에 대한 시각차로 진통을 거듭하다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과 홍 수석대표의 회담 종결방안으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좁히지 못

결의 심마리급 찾은 듯했다.

그러나 식량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경추위 등의 개최 장소를 놓고 북측이 안전성을 문제삼아 끝내 서울 개최에 반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측 대표단은 14일 오전 실봉호를 타고 돌아올 계획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朝鮮日報

2001. 11. 14 (수)

“공동보도문 발표도 어렵다”

지정남긴 금강산회담

북한 금강산의 금강산어관에서 진행된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회담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고도 남북 김합추진위원회 2차회의 장소 문제로 난항을 거듭했다. 양측은 13일 우리 대표단이 타고 귀환할 관광선 '실봉호'를 떠나 보내고 이산 상봉을 연기하면서까지 '마라톤 협상'을 계속했으나 매듭이 풀리지 않아 결렬 분위기가 감돌았다.

“우리측案 다 내놓아”

○...이날 밤 11시쯤 우리 측 회담 관계자가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제 회담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됐다”고 운을 떼면서 분위기가

신상치 않음을 느끼게 했다. 이 관계자는 “밤 10시40분부터 양측이 수석대표접촉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 합의없이 회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동보도문도 어렵다.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인사하고 덕담하는 수준의 모임인 것”이라고 말해, 결단 수순을 밟고 있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건연이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우리 측 안을 다 내놓았는데, 북측이 수석대표접촉에서 이를 수용하면 합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떠나자... 배 잡아라”

○...이날 오후 한때 우리 대표

단은 '철수'를 강행할 의사까지 내비치기도 했다. 실봉호 예정 출항시각을 1시간20분을 앞둔 오후 3시50분까지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홍순업(洪淳瑛) 수석대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떠나겠다. 배를 잡아라”고 연락관에게 지시하고, 서울에도 ‘철수 훈련’을 요청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선 회담이 결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잠시 후 연락관이 “대표단이 배로 이동하는 시각까지 실봉호가 대기할 수 없다”고 보고하자, 홍 수석대표도 하는 수 없이 돌아섰다. 대표단은 서울 상항선과 합의, “이날 중 협상을 다 끝내고 속초로 돌아간 실봉호를 다시 장진항으로 올라보내 14일 새벽 귀환하기로” 결정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장관급회담 결렬위기

어젯밤 수석대표 접촉서 '경추위 장소' 절충 실패

경향신문

2001. 11. 14 (수)

막판 극적타협 가능성도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5일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날인 13일 사실상 합의도출이 난망해 결렬 위기에 빠졌다. 회담이 결렬되면 담초 원칙합의된 12월 금강산이산상봉도 무산된다.

▶관련기사 3면
남측 회담관계자는 이날 밤 11시쯤 “우리측 홍순업 수석대표가 수석대표 단독접촉을 통해 북측 김영성 단장에 게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태도 변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현재 더 이상의 남북접촉은 예정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내놓았다”며 “북측이 이를 받지 않으면 회담은 끝”이라고 밝혔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수석대표 접촉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귀족 수석대표에게 물어보라”고 말해 남측의 견정만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막판 합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정부

당국자는 “공동보도문도 내지 못할 게 끝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4차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달 10일부터 1주일간 금강산에서 2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다음달 여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개최장소로 금강산을 제시하고, 남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난항을 겪었다.

최재열기자/금강산/공동취재단
cjyoung@kyunghyang.com

귀환승선 포기 막판절충 시도

■ 장관급회담 결렬 안팎

13일 오전 9시 30분쯤 남측 대표단은 13일 오후 관공선 실봉호가 정전함을 출발하기 20여 분 전에 승선 포기를 결정하는 등 버티기 작전을 펼쳤다.

남측은 이날 오전 지난날 16~18일 실시하려다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을 내달 10~16일 금강산에서 2차례에 걸쳐 실시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협추진위 제2차회의 개최 장소와 편편, 각각 서울과 금강산을 고집해 끝내 합의할 여지가 없었다.

●남측 대표단 편제자는 이날 밤 11시쯤 기자들에게 "양측이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현재로서는 7차 장관급회담의 일정 조차 잡지 못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카드)을 다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북이 어길 뻔하면 합의에 이르고 받지 않으면 이번 회담은 결렬"이라고 회담 분위기를 설명했다.

●남측은 이산가족 방문단 서울·평양 교환을 금강산 순차방문으로 양보한 만큼 비상경제대로 남측지역에 불안전하다는 북측 논리를 풀기 위해 서라도 경추위 2차회의나 7차 장관급회담 등 이미 서울 개최가 합의됐던 사항을 공동보도문을 통해 못박아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순영(洪淳瑛) 수석대표는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남측 연락관에게 "북측 김영성 단장의 얘기를 들어보아겠다"며 수석대표 단독접촉을 지시했다. 또 "우리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말을 반드시 전하라고 덧붙였다.

北 경협위 금강산 개최 고집 홍대표 "더 줄 것 없다" 통첩



13일 오후 상황실을 찾았던 홍순영 남측수석대표가 서울 귀환을 또 한번 미룬 채 심각한 표정으로 숙소로 향하고 있다. ●금강산 통일부시절기자단

기자들에게 "테러에 의한 사고나", "어디로 가던 비행기나" 등 질문을 거부했다. 일부는 남한 신문기사도 보고 일일이 메모해 북측 상황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 인내원은 남측 취재진이 단순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자 "그나마 다행"이라며 "미국이 비록 우리와 적대관계이기는 하지만 인민들이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남측 대표단은 오후 내내 경협추진위 제2차회의 서울 개최를 놓고 승강이를 벌였으나 시종일관 금강산 개최를 고집,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로 귀환하려던 남측 대표단은 실봉호가 정전함을 출발하기 20여 분 전인 오후 3시 50분쯤 승선 포기를 결정했다.

●남측 대표단은 그대로 북측의 태도 변화가 없자 오후 6시 10분쯤 실무접촉을 중단한 채 북측 대표단이 평양으로부터 새 훈련을 받아오기를 기다렸다.

●북측 대표단과 함께 금강산지역에 온 북측 안내원들은 이날 아침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안내원들은 남측

홍 대표는 그럼에도 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 개최장소 문제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오후 3시 30분쯤 금강산어관에 설치된 상황실로 집을 든 채 내리의 "서울로 돌아가겠다"며 연락관에게 실봉호를 잡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초 예정시간을 1시간45분 가량 넘긴 실봉호는 일반 관광객들의 불편을 의식해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오후 4시 15분쯤 정전함을 떠나 속초항으로 출항했다.

●남측 대표단은 오후 내내 경협추진위 제2차회의 서울 개최를 놓고 승강이를 벌였으나 시종일관 금강산 개최를 고집,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로 귀환하려던 남측 대표단은 실봉호가 정전함을 출발하기 20여 분 전인 오후 3시 50분쯤 승선 포기를 결정했다.

●남측 대표단은 그대로 북측의 태도 변화가 없자 오후 6시 10분쯤 실무접촉을 중단한 채 북측 대표단이 평양으로부터 새 훈련을 받아오기를 기다렸다.

●북측 대표단과 함께 금강산지역에 온 북측 안내원들은 이날 아침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안내원들은 남측

기자들에게 "테러에 의한 사고나", "어디로 가던 비행기나" 등 질문을 거부했다. 일부는 남한 신문기사도 보고 일일이 메모해 북측 상황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 인내원은 남측 취재진이 단순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자 "그나마 다행"이라며 "미국이 비록 우리와 적대관계이기는 하지만 인민들이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남측 대표단은 오후 내내 경협추진위 제2차회의 서울 개최를 놓고 승강이를 벌였으나 시종일관 금강산 개최를 고집,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로 귀환하려던 남측 대표단은 실봉호가 정전함을 출발하기 20여 분 전인 오후 3시 50분쯤 승선 포기를 결정했다.

난산(難産)이었다. 남북은 6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의 비상경제대세 문제를 둘러싸고 걸림 위기까지 가는 격론을 벌인 뒤에 부러부러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남북간 인식차가 협정을 찾기 어렵게 만들려 한다는 현실을 재확인했고, 이대로라면 향후 협상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테러경계'서 진통거듭 합의점찾기 막판 難産

■ 南北 장관급회담

언뜻 보면 남북은 '협상의 묘(妙)를 발휘한 듯하다. 북측은 경제대세 문제를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의 공식 해명으로 봉합하는 대신, 4차 이산가족 행사는 '불안한' 서울을 피해 금강산에서만 갖기로 했다. 반면 남측은 7차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갖기로 해, '남조선이 불안하다'는 북측 주장을 어느 정도 상쇄할 명분을 얻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남북은 경제대세를 해제하면서까지 회담을 이어갈 명분이 없었고, 북측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경제대세 해제를 물릴 수 없었다. 다행히 남북은 어렵게 쌓아온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부담감 때문에, 5박6일간의 한 치 양보 없는 협상을 벌이면서도 협상 테이블을 깨뜨리지는 않았다.

남북이 13일 격론을 거듭했던 2차 경협추진위 개최 장소 문제는 '명분 싸움'의 극치였다. 북측은 이 회담을 통해 식량을 얻어야 할 이쉬운 입장이었지

만, 남측의 '서울 개최'를 수용할 경우 경제대세에 대한 명분을 버려야 했다. 남측은 당연한 '서울 개최'를 북측 주장에 따라 '금강산 회담'으로 물리칠 경우 '질러 다녔다'는 여론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측이 북측의 경제대세 관련 공세에 밀린 느낌이다. 남측은 7차 장관급회담의 서울 개최를 '관할'했으나,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측이 테러

서로 명분집착 소모전 南은 北에 끌려다니셈

정국을 빙자해 언제든 회담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남측이 서울 개최를 얻어내기 위해 '상항이 후퇴'된 경제대세를 '안화'했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북측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용 장관의 경제대세에 대한 해명 수위가 논란이 된 것도 허연차, 많은 대목이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중립적 내용이며, 절대로 우리가 밀렸다는 느낌을 안 주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용은 어쨌든 해명을 하는 사실 자체가 북측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北안내원 "美機추락 안타까운 일"

■ 이모저모

○-북측은 미편 탈일 접촉이 한창이던 이날 새벽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북측 안내원은 남측 취재진에게 사고의 내용과 테러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몇몇 안내원은 남측이 관련 기사를 보여주자 이를 메모해 북측 상황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 안내원은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에 "그나마 다행"이라며 "미국이 우리와 적대 관계이지만 인민들이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실봉호 출항 지연 항의소동

○-남측 대표단이 이날 오후 북측과 막판 협상을 벌인 때문에 실봉호 출항 시간이 2시간 이상 연기됐다. 남측

은 당초 오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오후 2시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았다. 대표단 승선 문제로 상황이 늦어지자 실봉호에 타고 있던 남측 관공선 600여명은 현대이산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남북 모두 '벼랑끝 전술'

○-남측은 2차 경협추진위의 서울 개최를 관철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미다하지 않았다. 용 장관은 이날 오전 김영성 북측 단장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면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북측이 이에 대해 '요동도 하지 않'은 채 금강산 개최를 거듭 주장하자 용 장관은 "배고 잡이라.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금강산=공동취재단

끝내 못넘은 '비상경제' 암초

■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 안팎 경색국면 상당기간 이어질 듯

남북은 4일간에 걸친 마린포 회담에도 비상경제 태세를 넘어서지 못했다. 금강산에서의 이산상봉이라는 절묘한 타협전도 설자리가 없었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사실 북쪽이 비상경제 태세를 이유로 5차 장관급 회담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면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남쪽은 회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강산의 6차장관급 회담에 나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쪽의 비상경제태세 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것처럼 남북은 비상경제 태세를 사이에 두고 경쟁선을 달렸다. 그리고 유일하게 열려 있는 금강산을 통해서 남쪽은 금강산 이산가족의 상봉이라는 작지만 결코 쉽지 않은 성과로 대화국면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실패했다.

남북이 비상경제 태세라는 산을 넘을 수 없음을 가장 잘보여준 게 2차 남북검합추진위(경추위) 회의였다. 여기서 열 것인거였다. 북쪽은 검합추진위 회의를 다른 어떤 회담에 우선해 얹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남쪽의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는 이번 회담에 앞서 대북식량지원이 이산가족 문제와 사실상 연계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상봉과 검합추진위 회의가 식량지원의 필요충분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남의 이산가족과 북의 식량지원이라는 인도적인 문제는 서로 맞물려 풀리게 돼 있었다.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이라는 또다른 인도적 문제를 풀어기려면 2차 검합추진위라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남북은 이 검합추진위를 어디서 열 것인지를 장기간 소문자로 또다시 비상경제태세라는 장애물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북은 당연히 2차 검합추진위를 금강산에서 열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남쪽이 경추위마저 금강산에서 여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있다. 그건 북쪽의 비상경제 해제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12일 저녁 남북간에는 이산가족 상봉에 의견이 좁고되고 비상경제 태세에 대한 남쪽 수석대표의 종결 발언 수위에도 중립적인 표현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때부터 검합추진위 서울 개최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가 13일 오전 심각한 표정으로 금강산려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13일 남쪽 회담 관계자는 "회담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점회귀 경고는 검합추진위 회의가 열릴 수 없다면 북쪽도 이산가족 상봉을 거둬들이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이번 회담의 성과는 남북 사이엔 좁히기 어려운 거리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 남쪽관계자 일문일답

남쪽의 회담 관계자는 13일 밤 마지막 심무검측에서 타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종료 순서를 밟아야 할 시간이 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쪽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해 지리한 협상이 소극적이 끝났음을 알렸다.

-수석대표 단독검측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나?
-미진한 부분이 많아 합의는 못했는데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합의에 걸린간 시장성은 잘 살려내 나가자 등이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할 이야기를 다했고 저쪽은 배웅 절차를 준비중이다"라고 말했다)

"대화 필요성엔

남북 모두 공감"

- 회담이 결렬된다는 것인가?
- 결렬이라고보다는 현재로서는 구체적 합의없이 회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 공중보도문은
- 그것도 가능성이 낮다.
- 3차 전체회의는 어떻게 되나?
- 우리로서는 남북 대표들이 모여 좋게 마무리하는 모양을 갖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은 14일 새벽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종결모임을 했다).
- 회담이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앞으로 남북대화는 어떻게 되나?
- 남북 모두 회담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5차 장관급 회담을 협의하는 채널을 통해 다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심각

김경산-홍일부사장이자남

6차 장관급회담 남북 대표단인 홍순영 통일부장관(가운데)과 김진표 재경부차관(왼쪽), 윤형규 문경부차관이 13일 오전 심각한 표정으로 금강산여관 주변을 산책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끌려다니던 회담 빈손으로 돌아오나

남북장관급회담 난항

금강산에서 열린 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이 예정된 일정을 하루 늦춰 13일 심야까지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건재적인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이번 회담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럼 경우 남북관계가 당분간 소강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분이 약화될 경우엔 정부도 북한과의 협상 재개도 시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소강상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담 결의 배경=양측이 이견을 보인 사항은 공동보도문 작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2차 김집추진위원회 개최 장소 문제,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공동보도문 내용에 논란을 빚어온 비상경제대책 본체와 관련해 중립적인 남북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을 넣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5차 장관급회담 합의 사항 이행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12월10일부터 두 차례 실시하고 △2차 김집추진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하되 장소는 추후에 협의하며 △7차 장관급회담을 12월 중 서울에서 실시하되 정확한 일지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측이 또다시 2차 김집추진위원회 개최 장소로 금강산을 다시 제기하고, 남북도 서울 개최

일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등 평행선을 달렸다. 회담 관계자는 "우리가 A를 제시하면 북은 다시 B를 내놓고, 우리는 다시 C를 내놓는 식으로 집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표단 귀환 연기 경위=이날 회담 마무리 진말이 법무부에서 남북 대표단은 당초 오후 2시반에 출발할 예정이던 '실봉호' 출발시간을 오후 4시15분까지 늦춘 뒤 협상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 대표단은 설법

北 이산가족 불모로 트집 經協委 장소 異見 못 좁혀 南 최후통첩 후 철수 준비

요일 먼저 출발시키기로 했다가 막판에 다시 배를 변경해 놓기로 반복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남측 홍순영(洪淳英) 수석대표는 북측의 완강한 태도에 지친 듯 실봉호가 출발하기 직전 남북 연락관에 "나는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4시가 넘어서면서 실봉호 승객들이 출발 지연에 항의하자 결국 더 이상 머뭇거리지 못한 상황이 됐다. 결국 대표단은 일단 배를 먼저 출발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입한 남측은 회담에 별 진전이 없자 이날 밤 10시40분 수석대표 집회를 통해 남측 입장의 마지막 노선을 북측에 제시한 뒤 북측의 수용 여부를 기다리면서 회담 정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김영식기자·금강산=공동취재기자 spear@donga.com>

“北태도 요지부동 합의점찾기 난망”

남측회담관계자 일문일답

제6차 장관급회담에 참가중인 남측대표단 관계자는 13일 밤 "조금 전(오후 10시40분쯤) 마지막 남북 실무대표 접촉을 시작했다"며 "현재로서는 북측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담 종료 수순을 밟아야 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회담이 결렬될 것이라는 얘기가"는 질문에는 "결렬이러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합의 없이 회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회담 종료 수순을 밟아야 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

—합의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말인가.

△현재로서는 북측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일정을 하루 연기했으나 타 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가 서울 귀환을 또 한번 미루는 심각한 표정으로 숙소로 향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공동보도문 발표도 어려울듯 회담지속 필요성에 모두 공감

—현재 남북간 실무접촉은 이렇고 있다.

△조금 전 마지막으로 남북 수석대표 접촉을 시작했다.

—수석대표 단독 접촉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나.

△이번 회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합의에 걸린 사항들은 곧 실천해 나가자는 등의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 단독 접촉이 대화의 이어 가려는 마지막 노력이다.

—회담이 결렬될 것이라는 얘기가.

△결렬이러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합의 없이 회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양측이 대화는 지속하기로 한다는 일문을 밝히는 추상적인 수준의 공동보도문은 발표하나.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3차 전체회의는 어떻게 되나.

△우리측으로서는 남북 회담 대표들이 모두 모여 좋게 마무리하는 모양을 갖춰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측의 반응을 알 수 없지만 북측이 응해오면 간단한 종전모임을 가릴 생각이다.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비상경제대책 조치 논란과 관련한 발언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양측 대표들이 모여 앉아 인사하고 악수하며 덕담을 나누는 수준의 모임을 생각하고 있다.

—회담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남북 대화는 어떻게 이어갈 생각인가.

△남북 모두 회담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회담의) 시기-장소 문제와 관련해 남북간에 이견이 있어 앞으로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5차 장관급회담 합의 사항을 협의하는 체면을 통해 다시 합의 노력을 전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 위기

경추춧 개최지 이견... 洪장관 "돌아가겠다"

니영필 기자·금강산 공동취재단

제6차 장관급회담을 앞두고 있는 남·북 대표단은 14일 새벽까지도 일관 다짐과 결연 가능성을 오가며 회담 결렬을 감당하지 못하는 극심한 혼돈 양상을 보였다.

홍순임 남북 수석대표는 귀국에 장인이던 13일 북측의 억지를 견디다 못해 "돌아가겠다"고 각오했다가 서울 훈령을 받은 후 귀국 배편 탑승을 포기, 계속 체류할 결정하기도 했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13일 저녁 11시 현재 회담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현재로는 북측의 대대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밤늦게 열린 수석대표 접촉에서 우리측은 내용을 깃을 모두 내놓았다"면서 "북측이 이를 받으면 일괄타결될 것이고 받지 않으면 회담은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양측은 그동안 반전을 거듭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 △제7차 장관급회담 서울시 개최 △김정일 추진위 12월중 개최 등에 합의, 공동



홍순임 수석대표(가운데) 등 제6차 장관급회담 남북 대표단이 13일 오전 금강산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금강산=시진공동취재단>

보도문 발표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측이 1차 김추위가 평양에서 개최된 만큼 2차 김추위 개최장소를 서울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이 난색을 표명, 김추위 개최장소가 박관 김립호텔로 작용했다.

양측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귀국 선박의 출발 시간을 여러 차례 지연시키는 혼란을 거듭했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회담 막바지까지 김추위 개최지를 서울로 못 박기 위해 협상을 벌였다"면서 "이는 남측이 안전하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김추위를 통해서 할텐데 회담 장소마저 북측에 끌려가서 쫓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매일

남북장관급회담 결렬

이산상봉·경협위등 이견절충 실패

7차회담 일정도 못잡아

【금강산 공동취재단·진경호기자】 지난 9일부터 금강산에서 계속된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4박5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 권력기시 3면

남북 대표단은 13일 밤 늦게까지 심야 실무 접촉을 갖고 제1차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 등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 감축을 받았으나 장소문제를 둘러싸고 갈래 입장차를 좁히

지 못했다.

남측은 이날 김연추진위 2차 회의당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금강산 개최를 고수, 집결을 찾지 못했다.

남북이 7차 장관급회담 일정을 잡는데도 실패함으로써 9·11 미 테러사태 이후 벗어난 남북간 경제국면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남측 대표단은 당초 이날 오후 서울로 귀한 합의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자 심야 협상을 포기한 채 북측과 박관 김립을 시도했다.

남북은 이날 밤 홍순임(洪淳稜) 남측 수석대표와 김립성 북측단장간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공동보도문도 채택하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의 비상경제조치에 대한 시각차로 진통을 거듭하다 홍 수석대표의 회담 종결발언을 통해 이 문젠을 매듭짓자는 데 의견을 접근시켜 타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그러나 북측이 김연추진위 2차 회의 장소와 관련, '안전성'을 이유로 서울 개최에 반대함으로써 합의달 이견이내지 못했다. > jade@kdaily.com

새달 이산상봉 백지화

남측대표단 어제 귀환

【금강산 공동취재단·전경호기자】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14일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남북이 의견 접근을 이뤘던 '다음달 10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도 백지화됐다. >관련기사 5면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 회담이 합의없이 결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순영(洪淳瑛)수석대표 등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7시 북측과 마지막 전체 회의할 기진 뒤 실행호 편으로 귀환, 오후 서울에 도착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재개 등 남북간 주요 현안을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 jade@kdaily.com

회담결렬 洪통일 맹비난 北 대표단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은 14일 성명을 발표,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을 집중 비난했다. 성명은 "북남 상급(장관급) 회담의 진만을 어둡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무상의와 특히 남측 수석대표의 진원과 불순한 태도에 있다"면서 "우리는 남측 수석대표라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의 대화상대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점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仁机기자

南北장관회담 완전 결렬

'비상경계' 이견 못 좁혀 다음 회담 일정도 못잡아

지난 9일부터 잇새 동안 북한 금강산 지역 금강산여관에서 진행된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막판 남북 김일추진위원의 2차회의와 7차 장관급회담 등 두 당국회담의 시기·장소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 결렬됐다. >관련기사 3·4면

지난 7일 이후 여섯 차례 진행된 장관급회담에서 차기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공동보도문도 만들지 못한 채 결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상당 기간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홍순영(洪淳瑛) 수석대표는 14일 회

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이번 회담은 대리시대와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점 좁히지 못해 현안들의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남북관계가 다소 냉각기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북한 대표단은 14일 새벽까지 두 당국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계속했으나, 북측이 김일추진위원의 2차회의는 반드시 금강산에서 해야 하며, 7차 장관급회담 서울개최에는 동의하면서 시기를 명시하지 못하겠다고 버티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4차 상봉을 12월 10일부터 두 차례로 나눠 금강산에서 갖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도 백지화됐다. /송仁机기자 ginko@chosun.com

내달 이산상봉 백지화

南北 장관급회담 결렬

금강산에서 지난 9일 시작한 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14일 새벽 협상을 끝으로 원전 결렬됨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가 상당기간 소강상태에 빠지게 됐다.

특히 회담 중 한때 합의한 '12월 초순 금강산 지역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이 백지화되고, 북측이 결렬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공세도 펼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북측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남북한은 회담 일정을 이틀간 연장하며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협상을 통해 견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개최 장소 등 공동보도문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해 14일 오전 7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회담을 종료했다. 남측은 경추위 개최 장소로 서울을, 북측은 금강산을 주장했다.

홍순영(洪淳瑛·통일부 장관)남측 수석대표는 결렬 직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미결상태로 두고 회의를 마치게 돼 유감"이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다소 냉각기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수석대표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면담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측 김영성(내각 책임장관)단장은 "회담이 남측의 부당한 태도로 말미암아 결렬없이 끝나게 됨으로써 쌍방 합의사항의 이행이 어렵게 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게 될 새로운 위험이 조성됐다"고 밝힌 것으로 중앙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남측에 있다"고 밝혔다.

홍수석대표를 포함한 남측 대표단 39명은 이날 오전 현대 실행호편으로 속초항에 귀환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李洛演)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의 대 대리 경계대 세를 문제삼아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북측 잘못"이라고 밝혔고,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 이익을 도외시한 만국적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南北관계 長期경색 우려

장관급회담 결렬... 이산상봉 무산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14일 결렬됐다.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

담 후 장관급 회담이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 않고 끝난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남북이 회담 과정에서 잠정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단 방문행사 내담 금강산 개화 등이 완전 무산됐다.

남북은 특히 7차 장관급회담 입장

을 합의하지 못해, 9·11 미 테러 대참사 후 조성된 경색국면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로 돌아와 "남측의 비상경계 태세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면서 "남북관계가 다소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면담을 희망한다는 의사결정 피력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洪장관 “金正日면담 제의했지만 성사 안돼”

6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14일 "회담 과정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싶다는 뜻을 북측 수석대표에게 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장관이 회담을 마치고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 사무국으로 돌아와서 가진 기자회견의 문답 요지.

-북한 방송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회담 결렬은 쌍방의 책임이다. 북측 수석대표(김영성)와 마음을 열고 열심히 노력했다. 북측 수석대표는 좋은 대화상대라고 보고 있다."

-회담이 성과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정한 추진목표를 갖고 회담에 임했다. 그러나 견해차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대화를 앞으로 더해야 한다. 이번에 국제정세와 우리 외교적 입장 등을 설명했다. 이런 것이 상호인

식과 이해의 차이점을 좁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남을 요청했다.

"희망을 가졌지만 이번 회담이 그런 것을 (북측대표단이 상부에) 건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당에서도 노고담 치하했는데...

"회담을 하면서 견해차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높여야 회담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서울경제

2001. 11. 15 (목)

장관급 회담 결렬 이산상봉 무산.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14일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됨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산가족 상봉도 무산됐다. 또 이번회담에서 7차 장관급 회담 개최시기와 장소 등 다음 회담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에 따라 남북간의 경색국면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제개 등 남북간 주요 현안을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성훈기자 shlee@sed.co.kr

경향신문

2001. 11. 15 (목)

"장관회담 결렬 南에 책임" 北, 홍순영대표 등 비난

북한은 14일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결렬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 북한은 특히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을 직접한 대화상대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장관급회담이 결렬되고 회담 전망을 어둡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무성의와 특히 남측 수석대표의 전횡과 불순한 태도에 있다"고 비난했다.

최재영기자 cyoung@kyunghyang.com

東亞日報

2001. 11. 15 (목)

장관급회담 끝내 결렬 내달 이산상봉 백지화

남북이 9일부터 금강산에서 가진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끝내 결렬됐다.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이 이루어진 합의 없이 결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남북관계가 상당 기간 냉각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남북대표단은 14일 새벽까지 계속된 실무접촉에서 2차 김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장소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오전 7시부터 15분간 마지막 전체회의를 가

진 뒤 회담을 종결했다.

이날 북한관영 매체들은 "남측은 회담 전 기간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으로 지들의 부담한 비상경계대세를 합리하게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했다"며 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겼다.

이번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금강산에서 두 차례 이산가족상봉을 갖기로 했던 잠정집회의 내용도 백지화됐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남북 향후일정 기약없는 '결렬'

金正日답방 사실상 물건너가

금강산 장관급회담 '빈손' 귀환 파장

지난 9일부터 북한 금강산에서 진행된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채 14일 결렬된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는 장기간 경색될 전망이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答訪)도 불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울은 불안한 곳이라며 회담도 할 수 없고 이산가족 방문단도 보내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친 것과, 장기화되는 미국의 대(對) 테러 전쟁, 우리의 내년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김 위원장의 답방이 시사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그동안의 대북 지지 세 정책들이 김 위원장의 답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이 많았던 만큼, 차제에 이를 바로잡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관급회담은 그동안 남북한 간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총괄 협의체의 역할을 해왔다. 북한이 이런 장관급회담을 아무런 합의사항 없이 결렬시키고, 회담장에서나 회담이 끝난후 우리측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해

하를 위한 2차 당국회담, 경의선 복원과 도로연결 및 개성공단 조성 등 각종 남북경협 사업의 입장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이번 회담이 결렬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남한 내 비상경제조치'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북측은 이 조치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하여 회담

하지고 하다가, 7차 장관급회담은 서울로 양보하는 듯했다. 그러나 7차 장관급회담의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서울이 안전해지면 가겠다"는 의도가 깔린 발언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상경제조치를 풀고놓아진 '속뜻'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금강산 관광객가담 제때 받지 못한 데 따른 불만 표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이 '현대의 요청으로' 지난 9월 6개월 만에 당국대화를 재개해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나, 모든 당국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아프간 공격으로 시작된 '대(對)테러전쟁' 국면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국제적 상황에서, 남한의 대북지원도 예전 같지 않다고 판단, 남북관계를 대이상진전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는 분석들이다.

초반부터 이 조치가 해제되기 전에는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행할 수 없다며 강공(強攻)으로 나왔다. 북측은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2차회의와 7차 장관급회담 등 두 당국회담의 시기와 장소문제 협의과정에서도 이 조치를 문제삼는 입장을 보였다.

북측은 두 회담을 모두 금강산에서

/송仁執기자 pinko@chosun.com

北 당분간 관계진전 의사없는듯 “남북관계 원점서 재검토 할때”

은 것은 남북관계를 대이상 진전시킬 생각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지난 3일부터 6개 원간 당국대회가 중단됐을 때에도 다른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작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 이산가족 4차 교환방문과 김형주 전위원장 2차 회의, 금강산 관광 활성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현황

현 안	남북한간 합의사항	현 안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상봉	10월16-18일 서울·평양교 환방문	12월10일 금강산에서 실시기로 의견결근, 합의상배
금강산 관광활성화 2차 당국회담	10월19일 개최	미정
경협추진위원회 2차회의	10월23일 서울개회	미정
남북 장관급회담	6차례 진행	7차 회담 미정
경의선 복원·도로연결	가급적 이르면시일내 개통	군사보장합의서 필요되지 않고 있음
개성공단 추진	실무진척 조속 개최	협해도 못하고 있음
4개 경협 합의서	이른 시일내 발표	내부절차만 거치고 교환(보유)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11월중 현지조사	불투명
태권도 시범단 교환	북 10월, 남 11월	불투명

“北 내부 화해 반대세력 있는듯”

洪淳瑛대표 일문일답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14일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설봉호 선상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다소 냉각기가 있을 것으

로 우려되지만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무엇이 문제였나?

“우리 측 비상경제대세에 대한 북측과의 인식차가 우리의 설명으로 꽤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문제가 최고의 쟁점이었다.”

-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장관급 회담 개최, 장소와 날짜에 대해 북측이 협의의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합의할 도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미결로 둔 채 회담을 끝내 유감이지만, 양측이 기단없이 각자의 입장을 개진했고 추후 행사 교류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북측이 합의 못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나?

“북측이 진정으로 위함을 받는다는 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고 화해협력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내부에 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 당분간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남북간 의구심이 잠재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평화공존은 대결의 시대만큼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짐작했다. 상호 존중하고 상호이해하면서 관계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월15일 / 설봉호=공동취재단

朝鮮日報

2001. 11. 15 (목)

남북관계 당분간 냉기류

장관급회담 결렬 파장

금강산에서 일었던 6차 장관급 회담의 결렬시대는 향후 남북관계에 당분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게 확실시된다.

지난 9월 5차 회담 때 합의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서울·평양 교환과 각종 경제협력·교류사업의 형급어진 일정을 다시 짜는 데 실패했다. 다음번 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때문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주축을 이루는 장관급 회담이 처음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같은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남북관계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 남한 내 비상경계 태세 등에 대한 정세인식 차이를 남북이 극복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 정부 당국자의 진단이다.

여기에서 남북 견합추진위 개최 장소와 7차 장관급 회담의 시기를 둘러

비상경계등 인식차이 끝내 못잡히 냉각기 거친뒤 대화 재개 전망도

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도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경의선(京義線) 연결이나 금강산 육로관광 등 북한 군부의 양해가 필요한 사업들이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김영성 단장이 남측의 군사훈련이나 주적(主敵) 발언을 집중 거론한 것도 북한 내부 시정과 관련해는 여겨 볼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회담 성과를 알리는 데 급급해 '12월 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언론에 알렸으나 결국 틀거잠이 되는 바람에 '이산가족을 두 번 울렸다'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북측의 주장에 이따리 선택한 금강산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서 격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홍순영(洪淳英)수석대표를

비뻗한 대표단이 과거와 달리 북측의 무리한 요구에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비교적 소신있게 북측에 전달한 대목은 평가받을 수 있다.

한 북한전문가는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회담이 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14일 평양방송을 통해 "고집스러운 남측의 그릇된 태도 때문에 결국 회담에서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비난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이 공동보도문 작성까지 바짝 다가섰던 점을 볼 때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뒤 막후채널을 통해 읍해줄 법하지 않고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이라. 분석도 있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홍순영 장관 문답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속초항으로 귀환하던 중 현대 살봉호 선상에서 기자회견, 회를 열고 "남북간 의구심이 불식될 때까지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가면서 북측이 우리의 비상경계태세 조치가 그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화 재개에 냉각기가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보는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평화

"화해 반대 목소리 北내부에 있는듯"

공존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 평화공존도 대립의 시대만큼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절감했다."

—회담 교착을 타개하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면담을 추진하지는 않았나.

"북한 김영성 단장에게 요청했으나 면담이 이뤄질 분위기가 아니었다. 내 희망으로 그쳤다."

—북한 내부에도 어떤 시정이 있다고 보는가.

"북측은 자기네 주장을 얘기하면서 협의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다. 진정으로 위협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고 화해협력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북한 내에 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김영성 북측 단장의 불만은, '남측의 미국 테러시태, 관련 비상경계조치와 외교행위(대북정책, 관련 한·미 공조)·군사훈련이 주된 불만이었다."

살봉호=공동취재단

협상타결 될듯 안될듯 이틀 연장끝 결국 '빈손'

남북 접촉 과정

"앞으로는 남북회담을 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성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40년간 외교협상을 경험해 온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의 이 말 한마디는 잇새간의 6차 장관급 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 험겨운 것이었음을 잘 드러낸다.

특히 막판인 14일 새벽에는 '타결 압박'과 '결렬'을 수차례 오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결렬조짐이 처음 드러난 것은 13일 오후 3시 35분쯤.

홍수석대표가 "서울로 돌아가겠다"며 속초항으로 막 떠나려는 살봉호를 잡으라고 지시하면서부터다.

이는 이날 오전 '더 이상 줄 것은 없다. 마지막으로 김영성 단장으로부터 북측 의견을 듣고싶다'던 최후통첩성 언급에 북측이 호응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것.

그러나 북측이 "집중을 더하자"고 나와 회담일정을 하루 더 늦춘 남측대표단은 서울의 훈련을 받아가며 견합

추진위 장소문제 등 쟁점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후 10시40분에 시작한 수석대표 단독접촉이 성과 없이 한시간 만에 끝나자 회담장 주변엔 결렬 분위기가 깊게 감지됐다.

홍수석대표의 방으로 남측대표들이 굳은 표정으로 모여들고, 북측이 배웅준비에 나선 것. 남측은 살봉호를 이용, 질수하기 위해 14일 오전 3시 45분 접촉을 시도했으나 "인라관이 잠을 자고 있다"며 북측이 거부했다.

북측은 "바다사정도 있고 아침에 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며 시간을 미뤘다.

결국 6시50분 시작한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금단장이 "귀족 대표단이 빨리 가야 한다고 하니 할 수 없다"고 말해 이번 장관급 회담은 아무런 소득 없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영중 기자

南北관계 이대로는 안된다

전문가 진단·전망

'끌려다니기' 그만두고 상호주의 확립할 기회

전문가들은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결말이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더이상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연연할 경우, 지금까지의 성과마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주는 진단과 충고.

▲모종린(牟鍾麟) 연세대 교수=정부는 이번 회담 결말에 너무 앞메이지 말고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에

서는 그동안 채택 부분이 간과된 것이 사실이므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협박만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관계가 단기적으로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남북관계, 상호주의적 남북관계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본다.

對美·對中관계도 부담

▲정종욱(鄭鍾旭) 이주대 교수=현재 전개되는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대(對)테러 전쟁의 전개, 국내정치적 상황 등을 볼 때 정부가 김정일의 답방에 더 이상 연연해서는 안 된다. 대중립이 자신의 임기 내에 모두 이뤄졌다고 고집하면 무리수일 두게 된다. 현 정부는 작년 남북 정상회담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뤘는데 답방까지 임기 내에 실현시키려고 하니, 대미(對美)·대중(對中) 관계에서도 부담이 되었다. 이제는 차분히 남북관계만 새롭게 조망하고 정리할 시점이다.

▲문정인(文正仁) 연세대 교수=이번 6차 장관급 회담의 결말이 남북관계의 실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對北)상 하는 데 있어서 위

험을 실어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을 도와주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무리수일 뒤선 안 된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협조뿐만 아니라 남측 국민들의 합의기반이다.

답訪등 임기내 실현하려고 대통령이 무리수 둔다면 지금까지 성과 잃을수도...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원시관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정체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쌍방 모두가 현재의 입장에서 더이상 후퇴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냉각기를 갖고 상향평준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포용정책 재평가해야

▲권민웅(權敏雄) 통일정책연구소 이사=북한이 원천적으로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는 장기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현 정부는 다음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려하고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이상 무리하게 대북(對北)관계만 추진하면 지금까지의 성과마저 무시될 수 있다.

들과 대남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듯하다. 미국과의 관계도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한 정권에 맡겨 들어가니 북한의 입장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답방도 그 '충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 지금까지의 남북(南北)관계를 정리하고 성과를 재점검, 냉정한 입장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산가족상봉과 식량지

대화안되면 북한손해

▲유호열(柳浩烈) 고려대 교수=남북관계가 완전 중단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북한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좀더 얻을 것은 얻고 관계를 좀더 강화해놓을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원칙대로 차분하게 해야 한다. 북한의 요구사항 중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북측에 제시하고 국내에도 이해를 구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제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으니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초당적 합력을 구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

▲재성호(在成鎬) 중앙대 교수=북한이 계속 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南北)관계를 비롯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재규정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얻어갈 것은 북한이 많

고 받아야 할 쪽도 북한인데 우리는 외형적인 합의 선출에만 급급했다. 북한이 회담 장소나 시간 등으로 사비를 거는 것은 남북(南北)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화가 안 되면 손해는 북한이 더 많다.

/許容基기자 heo@chosun.com
/金德鎔기자 ducky@chosun.com

對美관계 돌파구 못열고 한국정권도 임기 끝나가... 北, 전략 전면 검토하는듯

시 있어야 한다. 특히 현 정부는 다음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려하고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이상 무리하게 대북(對北)관계만 추진하면 지금까지의 성과마저 무시될 수 있다.

▲서진영(徐鎭英) 고려대 교수=북한이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온

北 버티기에 南 속수무책

장관급회담 결렬 안팎

6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결렬에는 9·11 미국 테러사태로 경직된 한반도 주변 정세라는 외부 환경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회담의 전 과정을 통해 북한측이 우리측의 비상경계태세 해지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인 데는 북한 군부의 감경론을 무마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확인됐듯이 북한 강경세력의 상황인식과 북측이 갖고 있는 남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오해는 쉽게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서 남북관계의 소강상태가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회담 결렬 배경=6차 장관급 회담은 시작 전부터 북한이 남한의 비상경계태세를 문제삼아 회담장소를 '안전한' 금강산으로 요구하면서부터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임이 예고된 셈이다.

우리 대표단이 장관급회담의 금강산 개최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회담에 임한 것은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실리'를 챙기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같은 우리측의 계산은 당초부터 빗나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측은 우리측의 비상경계태세, 군사훈련, 반테러 국제연대 등 일련의 조치에 상당한 견제심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회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당분간 남북대화를 진전시킬 의사가 없음이 이번 회담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對)테러전쟁에 전력을 쏟는 미국과 대화를

6차 장관급회담 남북입장 차이

남	주요 내용	북
평화 유지 위한 조치	비상경계조치 인식	북측을 겨냥한 것
북측과 협의할 성격이 이념→수석대표와 중립적 표현 가능	비상경계조치 해제	해제조치 후 5차회담 협의사항 논의→남측입장 수용
방어적 성격의 훈련	남측의 군사훈련	북측 주적으로 간주한 도발
이산일점 우선협약→비상경계조치 문제와 병행 논의 가능	5차회담 협의사항 일정 조정	비상경계조치 문제 해결 후 일정 조정→병행논의 가능
12월 동시교향→금강산 가능	이산가족 상봉	12월 금강산 개최
12월 서울 개최	2차 경험추진위원회	12월 금강산 개최
12월 서울 개최	7차회담 개최	서울 개최, 시기는 추후협의

北 군부 의식 비상경계 해제 집착 당분간 대화 진전 의사도 없는 듯 南北 관계 소강국면 장기화 예상

쉽게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보다는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게 전략적으로 득이라고 북한측은 판단한 것 같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성과 및 전망=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사실만은 이번 회담의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최소한 남북이 향후 비공개접촉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기 때문이다.

또 남북이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 현 정세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것도 하나의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이와 관련해 홍순영(洪淳瑛) 수석대표는 "비록 합의문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상호간의 인식차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호이해가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게다가 10·25 재·보선 이후 국내정치의 역학관계 변화로 인해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카드를 쓰는 것도 쉽지 않다는 데 정부측의 또 다른 고민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로서는 무작정 시간을 끌며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권 마무리를 1년 남짓 앞둔 상황에서 이제는 그동안 벌여 놓았던 남북간 합의사항을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비교적 정치게임의 논리에서 벗어나 있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등을 매개로 대화재개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장관급회담 결집 원인·전망

남북은 14일 끝난 6차 장관급회담에서 다시 만일 약속 조차 못하고 헤어졌다. 양측은 지난해 6·15 공동선언 이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짊어지고 있었던 대화의 끈마저 놓아버린 셈이다. 이제나 저제나 하며 가슴 졸이던 이산가족들은 또다시 땅을 치게 됐다.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상당기간 냉각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북 햇볕정책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결집 배경

남북이 공동보도문도 발표하지 못한 것은 2차 경협추진위 등 당국간 회담의 장소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북측은 2개월 전 5차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회담을 북측지역, 그것도 금강산에서만 열자고 고집했고, 남측은 관례대로 서울에서도 개최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는 길은 멀고 도리난 길림과정일 뿐이다. 남북은 북측이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남측의 비상경제조치 대책 문제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자존심 싸움'을 벌였다. 남측은 향후 회담 중 최소한 하나라도 서울에서 열어 '남조선이 불안하다'는 북측 주장을 깨고자 했다. 그러나 북측은 장관급회담을 서울로 안보하는 듯했으나, '여간이 되면 간다'는 단서답답한 사립한 거부했다.

결국 북측은 남측이 준비중인 40만민의 식량 등 실리권 당분간 포기하면서까지 병분을 고수했다. 남측도 지위 조차인 비상경제대책을 해명하면서까지 회담을 이어갈 수 없었다. 남북은 막판에 홍순영(洪淳映) 통일부 장관의 공식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봉합하는 듯 했으나 실패했다. 남북 모두 '빈손 회담'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애초부

기약없는 대화...

햇볕정책 '시련'

테러경계 해제 둘러싼
명분싸움이 끝내 발목
당분간 회담재개 난망
南北화해 동면 불가피

터 타협이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 논란만 거듭한 꼴이 됐다.

정부는 회담 결집 후 발표문에서 '회담이 이번으로 끝난 게 아니며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분간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엔 남북이 6박7일간 머리를 맞대고 반을 새워 논의해도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한반도 정

세변화 등 '극적 돌파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 이번 시대의 객관적 배경이 된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긴장은 내년까지 지속될 공산이 크다. 또 남측의 경우 내년에는 월드컵과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 정부의 대북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

6차 장관급회담 남북 입장

남측 입장	의제	북측 입장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남측 비상경제대책	11월 중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라
정리치 혼란	남측 군사훈련	도발 행위
군사적 신뢰조치 실행 필요	주최(主軸) 표현	6·15 정신 위반
한반도 평화는 국제지침 받아야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변화' 언급	민족자주 원칙 훼손
서울·평양 교환 (금강산도 가능)	이산가족 상봉	'인선한' 금강산에서 실시
최소한 1기차는 서울 개최	2차 경협추진위 및 7차 장관급 회담	장관급회담은 서울서 회담 여건이 된 후 개최
경협추진위서 논의	대북 식량지원	제기하지 않음

더구나 거대 야당이 지리잡은 정국은 현 정부의 레임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벌써부터 "이러디간 내년 1년 동안 대북정책은 고착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동준기자 djlce@hk.co.kr

“北, 테러경계주장 전혀 안굽혀”

■ 洪통일 일문일답

“평화공존의 대안없이

南北대화는 계속돼야”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映) 통일부 장관은 14일 서울로 돌아온 뒤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잡지 못하고 돌아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회담이 결집된 이유는.

“남북이 테러사태로 인한 우리의 비상경제조치에 대해 대단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각종 당국회담의 시간과 장소도 합의되지 못했다. 회담이 이렇거나 연장됐는데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북측의 협상 태도는.

“북측은 자기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은 채 합의하고자 했다. 우리의 경제조치에 진정으로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다. 남북화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북한 내에 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물론 합의할 못한 것은 쌍방의 책임이다.”

-공개 해명키로 한 경제태세에 대한 발언 수위는, 내용은.

“유감 표명이다. 우리가 취한 경제조치를 북측이 우려하고 그런 우려로 긴장상태가 조성된데 대한 유감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 전망은.

“앞으로 다소 냉각기가 이어질 것

으로 우려된다.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남북간 회구상이 불식되는 여건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북측도) 우리측의 경제조치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남북은 기탄 없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은.

“비록 합의문을 갖고 오지 못했지만, 이것이 대화의 끝은 아니다. 평화공존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대테러 전쟁으로 긴박해져 있다. 이럴 때 입수속 상조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동준기자 djlce@hk.co.kr

“내복까지 다 준비했는데...”

年内 이산상봉 무산- 애끓는 실황민

“추는 겨울 잘 지내라고 내복까지 준비했는데...”

14일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돼 다음달 10~16일로 의견이 모아졌던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자 북의 가족을 만날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던 남측 이산가족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다.

“두차례나 물거품” 가슴앓이

특히 지난달 12일 북한측의 임박적인 인기 통보로 한번 가슴앓이를 했던 터라 이들의 실망과 서운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9남매 중 맏이로 북에 있는 여섯명의 동생들을 만나기로 돼 있던 김일창(姜日昌·75·서울 노원구 공릉동)씨는 서운함에 말을 잊지 못했다. “꿈에 늘 보이던 동생들이 요즘 꿈에 잘 나타나지 않아 이상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 동생 가족들 것까지 양말 60

켈레, 가죽장갑 20켈레 등을 준비했는데...”

그러나 김씨는 “언젠가는 동생들을 만나리라는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다”며 빨리 회담이 재개돼 북의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북에 있는 막내아들(60)을 만날 꿈에 부풀었던 권지은(權志殷·87·여·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씨는 상봉이 무산됐다는 뉴스를 듣고 아예 입을 다물고 말았다.

함께 사는 딸 이명옥(李明玉·54)씨는 “지난달 상봉이 연기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생기를 되찾으셨는데 이번 입로 말도 없으시고 얼굴도 흙빛이 되셨다”며 “여섯살짜리 아들을 시아버지 품에 맡기고 내리오신 뒤 50여년을 힘들어 하셨는데 오늘 일이 마음의 상처로 남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남쪽의 이산가족들은 자신들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했다.

북에 남은 남동생 윤희상씨(70)가 남쪽의 누나와 형들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5남매가 얼싸안고 울었다는 윤숙자(尹淑子·78·여·서울 강서구 가양동)씨는 “이제 형제 자매들도 모두 나이가 들어 저세상으로 갈 날이 머지 않았는데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겠느냐”며 곁말감을 감추지 못했다.

회담 하루빨리 재개되길

북측이 차입피일 이산상봉을 미루는 것에 대해 ‘무슨 공짜이속이 있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나뿐인 동생을 만날 예정이던 신응선(辛應善·81·경기 고양시 일산구)씨는 “북측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따뜻한 내년 봄에는 꼭 만날 수 있겠지...”라며 말갈을 흐렸다.

〈민동용·최호원기자〉
mindy@donga.com

대한매일

남북관계 다시 찬바람

장관급회담 결렬 인파

북한은 지난달 12일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그 이유로 ‘남조선에 조성된 정세’를 내세웠다. 이어 한달만인 지난 12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속에 칼을 품고 회담장에 나와서 웃음을 짓는 것이야말로 인파이 다른 위선적 행동’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처럼 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위한 남측의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북측의 강력한 반발 기류는 6백7일간의 6차 장관급회담을 관통했고, 결국 회담 결렬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북측은 비상경계조치에 따른 남측지역의 안전성을 내세워 이산가족 상

北, 계산된 억지주장... 파국 유도

南, 北전략 물이해·대책 부재 노출

봉, 경제협력추진위, 장관급회담 등을 모두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주장, 회담을 파국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측은 “(북측의 트집이) 협상용인지 아닌지, 진심을 모르겠다”고 털어놓는 등 북측 전략·전술에 대한 물이해와 대응력 부재가 드러났다. 게다가 “북한에 원칙없이 끌려다닌다”는 내부의 비난을 의식, 김연수진위 2차회의 및 7차 장관급회담의 시물개최 원칙을 고수, 협상의 여지할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대입은 외경지 원인일 뿐 북측은 ‘치밀하게

계산된 억지주장’을 토대로 회담을 결렬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북한은 반테러전쟁 이후의 국제정세, 남한의 정치일정 등을 두루 감안해 남북대화의 폭과 속도 등을 조절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성철(金聖哲)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은 “북한 군부 등 김경제려들의 입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로 금강산지역을 고집하는 것은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체제이완 현상에 대해 신중하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물론 대다수 전문가들은 6·15 정상회담 이후 처음인 이번 회담 결렬 뒤의 남북관계가 냉각기다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주식(徐柱錫) 한국국방연구원·북한군사연구팀장은 “지난해만 해도 양측은 장관급 회담이던 제도적인 틀을 존중해 왔는데 최근 그러지 못한 느낌”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는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유환 교수는 “이번 회담결결과 남북한 모두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남북관계법 등 조건 검색국면으로 끌고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o@kdaaj.com

6차 장관급회담 135시간 상황

8일	오후 1시 속초항 출발
오후 5시 청진항 도착	
오후 8시10분 금강산 입산	
9일	오전 10시 제 1차 전체회의
10일	오전 10시 제 2차 전체회의
11일	오후 8시 공판식 (이산가족상봉 연내 금강산 잠정합의)
12일	새벽 북측 공방 보도문도문만 반발 오전 9시 3차 전체회의 연기, 회담연장 발표
13일	새벽 북측 공방 보도문도문만 반발 오전 11시30분 통연 제 3차 전체회의 연기
오후 3시50분 남측대표단 정전행 출발 연기	
밤 11시00분 회담 종료 가능성 언급	
14일	새벽 1시30분~새벽 3시 회종대차 출발
오후 7시 마지막 전체회의 종료	
오전 8시 남측대표단 잠정차 출발	

南北 당분간 '영하권'

• 장관급회담 결렬배경·전망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4차 이산상봉 등 마이형 합의사항의 일정을 재조정할 계기로 기대를 모은 6차 장관급회담이 공동보도문조차 내지 못하는 등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악의 결과로 남았기 때문이다. 주요 시안에 대한 양측의 눈높이를 좁히고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나름의 성과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장관급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남북은 당분간 휴지기(休止期)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육로개설 등 현안의 해결은 더욱 힘들게 됐다. 북측이 14일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남측의 부당한 태도로 (기존) 합의의 이행이 어렵게 되고 북·남 관계가 악화되게 될 새로운 위험이 조성됐다"고 비난한 것은 북측의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도 이날 "앞으로 다소 냉각기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에 실패한 이유는 일견 단순하다. 7차 장관급회담과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시기와 장소를 두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서다. 장관급회담의 경우 '서울'에는 합의했지만 남측의 '다음달'과 북측의 '추후'에 합의하자'는 주장이 맞섰다. 2차 경추위는 '12월초' 개최로 의견이 좁아졌지만 북측의 '금강산'과 "서울에서 하되 장관급회담 시기를 겹치면 금강산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남측 입장이 대립했다.

이 바탕에는 9·11 미 테러 사태에 따른 남측의 비상경계 조치에 대한 시각차가 깔려 있다. "지위 차원의 예방조치"라는 남측 설명과 "우리를 겨냥한 도발"이라는 북측 견해가 엇갈린 것이다. 북측의 시각은 작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색비랍 유입 등 체제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북 내부의 문제가 남북회담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북측의 이같은 상황인식은 미 테러사태로 급변하는 한반

北내부단속·국제정세 관망 對美관계·식량지원등 급해 늦어도 연초엔 대화 나설듯

도 및 국제정세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로 대표되는 남쪽의 복잡한 정치구도와 미국의 아프간 공격으로 나타난 미국의 대테러 강경 자세는 북측으로 하여금 추이를 관망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했을 수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북측은 당분간 대화의 손을 내밀지 않을 듯하다. 남측이 전력지원이나 금강산 관광대가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다.

하지만 무작정 시간을 끌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의 장기 침체는 북측이 체제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보는 대미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당장 급한 남쪽의 대북 식량지원을 난감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식량차관 협의가 단초가 돼 이르면 연내, 늦어도 연초에는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재영기자 cyoung@kyunghyang.com

世界日報

2001. 11. 15 (목)

南北장관급회담 완전결렬 北, 남측에 책임전가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은 14일 금강산에서 성명을 발표, 남북 장관급회담의 전망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무성의와 특히 남측 수석대표의 전횡과 참수한 태도에 있다"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4면)

성명은 또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등 중요한 시간들을 합의하고서도 "남측 수석대표가 그것을 뒤집어놓았다"면서 "남측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민족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제6차 남북 장관급회

담은 별다른 성과값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됐다.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남측 대표단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실무접촉에서도 남북간에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의 개최 장소 등과 관련, 합의할 이루지 못함에 따라 오전 7시부터 15분간 북측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양측 수석대표의 종결발언을 거쳐 회담 입장을 끝낸 뒤 오전 8시에 선포호 편으로 장진항을 떠나 귀환했다.

/조정진기자 jji@sgt.co.kr

南北관계 '겨울' 속으로

금강산 장관급회담 결렬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빚다 른 성과없 거두지 못한 채 결렬 된 데 이어 북측 대표단이 14일 금강산에서 강력한 대남 비난성 명을 발표. 길렬책임은 남측에 전가함에 따라 연기됐던 이산가족 상봉 실현은 물론 모든 남북 관계가 지난해 6·15 남북 공동선 언 이전으로 후퇴할 위기에 직면 했다.

남북은 지난 9월 15일 서울에 서 열린 5차 장관급회담 이후 거 의 두 달만에 북측 지역인 금강 산에서 우여곡절 끝에 대치했으

나. 차기회담 입장 등을 담은 공 동보도문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냈기 때문이다. 남북은 이번 6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9·11 미국 테러참사 이후 취해진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해제와 제2 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를 비롯 한 각종 회담의 무조건적인 금강 산 개회할 고수, 결국 합의할 이 끌어내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래 회해와 협력의 모색해온 남북관계는 가 까운 시일 안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은 미국 테러사태 이후 국제정세, 내년도 대통령선거 등 국내정세, 북한의

식량난 등을 감안할 때 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극적 계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회담은 시작부터 조짐이 밝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회담에 임 박해서 남한 대북지원 민간단체 들의 방북 신청을 "따뜻한 환영 에나 방문하라"고 거절했다(세계 일보 11월9일자 보도). 북측 대표 단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9일 기초발언을 통해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청탁 높음을 벌 었다"며 "이는 용납 못할 도전" 이라는 등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 하는 듯한 폭언을 퍼붓기도 했 다.

북측 대표단의 이같은 태도는 그들이 보수집단인 군부의 영향 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남측 대표단의 태도 또한 유연했 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 이다. 북측은 회담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남측이 자리를 박차 고 일어서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 회담 결렬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곧 발표하게 될 공동보도문과 관련하여 쌍방 실무자들이 애써 합의하여 놓은 내용들마저 순간 에 제멋대로 뒤집는 행위를 서슴 없이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가능한 분야부터 의견을 접 근시키되 어떤 한 분야에서라도 의견일치가 안되면 모두 무효'라 는 일괄타결 방식의 특징을 후도 한 것이다.

北, 대남 비난성명-6·15정신 후퇴위기
"남측 유연치 못한 태도가 빌미" 지적도
'경계조치' 인식차... 두터운 벽 또 실감

대한매일

"이산상봉 합의못해 유감"

■ 홍순영수석대표 문답

【실봉호 공동취재단·김경호기자
|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수 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14일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실봉호 선상에서 이번 회담과 판 단. "이산가족 상봉 문제할 미결로 두고 회의할 끝내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은 일문일 답.

●협상 중단 이유는. 회담을 이틀

평화공존의 대안없어

남북대화 계속돼야

이나 연장됐다. 양측 사이에 테러 사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유와 북측 의 속셈은. 북측은 자기내 주장을 얘기면서 합의할 도출하려 했을 것 이다.

진정으로 위협의식을 가졌을 수 도 있고 화해협력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북한내에 있을 것으로 짐 작할 뿐이다. 이번이 합의가 안된 것은 우리 주장이 확고한데 비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다.

●남북대화 전망은. 시간이 지나 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가 안정되 고 남북간 외교상이 불식될 때까지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얼마나 걸릴까. 지켜보자. 평화 공존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대 화는 계속돼야 한다. 평화공존은 대결의 시대만큼 관리하기 힘들다 는 것을 절감했다.

남북관계 다시 겨울오나

북 "장관급회담 결렬 남 대결추구탕" 비상경계·방북인사 사법처리 맹공

북한은 14일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관영 언론을 통해 이번 6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한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버리고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고집스러운 남쪽의 그릇된 태도 때문에 결국 회담에서는 아무 성과도 거둘 수 없게 됐다"는 등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보도 태도를 보였다.

▶ 관련기사 2면

또 평양방송은 이날 지난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북본부 대

표들의 기소와 관련하여 과거 검찰·군당국 등 남쪽의 특정대상을 지칭해 비난한 것과 달리 정부를 '남조선 파쇼당국'이라고 비난해 대남비방을 사실상 재개했다.

이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으로서 북쪽이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쪽이 지난 11월7일, 8일, 9일 각각 법민련 북쪽본부 상명, 법청학련 대변인 담화, 민족회해입대위원회의 대

변인 담화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법민련 관계자의 사법처리를 들어 정부를 파쇼당국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한 관계자는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평을 꺼리면서도 북쪽의 이런 주장과 보도태도는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제6차 장관급 회담이 끝난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남쪽이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강제조치와 전후려 중간 등이 북쪽을 자극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비상경계 조치를 합리화하면서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남쪽이 회담을 결렬시키는 것과 같은 "무례한 행위"를 했다는 자극적인 표현들을 동원해 남쪽을 공격했다.

특히 이 방송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인식의 합의를 본 점은 남북 대화를 계속한다는 것"이라는 남쪽 대표단의 평가와는 달리 북쪽 단장이 "북남 공동선언 이행에 엄중한 장애요 조성한 데 대해 (남쪽이) 역사와 민족 앞에 진지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 대결적인 자세를 보였다.

김태호 기자 tankan1@hani.co.kr

냉랭한 작별

14일 아침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결렬된 뒤 전체회의를 마친 홍순영 남북 수석대표가 입을 굳게 다문 김형성 북쪽 단장을 뒤로 한 채 회담장이자 숙소인 금강산려관을 떠나고 있다. 금강산/통일부사진기자단

"테러경계 인식차 결렬들"

■ 홍순영 수석대표 일문일답

남북 대표단은 14일 오전 7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15분 동안 양쪽 수석대표의 종결 발언을 듣고 아무런 합의 없이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접었다.

14일 새벽의 막후 실무접촉을 마지막으로 남북 대표단은 전체회의를 통해 6박7일 135시간의 회담을 마무리했다. 남쪽 대표단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차를 타고 장전항으로 가서 아침 8시에 실패호에 올랐다.

남쪽 수석대표 홍순영 통일부장관은 14일 실패호 선상과 서울 귀환 뒤 남북회담사무국에서 한 회견에서 '대러사태에 대한 인식차'가 최대 결렬동인이라고 밝혔다.

"우리주장 확고 북 수용안해"

- 왜 여기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했나?

= 회담을 이틀이나 연장했다. 테러 사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 경제국면의 장기화 전망도 있는데?

= 시간이 가면 우리의 경제대세 강화가 북쪽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남쪽의 대내적인 안전조치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 이번엔 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북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 북쪽은 자기 주장을 해가며

합의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다. 전적으로 위협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고, 회해합력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북한 안에 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이번에 합의가 안 된 것은 우리 주장이 확고한데 비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대화 재개 시간 걸릴것"

- 당분간 대화가 어려지 않나?

=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남북간 의구심이 풀릴 때까지.

-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나?

= 일단 좀 지켜보자. 평화공존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 평화공존이 대결의 시대만큼이나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절감했다.

- 김형성 북쪽 단장이 북한은?

= 남쪽의 대테러조치, 외교행위, 군사훈련이 중요한 불만이었고 우리쪽 주장에 대해 불만이였다.

- 김정일 위원장 면담 추진은?

= 수석대표 접촉에서 면담 회담 의사를 밝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대화분위기가 그렇지 못했다.

- 비상경계조치 논란과 관련해 예초 3차 전체회의 종결발언에서 하려고 했던 말은?

= 북쪽이 우리의 비상경계조치에 우려를 지냈고, 이 우려로 긴장상태가 생긴 데 대해 유감을 표시 하려고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매일경제

2001. 11. 15 (목)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

김정일답방 '찬서리'

나영필 기자

정부가 회담장소(금강산) 문제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남북장관급 회담을 엮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냉랭하게 헤어져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차기 회담조차도 약속하지 못해 남북 양측에 쌓인 감정이 풀리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전망이다.

송영대 전 차관은 "이번 회담 결렬로 쌍방 모두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기 어렵게 됐다"며 상황이 고약하게 꼬여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산가족도 서울로 보내지 않는 마당인데 이번 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도 (DJ 집권기간중) 물건너 갈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연연하지 말고 의연히 나아가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왜 결렬됐나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른 것은 비상경제태세 등에 대한 양측 입장차였다.

북측은 회담 시작부터 남북의 비상경제태세 해제를 요구하며 다른 의제를 뒤로 미뤄놓고 우리측을 압박했다.

남북 대표단이 이산가족 상봉제 등에 합의하고서도 회담 막바지에 결렬상황으로 치닫해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등에서



14일 속초항으로 돌아온 홍순영 통일부 장관이 회담결과를 밝히고 있다. [문]

최장소를 금강산으로 양보한 만큼 경주위 개최장소를 반드시 서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안전한 금강산'이라는 북측 논리를 반박하고 서울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이었다.

●김정일 답방 말도 못꺼내 지난해 6·15 정상회담 이후 가진 6차례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DJ정권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니니는 관측마저 나온다.

북측은 회담 첫날부터 공식석상에서 우리측 국가원수를 비난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6차 장관급회담 결렬로 남북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양측간 대화 의지가 있는 만큼, 머지않아 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와 상당기간 정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국제정세나,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한정권 아래서 더 이상의 남북관계 진전은 '할 건너 갔다'는 극단적 견해도 제기됐다.

'장관급회담 결렬' 전문가 진단

“냉각기후 곧 대화” “현정권선 어려워”

“테러戰이 변수”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원 차관 회담 결렬의 표면적 이유는 남북의 대(對)테러 비상경제태세에 대한 북측의 문제 제기, 김일추진위 개최 장소 등으로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북측은 남북의 경제 지원유언기 위해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평양 방문단 교환은 북한체제 유지에 부단이 된다. 때문에 남북의 비상경제태세 강화급 구실로 금강산 회담 개최를 주장한 것이다. 남측도 북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정체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가 남북 관계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

“北행태 안변해” 이동복(李東福) 명지대 초빙교수 북측은 남북의 비상경제태세와 관련해 양쪽을 받아내려다 어렵게 되지 회담을 결렬 시켰다. 현 정권 아래서의 남북대화는 끝났다고 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후 합의사항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 남북대화를 중단시켰다. 과거 회담을 결렬시킬 때와 똑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남측이 계속 매달리니까, 올 9월 장관급회담과 이번 회담에 미지 못해 응한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남측과 대화를 통해 남한 사회의 분열, 경제적 실리 획득, 대(對)서방 관계 개선 등을 노렸으나 자신들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화필요 인식”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되었지만, 양측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머지않아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북측은 안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부의 입김 때문에 남북의 비상경제태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 반면 남측에서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지고, 예측이 가능한 남북관계의 좁음 만들기 위해 북측에 분명한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사태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진위위축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北, 南의지 확인”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북한학) 이번 회담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고도 명분싸움 때문에 결렬된 것 같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최고지도자 수준에서 남북협약 창구를 금강산으로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회담에 임했다. 하지만 북측은 식량난 극복 등 경제개화를 위해서나, 탈린단 미 행정부 말기 북미대화 때의 실기(失機)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머지않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의 입장차와 대화 의지를 확인했을 것이다.

“파탄은 피할것” 유호열(柳浩烈) 고려대 교수(북한학) 북한은 당분간 남북관계에 대해 소고르기를 하려는 것 같다. 미국이 이프간을 상대로 전쟁 중이어서 북미관계 진전도 어렵고, 남북의 현 정권도 레닌덕 상황에 들어가 실익을 챙기기 어렵다는 경제 인식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남북대화 자체를 피탄 시키려는 것 같지는 않다. 다시 한번 대화 재개를 시도할 것이다. 남북의 비상경제태세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북한 군부를 설득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끝내 '빈손' ... 南北경색 불가피

장관급회담 결렬 안팎

지난 9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렸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빈손에 빈손'을 거듭하다 14일 끝내 결렬됐다. 남북은 이틀간이나 입장을 언강하며 현안을 잡으려했으나, '빈손회담'으로 끝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장기간 경색국면에 빠져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왜 결렬됐나=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측의 '테러비상경계 조치'에 대한 북측의 불만이였다. 북측은 5백6일간 짝지 않은 기간중 대부분을 비상경계조치 해제와 이에대한 해명을 요구, 남측과 마찰을 빚었다.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이 14일 오전 회담이 결렬된 뒤 굳은 표정의 김영성 북측 수석대표를 뒤로 한 채 회담장을 떠나고 있다. /금강산통일부사진기자단

'비상경계' 트집 - 경협회의 장소 금강산 고집 대북 쌀지원 무기연기 - 이산상봉도 백지화

막판 갱금으로 부상했던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장소 문제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북측이 비상경계 조치로 서울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금강산 회담을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이다. 북한 군부의 감금입장이 회담결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남북관계 전망=테러관련 짐세에 대한 북측의 내부방향이 비뚤때까지는 남북간 경색국면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줄곧 이문제를 내세워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로 돌아와 "북측과 대화는 하겠다"면서도 "이

번 회담 내내 '테러 비상경계 조치'에 대한 공방으로 다른 현안들을 논의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시골답방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북경협의 후퇴도 불가피해졌다. 특히 경협추진위 2차 회의의 장소와 시기를 정하지 못함에 따라 대북 쌀지원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강산 관광사업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도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世界日報

2001. 11. 15 (목)

"평화외 대안없어 대화는 계속돼야"

洪수석대표 일문일답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은 14일 장진항을 떠나 속초항으로 향하는 설봉호 선상에서 모두발언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서 "평화공존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이번 회담에서는 비상경계조치와 관련된 북한측 인식이 우리 심방으로 꽤 좁혀졌음에도 최고의 쟁점이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길로 두고 회담 끝내 유감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남북간제업력추진위원회(경추위) 회담 개최 장소와 날짜, 장관급회담 개최 장소와 날짜

였다. 회담이 길어진 것은 북측이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협의를 도출하려 노력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전망을 말한다면 협의에 도달하지 못

"이산문제 못풀고 회담끝내 유감 北내에 화해반대 목소리 있는듯"

해 다소 냉각기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문일답

-왜 여기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했나.

▲회담을 이틀이나 연장했다. 양측 사이에 테러 사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테러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

해 회담이 결렬됐고 이에 따라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측의 비상경계대세 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번에 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북측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북측은 자기네 주장용 해가면서 협의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다. 진정으로 위협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고 화해협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북한내에 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합의가 안된 것은 우리 주장이 확고한 데 비

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기간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길릴 것으로 보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평화공존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평화공존은 대결의 시대만큼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짚었다. 상호존중하고 상호이해하면서 관계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담에서 시장경제 등 북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남북은 민족공동체인데 경제공동체부터 발전해 정치공동체로 가는 것이다.

-김영성 북측 단장의 '불만은, ▲남측의 대테러조치, 외교행위, 군사훈련 등이 중요한 불만이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조정진기자 jjin@sgt.co.kr

“배를 보내지 말고 잡아 뒤라.”

6차 장관급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은 13일 오후 3시35분경 금강산여관에 있는 우리측 상황실에 내려와 이같이 지시했다. 막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의 출항시간을 늦추라는 지시였다.

결국 설봉호는 예정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발했다. 일반 관광객(580명) 중 일부는 속초항에 도착한 뒤에도 출발 지연에 항의하며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상황은 남북회담을 취재해 온 기자들에게는 낯선 장면이 아니다.

지난해 9월23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렸던 2차 남북직접심자회담 마지막 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우리측 대표단은 회담장 철수할 공식발표한 직후 “회담을 계속하라”는 본부 명령이 내려오자 금강산 관광선의 출발을 연기토록 지시했다. 다만 연기 지시가 내려지던 그 순간 이미 관광선은 북한 장전함을 떠난 뒤여서 출발 지연이나 항의 소동은 생기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열린 3차 남북장관급회담 마지막날이었던 지난해 9월30일에도 우리 정부는 북측 대표단이 타고 들

아갈 서울행 민간여객기 출발을 2시간 가량 늦춰가며 북측출발 압박했다.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렸던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음은 물론이다.

북측과의 회담전략상 때로는 ‘벼랑끝 전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극약처방도 임상화될 경우 효과가 반감되는 법이다. 특히 국민을 ‘범포’로 잡는 방식으로 허겁지겁 만들어낸 남북합의는 이행 과정에도 무리수출 날을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행태가 어떤 정책보다도 장기적 비전에 일각해 추진돼야 하는 대북정책이 성곽주의로 흐를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매번 쫓기는 듯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혹시라도 ‘역지 춘향’식으로 전시적 성과에만 집착한 이유 때문이라면 더욱 큰일이라는 걱정을 떨칠 수 없다.

spear@donga.com



김영식 (정치부)

한국경제

2001. 11. 15 (목)

장관급회담 예정된 걸림

남북 장관급회담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는 14일 아침 금강산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5박6일 동간의 협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대리비상경계 조치”를 둘러싼 남북간의 인식차가 예상보다 컸다”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회담 일정을 이틀간 연장하며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전력투구했으나 역부족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홍 수석대표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예정된 걸림’이란 시각이 그만큼 강한 것이다. 북측은 남측의 비상경계 조치를 이유로 내세워 지난 9월에 있는 5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이번 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예고한 것이다. 또 모든 남북회담은 ‘안전한’ 금강산에서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했다. 남측은 북측의 이런 입장을 알고서도 ‘회담의 연속성’을 명분으로 금강산을 찾았다.

때문에 우리측이 치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회담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실제로 회담은 북측이 ‘비상경계 해제’란 예상된 문제집 제기, 첫날부터 진땀을 쥐었다. 북측은 남북경협추진위 2차 회의도

‘불안한’ 서울에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산가족이 대부분 고령자란 사실을 알면서도 장시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금강산을 상봉장소로 고집했다.

이에 우리측은 “비상경계가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또 ‘금강산 아산상봉’을 수용하는 등 저지세로 일관하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다. 간신히 합의했던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마저도 무산됐다.

회담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남북간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식량지원 등 몇가지 ‘당근’을 제시하면 북측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안이 한 자세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게 분명하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모두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대책없이 ‘만나서는 안될 만남’을 지속할 경우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현실도 일깨워준 회담이었다.

홍순영 정치부 기자 yshong@hankyung.com

취재여류



'홍순영식 對北협상' 새실험

남북장관급회담 분위기

우여곡절 끝에 열렸던 6차 장관급 회담(9~14일·금강산)이 원전 결렬된 배경에는 현재의 전반적 남북한 상황이 근본적인 이유로 작용했지만 이외는 별도로 남북 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의 '남북대화 방식'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직접 외교관으로 대북 협상에 처음 나선 홍 장관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 기준과 주고받기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교 협상방식을 도입하려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북측은 홍 장관 개인을 주목해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북측 대표단은 14일 오후 남북 대표단이 금강산을 출발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남측 수석대표의 부정적이며 독선적인 처사에 대하여 항의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남측 수석대표가 되는 사람이 앞으로 대화 상대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포용보다는 상호주의' 입각한 국제원칙 적용 '남측대표 독선적... 대화상대 안된다' 맹비난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신성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평생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도 북한과는 지난 5차 회담에 이어 두번째로 협상대이별에 앉은 홍 장관은 "앞으로 북한사람들과 협상을 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를 하지 않겠다"고 할 만큼 남북회담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북측도 직설적이고 원칙적인 홍 장관을 상당히 부딪스리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첫날부터 북측은 달라진 남북측 대도에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1차 전체회의에서 북측 김영성 단장은 기초반언을 통해 비상경계조치의 해제는 물론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비난하고 나서자 홍 장관이 강경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틀째 회의는 수석대표 접

촉을 먼저 갖고 의견조율을 한 뒤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홍 장관은 '입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야 한다'며 전체회의를 요구했다.

특히 홍 장관은 회담이 지지부진하자 13일에는 짐을 들고 숙소에서 내려와 회담 관계자에게 '내를 잡으라'고 지시, 북측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일부 북측 회담관계자들은 홍 장관이 자신들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남측 관계자들에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협상에서 이른바 '말침'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고 어느 정도 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원칙대로 국제기준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현중기자 lchun@munhwa.co.kr

國民日報

THE KUMMIN DAILY

남북회담 연내 재개 추진

정부, 별도 군사회담 제의등 후속대책 착수키로

北 "남측 무성의" 맹비난

정부는 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장관급회담을 포함한 당국간회담을 연내에 다시 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년간 북측의 대응과 여분 주의를 지켜본 뒤 판문점 연락관 접촉 등 다양한 대북채널을 가동, 이른바 다음달 초 북측에 장관급회담 재개를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측의 비상경계대세에 대한 북측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장관급회담과는 별도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조치 등을 논의할 군사당국간회담 개최를 재의하는 방안도 산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주말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장관

급회담 결렬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붕괴로 격변하던 국제정세가 정리돼 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측도 대화할 마냥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은 14일 성명을 통해 "장관급회담이 결렬되고 회담 전망을 어떻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무성의와 특히 남측 수석대표의 전횡과 불순한 태도에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남한이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버리고 대결을 추구하고 있으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교집스러운 남측의 그릇된 태도 때문에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北 '벼랑 전술' 실패 홍장관에 화풀이



왜 비난수위 높이나

野·보수층선 대표단 격려

6차 장관급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우리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이 "묘한 처지"에 빠졌다.

북한은 홍장관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 공세를 벌였다. 정작 홍장관은 한나리당과 일부 보수층으로부터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15일 "북한의 무도한 태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한 대표단의 노고에 위로와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렇듯 평양방송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회담 결렬은 남측의 무성의, 특히 남측 수석대표의 전횡과 불순한 태도에 원인이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남측 수석대표라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이라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회담 고위관계자는 북측의 이번 비난성명은 "이전의 우리측 대표와는 다른 협상태도를 보인 홍장관에 대한 일종의 화풀이성 조치"라고 짚어냈다.

홍장관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고집을 꺾지 않자 서울 상황실의 판단과 관계없이 '서울로 돌아갔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측이 남한 내 비상경계 태세에 시끄러운 요구해 결국 공동보도문 초안 1항에 '북과 관계없지만 남북 관계에 긴장이 조성된 것은 유감스럽다'는 '사실상의 유감표명'을 해주었는데도 북측이 다른 시안을 놓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자 철수를 결정한 것.

당시 그는 "북한이 하지는대로 따르면 합의서가 탐고 가겠지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남측도 때론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남북관계는 주

춤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측근에게 말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산상봉과 7차 장관급회담 등 2개항이 합의되지 않으면 회담을 깨고라도 돌아오는 게 정부의 미지노 선이었다"며 "북측도 벼랑 전술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향후 남북협상에서 보일 북측의 태도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홍장관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회담재개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東亞日報

2001. 11. 16 (금)

“南 무성의로 회담 결렬”

北, 홍순영장관 비난

북한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 15일 속보 형태의 '상보'를 발표하면서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을 비난했다.

북한 관영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4일에 이어 이날도 홍장관에게 회담 결렬의 책임을 떠넘긴 뒤 "이번 회담의 전 과정은 북과 남 중 누가 실재로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며 서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누가 그에 빚짐을 지르는가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朝鮮日報

2001. 11. 16 (금)

北에서 욕먹으니 野黨한테 칭찬받네

洪淳瑛 통일부장관 南北회담 '냉·온탕'



남북 장관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사진) 통일부 장관이 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이당으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북으로부터는 욕심을 들었다. 한 정부에서는 자극히 아예적인 현상이다.

한나리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14일, 회담 결렬과 관련한 논평에서 "국민자존심과 국가이의를 도외시한 방곡적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홍 장관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도한 태도에 대해 예전과 달리 단호한 입장을 취한 대표단의 노고에 위로와 보낸다"고 격려했다.

반면 북한은 이날 북측 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진직으로 남측 수석대표의 전횡과 불순한 태도에 있다"며 "앞으로 (그가) 우리 대화 상대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성명은 이어 홍 장관에 대해 "(회담내용) 재확인대로 뒤집는" "무례한 태도" "심히 무책임하고 침상산하며, 도덕이 없는" 등의 격렬한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홍 장관은 이런 북측 성명을 보고받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고, 통일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송민기기자 jinko@chosun.com

대한매일

2001. 11. 16 (금)

北 "회담결렬 南대표때문" 맹비난

극단표현 쓰며 장관회담상보 방송

북한이 6차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그 책임을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에게 떠넘기며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 맹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15일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을 통해 '제6차 북남상급에 관한 상보'를 발표, "남측 수석대표였던 홍순영 통일부장관이 회담에서 시대주의적 망발을 늘어 놓고 12월 급강산에서의 아산가족 성명까지 뒤집어 엮었다"고 비난했다. 200자 원고지로 28쪽에 이

르는 장문의 이 상보는 모두 3개항에 걸쳐 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특히 회담 과정에서 나온 홍 장관의 발언을 조목조목 공개하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상보는 "통일문제를 전담한다는 수석대표가 신뢰구속이 없는 조건에서 주직개념은 불기비하더니니 황실수설했다"며 "이는 6·15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족적 행위일뿐 아니라 북남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초보적 상식도 갖추지 못한 무지의 집중적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6·15공동선언의 기본명제인 '우리 민

족끼리'라는 의미별 국제사회의 단절이나 고립이니 하면서 심히 모독 왜곡해 나섰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협조하고 외세에 의존해야 한다는 시대배국적인 망발까지 서슴없이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상보는 나아가 회담과정에서 홍 장관이 했던 발언 내용을 조목조목 들어 "남측 수석대표 홍순영이 이미 합의된 사항까지 모두 뒤집는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북측의 이같은 비난공세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경색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상했던 것보다 비난강도가 높다"면서 "16일 관계기관 논의될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경호기자 jide@cdaily.com

“북, ‘경제해제’ 요구는 한·미 압박 전술”

■ ‘미테러와 남북관계’ 토론회
“남북 장기침체 안될 것”
경색 타개방안 엿갈려

평화통일시민연대(시민 공동대표 이장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흥사단 대강당에서 ‘미국 테러사태 이후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테러리전’이 북한에 위기가지만, 북한이 ‘과거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직군과 납치범 수배) 등을 위한다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미 관계의 전망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남북관계가 완전 단절되거나 장기침체에 빠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대체로 일치했지만, 현 상황 진단과 상황 다개방안에 대해선 일치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 테러사태 이후 북한의 선택-김정수 주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은 “테러사태 이후 북한의 태도는 테러반대와 한, 미에 대한 입력강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이 남북의 비정상적 대세를 문제삼는 것을 위기

의식에 따른 과민반응으로 분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 정부의 비상 경제대세 해제 문제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요인이 되기보다 북한의 한, 미 압박을 위한 전술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며 “미국의 대북 유화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더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행동이 마무리되면 북한을 회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북한이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테러 지원국과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남북대화에서 주려해 남북관계 관계를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북관계 전망-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앞으로 상당기간 북한의 위기관리 태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유보 등 북한의 최근 대남태도를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 또는 김은과 김의 갈등에 따른 유보조치 등 몇가지 가설로 정리했다.

고 교수는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체제 이완 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남북 당국간 대화의 급감한 일원화’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한국일보

2001. 11. 16 (금)

기자의 눈

이동준 정치부 기자



홍순영(洪順榮) 통일부 장관이 14일 6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빈 손”으로 돌아오자 시민들의 격려 전화가 쇄도했다. “한 발을 제대로 뚫고 원칙을 잡지 않았다”는 칭찬들이었다. 한나라당도 이해적으로 노고할 지해했다.

홍 장관은 우리의 비상경제대세를 갖고 생애를 한 북측에 본대를 보여줬다. 그는 회담 막판에 북측이 7차 장관급회담을 “불안

한” 서울에서라도 하겠다고 풀러서지 “시기를 못 빅으리”고 말어 붙였다. 대표단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홍 장관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홍 장관이 “배를 잡으라”고 협수를 지시하자 북측은 당황했다. 북측 “회담일꾼”은 “제발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며 매달렸다는 후문이 다. 남측은 잠정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돼 아쉬웠지만, 다시 만날 약속도 하지 않은

제 회담장을 뒀다. 회담 결말은 남북 모두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산 가족들은 상황이 또 다시 어려워 지지 땅을 쳤다. 북측은 홍 장관의 “전향과 불순한 태도” 때문에 회담이 깨졌다면서, “앞으로 그와 대화할 해야 할 지 검토하겠다”고 화장을 했다.

회담 결말은 홍 장관의 표현대로 “쌍방의 책임”이다. 홍 장관은 실리 보다는 명분을, 눈앞의 성과 보다는 장기적 비전을 염두에 둔 셈이다. 그러나 그의 결정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회담 결말에 대해 격려가 있는 것은 냉정한 현실이다. 하지만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우리의 변할 수 없는 목표다. 회담 결말이 이 같은 목표에 부합 할 수 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djiee@hk.co.kr

홍장관에 대한 격려

중앙일보

2001. 11. 16 (금)

북에 끌려다니 장관 회담
굴욕적 합의 안해줘 다행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말됐다.. 이산가족 연내 상봉이 무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종전과 달리 북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당당히 물리친 우리측 회담 대표단의 용기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양측은 당초 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금강산에서 열자는 북한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회담이 열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각종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남측에 비정상적인 해제를 시종일관 요구했다고 한다. 견악하지 않을 수 없다.

회담 일정을 늦추면서까지 남북관계 현안을 타결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려던 우리 대표단의 노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차라리, 북측 요구를 거부하고 결렬된 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 질질 끌려 다니며 굴욕적인 합의에 이르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남북회담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북측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회담의 결과는 변하다. 판을 깨는 북측의 상투적 수법에 밀려들고 국민의 가슴 속에 응어리를 만들 뿐이다.

정일훈·재향군인회 안보부장

한겨레

2001. 11. 16 (금)

북 “홍대표 독선에 회담 결렬”

남 “정부차원 협상 조율”...야 “단호대처 잘했다”

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과 관련해 북한이 남측 회담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의 ‘협상 태도’를 맹비난하고 나서 상황을 더 나쁜 쪽으로 끌고가고 있다.

북측 관영 (중앙방송)은 14일 밤 ‘북남 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회담 종료 관련 성명’ 보도에서 “북남 상급회담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무상의와 특히 남측 수석대표의 전향과 불순한 태도에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북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위한 남측 수석대표의 대화 부정적이며 독선적인 처사에 대해 항의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 우리 대화 상대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할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4일 권철민 대변인 성명에서 회담 대표단에 대해 “북한의 무도한 태도에 대해 예경과 달리 단호한 입장을 위한 대표단의 노고에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협상태도에 대해 “무원칙한 끌려다니기”라는 비난을 거듭해온 한나라당으로서는 이해적인 반응이다. 회담 결렬 뒤 통일부장관실로 보수층 등 일부 시민들의 ‘격려 전화’도 직달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북측이 앞으로도 홍 수석대표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할 경우, 회담 재개는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

회담에 참여했던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홍 장관 비난에 대해, “북측 대표단으로서 회담 결렬의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주장해야

했을 것이고, 그 구실로 홍 수석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회담 전야 수석대표 혼자서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조율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라며 “분쟁을 북점으로 물이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측 대표단이 성명에서 홍 수석대표가 “쌍방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놓은 내용들마저 제멋대로 뒤집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했다”고 비난한 부분이다. 홍 수석대표는 13일 오후 3시30분께 회담장인 금강산리관 2층 상황실로 개인 짐을 싸들고 와서 “돌아가야겠다. 배를 잡으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홍 수석대표는 회담 기간 중 공개석상에서 ‘시정경제원칙’에 따른 경제교류’를 강조하는 등 직접적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루킨 러 하원부의장 인터뷰



블라디미르 루킨(사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부의장은 "9·11 테러 사태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따른 국제정세의 긴장이 당장은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 결렬은 서로 의심 탓”

냉각 오래 안갈것...북 대러 채무 아직 해결안돼

다웠다. 그는 '21세기 한-러 동반자 교류사업' 참석차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14~17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 그는 "아직은 서로에 대한 의심이 많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남북관계의 냉각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비상경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제 북쪽을 향한 것이 아님을 북한 지도부에 미리 알렸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남과 북 지도부 내부에 화해, 협력과 대화 진행과정에서 속도를 내자는 쪽과 신중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인내심과 햇볕정책의 흔들림 없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류를 축소하면 남북 사이의 장벽이 더 높아지고 북한의 감점과를 강화할 뿐"이라며 "인적 왕래와 경제교류를 더 활성화해야 좋은 결과가 있다"고 '충고'했다. 남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현안인 한

국 중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 그는 "기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재정과 정치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다"며 "두 철도가 언제쯤 실제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노스트라다무스도 예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어려움은 철도연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과 남북한 간의 정치적 긴장"이라면서도 "모든 선의는 실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국정부에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북-러 협력에 대해 "두 나라 모두 결정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길고,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문제가 미해결 상태인 것 등이 지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채무문제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인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사진 감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일보

2001. 11. 17 (토)

회담결렬 책임 南에 떠넘기기

北, 對南비난 속셈은

북한은 15일 밤 '제6차 북남(남북) 상급(장관급)회담'에 관한 상보(詳報)를 발표, 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측 당국과 홍순영(洪淳英) 통일부장관에 돌리면서 대남 비난 강도를 높였다. 북한은 14일에도 회담 대표

洪장관 태도·자격 문제삼아

“北대남침 내부 면피용” 說도

단 성명을 통해 '남측의 무성의와 수석대표의 불순한 태도' 때문에 당국 간회담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측은 조선중앙TV 등 관영인분을 총동원해 발표한 상보에서 "이번 회담은 민족보다 외세를 우위에 놓는 남측의 시대주의적 근성 때문에 깨졌다"면서 "남측은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릇된 입장과 자세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또 홍 장관을 겨냥해 "실무진들이 합의한 사안을 뒤집는 망동음 서슴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측이 대남 비난에 주력하는 것

은 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 향후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남측 여론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상보 앞부분에서 '회담이 끝나기 바쁘게 남측 일부에서는 사실과 다른 여론이 돌고 있다'면서 분개했다. 북측 권력 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대남 사업 담당자들이 회담 실패의 책임을 면하려는 지구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동준기자 djice@hk.co.kr

北, 對南비방 강도 '위험수위' 넘었다

연일, 방송통해 공세

6차 장관급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거칠고 신랄하게 대남(對南)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회담 결렬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면서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이같이 위험 수위에 육박한 대남 비난은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당분간 분야별 '궤기모임' 등을 대남 비난 및 선전장으로 활용하면서 공세를 계속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장관급회담 결렬되자 대남담당자들 軍部 눈치보기 홍순영장관에 '화풀이' 성격도

북한 중앙방송은 16일 한미 양국이 12일 서부전선에서 연안 상륙 합동군사훈련을 벌였으며 "미제 해병대와 남조선 해병대, 친동부대, 해군 6항공전단, 육군 도하부대가 참가한 이번 훈련은 참주침미 공화국을 거느린 전쟁 연습"이라고 격렬히 비난했다. 앞서 중앙-평양 방송은 지난 15일 밤 속보 형태인 '상보'(詳報)를 발표, 장관급회담 결렬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그 본심은 민족보다 외세를 우위에 놓는 남측의 사대주의적 근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에도 6차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의 성명을 통해 장관급회담이 결렬되고 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무성의와 특히 남

측 수석대표의 진행과 불손한 태도에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대표단 성명에 이어 상보를 발표한 것은 군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대남사업 담당자들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홍순영 장관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장관에 대한 맹비난은 회담 결렬에 대한 일종의 '화풀이'라는 분석도 있다. 직업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에 처음 나선 홍 장관이 '포용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원칙을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회담

관계자는 "북측 관계자들은 홍 장관이 자신들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국제적 기준과 주고받기식 외교협상 방식

을 고수한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당분간 궤기모임 등 각종 내부행사에서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주민들의 내부 견속을 다잡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최근 들어 '기자-언론인 궤기모임'을 비롯해 분야별로 궤기모임을 빈번하게 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극단적인 남북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퇴로(退路)를 터놓고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6일 성과없이 끝난 6차 장관급회담을 남북간 대결의 구태를 없애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경향신문

2001. 11. 17 (토)

"대북지원 원칙지켜야" 홍통일부장관 강조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은 16일 "(북한에) 물량을 주는 것은 인도적으로 좋지만 우리가 가진 가치와 원칙 아래 평화공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장경제 원칙과 국민적 동의 위에서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낮 KBS-1 라디오에 출연, "6차 장관급회담에서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홍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양곡지원은 할 수 있을 때 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재영기자

사 설 · 칼 럼

.....

.....

사설

소모적 색깔논쟁 그만두라

또다시 정치권에 색깔 논쟁이 휘몰아치고 있다. 할 일 산적한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나라는 소란스럽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세계적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한반도만이 유일한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지금 뒷북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잃지 않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언제까지 해묵은 색깔 시비로 국민을 피곤하게 할 것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치권은 소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색깔 논쟁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물론 북한은 아직도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또 그 이념에 바탕을 둔 무력 적화노선도 여전히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 무력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되며 북한의 어떠한 술책에도 말려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옳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옳은 것은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이끌어내 현실적인 남북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새삼스레 친북, 반북을 따져 뭘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그저 북한을 이용한 정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단지 경계의 대상이자 화해의 대상일 뿐이다.

이번 색깔 논쟁의 발단이 된 김대중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만 해도 그렇다.

전문(全文)을 보면 '6·25가 신라, 고려에 이은 세번째 무력통일 시도'라는 김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노선에 대한 동조 혹은 지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야당이나 일부 보수세력이 거두절미해 이 부분만을 문제삼아 색깔 시비를 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게 도대체 국익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될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여당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야당이나 일부 보수세력이 나름대로 나라를 걱정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될 것을 무조건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붙인다는지 야당 총제를 겨냥해 '확전'을 추구하는 등 신경질적 과잉반응을 보임으로써 색깔 논쟁을 스스로 확대하고 정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각종 국정 현안은 뒤로 미루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아울러 아무리 대북 화해를 위해서라지만 마치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북한의 비위나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 김대통령의 발언 역시 무력통일은 안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해도 굳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구절을 포함시킴으로써 색깔 논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여든 아든 쓸데없는 색깔 논쟁으로 더이상 국력을 소진해서는 안된다.

柳根-칼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반(反)테러리즘 전...

北韓까지 "테러반대..."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푸틴과 정쩌민...

정이라며 확고한 대처를 버렸던 터였다. 그...

하지만 이 둘의 경우보다 몇 배나 더 진...

'反테러'와 '남·북'

합인민들의 정의의 비수... "CIA의 저작...

도대체 왜 이런 흥미진진한 '부시 맞수...

그토록 반발하던 푸틴, 정쩌민까지도 막상...

지구적 규모의 '하나의 시장'에 줄을 대...

과가 전세계인들의 허파를 동시에 빙들...

심과'는 아니다.

'나홀로 민족주의'는 안돼

우리의 경우에도, 작금의 반(反)테러리...

동아광장

남찬순 (논설위원)



北이 '상봉행사' 꺼리는 이유

(了解)사업'부터 하자고 제의했다. 남북...

우여곡절을 겪다가 85년 9월 처음으로...

국 '꽃 피는 처녀'의 남한 공연을 주장...

북측이 자기들 체제에 대해 갖는 불안...

올한 새 차대 상봉행위만 봐도 그런 짐...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드러내

그러다 보니 북측에서는 상봉행사의...

그러나 '상봉행사' 불 행사로만 끝나...

이제는 다 준비된 100명 상봉행사마저...

社說

이산상봉 보류 안될 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돌연 오는 16~18일로 예정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남측이 요청한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방문을 '남측에 조성된 정세' 때문에 보류한다고 통보해 왔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평양행은 위해 방북 준비교육을 받고 선물 꾸러미를 챙기던 실향민들이 허탈과 충격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남북 장관급회담 하루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회담을 무산시킨 적이 있으나 장관급회담에서 상호 합의한 이산가족 교환 방문을 일방적으로 보류시킨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이 제시한 방문단 교환의 보류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

북측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 테러 참사와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으로 인한 국내의 긴장된 분위기와 안보태세 강화를 보류 이유로 내세웠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북측은 테러사태 이후 남측에서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져 예측할 수 없는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는 대화와 내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고 그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11테러사태 발생 직후 남측에 내려진 비상경계령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비상경계태세 외종인 지난달 28~30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장관급회담에 북측 대표단

이 참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와서 남측의 '살벌한 분위기'를 이유로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북측은 이산가족 사업을 보류시킨 채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남북 당국간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정치-경제 현안과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문제를 금강산 육로관광과 전력지원, 철도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협상에 카드로 활용할 생각인 것이다. 이는 이산가족을 인질로 삼아 달력을 챙기는 짓이다. 북측이 지난 3~5일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자회담에서 육로관광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오히려 현대아산의 관광대가 미납금 2400만달러 문제를 거론한 데서 그들의 속셈을 엿볼 수 있다.

어제도 부산에서 방문단에 번번이 탈락된 팔손의 실향민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령의 실향민에게 있어 생의 버팀목인 혈육 재회의 소망을 짓밟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다. 정부는 신의를 저버린 북측에 질질 끌려갈 것이 아니라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식량 40만t의 대북지원계획도 사태의 추이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北의 느닷없는 상봉 연기

북한이 어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교환 방문 일정을 나흘 앞두고 언제 하지는 언짢도 없이, 느닷없이 평양방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북측이 이처럼 돌연히 '뒤통수'를 치고 나온 배경이 석연치 않아 최근에 다시 조성된 남북한간의 중층적인 회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부의 향후 대처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은 미국의 테러 참사 응징 공격에 따른 우리의 경제대처를 이유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제6차 장관급 회담과 제2차 검증추진위 회의,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은 일정대로 하되 금강산에서 하자고 재의했다. 북측이 그렇게 제의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에 새로운 걸림돌을 왜 놓는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지만 북측의 연기 이유는 우선 설득력이 없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응징조치에 따라 촉 일어났지도 못할 외국인에 의한 테러에 대비해 직정한 경제대처를 갖춘 것은 너무 당연한 사전대비책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내년의 월드컵이라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테러 대비는 만전을 기해야 하는 입장이다. 북측이 그것을 어떻게 "6·15 북남 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며, 대화 상대방인 우리측 심히 자극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보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북측이 이 조치의 대상을 자기들일 것이라고 왜 생각하는지가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남측 내부

의 검제강화는 북측이 상봉단과 당국간 회담의 내왕에서 우려하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도리어 크게 낮출 것이다.

따라서 북측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지만 정부측도 그 진의를 몰라 답답할 뿐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북측이 자기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무기 연기하면서 북측에 경제적으로 이로온 결과물 낚을 각급 당국간 회담은 예정대로 열되 장소를 금강산으로 한정하자는 북측 제의 내용이다. 시뻘대로 꾀꿉만 빼먹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해서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홍순영 통일부장관이 일단 북측에 강력히 항의한 전문문을 보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것은 지금까지 북측의 일방적인 위약에 집질 끌려다녔던 정부가 모처럼 순리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시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질적인 북측의 위약(違約)행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측이 깨닫도록 이번엔 직정한 수준의 상호주의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북 식량지원 계획들 이에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직하다.

북측은 이런 식의 뒤통수 치기가 북측을 이해하려는 남측 국민마저 등을 돌리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연기 사유를 우리측이 납득할 수 있게 알려주든지, 아니면 예정대로 방문단 교환을 곧바로 실천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社說

'이산방문' 연기 명분없다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방문을 돌연 연기시킨 북한의 조치는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행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약속을 뒤집는 태도는 그들이 양식 없는 집단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반세기 동안 만나지 못했던 피붙이를 한번이라도 만나봐야 눈을 감겠다는 이산가족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북한이 모를 리 없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어떤 이유, 어떤 핑계로도 결코 미룰 수 없는 화급한 인도적 사안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교환방문단에 탈락한 것을 비판한 고령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시대까지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돌연한 처사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미 약속한 교환방문단의 지체 없는 실행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밝힌 연기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

다. 미국 비행기 테러 사태 이후 정부가 우리 군경에 대해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다.

북한이 이런 우리 내부의 일까지 문제삼는 것은 그야말로 내정간섭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측의 태도변화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억지다. 특히 정부가 보유살 30만톤과 외국산 옥수수 10만톤을 구입해 대북지원하기로 방침을 거론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북한이 더 많은 지원을 거둬내서 부린 땅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려서는 것이다. 어쩌면 북한의 이번 억지가 대북지원 발걸음을 천천히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북한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김대중 정부에 왜방까지 놓는데서야 배운말이 아닌가.

이러니 '퍼주고 뺏맞기' 아닌가

북측이 돌연 16일로 예정됐던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회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방문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라며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라는 것이 가당치 않다. "남조선에서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턱을 대고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 태세가 내려져 예측할 수 없는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측이 말하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도무지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전쟁으로 국제 사회에 불안 심리가 널리 퍼지고 있는 이때 오히려 남북교류에 적극 나서으로써 북측이 바라는 대미(對美)관계 개선의 발판도 마련하고 신뢰감도 조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북측의 일방적인 상봉단 연기로 며칠 후면 북녘 가족을 만남 기대에 반감을 심치던 이산가족의 실망만 더하게 됐다. 얼마 전 80대 실항민이 이어 어제도 광복군 출신 80대 노인이 자살한 사건은 국민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했는데, 북측의 이번 연기 발표는 민족의 염원을 배신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방북이 무산된 사람들 이외에도 기억없는 상봉을 기다리는 나머지 수많은 이산가족의 참담한 심정을 북측은 알아야 한다.

북측의 이번 조치는 '받을 건 다 받고 응당 해야 할 일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북측이 이번 발표에서 10월 중 예정된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금강산 당국회담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그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식량과 전력, 그리고 얼마 전 북측이 새 의제로 올린 금강산 관광 대가 2400만달러 등을 받아내기 위한 회담은 계속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앞으로 두고 두고 쓸 카드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이번에 대단한 악수(惡手)를 썼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일로 남측 여론은 북측에 대한 실망과 분노, 불신만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당장 논의 중인 대북(對北)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여론은 한걸 악화될 것이다.

저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측에 대해 아직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남북 화해협력도 좋은 일이고 관대함도 좋다. 하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퍼주고 뺏맞기' 식의 남북관계를 계속해야 하는가. 당장 식량 지원 문제에서부터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등에서 확실한 대가를 보장받는 쪽으로 일몰 추진해야 한다.

北 '뒤집기病' 또 도지나

북측의 돌연한 이산가족 상봉 연기발표는 코앞의 4차 상봉에 기승설레 하던 실항민은 물론 전국민을 또한번 낙망케 했다. 모처럼 성사된 5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라 이번 만큼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불과 보름도 안돼 무산되어 버린 것이다.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데 이어 나온 이번 연기발표는 북측의 진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게 만든다. 값을 올리려는 것인지 판을 깨려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연기이유로 남한이 테러에 대비해 군·경에 비상경계령을 내린 것을 두고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들고 나온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사태 이후 테러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나라가 경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이것은 이산가족 상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일단 '값을 올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태권도 시범단

교환은 연기하면서 남북경협 추진위와 6차 장관급 회담 등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힌 것은 '값을 올려' 식량지원과 금강산 미납금을 받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이 경의선 복원, 금강산 육로관광도로 개설, 개성공단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이 남한의 요구에 따라 이들 사항을 합의 하기는 했지만 군부의 반발이 워낙 심해 실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편으론 '판을 깨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편에선 '대화 계속'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김대중정부로부터 얻을 것은 최대한 얻겠다는 판단에서 나왔음직 하다.

정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화할 중단을 하겠다는 자세로 남북대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세워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쌀 제공에 대한 국민땀방침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社說

북한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16일로 예정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불과 나흘 앞두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일방적으로 방문단 교환을 보류한다고 발표해 우리 국민과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방문단 교환을 보류하는 이유로 미국 테러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비상경제대처를 강화했기 때문에 북한측 서울 방문단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억지말 부리는 것이다.

지금 미국 대사관과 미군 시설은 전세계에 걸쳐 테러 위협을 받고 있으며, 텔레반은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아프리카정책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보복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남한도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군과 경찰의 경제대처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이유를 북한측이 모를 리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방문단 교환을 나흘 앞두고 보류를 발표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방문단 교환 보류는 우리 군의 경제대처 강화에 대해 북한측이 불쾌하다는 반응의 표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북한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안타까운 지적을 하는 데도 그만한 이

유가 있다. 지금 남한사회는 미국의 테러사태로 인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하등의 안보 위협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를 새삼 주목하고 있다. 즉 이번 미국의 테러사건은 남한사회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크게 해소되고 화해 분위기가 정착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역사인가를 다시 인식하고 평가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남한사회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북한측은 "실질한 경제대처에 있는 분위기에서는 대화와 내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행히 북한은 장관급회담과 경협추진 및 금강산관광 활성화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밝히고 있어 이번 일로 기존의 화해정책기조의 변화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론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점에 대하여 단호하게 따져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한매일

2001. 10. 13 (토)

사설

어이없는 北의 이산상봉 연기

북한이 불과 나흘 앞두고 다가오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을 돌연 연기한 것은 어떻게 쌓아온 남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이 철룡 같은 안보대처를 역설하고 있는가 하면 군부세력들은 출동대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공포가 하늘을 겨누고 아치하면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지역에 민간인들을 보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연기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북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의 남북관계 인식이 여기에밖에 미치지 못하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對)테러 전쟁은 앞으로 세계 질서를 바꿀지도 모르는 지구촌 최대의 사건이다. 그러한 국제상황에서 군의 경제대처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 군의 출동준비 대처를 강화한 것

이 아닌 줄은 북한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부득이한 시정으로 일정을 연기하고 싶다면 다른 이유를 댈 것이지만 굳이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댈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일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은 제2차 이산가족 상봉 때도 일방적으로 일정을 연기했고,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도 회담이 열리는 당일에도 불참을 통고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 이렇고서야 어떻게 신뢰가 쌓이겠는가.

이산가족 상봉은 당국간 회담과는 달리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민족의 과제다. 이제 죽음을 앞둔 나이에 그러한 가족들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던 이산가족들 또한 울게 해서야 되겠는가. 남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추첨에 떨어진 할아버지 2명이 고향을 그리며 자살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북한이 그나마 이산가족 상봉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고 밝힌 데 대해 주목하며,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북한의 돌출 행동은 지금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 발전 논의나 경의선 연결 등 경제협력 분위기에도 일정부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북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정부 부처들도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무엇이 남북의 화해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진정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나 국민들도 북한의 어이없는 '몽니'에 속이 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해와 평화'라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일부 대북 강경론자들도 이쯤 범위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폄하하거나 '남북갈등'이나 '남남갈등'을 부추기까지 맡기를 당부한다.

북한, 또 약속 깨는가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상호방문과 북한 의 태권도 시범단 서울 파견을 연기하겠다는 북한의 일방적 발표는 무척 실망스럽다. 상호방문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다. 꿈에도 그리던 혈육상봉을 실례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이산가족 등 모든 심혈만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 인도주의 사업이라지만 잠깐 만남 뿐인 상호방문마저 이런 식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면회소 설치나 자유왕래는 어느 세월에도 실현될 것이며 이산가족들은 무엇을 희망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내세운 연기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 미국 테러 발생 이후 남측의 군과 경찰이 경계태세에 들어간 것이 어찌서 북측 인원들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달이 넘는 경계태세를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남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북한 내부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가령 현대의 금강산 관광객이 중립된 돈 문제가 기대처럼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데 대해 북한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졌거나 이 때문에 남측에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것일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측의 준비가 미처 덜 된 탓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이유가 무엇이건 북한의 조치가 남북간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 3월 일방적으로 모든 회담을 중단하는 등 수시로 불신을 살 만한 처사를 해왔다. 하지만 이담부터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라 기대를 걸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담 중 잇따라 예정돼 있는 금강산관광 회담이나 6차 장관급회담, 경협회담도 북한이 장소변경 등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서 모처럼 화상화되는 듯하던 남북관계의 전체 회로가 비뚤리고 있다.

남측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방침을 재고하겠다는 등 어느 때보다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당연하다. 북한은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과 중단, 그 자체를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남한사회에 불신만 확산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번과 같은 경우도 자칫하면 햇볕정책에 제동을 걸어온 아담과 보수층에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의 발미를 제공하기 쉽다. 그렇지 않아도 한창 여야 사이에 색깔론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예민한 때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



한겨레

2001. 10. 13 (토)

사설

북, 이산가족 상봉 지체 말아야

북한은 12위 '살벌한 경계태세 하에 있는 (남쪽의) 분위기'를 이유로 16~18일로 예정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 서울 방문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단 회를 통해 "살벌한 분위기에서는 어떤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다"며 "지금 정세 하에서 남조선에 마음놓고 가기가 어렵다"고 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런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남쪽에서 진행돼온 경계태세는 미국 테러사태와 관련된 것이지, 남북관계나 한반도에서 일어난 상황 때문이 아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마음놓고 가기가 어렵다면 남측 정부로부터 신변안전을 다시 한번 보장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 북한은 50년 이상을 기다려 온 이산가족의 고통을 생각하여 그들의 상봉을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이 이산가족 서울 방문의 보류 결정을 내린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북한은 '살벌한

분위기'를 내세웠지만, 그러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북한 의도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지만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이유가 어디에 있건 당국 사이에 약속한 일을 마지막 순간에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테러 등으로 인해 '살벌한 분위기'가 있다면, 오히려 남북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은 상봉을 앞두고 방문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산가족의 그리움과 고통을 깊이 헤아리고 또한 약속은 지킨다는 신의의 측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이행하기 바란다. 그제 테러와 보복전쟁으로 온 세계가 살벌해진 지금 상황에서 남북, 특히 북한에 바람직한 일이다.

북측의 변덕 더 이상 좌시말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16일부터 18일 까지로 예정돼 있던 이산가족교향방문사업과 이 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태권도시범단 교환방문사업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사업보류의 이유에 대해 "살벌한 경계태세하에 있는 분위기에서는 대화와 내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측이 주장하는 '살벌한 경계태세'란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참사와 그로 인해 미국이 아프간을 상대로 대테러 전쟁을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한 안보태세 강화 조치를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도둑이 제발 저런 격이다. 비록 북한이 미국에 의해 테러수출국으로 지목돼 있지만 남측이 경계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북측 보다는 국제적인 테러조직에 의한 공격에 대비한 것이다. 테러에 대한 경계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이며 월드컵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는 남한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남측은 지난달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을 반테러 국제연대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반테러 공동선언을 추진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북측이 이것을 이유로 이산가족상봉사업을 보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 기증스러운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절실한 인도주의 사업은 보류하면서 경협과 관련한 회담은 예정대로

열겠다고 한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받을 것만 챙기고 줄 것은 안 주겠다는 심보에 다름 아니다. 북측은 남측의 대북경협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인 사업에 협조하는 대가이지, 북측의 체재개방을 돕기 위한 보상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남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에서 탈락된 것에 비하면 자살한 사람과, 상봉의 날만 기다리다 지쳐 사망한 사람의 예치로운 사연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지난달의 장관급회담 이후 야당까지 나서 대북 30만톤 쌀 지원을 제한하는 등 분위기가 호전되어가고 있었다. 북측의 이번 조치는 그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적인 반대 여론 속에서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법정책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북한이 약속파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하는 나쁜 버릇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못된 버릇은 협상을 구걸하는 듯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키워진 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다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 이상의 배신은 남측의 대북 불신만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불량국가 이미지를 각인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설치사업에 확실한 보장을 할 때 까지 식량지원은 물론 모든 경협은 중단돼야 할 것이다.

한겨레

2001. 10. 13 (토)

사설

북, 이산가족 상봉 지체 말아야

북한은 12일 '살벌한 경계태세 하에 있는 (남쪽의) 분위기'를 이유로 16~18일로 예정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 서울 방문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살벌한 분위기에서는 어떠한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다"며 "지금 정세 하에서 남조선에 마음놓고 가기가 어렵다"고 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런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남쪽에서 진행되는 경계태세는 미국 테러시대와 관련된 것이지, 남북관계나 한반도에서 일어난 상황 때문이 아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마음놓고 가기가 어렵다'면 남쪽 정부로부터 신변안전을 다시 한번 보장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 북한은 50년 이상을 기다려 온 이산가족의 고통을 생각하여 그들의 상봉을 늦추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이 이산가족 서울 방문의 보류 결정을 내린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북한은 '살벌한

분위기'를 내세웠지만, 그러면서도 "대화과 협상을 발전시키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북한 의도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지만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이유가 어디에 있건 당국 사이에 약속한 일을 마지막 순간에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테러 등으로 인해 '살벌한 분위기'가 있다면, 오히려 남북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은 상봉을 앞두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온 이산가족의 그리움과 고통을 깊이 헤아리고 또한 약속은 지킨다는 신의의 측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이행하기 바란다. 그게 테러와 보복전쟁으로 온 세계가 삼반해진 지금 상황에서 남북, 특히 북한에 바람직한 일이다.



사설

북의 상봉연기와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이 어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방문을 연기한다고 돌연 발표했다. 실망을 넘어 기가 막히는 심정이다. 상봉단 탈락에 실망한 노인들이 자살까지 택하는 이산가족의 고통과 절망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북한식 협상전략의 본질, 이런 북한을 상대로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등을 다시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망할 필요조차 없다는 '역설의 교훈'을 떠올려본다. 북한은 남쪽 주민들의 이같은 '심리적 저류'를 똑바로 읽어야 한다. 정부도 더이상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쪽의 인도주의적 배려, 민족으로서의 도리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들을 심한 표현이긴해도 발로 찬 격이다. 뒤뚱수름 가격했다. 남측은 전대미문의 미국 테러시태속에서 테러국가 명단에 올라있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백안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배려의 일환으로 반테러 연합조직임이 본격화했던 상황에서도 북한의 제5차 장관급 회담을 수 용했다. 반테러 선언도 함께 채택하자고 제안했었다. 30만의 쌀과 옥수수 10만t 재공도 사실상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북측이 되돌려준 것은 지난번 회담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합의한 이산상봉 계획에 대한 연기 조치였다.

그것도 남쪽의 반테러 경제태세를 밀미로 삼았다. 북측은 '살벌한 경제태세' 때문에 이산상봉과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방문이 어렵다는 것이다. 도대체 반테러 움직임과 이산상봉이 무슨 연계성이 있는가. 북측은 미국 내의 테러시태를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남쪽이 이에 '턱을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측이 유엔에서까지 했던 반테러 언급은 무슨 얘기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윤배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와 서방세계가 따귀를 맞은 셈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차제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성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북측이 이처럼 만만하게 대하고 있다. 불과 나을전에 상봉 연기를 통보하는 것을 보면 예의나 절차도 안중여 없다. 북측이 제5차 장관급 회담, 금강산 관광 회담들은 당초 예정대로 열자고 나왔으나, 북측이 경제협력여론 관심을 보인다면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대북 식량지원도 재고돼야 한다. 더 이상 대북지원을 삼득할 수 있는 기반도 잃어가고 있다. 긴장한 화해조치를 동반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대북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런 북한의 행동은 정부의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는 여론을 읽기 바란다.

國民日報

THE KOREAN DAILY GORB

2001. 10. 13 (토)

사설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하나

'끈기'와 '인내'. 우리가 남북관계를 꾸려오는 과정에서 이 두 단어만큼 필요성을 절감하는 말도 없다. 북한이 남북한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가 하면 한편으론 터무니없는 주장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50여년간의 분단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대화가 결코 순탄하지만 않을 것이라는 인식 위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위해 애써 왔으며 남북대화에 힘써왔다.

우리는 또 다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2일 북한은 16~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4차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사업을 연기하고 태권도시범단 서울방문을 보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지난 3월 북한의 느닷없는 불참공고로 무기한 연기되었던 장관급회담이 지난달말 6개월만에 재개되면서 남북대화가 다시 본격화된 것으로 기대되었던 만큼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그간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어온 사업이었기에 정부의 실망도 작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실행민들에겐 더 없이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사실 실행민들에겐 허무가 급하다. 그들은 남로 연로해지고 있어 더 이상 후임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다. 실행민들은 겨우 100명씩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산가족 상봉단의 규모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라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느닷없는 북한측의 연기통보라니 참으로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심지어 최근엔 방북단 선정에 누락된 것에 비관한 실행민들이 자살을 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홍순영 통일부 장관을 시켜 북한측에 강력한 항의 전문문을 보내게 한 것은 저

절한 대처였다. 사실이지 북한측이 연기 사유로 거론하고 있는 '남한측의 살벌한 분위기' 운운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면 서도 북한측은 끝 이어 열 각급 당국자간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실속없는 이산가족 상봉은 미루고 활동적 실리를 얻어 낼 수 있는 당국자간 회담은 이어가겠다는 알파한 의도를 내보인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북한측은 이해할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사업 연기 주장을 거두고 신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남한측 역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격결히 대처함으로써 북한측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인내할 만큼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만 다닐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시킨 바로 다음날인 13일 "남북 관계는 힘들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의 '일방적 연기'에 '인내심'을 들고나온 대통령의 뜻은 분명하다. 어떤 조건이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 있더라도 북과의 접촉은 끊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언제까지든 북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인내하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북의 안하무인적인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자존심과 분노는 이렇듯까지 않고 집권여당이 '이산가족문제와 쌀지원은 별개 문제'라며 쌀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이산가족 상봉연기는 북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연기일 뿐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이제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본궤도를 이탈하는 느낌까지 든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북한이 자신들이 마음내켜하지 않는 이산가족상봉은 멋대로 연기하면서 당국자회담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꽃같은 계속 빼먹겠다'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저기에 매달리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똘똘 본질적으로 남북대화란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대화가 가능한 한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하는 대화, '대화할 하면 합수륙 국민 자존심이 상하는 대화'는 결국 아무런 소득없이 끝난 뿐이다. 지금까지 이 정권은 북측이 하라는 대로 해왔다. 직십자총재도 길아주고 북의 누가 무슨 소리쯤 해도 받아줬다. 더 나아가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변명에 급급하면서 무엇이든 못 쥐서 안단이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줬다.

심지어 북측은 이런 남측의 약점을 잡아 '단순히 회담장에 나오는 것'만을 조건으로 비료와 식량을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도 당국회담은 깨지 않을 테니 6차 장관급 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 2차회의, 금강산관광 환상회담 위한 2차 당국자회담을 '안전한 금강산'에서 하자고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식이다. '인내'와는 상관없이 이 같은 대화구조는 깨야 한다. 정부는 '햇볕정책은 전세계가 지지한다'고 허장성세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과 실리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껏 인내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

사설

이산가족 교환방문부터 실현돼야

북측이 지난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회담회를 통해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과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은 이치구니 없는 일이다. 북측이 방문단 교환의 보류 이유로 '남조선에 조성된 정세'를 거론한 것도 그렇지만,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이를 정식으로 전달하지 않고 북측 방송으로 먼저 알린 것은 기본적인 예의마저 지비된 행위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설 민회소 설치에 겁내 외면하면서 방문단 교환 약속마저 이렇게 지판개로 이행하지 않으니 무얼 믿고 대화를 계속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경과를 환영하면서 '합의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합의했던 약속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북측의 행태가 우리의 신뢰를 잃지 못한 탓이었다. 북측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보류하면서도 겸습추진위원회와 금강산관광 환상회담 위한 당국자 회담 등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하겠다. 이는 북측이 기피하는 사회·민간 교류는 줄이고 자신들의 경제실익을 챙길 당국자 대화는 계속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북측이 서울은 불안하니 안전성이 담보돼 있는 금강산에서 회담을 갖자고 나오는 것은 당차도 않은 일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가 점차 커지고 더 이상 퍼주기식의 대북지원은 곤란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음을 북측도 폭넓게 알아야 한다. 북측의 이같은 태도는 오히려 국민여론을 악화시켜 대북지원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내에서도 이산가족 방문이 일방적으로 보류된 상태에서는 당국자 회담을 연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식량지원을 먼저 제의했다가 상환변화에 따라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북측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의 방향이 옳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 식량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북측이 최소한의 선의마저 보이지 않는 태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측의 태도 변화를 보이기만 당국자 회담 여부를 결정하고 식량지원문제도 이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북측은 하루 빨리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 가능해지도록 당초 약속을 이행하는 선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社 說

대북식량지원의 한계

북한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보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식량 지원은 인도적 사업이고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 연기 사태로 대북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북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다뤄나간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아담은 당초 지원 입장을 바꿔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때까지' 쌀 지원을 해선 안되며 이번 기회에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포용하는 햇볕정책을 국민 대부분은 지지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북이 상호 신뢰관계를 쌓은 기반 위에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우리는 이같은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를 돕기 위해 쌀을 지원하되 정부와 여당이 선분별 결정을 내리지 말고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원점 회귀 주장은 남북관계의 검색을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상급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미국 주도의 대(對)대러 국제연대가 구축되고 아프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데다가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의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남북관계의 악화는 안보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대북 쌀지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면서도 북한에 장기차관 형식으로 지원키로 한 30만t 외에 정부 보유미 30만t에 대한 대북 구상(비터)무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 역시 조급한 태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위약엔 분명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

정부가 북한이 이담중에 예정된 검토허진위원회 등 남북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고집할 경우 모든 남북회담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조급히 성과를 내려는 태도를 버리고 내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 바란다.

世界日報

2001. 10. 16 (화) 서 지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을 결정하는

한겨레

2001. 10. 16 (화)

사설

답답한 북한, 감정대응은 삼가야

북한이 '남조선 정세'를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유보하고, 다른 회담도 '안전한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하자 정부는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9일로 예정된 금강산 관광 활성화 회담 위한 2차 당국회담을 설악산에서 열 것을 촉구 하고, 북한이 끝내 금강산을 고집하면 회담 무산도 감수한다는 자세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빗나가기 시작하면 이미 결정한 대북 쌀지원도 당분간 늦춰질 개연성이 크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북측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보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힌 바 있다. 쌀 값이 얼마 남지 않은 실향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약속 위반은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용납하기 어렵다. 또 앞으로 남북회담을 '안전한 금강산'에서 열자는 제의도 전례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러지 않아도 남쪽에서는 '북쪽

에 끌려 다닌다'며 대화 진전을 못마땅해하는 세력들이 '반대할 구실'을 찾지 못해 안달인데, 북한이 이치법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편다면 남북 회담을 추구해 온 사람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견제해야 한다. 북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합의를 백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북녘 동포들의 굶주림을 덜어주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식량지원을 취소하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북측 당국에 섭섭한 것과는 별도로 식량은 지원해야 한다. '굶주림은 정치적 모른다'고 하지 않는가.

대북 쌀지원을 정부·여당에 앞서 제의했던 한나라당이 북한의 약속 위반을 빌미삼아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쌀 지원 반대쪽으로 기울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처럼 내놓은 옳은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재고해야 한다.

"생포하든 죽여서든 법정에 세우겠다." 9·11 테러 직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말은 흡사 서부 개척시대 총잡이의 그것이었다. 테러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지난 20일 그의 의회연설은 세계를 향한 포고였다. "모든 나라와 지역은 우리와 테러리스트들 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 전쟁에서 미국쪽에 서지 않으면 테러에 대한 자유수호를 거부하는 '적대국'으로 간주한다." 그의 입김이 세계 각국이 줄줄이 '신앙고백'을 했다. 미국과 일심동체로 본연히 복수의 깃발을 든 나라들이나, 선대의 여지 없이 미국과의 항전을 선언한 나라들은 그렇다 치자. 테러는 악이로되, 전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믿는 많은 나라들도 복비권이냐 말비권을 뽑여지는 없었다.

국익을 위한 원시의 질주

세상스래 어느쪽이 물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허리는 게 아니다. 미란다법칙도 죄형법정주의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체급의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 국제정치 무대란 얼마나 엄혹하고 기계한 곳인지 뼈저리게 느낄 뿐이다. 국익을 향한 각자의 질주가 있을 뿐인 이 원시의 정글에서 우리는 어떤 감성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남북이 잡린데다 미국을 비롯한 4강의 이해가 얽힌 한반도에 기어 더 옮겨 탄기 복잡한 밧잡살이다.

아침.행.발

지영선 논설위원



테러와 이산가족

오늘 시작될 여정이었던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불고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남을 50년 동안 기다려 왔을 나이 많은 이산가족들의 실망과 허탈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렵사리 이룬 당국간 합의를 이라도 쉽게 깨버린 북쪽의 행태는 회해를 지지해 온 이들에게까지 분노와 짜증을 불러 일으켰다. "남조선에서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턱을 대고(근거를 두고) 전군과 경찰에 비상 경계대세가 내려져 연속할 수 없는 상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이나 태권도 시범단 서울 파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북쪽이 내놓은 이유다.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엄중한 명제다. 정부도 '남북관계가 한동안 냉각기에 빠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진에 없이 감경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쪽의 실정을 뒤집어 보면, 이산가족 상봉을 치러낼 수 없을 만큼 긴장된 분위기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하는 아프간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테러를 지원하느라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운명을 같이할 각오를 하라"는 상행에서 아직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들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번 사태의 긴장도 강도가 예상되지 않으리라.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던 한-미 합동 팀 스포카리트 훈련이 우리에겐 엄폐적인 '받아 훈련'이었지만, 북한은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로 받아들였던 사실을 기억해 볼지하다. 북한은 9·11 테러 직후 테러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유엔에서도 미국 테러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테러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유엔을 통해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대처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하거나 지역의 정세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을 통한 테러와의 투쟁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국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래도 대화는 지속돼야

북한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류를 지연시키는 실질적인 이유는 감강산 판관대금 지급이 순조롭지 않은 데 대한 입력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로서는 인도적 견지에서 최우선 순위의 남북교류 사업이지만, 북한으로선 체제의 안정을 짐식할 위험이 있는 탈감지 않은 사업인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 변화에 끌려 다닐 필요는 없지만, 합의를 이긴데 대한 실망과 당혹에서 한걸음 물러나 북한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한쪽의 잘못된 행태를 짚고 넘어가되 대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엄혹할수록 남북 회화는 다른 누구에게 기발 수 없는 우리 민족끼리 해나 할 일이기 때문이다.

yjsh@hani.co.kr

대한매일

대한포럼

상식 벗어난 북한 상대하기



김경홍 논설위원

"부처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는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강하게 대하는 것이고, 셋째는 부도러우면서도 강하게 대하는 것이다. 누군가 물어왔다. 그 세가지 방법으로도 다룰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니까, 죽여 버린다. 삼생은 나쁜 것이지만 이 세가지 방법으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다시는 그와 함께 말하지 않고 가르치거나 혼내지도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어찌 죽이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국내가 어

수선하다. 지금쯤 이산가족들이 열세이고 눈물을 흘려야 할 텐데 준비된 눈물마저 거부당하고 있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북한의 어이없는 결정의 속내를 짚어보며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최선을 다해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니 기가 막힐 것이다. 그러자라도 국내의 비판세력들이 뽑만 있으면 끔찍해대는 외중에 북한마저 이렇게 나오니 '안락 갑사등어' 한국이다. 모처럼 이남의 한조로 순조롭게 추진되던 대북 쌀지원 문제도 다시 도미위에 올랐다.

정부 대북정책 기조는 옳아

정부-여당은 이산가족 상봉 연기와 잡지 원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졌지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일부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은 왜 이리도 우리들 속삭이게 하는가. 또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쉽게 무너뜨리려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 기조는 옳다.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평화'는 돈으로 재량할 수 없는 한반도의 자산이다. 햇볕정책의 효과는 국민들이 진정보다는 명회들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게 했고, 북한이 두렵거나 기피할 상대가 아니라는 짐을 알게 했으며, 외국인들이 한반도가 전쟁위험지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합치는 미지수다. 포용정책은 우리의 차지에서 포용정책이지 북한의 차지에서 그 의미가 다를 것이다. 이산가족이나 식량지원 문제는 남쪽에서 볼 때 인도적인 사안이지만 북쪽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사안이다. 문제는 정부당국이나 국민들이 북한을 잘 모르거나 북한의 차지에서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했다고 해서 쌀지원 문제를 협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 정부당국은 부드럽게 대하고 나눠주면 북한이 고미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 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북한의 상식과 우리의 상식이 다른 데도 우리의 것대로 병기하지 않았는지도 짚어 봐야 할 것이다. 상신의 영해침범이나

이산상봉 연기나 하는 행동을 남쪽에서는 '돌출행동'이라고 우왕좌왕하면서 심지어 곡론분열까지 감수해야 한다. 북한전문가들도 북한의 의도나 속셈이 뭔지를 분석하는데도 북한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새롭게 다듬어야

우리의 대북정책 당국자들이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고위층이나 정치권에 성과를 보고하고 과시하는 데 정책 추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니듬의 '행동 양식'을 무조건 들춰내며 처부해버리는 것은 이남의 '뭔가 보여주기' 위해 남북관계를 서두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북한을 잘 상대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다. 남북관계를 일일이 사안별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포용정책의 확고한 기조위에서 인내와 실천이라는 장기적 전략으로 인해야 할 것이다.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는 묵묵히 실천하고 당국간 대화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조급한 마음은 버려야 한다. 침묵이나 무관심도 최대의 전략이 될 수 있다.

hork@daily.com

김정일의 패착

時論



윤창중
논설위원

도 한번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도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심지어 자본주의적인 정치 형태를 보여왔다면 남쪽은 완전히 뒤집어졌을 것이다. 단연한대 남쪽에서는 모든 면에서 '군함'이 깨졌을 것이다. 사실 김위원장의 면모가 남쪽에 공개된 것은 단 두차례에 불과했다. 남북정상회담 때 한 차례, 그후 남쪽 언론사 사장 단 면담 때 한차례 뿐이었다. 그런 정도에도 남쪽에는 해방 이후 최대의 이념적 혼란이니 뭐니 하며 진풍경을 겪고있다.

여건대, 지난 8-15 평양축전 행사때 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남조선 대표단이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개막식에 참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약속은 지켜야한다.' 이런 얘기가 전달됐다면 남쪽의 보수층도 완전히 '매료'됐을 것이다. 그러나 아예 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참

가를 유인했다. 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NLL) 침투시간 차를 주기적으로 남쪽 보수층의 우려를 확인시키고 있는 장면이니 김위원장이.

남쪽의 보수층이 김위원장에 감사라도 표해야할 정도로 그는 임종하게 나오고 있다. 김대통령은 보수층의 반발에는 꼼꼼하지 않았지만 김위원장이 이렇게 나오니 어쩔수 없이 햇볕정책을 속도 조절할 수 밖에 없는 관혹스런 상황에 놓이곤한다. 햇볕정책의 '브레이크 역할'을 다름 아닌 김위원장이 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치권이 보수층의 눈치를 보면서 할 30만과 옥수수 100만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간신히 '작동'을 만들어 놓았다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김위원장이 남쪽을 실망시킬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관계는 북한의 '국가적 재기'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안

보'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쪽과의 화해-협력보다 정권안보가 더 절박하기 때문에 남쪽 대표단이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주민에게 보여 주고, 상선을 침투시켜 군부들 다독거리고, 이산상봉을 무산시켜 남쪽을 골탕먹일수 있는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남쪽과의 경제협력은 국가적 재기에 활용하려는 장기적 안목에서 보다는 자신의 정권 재기, 정권안보 강화에 이용하려하기 때문에 남쪽으로부터 즉각적 성과물들을 가져가려한다. 그러다가 남쪽의 지원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번처럼 인도주의 문제까지 겹고 넘어지고 있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것은 김위원장의 대단한 착각이다. 남북관계는 김위원장이 언급한 것과는 달리 내내심을 가져야할 쪽은 우리쪽이 아니라 오히려 북쪽이기 때문이다. 남쪽의 남북합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검찰도 얻어내고 정권유지도 하겠다'는 그의 전략을 이미 남쪽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참고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쪽이 북한에게 지원해주고 싶은 상의가 없어진다면 북한은 진짜로 가져갈 것이 없게된다. 정권안보니 뭐니 있을 수도 없다. 김위원장은 남쪽을 제대로 봐야한다.

북한이 돌연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친내 자신의 '필진'까지 모두 드러내는 것을 보게된 것은 다행스럽다.' 남쪽에서 상봉연기에 가장 실망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김위원장의 대남전략이 남쪽과의 경제협력에 있다해도 합의해놓은 인도주의 문제까지 외면한다는 것은 김대통령조차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니중에는 남북문제의 인내력을 강조하면서 냉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지만, 즉각적으로 상봉연기 조처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려고 내각에 지시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상봉연기 조치는 남북 사회에서 김위원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갖게했다는 '역설의 의미'에서 다행스럽다. 불행은 반복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하급 이산가족의 고통과 절망의 심화속에서 김위원장에 대해 근본적인 시각교정을 할 수 있게된 것은 물론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남쪽에서 매우 '깊진 교사의'를 맡고있다.

만약 김위원장이 6-15 정상회담이후 기하있을 때마다 남쪽의 '국유-반봉일 세력'

東亞日報

남선과 6-25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질적인 체제간의 투쟁은 시민전쟁과 국가간 전쟁의 양상을 혼합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질적인 이념을 가진 정치집단간의 국내적인 투쟁도 객관적으로는 국가간 투쟁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업진이 자리잡게 되면 타협은 어려워져 서로 상대방의 체제 잔복이 불가피하게 투쟁의 목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강대국 차원에서 냉전이 끝난 것은 궁극적으로 한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아직도 이런 성격의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이런 조건에서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전략을 통해 남한의 체제 붕괴를 기도해 온 데 반해서 남한은 방어적인 전략으로 대처해왔다. 전쟁 원인에 해당하는 갖가지 테러를 감행하면서 북한은 즐기게 남한의 체제 잔복을 피해 왔고, 그 결과로 테러국가로 지칭하는 '불량국가'의 리스트에까지 올라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의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이런 상황의 변화를 모색하는 이른바 햇볕정책을 실현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北 정세성 불공우려 '상봉' 미뤄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동시다발 테러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구동성으로 그 행위를 문명세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거나 인류 전체에 대한 침공이라고 규탄하고 나섰으며 보복이



테러와 북한의 딜레마

아닌 단죄(斷罪) 목적의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느닷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키면서 다른 회담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통고해 왔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경제적인 큰 대가를 바라고 취한 행동이라면 식량 지원을 남한에서 발표한 것으로 그 정도의 행사는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이 인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테러라는 것과 정반대의 것이다.

현재 시점의 시정에서 만약 '인류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킨다면 북한으로서는 과거의 테러행위에 대해 재기할 수 있는 시과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또한 사과를 한다면 모든 징책 초점

을 맞추고 있는 미국에 굴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지못해서 테러를 규탄하는 심판을 내면서 얼마 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바로 그 뒤를 이어 남쪽에서 소수에 의한 공격 반대 시위가 있기는 했으나 면죄부를 받아 빠져나가기에는 막중한 현실적인 압력을 뒤집을 수 없는 남쪽에 봉착한 것이다. 더욱이 생화학무기가 북한에서 미국에 대한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 세력에 공급됐다는 설조차 분분한 판이다.

'인류'와 '테러'라는 양자간의 모순을 부각시키게 될 이산가족 상봉은 현 상황에서는 북한 존재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지원을 천명하고 나선 것도 면죄

부를 받으면서 진북 전략을 지속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테러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이산가족 상봉은 어려울 것이며, 국제 여론이 분열되는 시점까지, 북한은 기다릴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정부의 對北 시각에 의구심

북한의 그러한 정체성 위기를 놓고 보면 김대중 정부가 근년에 보여준 일련의 행위들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충기념식에서 지금까지의 예를 벗어나서 현충탑을 돌리고 기념식을 거행한 '상징적' 행위. '6-25는 통일 시도'라는 발언, 일본인 납치범까지 우방의 요구를 무릅쓰고 잠가수송함에 포함시킨 것, 국가보안법에 걸려 있는 인사들을 8-15 방북단에 포함시킨 일, 그 일로 불신임된 사람을 즉각 핵심 요직에 다시 임명한 처사 등을 놓고 보면 장군들이 분기한 것, 국회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발언이 나온 것, 그리고 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정도의 의사가 표출된 것 등은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보아 넘기기에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치명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의 햇볕정책은 테러사건으로 말미암아 불량국가를 지낸 채 존 결과가 되었고, 북한은 북한대로 인도적인 명목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방향이 모두 정체성의 문제에 당면한 지금, 이쪽만이라도 시원한 대답을 내놓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 국무총리)



지원절차를 밟고 있던 중 북한의 합의의 파기로 매우 당혹해하고 있다. 제4차 이산가족상봉이 유보됨으로써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남남갈등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2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밝힌 이산가족 상봉과 태권도 시범단 교류유보 통보의 배경을 읽자.

첫째, 미국의 반테러 움직임과 한국의 반테러 대비태세에 대한 위기인식의 겹개로 볼 수 있다. 부시는 미국의 아프간 공격에 따른 전

회) 사조의 침습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남북당국간 대화의 장소를 금강산지역으로 일원화하자는 북한의 주장이다. 북한은 향후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는데 따른 체제이완을 막기 위해 남북대화의 장소를 금강산지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 내부의 강온파간의 갈등에 따른 남북교류의 유보조치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용순 대남 담당비서 등 대남협상파의 남북관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미국의 참관관행정부 말기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당시 북-미대화의 시기를 놓쳐 관계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대화시기 놓치면 손해

마침가지로 남북관계에서도 김대중정부와의 대화시기를 놓치면 상당기간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 향후 우리의 국내정세도 남북문제보다는 차기 대선과 관련한 '소용돌이'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대량의 식량지원도 어려울 것이다.

만약 내년 말에 있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미국의 부시정권~일본의 고이즈미정권~한국의 '보수정권' 등과의 강강-보수적인 대북 3각공조체제가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숨쉬기 어려운 정도의 압박감과 위협을 받을 것이며 경제재건도 어렵게 될 것이다. 이제 북한에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한지도부의 올바른 정세판단을 기대해 본다.

/동국대학교수·북한학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북한 정세인식의 문제점

북한은 지난달 중순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조성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잔고 끝에 연기했던 제5차 장관급회담에 나와 끊겼던 각종 대화채널을 다시 연결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양한 대화 접촉을 합의한 지 한 달도 채 안돼 남쪽의 반테러 대비태세를 문제삼아 이산가족 상봉과 태권도 시범단 교류를 유보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테러 응징에 과민반응

우리 정부는 제5차 장관급회담의 재개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코자 모처럼 아담의 동의 아래 30만1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력공백으로 오히려 북한의 오판을 우려하고 있으나, 테러지원국 명단에 유려 있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반테러 움직임이 북한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위기인식을 반영하여 '과민반응'을 보인 것이다.

둘째, 북한은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체제이완현상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돼 남북 주민들간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집단주의사회)에 대한 남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개인주의사

계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 관공대가의 미지불과 전격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군부의 불만이 반영돼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북한의 사상이론적 조짐 없이 지도자의 견단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안은 채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으로써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社說

금강산 회담 안한다더니

북한이 남북 장관급회담 등 3개 당국자회담을 금강산에서만 하자고 계속 고집하는 것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과 북에서 회담을 교대로 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에도 맞지 않음 뿐더러 그들이 그 이유로 엄중하게 "남한은 불안하니 안전한 금강산에서 하자"고 내세우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북한의 이런 재의에 처음에는 발도 안된다며 손사래를 치던 당국의 태도가 슬그머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금강산에서의 당국자회담을 제의한 북한에 대해 남한측이 의제외였으나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진풍문을 보내오자, 정부 일각에서는 금강산회담에 응하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할 어떻게든 진전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북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는 말로 장관급회담을 받아들여야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는 실종되고 남북 대화는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갈 판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전세계적인 테러공포 속에 우리 군경이

비상감계령을 내리고 미군이 반일의 사대에 대비해 공군전력을 증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그것을 구실로 내세우는 것은 노리는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금강산에서 회담이 열리면 이세를 몰아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고, 회담이 무산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회담결렬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조건이 참러해도 남측이 쉽게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강함을 억이용한 측면도 있다. 남한의 속내를 훤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금강산을 계속 고집하는 또다른 이유는 금강산 관공대가 미납금을 받아내기 위해 현대를 간접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국간 회담을 계속 금강산에서 열게 되면 금강산의 중요도가 부각되고 그에 따라 현대가 그만큼 시인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뽀얀뽀얀 시일은 뽀얀뽀얀 부대사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금강산에서 북한이 부득불 회담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정이 이러인데도 정부가 일관성이나 원칙도 포기한 채 계속 북측의 의도에 끌려가는 것은 이제 더이상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중앙일보 2001. 10. 22 (월)

사설

북한, 책임전가 할 때인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및 각급 회담의 연기 책임을 남측에 다시 뒤집어쓰며 남북간 대화 및 협력에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세심 의심케 하고 있다. 북측은 그저 조경룡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이 연기된 까닭을 남측의 '비정상적인 긴장 조성 행위'에 거둔 들켰다. 때문에 각급 회담도 금강산에서 열려야 한다고 되풀이 주장했다. 북측은 더욱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는 자기들의 제의를 우리측이 거부해 상봉 일자가 늦춰졌던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마치 남쪽이 상봉행사에 미온적이었던 듯이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억지에 불과하다. 우리의 경제대세 강화는 미국 테러 참사에 따라 주요 국가가 취한 국가안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북측이 왜 그것을 자기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짐작

하는지가 오히려 이상할 뿐이다. 그리고 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측이 추석 상봉을 뒤로 늦추지 못한 것은 북측을 배려한 것임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세차례 이산가족 상봉의 준비과정에 비춰볼 때 북측이 12일간의 준비 기간으로는 행사를 차질없이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리측 배려를 접수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엄중하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남 비방에 나선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은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상하이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국가원수들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왜 내고 있는지를 상찰해야 한다. 북한은 상봉과 각급 회담을 합의된 대로 바로 정상화해 남북관계를 순항시켜야 한다.

대북정책 공조 강화해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지난 20일 '보도 제811호'를 통해 자신들이 제안한 회담일정을 받아들여달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그 제안내용은 제2차 남북당국자 회담과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각각 25일과 다음달 5일로 연기하고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개최하되, 모두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한 것이다. 북측은 '남측이 비정상적인 긴장조성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이산가족 상봉은 언제 실시할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측 조평통의 촉구는 지난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응수로 보인다.

김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잘 되면 미국과 공동으로 큰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듣고자 했고 김 대통령은 주로 설명하는 쪽이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이미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했는데도 북한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부시 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 때 보여준 대북한 불신감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표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미국의 대북한 불신감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 이후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간에는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을 놓고 북한과 미국, 국내의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북한은 '무엇인가 노림수' 때문에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최근 북한의 태도로 보아 당분간 대화를 기조로 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전망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9월 11일 미국 연쇄 테러사건 이후 국제정세는 격변하고 있다. 북한도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수동적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개방적 입장으로 나와 평화와 안전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또 임기 말을 맞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시간에 쫓기기 보다는 정보 공유와 실득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오만을 막고 한반도 화해와 협력 기초가 유지돼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世界日報

2001. 10. 22 (월)

社說

대북 협상 원칙 지켜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후 남북 당국자 회담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미국의 테러 참사 이후 국제적인 반(反)테러 연대가 구축되고 있고, 북한이 여전히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 당국자와 민간 차원의 대화와 교류가 조속히 재개돼야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북한이 6차 장관급 회담과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금강산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자 회담 개최를 누차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대화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의 테러 비상경계령'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변한데 이어 엇그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장관급 회담 등 모든 당국자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거듭 주장하는 데는 북측의 대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노동신문이 '가짜 인도주의 모자를 벗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측이 최근 살벌한 사태를 조성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방해해 놓고는 인도주의적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

당초 평양으로 돼있는 장관급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변경하자는 북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다. 정부 입장에서 남북대화 창구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금강산 개최'를 수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지만 '평양 개최'의 원칙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당부한다. 장관급 회담은 지금까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개최돼왔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금강산엔 회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회담에 적합한 장소가 아님을 북측도 잘 알고 있다.

남북 회담이 개최 장소 문제 때문에 열리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나 그 책임은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서로 합의하고 약속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다. 북한은 당국자 회담의 금강산 개최 주장을 철회하고 먼저 무산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남북간 상호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

세계포럼



劉又根

남북한 단국이 장관급 회담 등 3개 단국지회담의 개최 장소 문제를 둘러싸고 2주째 제의→수장제의→재봉보의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북측이 "서울은 테러 비상경계태때문에 불안하다"며 모든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고 주장하는 데 맞서 남측은 관례대로 평양 또는 실안산 개최를 재의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압박적으로 안기한 데 이어 회담장소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노라면 단기간 남북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한 것 같다.

국제정세 급변 '숨고르기'

장부기 장관급 회담의 인기를 각오하면서도 평양 개최 원칙을 고수

한 것은 잡힌 일이다. 그동안 남측이 북측의 납득할 수 없는 요구도 민분없이 수용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비판에 북측의 '버텨'만 나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면 대북협상에 원칙을 갖고 단단히 옹호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북측이 금강산 관광대가 미봉금 2400만달러를 받아내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고 육로관광 특구지정 등에는 군부의 반발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터라 당

오래 계속될 경우 우려할 사태가 초래될지도 모른다. 북한의 '바람잡이'는 이제 먹혀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핵재개가 여전히 생존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북한이 협상의 '진술'에선 이겼으나 '진각'에선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미국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며 실리를 취해온 북한이 지난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화제의 이후 계속 기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부시 대통령이 최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대남 및 대미 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협약 능력은 제한돼 있다.

북한 경제 '말빠진 독'

또 북한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국가들을 중심으로 매년 6000만달러여치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테러전쟁으로 무기 판매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의 지원 없이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부실기업이다. 북측 금강산 회담 대표단장이 "금강산사업이 말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토로했지만 북한 경제 자체가 말빠진 독이다. 오래 끌면 끝수밖에 남음이 없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중러의 지원에 힘입어 어느 기간 경제 안정을 해갈 수는 있으나 파산이 불가피하다. 조속한 구조조정, 즉 개방개혁의 길을 갈아야 한다. 북한은 테러 전쟁이 진행되는 국면까지 기다려 기회를 엿보고자 하는 듯하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차우세스쿠가 된 것인가. 덩샤오핑(鄧小平)이 된 것인가. 김 위원장의 결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논설위원

金正日の 선택

국지회담을 해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북한이 회담장소와 금강산으로 고집할 뿐 회담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남북과의 대화 창구를 완전히 닫아 버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최근 미국의 테러참사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를 감안한 '숨고르기'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미국의 대(對)테러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인데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착상태가

근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직전 아시아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김정일 국무위원장에게 서울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의심 많고 비밀에 싸인 사람'이라고 혹평한 것에 대해 북한 단국이 '외교 의례를 무시한 경솔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김 위원장의 자업자득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장제민 중국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중국 러시아 등 '힘제국'과 북방

외교적 수사(修辭) 가운데 '동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Agreed to Disagree)'란 말이 있다. 쉽게 말해 협상이 깨졌다는 말이다.

이에 대응되는 경우에 '동의하기 위해 합의하지 않았다(Disagreed to Agree)'는 수사가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신교조의 유행어가 있긴 했지만.

지난 12일 북한이 남한의 '실명만 경제대세'를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일방적으로 보류한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사업 외에 장관급회담이나 경협실무회담은 예정대로 열자고 했지만 이것마저 개최장소를 당초 약속된 평양 대신 금강산으로 하자고 그를 빗대어 바꿨다.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엮 것인지와 대책 식량지원율 대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북한의 엄치없는 약속파기

정부 내에서는 예정대로 식량지원을 해주고 장소에 구애 받지 말고 남북회담도 하자는 얘기가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파 경제대세 사업보류의 구실로 삼은 것이다. 가장 결백한 인도주의 사업을 보류하며 견제대회만 하겠다는 것이다. 장소도 그렇듯 빗대어 바꾸는 것 등은 너무나도 흔한 대화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이전에도 약속



임종건 칼럼

대화를 위한 단절

파기할 식은 죽 먹듯이 해왔다. 연초 장관급 회담 때는 개최 예정일 이전에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없이 불참했다.

이번의 이산가족 상봉사업 보류도 그런 변덕의 연장선에 있다. 이런 상태에선 대화에 의미 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몇몇차례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은 맞다. 그러나 몇번을 너무 강하게 오래도록 쫓으면 자멸이 된다. 때론 '구멍으로 북쪽으로 흐르면'이 기적적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햇볕정책' 뒷은 지나갔지만 북한 위성지들의 정심상태가 사망한 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든다. 김일성-김정일시대 그들은 자존심이나 체면을 생각했다. 굶는 한이 있어도 구걸 하진 않는다는 '주체적' 오기가 있었다. 주민을 먹여살리기도 어려운 형편에 남한에서

수해가 나지 않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자존심을 내면개천 모습이다. 자연재해를 맞으면서 남한은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에 지원을 달라고 손을 내민다. 그것도 말걸 놓은 것을 달라고 한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속담, 빚인자는 팔리도 용서받지 아이에게 무엇을 주어서 담대하는 것이 우리네 부모들의 소신이다. 그러나 서양의 부모들은 대개 그런 아이에게 젖 대신 방안에 울로 뒤덮여 공포를 압도할 거른다.

북한의 생애는 버릇 나쁜 용서받이 수준이다. 그동안 남측은 굴주된 동족에 대한 인도주의 정신으로 식량과 의료, 현금 등을 지원했다. 그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에 대한 협조는 남측이 북한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다. 이것조차 외면하면서 얻을 것을 챙기기

위한 경험외담만 하고 하는 것은 엄치도 채면도 모르는 행위다.

북한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두 가지 걸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값을 일일 생각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남의 도움 없이 살길 을 찾아야 한다. 그런 생각 없이 가져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구걸행위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에서 그런 정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식량난만 허더리도 어찌 오늘도 일이 아니어도 날새 맞만 하고있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이산상봉, 최소의 대화조건

해답은 빨리서 찾을 것도 없다. 사회주의를 하면서도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중국이 해답이다. 중국은 '인민공사를 줄이고 개인농업, 확대함으로써 식량문제를 해결했다. 북한도 협동농장의 체제를 기록도급제 형태로 개인농으로 바꾸어 한다. 협동농장을 당 해체해가기 어려워만 개인농 면적을 현재 의 몇배 수준보다 크게 늘리는 것이다.

대화는 깨지더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 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반면 대화할 줄은 것이 낮은 대화의 비교의, 현금을 지불한다. 상대로부터 최소한의 식량의 담보하기 위해 지금은 후자를 택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논설위원 imjk@sed.co.kr

시론



高有煥

미국의 반테러 움직임과 남북의 반테러 대비태세를 문제삼아 북측이 남북대화의 개최지를 금강산 지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이번 답에 열리기로 예정됐던 각종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미 19일 남측지역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금강산관광 합성회를 위한 제2차 남북 당국간회담과 23일로 예정됐던 남북경제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무산됐다.

만나서 오해푸르게 우선

그리고 28일부터 31일로 예정된 제6차 장관급회담도 금강산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북측의 주장과 평양 또는 묘향산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남측의 주장이 맞서 팽팽한 팽팽한

을 그리고 있다. 왜 구태어 남측은 묘향산이고 북측은 금강산인가. '산은 금강산도 산이고 묘향산도 산인데' 체제와 이념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남과 북의 산은 가을단풍의 정취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이대 율로기적 색깔로 재색되고 있는 데 대해 서글픈 마음이 든다.

6개월동안의 정체를 겪고 지난 달 중순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간신히 남북관계의 다양한 연결고리를 이룬 상태에서 이들 남북관계

역에서 열리기로 돼있기 때문에 북측지역 어느 곳(금강산 지역)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이 유보된 상태에서 북측에 물러다니기만 한다는 여론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 정부는 회담에 나가서 따질 것은 따지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켜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번 제6차 장관급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상당기간 정체될 수밖에 없다.

40만1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

이 남측의 대테러 대비태세 차원의 비상경계조치를 '민족내부의 대결 분위기 조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체제위기에 따른 북한당국의 안보 불안감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유있는 우리가 아랑을

특히 북한은 테러조직인 일 카에 다외의 연계설에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측이 '어려울 때 우리의 관용적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감입심 주석 사망 직후에 남쪽에 내리쬐던 비상경계선이 6년여 동안의 남북관계 경색의 밑바탕이 됐다. 남측도 삼기할 필요가 있다.

체제역량이 우세한 우리가 좀더 넓은 이랑을 보여야 할 때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6차 장관급 회담에 나가 우리측의 반테러 대비태세를 심방하고 북측의 정세인식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연기된 이산가족상봉의 일정 등 남북관계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문제는 국내 정치적 고려를 초월할 때 '음미로' 풀려나갈 수 있다. /동국대학교수·북한학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南北대화, 장소 연연말라

진전의 전환점으로 삼지 못한 것은 현 정세 인식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차이에서 인유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남북합의체임인 제6차 장관급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검색조짐'에 대해서 서로 핵 임공방을 하면서 장소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대화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다. 원래 이번 장관급회담은 북측지

역이 구체화되고 있던 현시점에서 북한이 보인 '과민반응'은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통과 이후 체제생존에 골몰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될 부분도 있다. 1990년대 초 김프전대 우리 사회인 허더러도 위기의식이 높았고 일부 생활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가.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반테러 움직임에 대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의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

문화일보

포럼

북미-남북대화 왜 끊기나

현재 미국 아시아재단의 한국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스폿 스나이더씨는 미국내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관한 몇 안되는 전문가 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지난 90년대 북-미간 회담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쓴 '북한의 버려진 외교(Negotiating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1999)'에서 북한이 협상 분위기를 특히 강조하는데 주목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본이 좋아질때 본격적인 의제 협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한은 고집을 부리면서 대화가 파행을 거듭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고 미국 행정부의 약속 위반으로 북-미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26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남한에 보수세력 때문에 남북관계가 사실상 6·15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북한은 스나이더씨의 분석대로 미국과 본격적인 의제를 다루기 위한 협상에 임하기에는 분위기가 전혀 조성돼 있지 않으며 남한과의 관계 역시 비우호적인 분위기로 기본이 나빠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는 물론 남북관계에서도 기존의 협의사항을 파기하는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6·15 정상회담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회담에 따른 '정상'을 들었으며 이들 회담에서 실질적인 의제 협상에 임함으로써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서 적지않은 진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금년들어 이같은 우호적인 분위기는 대결분위기로 악화되면서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는 대화의 불씨만을 살려나갈뿐 실질적인 협상은 이뤄지지 못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이행 약속 파기로 파행을 겪고 있다.

우호분위기로 북한 움직임

북한으로서는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발표된 이후 뉴욕에서의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한과의 제5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화 속개를 지지를 과시하였는가 하면 특히 미국의 테러침략 이후 위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테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현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북측의 의지표명과 대외에 대해 부시행정부와 남한 시회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학교수·북한학>

한측으로 하여금 기대하게끔했던 대규모의 지원과 협력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등 '분위기'가 깨져버린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남북대화의 파행적 운영과 합의사항 이행 파기 역시 구체적인 지원 내역 못지않게 남북간에 조성된 긴장된 분위기로 '기본'이 나빠졌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北도 '기본파라 외교' 벗어나야

그간의 북한 행태로 볼때 북한이 고집을 쥐고 기본이 다시 풀려 대화와 협상에 나섬으로써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의 대결분위기가 다시 우호분위기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감축 등 일련의 핵심적 의제를 놓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개선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로서도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지속적인 남북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우리 사회 분위기가 지나치게 냉랭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분위기 악화에 가장 큰 책임은 역시 북한에 있으며 따라서 북한은 분위기에 대한 임팩트 해석으로 기본에 따라 국가간 대화와 약속 이행에 고집을 부리는 건 근대적인 한테에서 벗어나 좀더 성숙한 자세로 분위기 쇄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안타까운 남북 장관급회담 연기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결국 무기 연기됐다. 예정대로라면 28일부터 31일까지 북쪽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 장소를 둘러싼 양쪽의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것이다. 남북 양쪽이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완전 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소강상태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남북이 6개월여의 공백을 딛고 간신히 당국간 회담을 재개한 뒤이처럼 또다시 파행을 겪는 현실이 딱하고 안타깝다.

당국간 회담이 엇나가게 된 것은 북쪽이 지난 12월 이산가족 상봉과 태권도 시범단 교환 행사를 유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서 비롯됐다. 북쪽은 남쪽의 '불안한 정세'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앞으로 회담을 '안전한 금강산'에서 열자고 주장했지만, '북쪽에 끌려만 다닌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남쪽은 이를 거부했고, 장소문제를 둘러싼 논란만 되풀이됐다.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 남북 검토통추진위원회 2차회의 등이

줄줄이 연기됐고, 남북 현안을 조율하는 주된 통로인 장관급 회담마저 연기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북쪽이 합의사항을 갠 속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추측만 무성할 뿐 진의를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건,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화를 계속하자면서도 회담장소로 금강산만 고집하는 것도 남쪽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감정적으로만 처리할 일은 아니다. 설사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퍼더라도 여유있는 쪽에서 한수 접어주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에 냉각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화 분위기를 살리기 바란다.

당국간 회담 지연과는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쪽에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식량지원은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한다. 쌀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사설

남북관계, 더 꼬여선 안된다

이달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회담, 김일, 6차 장관급회담이 모두 무산됐다. 특히 각종 회담을 총괄하는 장관급회담마저 성사되지 못해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또다시 꼬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게 한다. 공식 남북대화가 6개월 만에 전면 복원되는 듯하다 한달도 안돼 주지않은 것이어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새삼 실감케 해준다.

정부 당국은 이번 주 중 대책을 세워 북측과 접촉에 나선다고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남북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기존입장에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교류와 회담 무산의 빌미가 됐던 장소문제에 대해 남측이 양보할 수 있다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교류와 회담들이 모두 무산된 것은 북측의 태도변화 탓이다. 미 테러전쟁으로 인한 남측의 경계태세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모든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옮기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는 북한과 미국의 상호비방 등으로 대화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북한이 미 테러전쟁의 강과를 관망하려는 것일 수 있다. 또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

한 휴전선 관광이나 현대측의 금강산 관광대가 미지급 등을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배경이 무엇이든 냉각상태의 분위기를 전환시켜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장소문제에 대한 뉘엿뉘엿도는 남측이 먼저 접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심상 당국은 명분을 철저히 용의가 있으면서도 아당과 여론으로부터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을까 걱정하는 듯하다. 특히 최근 제·보선에서 승리한 뒤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한나라당, 을 예전보다 더 의식하는 것 같다.

문제는 남한 내부의 대북 분위기가 냉랭해지면 북한은 더욱 움츠러들 것이라 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에 당부하고자 한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남북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최소한 우호적 분위기 만큼은 유지해나가야 한다. 이제 거대야당으로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었다면 대북문제를 여야 합력투기나 특정세력을 의식하는 차원에서 강경책으로 접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남북간의 모든 공식사업이 교착 상태인 지금 장관급회담부터 살리기 위해서는 아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사설

北 요구 또 수용하나

정부가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지는 북한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는 정부의 고심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한 마디로 잘못된 결정이다. 매양 되풀이되는 것처럼 또다시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돼 버렸기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이 앞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이미 합의된 교류를 거부하고 모든 남북대화의 금강산 개최를 주장하면서 내건 '남한은 위험하고 금강산은 안전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인정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큰 줄기에서 북한의 전략에 밀려든 셈이 아닐 수 없다.

남북화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장소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 일각의 견해는 일견 옳은 듯 해도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장소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관류하는 북한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큰 줄의 일부로 봐야 한다. 실제로 정상회담 이후 사태 진전을 돌아켜보면 남북관계가 오로지 북한의 전략대로 이끌려왔음이 한눈에 드러난다. 너무 빠르다 할 정도의 패속항진과 그에 이은 음 3월부터 6개월간의 공백, 그리고 지난달 15일야 겨우 재개된 당국간 회담과 다시 한 달 만의 소강국면 등

모든 게 북한의 연출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남한 침범론'은 난센스에 불과하다. 아울러 거기서 파생된 듯한, 북한의 주장은 '행감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옳지 않다. 이들 태만, 이산가족 상봉 무산과 관련해 '남한이 실법한 사태를 조성해 놓고 인도주의적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괴우고 있다'는 식량지원과 관련해 '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을 어느 일방이 선심이나 쓰는 일처럼 생각'한다는, 하는 대남 비난의 행간에는 당장 회담에 나서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식의 해석은 곤란하다. 자칫 과잉해석이나 지레짐작으로 이어져,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에 밀려들고 있다는 걱정 못지않게 큰 걱정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북측 요구 수용 불가 방침을 몇 번씩 국민에게 다짐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숨겨서 방향을 바꿨다. 이처럼 무원칙하고 혼란스런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정부의 현명하고 확고한 대북 자세를 촉구한다.



한겨레

사설

성에 안착지만 '대화'는 이어가야

정부는 북쪽의 요구를 수용해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회담은 지난 28일부터 열기로 돼 있었으나 우리가 평양을 주장한 반면, 북쪽은 금강산을 고집해 연기됐다. 장관급 회담에 앞서 열기로 했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 2차회의도 장소문제로 무기 연기됐다.

금강산 회담을 수용한다는 정부의 태도 변화는 '북쪽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북한이 5차 장관급 회담에서 약속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유보하고 회담 장소마저 금강산으로 못박은 것은 우리측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이다. 당장 아단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이런 비판이 쏟아질 것을 알면서도 북쪽의 제의를 받기로 한 것은 회담장소 문제로 장관급 회담을 오래 공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회담의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자리를 함께해 북쪽의 진의를 알아보고,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인 것 같다. 테러사건으로 생긴 국제적 긴장상황이 한반도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가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할 조짐을 보이는 터에 남북대화마저 끊긴다면 긴장이 고조되는 등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듯하다.

우리는 정부가 이런 웅색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돕아가는 북한의 편협한 회담 태도를 납득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우리가 양보하고 포용하는 것이 소모적인 밀고당기기 싸움 계속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북한과의 대화에는 당장 성에 차지 않더라도 끈기로서 잠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社說

남북회담 열리는 편이 낫다

정부가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종전의 방침을 반복하고 북한의 '금강산 개회' 요구를 수용키로 한 것은 남북 대화의 지속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일반적으로 연기하는 등 합의위반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회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이를 용인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남북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소극적인 인인을 만만히 분석하고 대북정책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홍순안 통일부장관이 21일 북측에 보낸 전 문에서 "장관급회담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중립협약이라는 중요성과 상징성, 회담진행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금강산 개회 수용으로 돌아선 데 대해 성급했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시간을 갖고 북한의 대응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야 했다. 사실 남북 당국간 접촉의 핵심기구인

장관급회담이 6개월 만에 재개된 지 한달 만에 다시 중단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북측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일반적으로 연기함으로써 합의를 위반하고는 책임을 남측에 전가한 상황에서 남측이 북측에 명분 없이 끌려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평양 개회 입장을 고수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대회의 창구가 회담장소 문제로 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간에 회담을 자주 갖고 대화하는 것이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백번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금강산 회담이 성사된 경우 북측이 평양 회담을 거부하는 배경 등 남북 대화에 대한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측이 테러 경계령을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했는데 테러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측의 입장변화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장관급회담의 금강산 개회가 모든 남북 당국자회담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대북협상에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사설

또 원칙 잃어버린' 대북정책

정부가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북측 요구대로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기준의 문제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회담 장소 문제를 놓고 1개월간 벌인 남북간 '기싸움'에서도 우리가 맥없이 물러난 형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금강산 회담 수용은 정책결정의 오류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적지않은 정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남북대화의 지속을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정부측 설명을 백번 이해한다 해도 이런 식의 잦속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애당초 남북대화의 지속이 최대의 우선순위였다면 북측이 평양, 묘향산등을 회담장소로 재의할 필요도 없었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도 정하지않고 이리저리 뒤흔어볼이러다가

재물에 주저앉는 모습에 허탈할 뿐이다. 일본 교과서 파동때 "일본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빙한을 받아 들었던 정부의 잦속결정 과정을 그대로 보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미국테러 사건의 와중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회담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북측 논리를 수용하는 듯한 인상만 남겼다.

이왕 금강산회담이 열리면 정부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임하기 바란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립은 물론, 경의선 복원등 북한이 그동안 미온적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현안들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 지키지도 못한 합의, 진시성·이벤트성 합의에 국민은 식상한지 오래됐음을 알아야 한다.

北의 '南韓 길들이기' 또 성공

북한이 장관급 회담장소로 금강산을 제의하자 이를 수락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굽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우리 자존심의 문제일 떠나 북한의 '남한 길들이기' 수법을 굳혀주는 중대한 실수가 아닌 수 없다. 이처럼 일관성도 목적 의식도 없고 북한 하자는대로 끌려다니는 회담이라면 백년 한길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난 2주 동안 남북 간에 회담을 둘러싸고 10여차례의 전문문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북한의 요구가 너무나 부당했기 때문이었다. 안전면에서 남쪽은 불안하니 당국 간 회담은 '안전한 금강산'에서 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남북회담 관행에도 맞지 않고 일방적 덮이외우기식의 억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정부가 북한의 당초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남한은 테러사태에 따른 군경의 긴계엄으로 불안하지만 금강산은 안전하다"는 북한의 논리를 추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북한이 버티기만 하면 "남조선 정부는 지절로 끌려 온다"는 북한의 회담전략이 또 다시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예정되었던 3개 회담 가운데 금강산관광 협상화를 위한 2차 당국간 회담과 남북 경험추진위 2차회담의 금강산 개최 제

의에 대해서는 끝내 거부했던 정부가 6차 장관급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받아들인 것은 통일부의 단독결정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 때문인지, 또는 무슨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평양축전' 때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꿔 참가시킨 경위와 지극히 닮은 꼴이다. '남북간 접촉을 무한정 단절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수공이유라면 애당초 '금강산 개최'를 왜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북간 협상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당국자 회담이기 때문에 '금강산'이라는 장소문제에 너무 엄매이는 것이 불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장관급 회담과 다른 회담을 분리해 대응하든지, 또는 일괄대처하기로 했으면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순리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은 북한당국자들의 코대만 높여주고 회담이 북한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확인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의 성과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통일부 고위당국자 스스로 "이번 회담은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의 진의를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로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실토했다. 회담을 위한 회담, 북한에 끌려만 다니는 회담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정부의 갈지(之)자 對北 자세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장소문제를 놓고 계걸음을 거듭한 정부의 자세는 너무 한심스럽다. 남쪽에서 이미 서울이 아닌 서귀포에서 열릴 바 있는 장관급 회담이라면 북쪽의 금강산에선 들 못 열릴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평양을 제의했다가 북한의 일관된 주장에 부닥치자 궁색하게 평양 또는 묘향산으로 수정했지만 결국 북측 제의의 수용이라는 원점으로 회귀했다.

이야말로 쓸데없는 소모전이자 북한의 입장만 강화해준 도로(徒勞)가 아닌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라든가 남북문제의 본질을 갖고 필요한 기싸움을 북측과 벌였다면 그래도 국민의 이해는 받았을 것이다. 서로 오고 가면서 주관적 제의로 겁쟁해온 장관급 회담 장소를 정부가 시비상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이었다. 이렇게 무원칙하게 접근하니까 대북 협상에서 늘 밀리면서 집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지 정부는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북측이 남쪽에서 열릴 차례인 여러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고집한 것이 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입장을 결정토록 했던 한 요인인 것 같다. 그럼수록 정부가 원칙과 사리에 입각해 장관급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회담의 남쪽 개최를 촉구했어야 마땅했다. 억지논리로 이산가족 상봉을 무기한 연기해 버리는 북측에 우리마저 억지로 대응한다면 북측 입장만 높여주는 꼴이 된다.

이런 식의 대북협상으론 국민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이산가족 상봉도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금강산 회담을 다시 수용키로 한 정부의 설명은 너무 궁색하다. 어차피 받아들일 바엔 시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정부는 대북협상에서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

北은 '이산 아픔' 왜 모르나

MR 기고

신영근

국방부 국방심리전 전문위원



문제가 대해 지금
까지 미직거리고
있다. 이번엔 정부
에서는 차관형식
의 식량 40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
로 잠정 결정하였
다. 만일 북한의

지금 우리 남과 북에는 760여만명의 이산가족이 그들의 혈육과 헤어져 반세기 동안을 소식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이후 몇 차례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그들의 가족을 만나 이산의 한을 푸는 짧은 순간의 기회를 가졌다. 다행히도 남북대화가 다시 시작되어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16일부터 이루어지나 했더니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다시 연기되고 말았다.

이 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벤트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며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대화체널이 있는 남북직접자 회담을 상시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이산가족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비무장지대에 몇 군데의 상설 면회소를 설치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만나보고 나아가 자유왕래를 보장하여 고향을 방문하고 남북한의 발전상을 둘러봄으로써 자연스럽게 한민족의 동질성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계획된 남북공동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번 4차 이산가족 방문단 명단에서 누락된 한 노인이 임진강에서 무신자살한 사건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가. 비록 무산되었지만 이번엔 남쪽이 올 북쪽 상봉단 후보자들도 남쪽의 가족 중 18명이 몇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산가족은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하며 세상을 등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장기수들을 송환할 경우 비로 면회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마음 내키는 대로 남북대회를 무산시켰으며 면회소

입장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들을 그들의 유리한 방향에서 주고받는 형식으로 연계시켰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임을 그들은 알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일이다.

“하나 주고 하나 받기 식”이라면 앞으로의 평화공존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저명한 시인 장해명씨가 읊었던 한 사연의 기약 없는 시 구절처럼...

“이른 새벽잠을 깬 때에도/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어머니/깊은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려보는 모습은 어머니.” 지난해 9월, 북으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 신인영씨의 남한에 있는 노모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북한 시인이 읊은 서시시의 한 구절이다. 신씨는 지난 9월 21일 평양방송을 통해 서시시를 노모에게 띄웠다. 이 서시시에는 “받아 안은 영광 커질수록/누리는 행복 목 매일수룩/못 견디게 그리운 어머님에게 아리고 싶어 이 편지를 띄웁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우며 씹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자신의 애달픈 심정이 녹아 있다.

북한은 평양방송과 노동신문에서 이러한 이산의 아픔을 소개하면서도 실지로 당면한 이들의 아픔을 해소하는데는 소극적이다. 선전선동에만 입을 올리면서 남측의 경제감화나 비상국무회의를 핑계삼아 인민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가슴이 시키말게 멎은 이산가족에게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아픔을 더해 줘서야 되겠는가. 남북이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공존공영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이를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社說

결국 받아들인 '금강산 회담'

그동안 장소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결국 북측 주장대로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는 모양이다. 어쨌든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금강산 불가(不可)' 입장을 접은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전략 부재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북측이 10월중에 예정돼 있던 모든 남북회담을 '안진한' 금강산에서 열자고 주장했을 때, 우리는 이번만은 정부가 원칙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북측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남과 북 중에서 과연 누가 더 회담에 목말라 하는 형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측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임기말로 갈수록 대화 상대로서의 '매력'이 떨어져갈 것이고, 따라서 북측은 적당히 대화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실리만 챙기려고 할 게 분명하다. 북측이 이번에 금강산을 고집한 배경에도 곤경에 처한 금강산관광 사업에서 남측 정부의 보장을 얻어내겠다는 속셈이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전술적 차원에서라도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는 한 금강산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다. '또 북에 끌려 다닌다'는 여론을 봐서라도 그렇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북측에 있다. 9월 제5차 장관급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을 때에도 우리측에선 10월에 열기로 합의한 갖가지 남북 회담에 큰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비롯해 그런 모든 기대를 저버렸다. 북측은 언제까지 이런 못된 행태를 계속할 것인지 안타깝다.

북측이 표면상으로는 우리의 경제태세 강화를 핑계삼고 있지만, 미국의 대(對)테러 전쟁은 북측에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불안정할 때 북측이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번처럼 회담 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하는 등 과거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것밖에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북측에 '금강산 회담'을 수용하겠다고 통보할 것이라고 한다. 어차피 금강산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번만큼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이 급선무이지만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및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선 복원 문제 등에서도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속 없었던 제5차 장관급회담의 재판(再版)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太平路



金玄浩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정부의 안간힘이 애처롭기 그지없다. 국민을 설득하려는 당국자의 말에는 자신감이 없고 논리는 궁색하다.

北에 이끌려 '금강산' 수용

제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불과 나흘 앞두고 북한당국은 한국의 테러경계태세를 시비할며 일방적으로 이를 무산시켜 버린 뒤, '안전성'을 이유로 모든 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겠다고 홍보했다. 이산가족의 한(恨)과 한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처사였다. 정부도 국민적 분노를 감안한 듯 단호한 대응을 보이는 듯 하더니 보통 남짓 만에 돌연 장관급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수용키로 방침을 급선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당국자의 설명은 "회담의 연속성을 살리고 현안을 조속히 협의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국민적 분노를 대북정책과 회담의 에너지로 활용하기보다는 어떤 굴욕을 감수하더라도 회담 자체를 이어가겠다는 집념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강조하는 회담의 '연속성'은 기존 합의사항의 성실한 실천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지 고개를 숙여 가면서라도 무조건 만나기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간단한 이치도 정부라고 모를 리

다. "북한은 상대방이 낙관과 환멸과 실망 사이를 정신없이 오락가락하게끔 협상과정을 조작한다. 실망에 빠진 상대방은 다음번 협상을 시작할 때면 어쩌면 북한이 협조적인 자세로 나올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환상에 부풀어 새로운 마음으로 회담장에 나선다."

북한과의 회담에서는 언제 어떤 회담이건 어김없이 이런 과정이 되풀이돼 왔으며 "현재의 북한정권이 존재하는 한 이 사이클은 끊어질 것"이라고

하기 위한 것임도 충분히 검증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할 단절시킨 두 번의 경우가 미국 부시행정부 출범과 미국의 아프간전쟁 개시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 대남협상을 여전히 대미전략의 한 부속물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으로서는 '9·11테러 이후 시대'의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野·여론 지지없으면 실패

호흡을 고르기 위한 시간은 우리 정부에게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신경써야 할 급선무는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 장소가 될 것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의 여론을 가다듬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야당과의 진지한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만약 정부가 생각하는 모습으로도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면 야당인물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돈과 양보로써 변화를 살 수 있다"는 인식에서, 여론과 그것을 반영한 야당의 지지가 없는 대북 회담에 매달리는 한 북한이 연출하는 환상과 환멸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일보 통일문제연구소장

nhkim@chosun.com

民意 무시한 남북회담

없진만 왜 이렇게까지 회담 자체에 조금 중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 의혹의 시선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방침의 급선회가 정부 내의 충분한 토론과 분석을 거쳐서가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 하나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정황들도 눈길히 쫓기고 있다.

미 국방부와 공공정책연구소, 의회 등에서 한반도문제를 다루어 온 척 다운스가 지난 50년간의 남북협상을 분석해 펴낸 '북한의 협상전략 (Over the Line)'은 요즘의 남북협상 운영 주체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을 담고 있

다운스는 전망한다.

북한의 협상 행태가 예측 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이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협상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이한 행동과 논리를 동원하고 위협적인 연사로 바람골 전술을 구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익숙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이러한 전술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 무산과 회담 장소 논란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입증됐다.

북한의 이 같은 '일관성 없는' 협상 전술은 '일관성 있는' 협상목표를 달성

社 說

'회담을 위한 회담' 대선 안된다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지는 북측 제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정부 집정관 국민들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엇그제까지만 해도 강경하게 평양 또는 묘향산 개최를 주장하던 우리 정부가 병패한 이유없이 습거나 풀려선 데 대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처음부터 반대했는가"를 우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당국간 대화는 이어지는 게 좋다는 것이 통일부 장관의 설명이지만 그렇게 짧은 사이에 정부 입장이 바뀐 이유치고는 실득력이 부족하다.

무언가 대북정책 성과에 너무 연연하고 있지 않은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북측이 남측의 비상경계 태세를 핑계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물론 남측에서 열릴 예정인 여러 실무회담도 일방적으로 취소한 터에 금강산 회담을 수용함으로써 '안전문제'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결과를 초래한 것도 문제다. 한마디로 의견합도, 원칙도 엇볼 수 없는 대북정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금강산 회담이 열린다면 이번엔 과연 어떤 성과가 도출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5차 회담에서도 그랬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그저 만남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일방적 끌러가기'나 '퍼주기'라는 식으로 짐차 회의를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셈이다.

이 점에서 10여 차례 실무적 전화종지문 교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의제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만나는 것은 걱정부터 앞선다.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럴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번엔야말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주기 바란다. 북측과의 대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궁금증과 의욕이 절반은 해소돼야 할 것이다.

북측 합의 불이행의 진정한 이유, 4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의 확실한 재개, 이미 합의한 금강산관광 활성화 등 실무회담의 이행 보장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북측에서 거론할지 모르는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만에 하나 '김정일 위원장 서울 답방' 등의 목표에 너무 얽매어 또 다시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할 때다.

대한매일

사설

괘씸해도 회담은 계속돼야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제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장관급회담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측이 남한의 비상경계태세를 핑계로 금강산에서 열자고 주장해 남북이 맞서던 상황이었다. 지난달 16일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도 북한이 같은 이유를 내세워 무산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양보한 것은 얼마간 여론의 비난이 따르더라도 '포용정책'의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고심의 결과로 이해된다.

인내하고 양보하면서도 평화를 향한 신뢰를 쌓아가자는 것이 포용정책이다. 회담 장소 문제로 남북대화 단절이 장기화된다면 오히려 장소를 양보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물 가져올 수도 있다. 태러전쟁의 와중에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도 냉랭해지고 있는 상황은 한반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수세를 만회하기 위한 어설픈 합의보다는 북한에 남북의 처지를 실득하고 견해차이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 정부가 금강산회담을 수용한 것이 북한의 주장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백년 양보 하더라도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연기나, 장관급 회담을 표류시킨 것은 당국간 합의사항의 파기이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더라도 북한은 수혜자 쪽이다. 북한은 남한이 양보한 뜻을 헤아리 트집이나 잡는 태도를 버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회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한의 태도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괴롭히고 심심한 마음이 들게 했고, 정부도 오락가락하며 북한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깊게 심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금강산에서 열릴 장관급 회담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따질 것은 따지고 서로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것은 차근차근 풀어나가더라도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 일정만은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다.

동북아 안보전문가 잭 코튼교수 특별기고

— 북한은 주어진 상황을 외면하지 말라

필자인 제임스 코튼 교수(뉴사우스 웨일스대 호주방위아카데미 정치학과)는 호주의 대표적인 아태·동북아 안보문제 전문가로 9월 북한을 다녀왔다. 그의 특별기고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제임스 코튼 교수

북측은 남북 교착상태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남북 관계는 전적으로 남북 당사자

북한이 향후 어떤 정책을 추진 하건 외면해선 안 되는 정치 경제 상황을 안고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진전도 이뤄낼 수 없다.

경제는 매년 100만~200만 t이 부족한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고 공업생산은 에너지 부족과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은 90년 이후 국제원조기구들이 제공한 식량 비료 원유 의약품 생필품 등으로 연명해 왔다. 원조를 가장 많이 한

간에 해결할 사안이며 미국의 정책이나 주장은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관리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에서 고조됐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남한의 사회적 불안정과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대(對)테러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이 대북 추가지원에 나설

“對話나서야 지원 얻는다”

국가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었다. 북한 당국은 주민의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새로운 돌파구였다. 남북공동선언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경제협력에서는 급속한 변화가 예상됐다.

김집은 91년 남북 기본합의 사항이기도 했지만 2000년은 당시 상황과 크게 달랐다. 남한 당국은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북한은 지원이 절실했다.

김집이 일방적 원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북한은 남한과 더불어 남한 시장을 위한 생산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남 경제는 북한 내부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의 대외 개방 의지에 대한 국제 신뢰를 재고해 외국투자자를 끌어들이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연기로 남북경협의 세부 실천조치들이 미뤄되지 못했고 이산가족 상봉과 장관급 회담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럴 경우 남한의 실망은 더욱 커질 것이며 햇볕정책은 무산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어떤 차기정권도 이 정책을 믿고 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10년 전이라면 북한 지도자들은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미 양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며 시간 벌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한과 북한 주민이 처한 상황은 전에 없이 급박하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한 국제기구들은 조만간 대북지원에 지칠 것이다. 실제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식량 추가 지원은 북한이 군사력을 감축하지 않는 한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 협정도 커질 것이며 지원도 줄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會) 합의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약화와 실패를 면할 기회를 잃은 것이다. <절리=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시론



安仁海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담판을 예대게 기다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초소가 갖긴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해의 모든 대외정책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에 맞춰져 있다고 할 만 급 한국은 다른 외교문제에는 무신경을 드러내고 있다.

北美관계 개선 기로에서

지난해 김대중정부의 김장희남 이후 김대중정부는 6·15 공동선언에 명시한 대로 "적절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담판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올 것인가? 지난 9월 북한은 통일부 임명장 장권의 해임인 물과 직선에 각각 수렴한 남북회담 제의를 했고, 이에 한국은 신

임 출신인 장관을 대표로 남북 장관급 회담에 임했다. 그러나 이때 합의할 한 이산가족 재회는 아무런 이유없이 연기됐고 부분적으로 금강산 관광대금 지불만이 이뤄졌을 뿐이다. 북한의 요구에 따라 이번 주에 금강산에서 입담 장관급회담은 금강산 관광대금의 완납을 원하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올해 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한 관계가 냉각됐으나 북한은 나름대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은 이집티아·스웨덴

의 기로에 서게 됐다. 미국과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테러국으로 남아 보복을 당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북한은 테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테러반대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테러집단이나 다른 테러활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기에는 지난날들의 행적을 감추기가 쉽지 않다. 이미 미국이 북한의 테러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면 오히려 북한은 더욱 이

다할 수 없을 것이다.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김대중정부의 노력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있던 북한이 김대중정부는 가장 호의적인 대화상대인에 흡입됐다.

성과업이 담판카드 슬까

미국의 법 집행관에게 이은 부시 대통령과의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하고 있는 경험에 비추면, 김 위원장에게는 김대중정부가 이은 다음 정권과의 대화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별다른 성과도 없이 담판카드를 써버린다면 오히려 다음을 타 못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담판하지 않더라도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실리를 취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면 굳이 이 시점을 "적절한 시기"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김대중정부를 상대로 김 위원장이 한국에 올 이유는 없다. 앞으로 김대중정부는 본인이나 남북한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북한 추진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음 정권에 임무를 넘겨야 한다. 그래도 김 위원장은 남북한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일은 오지 않는다”

총리를 초치하고 유엔안보(EU)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왔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내세워 3개 의제를 제의해오자 (6월 6일) 북한은 김 위원장의 중국·러시아 방문과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방북을 통해 대미협상력 강화를 위한 신동맹 삼각관계를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사건으로 북·미관계 개선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북한은 중대한 결정

리온 처지에 빠질 수 있다. 더구나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미국이 북한과 이런 안개 관계개선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북·미관계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한관계도 담판상태에 있다. 현재 한국 정치권의 현실상이나 경제시정으로는 김 위원장이 외도 거국적인 환영분위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북한은 생존의 마지막 카드로 할 수 있는 담판문제를 함부로

3/ 금요포럼



김영진 (미국 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

北의 위험한 ‘對話거부’

미국 정부가 6월 대화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계속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지금까지 “노(No)”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은 6월 이후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 왔다.

첫째, 미국이 핵, 미사일, 재래식 병력을 의뢰로 제거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전력 보상의 문제다. 둘째, 재래식 병력 문제 제거는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는 것이며 미군이 먼저 철수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북한을 압살하려는 적대정책을 중지해야 한다. 넷째, 이미 양국이 합의한 것을 실천하는 문제부터 토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은 적어도 발 클린턴 정권 말기에 북·미가 합의한 수준까지 회복해야 한다.

“언올것 없다” 北-美대화 미적

북한은 왜 북-미대화에 소극적일까.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양국 현안에 대한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강력한 입장으로부터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고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선 순위가 낮아졌다고 볼 것이다. 또 북한은 국제환경이 자국이 극히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간의 정상회담이 대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치작업이라는 측면이 있었

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테러사건 이후 대미 협조자세를 선명히 함으로써 그러한 정치작업을 통해 확보되었던 북한의 입지가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윽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공격으로 북한은 심각한 안보상의 우려와 경각심을 갖게 됐다. 탈레반 정권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쓰인 논리가 언젠가 북한에도 적용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안보위기가 감의 고조는 국내 결속 강화를 필요로 하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교조적 반미 강경노선이 격화되어 온건노선의 대미 협상 의지를 압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정책의 예측불가능성, 불안정성, 과격성,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이 협상

전략상 미국에 효과적인 압박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대상(代償), 특히 미국 입장의 수정 등 실질적인 전제조건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2000년 10월 북-미 정상회담에 있는 핵심적 합의사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만 양해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응이 늦어지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의 경직성에도 원인이 있다. 대미 전략의 재검토는 안전의 중요성도 신중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거명한 부시 미 대통령 취임의 획기적 발언이 북한의 경직성을 높였다. 북한 매체에 나타난 부시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격의 빈도와 강도는 부시 대

통령의 김 위원장 관련 발언에 대한 북한측의 분노의 지표이며 그러한 발언들이 그들의 대미 정책 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대미 테러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확대되는 추세로 보아 조속한 북-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윽고 막론하고 대화에 대한 북한측의 부정적 입장은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미국과의 대화를 거듭해 타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관계개선 재동 걸릴 수도

지속적인 대화의 부재는 북-미 상호간의 정확한 인식과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구축을 저해하고 북한의 국제 사회에서의 생산적 참여를 곤란하게 만들 것이다. 또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대북 의혹을 증폭시켜 관계개선에 재동을 걸 수 있다.

북-미는 각종 통로를 이용해 정식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계속해 놓어도 내년 봄까지는 본 회담을 재도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회담은 장기간에 걸쳐 난항을 겪겠지만 대화 부재 상태에 인한 한반도에서의 위기상황 발생의 위험성은 줄일 수 있다. 내년 한국 내 정치입장 및 대북정책과 관련해 예상되는 심각한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상황을 막는 ‘예방외교’의 의미에서도 북-미간의 진지한 대화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사설

홍 통일의 신중치 못한 발언

9일부터 금강산에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린다. 이 에 앞서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임(洪淳瑛) 통일부장관이 6 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양곡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북 식 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사실상 연계돼 있다"고 밝 혔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신의를 저버린 행위였지만, 우리 정부가 여든 의 비난을 무릅쓰고 금강산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포용정 책의 지속 의지를 확인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실상 연 계'라는 홍 장관의 발언은 대북정책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 이미 북측과 사전협의 가 있었거나 아니면 협상전담을 노출한 신중하지 못한 행 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지원은 각각 인도적 차원 에서 다른 현안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 다. 따라서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홍

장관의 말은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 이산가족 상봉을 식량지원을 위한 경제협력회담 개최 조건으로 성사시킨다 면 앞으로의 협상에서 정부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 이다. 북한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부분이 식량지원 문제이 다. 그래서 정부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렵고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홍 장관의 말처럼 만약 이산가족 상봉 일정 이 잡히지 않는다면 식량지원은 하지 않을 것인가. 또 이산 가족 상봉 때마다 무엇을 쥐어 할 것인가 묻고 싶다. 회담 을 눈 앞에 두고 북한이 식량지원 요청을 했더니,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했다니 하는 홍 장관의 발언은 이 해할 수가 없다. 홍 장관은 정부가 북한에 끌리다니는 비 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해야 하는 대의 를 기쁘게야 '미주고 받아오는' 차원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사설

유감스런 남북대화의 모습



한겨레

2001. 11. 12 (월)



남북대화의 동력이 뚜렷하게 떨어지고 있 는 상황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 으로 기대했던 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남과 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회담이 결렬로 끝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 기 위해 지난번에 유보된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추진하는 선에서 막판 절충을 모색하고 있다. 교차상대를 적극적으로 타 개하기보다는 봉합하는 쪽에 기울어 있다.

남쪽은 이번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무 릎쓰고 장관급 회담을 금강산에서 여는 것 에 동의했으며, 그 배경은 북쪽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와 대테러 보복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높아 지는 마당에 그 부정적 여파가 한반도에 미 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작 용했다. 북-미 대화의 남북상태가 남북대 회의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 려는 판단도 있었다.

남쪽 처지에서 보면 북쪽이 대화진전의 조건으로 들고 나온 사항은 분량이 너무 높 다. 북쪽은 이산가족 상봉이 유보된 것을 남 쪽의 비상경계 조치 탓으로 돌리고 이달 안 에 이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북쪽은 또 구 체적으로 거명을 하지 않았으나, "남쪽이 최근 밖에 나가 개화·개방으로 유도하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했음을 밝힌 것은 공동선

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체제를 건드리는 용 납 못할 도전"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우리는 북쪽이 동시다발 테러 이후에 발 동된 비상경계에 대해 관심을 쏟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지 않고 있는 미국이 대 테러 전쟁을 공인하고 있는 마당에 북쪽이 비상경계에 무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 만 비상조치가 "동쪽을 헤치려는 자세를 드러낸 것"이라고 몰아세우고 그 해제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남북 간의 대화가 진전되면 냉철한 현 실인식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남 쪽 정부와 미국은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특 수한 관계가 존재하며 그것이 현실이다. 남 쪽 정부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지지의사 를 표명한 이상 남쪽에도 테러 위협이 존재 한다. 비상경계가 발동된 배경은 여기에 있 다. 남쪽이 협박한 국제정세의 불통이 한반 도에 뿜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마 당에 북쪽이 오히려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고 다그친다면 남쪽 정부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에 김대중 대통령 의 햇볕정책이 큰 구실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하지만 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안락의 여건 변화로 좁아졌다. 북쪽은 이 길을 임두에 두고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

南의 '비상경제' 왜 트집잡나

社說

朝鮮日報

2001. 11. 14 (수)

북한은 6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시종 일관 남한의 비상경제권을 문제삼으며 그것을 해제하지 않으면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이 남북장관급 회담의 장애요인이 될 수 없으며, 남북회담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안이다. 미국 테러시대 이후 내려진 비상경제대세는 남한 내의 국제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였다. 이것은 우리만 취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연대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상황이다. 전세계가 테러공포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북한이 '그것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며 "서울은 불안하니 남한에서 회담을 할 수 없다" "그것이 해제돼야 남북합의사항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억지질을 계속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을 이용해 남한의 안보체계를 약화시키거나 남한으로부터 얻을 것을 더 얻겠다는 속셈이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남한의 군사훈련이나 주적개념을 문제삼아 남북회담을 휘젓거나 양보를 받아내

려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에 대응하는 태도다. 남북회담을 못하는 한이 있다라도 북한의 주장에 당당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 운담한대도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이번 장관급회담을 두고서도 처음에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안전한 금강산'에서 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회담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회담날짜를 연기하며 매달려 일단 합의를 받아내기는 했으나 그것의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그런 과정을 거쳐 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와 7차 장관급 회담을 합의한다고 한들 그것이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의문이며,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북한은 회담이 여의치 않으면 마지막에 판을 깨는 것이 상부적인 수법이었다. 북한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이 같은 남북회담 구도는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남북회담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해도 국가로서의 원칙과 나라의 체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

社說

서울경제

2001. 11. 14 (수)

소모적인 남북장관급 회담

지난 9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예정했던 일정을 시뮬빅이나 연장해가며 남측의 테러에 대한 '비상경제대세'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남측의 비상경제대세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이기에 이처럼 난항을 거듭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 중에 성과라고 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금강산에서 다음달 10일부터 1주일동안 두차례 실시한다는 것이 고작이다. 두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한 것은 금강산이 상봉장소로서 수용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서울과 평양을 상봉장소로 했던 것에 비해 노령의 이산가족들이 겪을 불편과 불의의 사고위험은 물론이고 상봉자의 숫자나 자유스런 상봉분위기도 제약이 뒤따르지 않을까 걱정된다.

당초 이번 회담은 이렇다 할 성과가 기대되지 않았다. 국제적인 테러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한 비상경제대세를 문제삼은 북측의 의도가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대세 발동을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의 취소 및 사과를 요구한 것은 남한 내부의 비상경제대세 발동마저 북한의 허락을 받아서 하란 말과 같은 것으로서 억지에 불과했다. 남한은 내년에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안

전하게 치러야 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생존하는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비상경제대세는 한참 나중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측이 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한 금강산회담을 국내적인 비판을 감수하며 수용한 것은 국제테러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간에 대화분위기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측은 회담에서 북측 요구의 무리성을 따지겠다고 했으나 회담결과 그런 억지는 역시 따질 것이 못된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우리측은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표현'으로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그들의 전략에 밀려들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회담 내내 이 문제로 압력을 하는 통에 면회소 설치나 생사확인 등의 상사적인 이산가족 상봉사업 문제는 꺼내지도 못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회담결과로 북측이 일방적으로 보류한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재개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나 이 같은 합의를 그들이 또다시 안 깬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대북경협회의나 7차 장관급회담 등은 추진하되 쌀 지원과 같은 대북경협사업은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확실하게 보장될 것인지를 보아가며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사설

북한, 속셈이 따로 있나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공동보도문조차 없이 끝내 결렬되고 만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북 대표단의 귀한 일정을 및 차례 늦추면서 14일 새벽까지 계속된 회담을 지켜보며 속시나 막판 극적 타결을 기대했던 티라 허탈한 심정이다. 특히 가족 상봉을 확고고대하던 이산가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협상은 상대적이지만 이번 회담 결렬은 북측의 무성의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 정부는 장관급 회담 성사를 위해 내부의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금강산 회담'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였다. 게다가 애초 서울로 예정됐던 4차 이산가족 상봉 역시 '내달 10일부터 금강산에서 두차례'라는 것으로 양보했다. 실사 순조롭게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또 "참라다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었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의 끈을 이으려는 의지와 함께 이산가족의 비원(悲願)을 고려,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정도면 남당히 북한측의 상응한 상의를 요구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비상경제 조치를 문제삼는 자세를 끝내 바꾸지 않았다. 일단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조차 비상경제 해제와 연계시키고, 남북경제추진위원회 2차 회의 장소도 금강산을 고집하는 바람에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북측의 태도는 표면적일 뿐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대화 의지 부족 탓이 아닌가 보인다.

국제 테러에 대한 정부의 비상경제조치는 월드컵을 앞둔 우리 내부의 불가피한 대비책이다. 이따기 모를 리 없는 북측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당국간 대화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인 교류에도 별다른 뜻이 없음을 보여준다. 간접적이지만 회담 초기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해외

발언을 이래적으론 비난하고 나신 것도 북한의 생각을 짐작케 한다.

북한의 태도가 혹시 입기 말을 앞둔 우리 정부의 더 큰 양보를 얻어낼 의도라면서는 오산이다. 남북대화는 소중한지만 남북간 기본적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계속적인 양보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한 식량지원 문제도 여론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어렵다.

장관급 회담의 결렬로 남북대화는 상당기간 소강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북측이 진정으로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 상봉마저 정치문제화하는 자세를 재고해야 마땅하다. 우리 정부 역시 북측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대화 자체만을 위해 또 다시 북측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경향신문

2001. 11. 14 (수)

사설

우려되는 북한의 자세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지켜본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남북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 실시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 및 제7차 장관급 회담 개최에 잠정 합의를 하고도 일정을 이룸이나 연기하며 논란을 거듭했다. 북측이 줄기차게 남한의 비상경제조치를 문제삼으며 이 조치의 해제 등 마음에 드는 북측의 응답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이번 회담의 성과 미흡 그 자체는 지엽적 문제일 수도 있다. 본질적 문제는 비상경제를 타협해 남북관계를 교묘히 이용하는 북한측의 기본 자세인 것이다.

물론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으로서 대테러 경제상황에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도 테러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남한 정부는 이미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지지했다. 북한 역시 테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북한도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것이다. 그럼에도 "동족을 해치려 한다"고까

지 극언을 하며 짐작하는 것은 실제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대이산가족의 금강산 관광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북한 내 대남협상과의 입지 축소, 테러사건으로 인한 국제적 긴장, 정권의 입기말을 맞은 남한 내부의 유동성 등이 북한으로 하여금 주춤하게 하는 듯하다. 민간교류도 벽에 봉착한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현 정부 출범 후 대북정책이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은 당분간 남한의 식량지원 등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대남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아무리 어려운 고비가 있더라도 기본적 신뢰와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 지난달로 예정된 여러 교류 및 회담 일정을 북한이 '비상경제'를 이유로 잠소변경요를 요구하며 무산시켰을 때 남측이 내부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며 양보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북한은 더 이상 남한 정부의 심판을 겁먹지 하다가 6·15 공동선언 자세를 훼손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바뀌어야 한다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끝내 공동발표문도 발표하지 못한채 결렬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이번 회담이 남북화해 및 평화정착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진다한 주변적인 문제들을 놓고 회담내내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깨졌다는 보도를 접하는 심정은 짜증스럽다. 인내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지않나 싶다.

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북측의 전략에 우리 측이 말려들고, 휘둘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남북대화를 계속해야겠다는 의도임을 미리 간파했고, 북측은 그런 남쪽 사람들을 금강산으로 불러들여 시간을 팔다가 회담을 결렬시켰다. 그것이 이번 회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다. 함으로 침묵한 일이다. 북측의 그같은 전략을 뻔히 알면서도 뭇가 일을 것이 없는 가라는 막대한 생각에서 끌려다니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는 우리측 대표단의 모습은 측은한 생각까지 들게하고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제조건들을 내걸었다. '신(先) 비상경제 개세 해제-후(後) 현안논의'라는 인제고리를 만들어 우리측이 9.11 테러사건이후 취해온 비상경제 개세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조금도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 빠뜨렸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원드립 주체국으로서 테러사건에 대비하는 것이 왜 북측을 거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북한식 논리를 회담 내내 지켜보는 심정은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어올때도 많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도 진담부재, 원칙과 기준의 상실등 그동안 보여왔던 대북 정책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재현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까지 무기한 연기시키고, 회담 장소도 금강산으로 하지도 했는 데도, 상봉문 제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받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버렸다. 뭐가 그리 급해 지난번 5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북측의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 다짐도 전혀 반

지않고 회담에 응했는지 한심스럽다. 심지어 비상경제 개세 문제에 대해서까지 유언한 입장표명을 하려다가 북한이 막바지에 다음번 경제협력추진위 회담장소까지 금강산이 돼야 한다며 또 다리를 걸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으니 그만 물러선 꼴이 됐다. 전략에서도, '기싸움'에서도 모두 밀려났다.

가장 비판받아야 할 대목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이다. 이는 이산가족에 대한 우려희고 인도주의에 대한 폭력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대화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에도 남북대화는 장기간 소강상태에 빠져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결정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결연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은 진정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런 자세로는 국제적인 호응을 받을 수 없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변화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제발 정신좀 차리고 차분한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社說

朝鮮日報

2001. 11. 14 (수)

北 생때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회담일정을 이끌어간 연기하며 범생 협의까지 거듭했으나 공동발표문도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수많은 교류와 협상에 돌고 돌고 변하지 않은 북한의 자세와 태도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번에도 협상내용과 관계없는 것을 시비거리로 삼아 생때를 쓰는 패턴을 반복했다. 호혜성과 상호존중의 정신은 애당초부터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내내 남한의 주권 사항인 '비상경제개편'을 걸고 넘어졌다. 저들은 "비상경제로 남한과 서울이 불안하다"며 금강산을 회담장소로 고집했다. 애당초 금강산 개최를 반대했던 우리 당국이 회담 성사에 급급한 나머지 이에 응해준 것이 첫 번째 잘못된 단추였다. 북측은 남쪽의 요구사항인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 그리고 7차 장관급 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척 하면서 또다시 장소를 금강산으로 내세웠다. 결국 우리 측은 '금강산'을 허용함으로써 저들이 내세운 남한 비상경제개편 트집을 정당화할 수 없는 막대한 상황에 몰렸고 그래서 회담은 성과없이 끝난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이 왜 무엇 때문에 남한에서의 회담을 거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사람들의 남한행(行)과 서울 접근을

더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그들 내부의 어떤 절박한 상황 때문일 것이다. 또 그 주변에는 북한군부의 반발과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군부는 그동안 금강산 육로관광도로와 경의선 복원 등 군사분계선 부근의 개방에 심한 반발을 보여왔다.

김대중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북한의 생때쓰기를 어느 면에서는 조장하는 측면까지 있었다. 북한이 억지를 쓰면 김대중 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김대중 정부가 대화를 단절하지 않을 것이란 낙담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실제로 이 정부는 북한이 적심자사 총재를 바꾸라고 하면 그대로 따랐으며, 식량지원 합의도 되기 전에 선적작업을 서두르기까지 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의 요구를 상당부분 따른 셈이다. 그나마 막판에, 모든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남한의 '결안'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그레가지고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앞으로 소강상태를 보일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북한협상패턴에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남한도 분별없는 성과주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社說

냉각기에 역지사지 하길

금강산에서 열렸던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결렬돼 유감스럽다. 이로써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소강국면을 띠게 됐다. 하지만 양측이 당초 회담일정을 이급간이나 연기에 기면서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이다. 비록 결론 없이 헤어졌지만 열지 않은 장래에 다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리라 기대할 하게 되는 이유다.

우리는 이번 회담의 결렬 사태를 크게 비판하지 않는다. 이유는 비록 남과 북이 일사적인 명분다툼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지만 서로가 냉각기를 통해 역지사지 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또 남북은 식량지원 문제 등 끝까지 만나야 할 현안들이 쌓여있다. 냉각기가 그렇게 길지 않으리라고 보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지연되는 점이 안타깝다. 방문희망자의 대부분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고령이라는 점에서 한시도 미룰 일이 아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9월15일 서울에서의 제5차 회담 후 거의 두 달 만에 열렸다. 그럼에도 다음 회담 일정조치도 합의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북측의 경직된 자세 때문이라고 본다. 북측은 9·11 미국의 연쇄 테러사태 발생 후 우리정부가 취한 비상경제태세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선(先) 비상경제태세 해제, 후(後) 현안 논의를 고

집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측의 경제태세는 전적으로 우리내부의 문제다.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부터 대회장을 지키려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일 뿐이다. 반테러선언은 물론 각종 테러반대 국제협약에 가입키로 한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약 일부의 추측대로 북측이 임기 말의 장권과 대화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그것보다는 교환방문 행사로 일부 주민들의 지분주의 경향을 북한이 안보위협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보여진다. 북측을 설득하다 마지막에 밥값을 돌린 우리대표단의 자세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에도 민약 북측 요구대로 끌려갔다면 호된 비판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안 될 것은 안 된다는 점을 북측이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상경제 사태를 구실로 대화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만 보다는 느긋한 접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 번에, 또 이 정권에 서 안 되면 다음정권으로 넘긴다는 자세로 말이다.

한겨레

2001. 11. 15 (목)

사설

실망스런 장관급회담 결렬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끝내 결렬됐다. 대표단은 회담기간을 이틀이나 연장하면서 합의를 끌어내려 했고, 개략적인 의견접근을 보기도 했으나 막판에 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 장소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왕의 합의사향도 백지화됐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남측은 어떻게든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봉장소를 금강산으로 양보하고, 대신에 다음번 회담인 경제협력추진위 회의와 7차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연다는 복안을 갖고 북쪽을 설득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번 회담은 시작 전부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9·11 테러사태 이후 조성된 국제적 긴장상황과 남측의 비상경제를 문제 삼아 날짜까지 잡힌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미루고, 양

으로의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못박은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성과를 자신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정부가 여론의 부담을 무릅쓰며 대화에 나선 것은 남북 대화가 장기간 끊어질 경우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우려해 어쩔게든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우리는 남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완강한 태도도 고집한 북측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처지에서는 테러사태 이후의 정세를 심각하게 느꼈다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북쪽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그토록 강조했으면 이를 받아들이는 융통성을 보여야 했다고 본다.

북측이 회담이 결렬에 이르도록 버틴 배경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반테러 전쟁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감, 북미 대화 재개에 여전히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불만, 전력지원이나

금강산 관광대가 지금에 소극적인 남측 정부에 대한 실망감, 당분간 대화속도를 조급하겠다는 속셈 등이 거론되지만,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견뎌야 어쩔든,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해 이산가족 상봉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남북관계의 견색을 밝히려는 대표단의 협상능력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의 편협한 태도도 문제지만, 우리 대표단 역시 북측에 끌려간다는 보수여론을 지나치게 의심해 협상력을 좁히지 않았는지 자심할 일이다.

이번 회담의 결렬로 남북은 모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으며, 당분간 남북 사이에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장관급 회담 결렬은 매우 실망스럽지만 양측이 대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정부는 모든 불로함 동원해 대화 재개를 시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社說

金正日담방, 미련 버려라

작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장관급회담이 결렬됐다. 6차 장관급회담은 남북한간에 불신만 쌓이게 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회담이 됐다. 구태여 긍정적으로 본다면 남북대표단이 북측의 무리한 요구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고 버렸다는 사실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남북대표들이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막대한 기대를 갖고 금강산까지 간 것이 잘못이었다. 북측은 애당초 이번 회담에 별다른 뜻이 없었다. 결국 남북대표들은 북측대표들과 6박7일간 입세름만 하다 "남한이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버리고 대결을 추구했다"는 식의 누명만 쓰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북한에 대해 '과주기'와 눈치보기로 일관해 온 정부가 왜 이처럼 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까지 뒤집어쓰고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단장 서울에 오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햇볕'만 피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그동안 남북한 관계의 경험으로 보아 실효성이 없다.

특히 김 위원장의 서울 담방에 대한 미련은 이제 버려야 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담방은

북측이 지켜야 할 약속이지 남측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이 성사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북측이 해야 할 일이다. 남측은 만약 북측이 그런 노력을 한다면 성실히 도와주면 그만이다.

북측은 의도적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담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대남(對南) 협상카드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김 위원장의 담방을 고대하며 마치 거기에 매달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혹사라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임기 후반 치적이나 어떤 정치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김 위원장의 담방에 집착하고 있다면 큰 잘못이다. 만일 제2차 정상회담을 금강산에서 하자며 김대통령을 금강산까지 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금강산을 남북한 회담 장소로 계속 고집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제 김 위원장의 담방이나 또 다른 남북관계의 극적인 전환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햇볕정책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반성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다음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북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바탕을 차분히 '정리'해 주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한국경제

2001. 11. 15 (목)

사설

결국 결렬된 남북 장관급 회담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남북 협상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남북대화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제까지 북한측의 억지주장에 끌려 다닐 수는 없는 일이고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현정부가 정치적인 고려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회담은 북한측이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개최전부터 전망이 밝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9·11 테러사건 이후 취해진 우리측의 비상경제대체제를 문제 삼아 서울에서의 회담개최가 안전하지 않다고 회담장소를 금강산으로 옮기자고 생떼를 쓰더니, 우여곡절 끝에 회담이 열려야 어렵게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까지 끝내 무산시킨 것을 보면 북한측이 처음부터 이번 회담을 성사시킬 의사가 없었음에 틀림없다. 북한측의 이같은 역지가 한 정부로부터 디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한 전술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고 보면 우리측 관계당국은 명확한 원칙 아래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미망하다.

문제는 우리측의 대응자세에 일관성이 없고 명분도 약하다는 점에 있다. 순서상 당연히 서울에서 회담이 열려야 하는데도 북한측이 억지를 부리자 막판에 두렵한 이유 없이 회담장소를 금강산으로 옮기는 데 동의한 것도 그렇고,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일에만 매달리다가 2차 경제협력추진위와 7차 남북 장관급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는 북한측 억지로 인해 끝내 회담이 결렬된 협상과정도 적절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북한측에 위

둘러 명분도 잃고 시간만 끌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것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도무지 원칙도 없고 협상전략도 지리멸렬인 우리측 대표단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본다.

북한당국은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인식하고 더이상 무리한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우기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바람 끝 협상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마저 경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측의 태도는 불신과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번 회담결렬을 계기로 그동안의 일방적인 협상자세를 벗어나 이산가족 상봉과 쌀지원을 포함한 대북관계에서 뚜렷한 명분과 일관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社說

대북정책 전면 총점검해볼 때

처음부터 개최장소가 평양이나, 금강산이나
를 놓고 승강기를 밟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일
었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회담기한을 이
틀씩이나 연기해 가면서 원전 합의를 시도했
으나 결국 결렬되고 만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이다.

한때 이산가족 상봉 실시와 차기 장관급 회
담 개최 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끝내고 공동
합의문 발표단계까지 갔으나 막판에 2차 경협
추진위원회 개최장소를 놓고 '남측-서울'과
'북측-금강산'의 주장이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또다시 무
산돼 이산가족의 허탈감과 아픔이 더해질 게
제일 걱정된다. 이산가족 상봉의 절실함을 북
측이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라면 경협추진위원
회달 순서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 대해
고집을 부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비상경제대세' 운운하며 역지를
부린 북측을 볼 때 남북대화의 앞날이 밝지 않
을 것 같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차재에
재검토가 요구된다.

남과 북이 6·15선언 정신을 바탕으로 대
화와 접촉을 시작한 지 여든 1년반이 지났
다. 그렇지만 남북간 대화와 접촉이 세 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하곤 무의미하고 성과 없이
땀 흘리고 있음을 볼 때 무엇보다 북측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가
됐다고 본다.

한마디로 햇볕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대화과 지원을 가능한 한 확대한다는 게 우
리의 기조였다면 북측은 오히려 이를 임종
하게 이용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과 군사분
야 등 사안별로 접촉할 때마다 일관성 없이 임
하는 북측의 태도를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사
실로 여겨진다. 그 때문에 국민들이 '북은 변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퍼준다'는 식의 불
만을 갖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가 대화와 지원의 기본원칙은 지켜 나
가야겠지만 더 이상 지속성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특히 국민적 동의가 수반되지 않은 대북정
책은 그 성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
달아야겠다. 그래서 이제껏 대북정책에 큰 오
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당국이 여야는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야 할 때
라고 말하고 싶다.

① 중앙일보

2001. 11. 15 (목)

사설

북측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금강산에서 진행된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13일 결렬됨에 따라 남북관계의 냉각기가 불가피
해졌다. 북측이 우리의 비상경제 조치를 끈질기
게 들고 늘어지고 제7차 장관급 회담과 남북 경
협추진위원회의 개최 장소를 끝까지 금강산으로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북측은 14일 방송을 통해 장관급 회담의 결렬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남측이 '6·15 공동
선언의 근본정신을 버리고 대결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북측이 이래서는 안된다. 북측은 이번
회담 결렬에서 교훈을 찾아 남북대화에 임하는 자
세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 대표단이 회담에서 '반(反)테러' 비상경
계 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누누이 설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9·11테
러 직후 서울에서 제5차 장관급 회담을 연 선례
가 있지 않았는가. 북측이 우리의 비상경제 조치
를 정말 우려한다면 장관급 회담에 이어 곧바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
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문제를 물어보려는 성의를 별반
보이지 않았다. 만의 하나라도 일부 북한문제 전문
가들의 분석처럼 대남 협상가들이 군부의 불만 때
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그야말로 국방장관 회담
을 열어 군사당국자들끼리 마주앉아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측
이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남측의 비상경제 조치나
전투력 증강에 진심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쌍방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남북간에는 늘
돌출적인 현안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대화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방적인 때쓰기나 일
수봉피의 바티카를 고집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장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왔다. 또
우리측이 다소 손해볼 보더라도 대북 경제지원
에 나서야 하며 엄격한 상호주의에 집착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유연한 입장을 지지해왔다. 그러

나 최근의 남북대화를 지켜보면서 북측이 일방
적·폐쇄회로적 억지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진정한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절
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남북합상에서 서로의 입장차이 때문에 회
담이 결렬될 수도, 냉각기를 거칠 수도 있는 만큼
이번 회담 결렬에 크게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같
다. 비록 합의 도출에 실패했지만 우리 대표단이
원칙을 고수한 것은 칭찬할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협상팀이 북측의 일방적인 자
세에 끌려다니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안보를 거듭했다라면 대북 포용정책의 근본미저
흔들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이런 식의 일방적 회담자세를 계속한다
면 남측의 대북 여론이 거듭 악화될 것이고 대북
화해 협력론자들의 입지마저 좁아진다는 현실을
지시해야 한다. 북측이 쌍방 호혜적인 자세로 거
듭날 때 남북대화가 제자리로 찾을 수 있고 남북
경협과 평화공존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
다. 북측의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장관급 회담 결렬 이후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남측의 테러 비상경계 태세를 문제삼은 북측의 완강한 태도 때문에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이틀이나 연장하고 합의협상까지 벌였으나 다음 장관급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끝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달 금강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이뤄졌던 테러 협육 상봉을 기대하던 이산가족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정부가 야권과 일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회담을 수용했고 이산가족 문제도 서울 및 평양 교환 방문이 아닌 금강산 집단 상봉으로 양보하는 등 최대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회담 결렬의 책임을 북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은 회담 첫날부터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둘러싼 일정 조정 문제 등 본안 협의는 재쳐두고 남측의 비상경계 태세를 대북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해체를 요구해 회담은 내내 난항을 겪어야 했다. 결국 이산가족의 금강산 상봉과 7차 장관급 회담의 서울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뤄놓고도 박관에 북측이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장소를 금강산으로 고집한 것은 결론적으로 판을 깨지는 의도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이 회담과 행사 장소로 금강산을 고집

하는 데는 현재 파산 위기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대가 미납금 문제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살리는 길은 육로관광과 금강산 특구지정 정도일 뿐 다른 대안은 없다. 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교차 개최기로 했으면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야 한다. 회담이나 행사의 주최측이 신변 안전을 보장하면 되는 일임 외세 운운하며 트집잡는 것 자체가 '비(非)자주적'인 태도가 아닌가.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도 비난받을 일이지만 이제 더이상 대남 협상에서 '버림잡' 전술이 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회담은 남북간의 인식 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상호 불신의 폭도 크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우쳐주었다. 남북간 인식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대(對)테러 전쟁 등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남북 관계는 상당기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남북이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평화 공존의 틀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 결렬을 계기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군사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당국자 회담의 한계를 감안해 다양한 비공식 채널의 남북 접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매일

남북회담 실망 크나 중단 안돼

남북장관급회담이 끝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됐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차례 가진 회담에서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기로 한때 합의를 보았다거나, 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를 갖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에 미흡하나마 남북관계가 되살아나는 징조로 받아들이며 환영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 합의마저도 북한의 비상경계조치 해제 요구와 경제협력추진위의 금강산 개최 주장에 제동이 걸려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작으나마 신뢰를 쌓아가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우리 세대에서 해결하고, 남북이 함께 경제발전의 동참하고자 했던 희망들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번 회담의 결렬 원인은 북한이 남한의 비상경계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남한이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북한내 강

경파와 개방파간의 '북북갈등'도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사정은 있겠지만 신뢰회복과 평화정착이라는 대의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남한이 이산가족 상봉 장소마저 금강산으로 양보했는데도 북한이 끝내 합의를 백지화한 것은 우리를 너무 실망스럽게 한다.

테러전쟁의 와중에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내린 비상경계조치가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닌데도 이를 빌미로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북한이 스스로 응징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경제협력추진위 대북 자금 지원 등 경제협력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굳이 장소가 금강산이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이산가족의 비통한 심정과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남한은 물론 북한당국도 이런 점들을 곰곰이 새겨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회해 협력은 '결렬'될 수 없는 거래의 소망이다.



李東諤

결국, 결론로 끝나고 만 이번 금강산에서의 소위 '남북 장관급 회담'의 시말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내 준 해프닝이 되고 말았다.

北, 회담에 흥미 없어

이번 회담의 분위기를 가장 강렬하게 전달한 TV 화면이 있었다. 한박웃음으로 '여유(?)'를 과시하면서 헛헛하게 서 있는 자택의 북측 수석대표와 손을 맞잡기 위하여 회의타자의 중앙선 너머로 허리를 잔뜩 굽힌 '여지웃음(?)'으로 일그러진 우리 측 수석대표의 모습이 다. 우리는 이 화면에서 1951년 북측 지

역인 개성에서 열렸던 한국전쟁 휴전협상 첫날 회담장 정면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회담장에 도착하여 의자에 착석한 유엔군 수석대표 C 터너 조이 재독은 곧 이상한 사실을 발견한다. 조이 재독의 의자는 다리가 잘린 앉은뱅이인 대 반해 북측 단장 남일의 의자는 다리잡 키운 키다리. 남일은 조이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게다가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북한 기와 조그만 미국 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조이 재독은 즉

·상당을 하는 데 그치게 됐다. 그때 우리 정부는 소위 '과속현'을 거론하면서 그 처방으로 '속도조절론'을 내놓았었다. 과거의 회담을 돌이켜 보면 북한이 회담을 중단시키는 전형적인 과정이 있다. 첫째로 기존 합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둘째로 그러면서 북한만의 일방적 해석에 근거하여 합의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셋째로 짐작 회담을 잘 하려 들지 않는다. 이번에도 그러한 과정이 정확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점이 한

번의 태도는 우리 정부의 그 같은 판단이 빛나간 것임을 입증해 주었다. 결국 김정일의 북한은 이미 레임더이 된 김대중 정권과의 생산적 대화에 흥미를 잃은 것이다.

미련 집고 內治 힘써야

그동안 정부가 그러던 화려한 장밋빛 그림들은 이제 간 곳이 없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는 여전히 끊어져 있고 개성공단은 여전히 신기루일 뿐이다. 이번 금강산 회담에서도 북측은 김대중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을 트집 잡아 "밖에 나가 그 누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 높음을 한 것은 용납 못할 엄중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는 소식이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북측에 끌려만 다니는 굴욕적인 저지서 대북정책에 매달릴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 것인가? 아무래도 김 대통령은 더 이상의 미련을 집고 향후의 남북관계는 다음 정권의 몫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리고 시야를 안으로 돌려 환골이될 대로 환골이될 내정을 챙겨서 수습하는 것이 정도일 것 같다. /영지대 초빙교수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南北관계 다음 정권으로

각 '적지'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다음날 조이 재독은 회담장소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적지'인 개성으로 가는 것을 단호히 보이냈었다. 이렇게 해서 회담장소는 쌍방간의 중립지대인 판문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김정일의 북한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남북대회에 흥미를 잃고 있었다. 이미 그때부터 다음 회담 날짜는 잡히지 않고, 이렇사리 잡히면 일방적으로 연기되고, 또 회담이 열려도 진전은 없고 이미 논의되었거나 합의된 것을 가지고 재반

가지 있다. 경제적 곤경을 미봉해야 하는 북한의 막대한 상황과 이와 관련하여 우리 측 김대중 정권에 거는 기대이다. 양국과 비교, 그리고 그동안 발생한 미수급을 포함하여 금강산 관광대금의 계속적인 수급이다. 이번 금강산 회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경제적 해태에 대한 미련 때문에 김정일의 북한이 표리불리하여 결국은 회담을 진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귀환을 이끌어나 연기하면서 북측의 웃자락에 매달렸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드러난 북



趙明哲

끝내 결렬된 금강산 장관급 회담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가슴치열이 오르는 그 무엇에 의해 일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북한이 닫힌 체제이고, 획일적 명령체제라는 것이야 겉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수가 있을까 싶어 허탈감마저 든다.

회담개려 의도적 생트집

북한은 회담의 지속과 합의안들을 깨기 위한 명분으로 '남측의 비상경제권'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발언' 등을 내걸었다. 허나같이 말이 안되는 핑계에 불과하다. 북한 지도부가 현실을 이렇게까지 안이하게 보고 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는 그들에게 화

실하게 따질 것은 따질 때가 되지 않았나 본다.

첫째, 비상경제권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사실 이번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이후 전세계에서 비상경제체제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세계 각국은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가 자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기에 대비한 것이다.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국가 책무의 제일 과제로 하는 주권국가라면 옹담 취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행동

일 뿐이다. 하물며 한-미 동맹관계로 위어진 남측으로서는 테러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나라보다 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내년이 월드컵이 열린다. 즉사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정부의 죄무유기이다. 북한도 세계청년학생축전이나 국가직인 중요한 행사 때마다 전국, 전군이 경제체제에 들어갔었고, 최근 푸틴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의 방북 시에도 전국에 비상경제권을 내걸었다. 만일 그때 남측이 "이 기회를 틈타 북측이 남침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었다면 북측으로서도 이기가 없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 회담개기의 명분으로 내건 소위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발언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 참뜻을 꿰뚫어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은 북한만을 상대로 해서 만든 용어도 아니다. 개혁·개방은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로 된 지 이미 오래다. 개혁·개방을 통해 국가를 혁신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킨 중국을 비롯한 고무적인 사례들도 이 용어의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북한 당국만이 이 말을 곡해하고 있으니 세계는 그 이유를 다룬

금강산 관광 개발, 개성공단 개발, 남북철도 연결, 에너지 협력 등 하나같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한국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보기 때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후대가 남북에 살든 북측에 살든 좀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南의 제안은 北에 더 이익

지난 몇 년간 식량, 비료, 외화 등 한국으로부터 들어간 경제적 이익이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이 확대되면 될수록 북한이 누리는 혜택은 커질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마다하고 회담마저 깨버렸으니 '아, 이제 북한당국자들이 자신들의 인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민들의 굶주림은 관심이 없어졌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옹만하지 않아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주민을 진정 위한다면 국민 모두를 김정남처럼 대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길이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전 김일성대 교수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北은 誤判하고 있다

대서 찾을 수밖에 없다. 즉 북한 주민의 생활상보다 유일지배체제의 운명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다. 유일지배체제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작용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가 굶주린 주민을 삼키고 국민복지 증진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배척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반응을 보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한국의 대북 제안들이 갖고 있는 뜻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수많은 대북제안들이 있지만, 솔직히 한국 입장에서는 그 제안들이 실현된다고 해도 크게 이익날 것들도 아니다.

9일부터 14일까지 열렸던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매우 상징적이었다. 장전이 되어 촛불을 켜고 회담을 진행했던 금강산 여관의 열악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남한의 태리경제 조치들 문제 산하 '쌀'이 걸린 회담을 결렬 시간 북한의 생트집은 새삼 그들의 모순을 부각시켰다. 일정을 연장하며 금강산에 일주일 머물며 남측 대표단의 안내심도 인상적이었다. 그 안내는 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련을 남기지 않겠다는 노력으로 비쳤다.

남측 대표단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작년의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렸던 장관급 회담이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견이 좁혀지는 듯 하던 이산가족 상봉도 수포로 돌아갔다. 고향의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이번에 남측대표단이 회담 성과

생떼를 부리고, 무례하게 굴기도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무시하고, 남한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 아직 부족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남한정부의 노력을 향해 번번이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2000년 6월15일 남북의 정상은 손을 맞잡던 순간의 감격은 소중한 역사 속에 간직하고, 이제는 지난 17개월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대책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금 북한의 상황에서 엄격하게 상호주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북한을 진정한 대화 상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북한은 쌀을 받기 위해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동의하고 적당한 선에서 생트집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회담은 결렬됐다. 북한

강명수 칼럼

(2177)

“평화공존도 어렵다”



에 연연하지 않고 '결렬'을 수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햇볕정책의 성과에 조금증을 보이던 정부가 회담 결렬을 수용할 만큼 냉정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평가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정부는 냉정해져야 한다. 냉정해야 사태를 바로 보고 전략도 세울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외골수로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밖에 다른 전략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 결과 많은 국민으로부터 북한에 끌려만 다닌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상당부분 북한을 오도해 왔다.

남한의 정성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은 이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공영을 논의하는 사이가 됐다. 6·15선언 이후 쏟아져 나왔던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조성, 직항로 개설, 이산가족 상봉 정례회 등 무지갯빛 계획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폐기처분된 것으로 편향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큰 획을 그었고,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물론 달라지지 않은 것도 많다. 북한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다. 합의를 멋대로 뒤집고,

이 쌀을 원하는 것 못지않게 남한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남측이 더 다급할 것이라는 북한의 오해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그런 오산을 했다면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 앞으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빈손으로 돌아온 홍순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공존이란 대결의 시대만큼이나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중요한 말이다. 오늘 햇볕정책이 국민과 북한으로부터 동시에 도전 받게 된 것은 '평화의 관리'가 너무 '남만적으로' 생각했던 잘못이 크다. 홍 장관은 이번에 두 번째로 남북 회담에 참가했는데, 햇볕정책의 '행복적인 추종자'가 아니라 햇볕정책을 보다 성숙하게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평화공존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으며, 평화공존이란 대결 못지않게 관리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는 것이다. 감정일이 언제 오느냐, 남북관계가 언제 풀리느냐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햇볕정책이 보다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는다면 결렬을 삽입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발행인 mschang@hk.co.kr

대북 협상자세 재점검할 때다

제6차 장관급회담의 결렬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든 것은 처음부터 북한이 의도한 결과로 보인다. 남측의 양보로 회담이 성사됐음에도 북측의 김령성 단장은 첫날 기초발언에서부터 “북한의 개혁·개방을 도와달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해외발언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는 회담기간 내내 이치에 닿지 않게 남측의 비상경계 상황을 트집잡았다. 남측의 책임있는 고위당국자인 홍순영 대표가 북측을 겨냥한 조치가 아님을 누누이 설명했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는 이상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다.

회담 종료 후에도 북측은 대표단 성명과 방송을 통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면서 홍대표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은 교류와 회담이 있었지만 북측이 이처럼 거칠게 남측을 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회담은 경우에 따라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상호신뢰에 상처를 내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는 데 있다. 남북관계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기본적인 신뢰만 유지한다면 낙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뢰관계를 훼손해 놓으면 복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특히 지금 남한은 정권 임기말에 몇몇 실정(失政)으로 인한 레임덕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보수적인 야당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햇볕정책을 추진해온 현 정권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북한에서도 대남 협상과의 입지가 위축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과연 어느쪽이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어겼는가.

북한은 군부 등 강경세력의 압박이라는 내부사정 때문에 일단 대남 화해장구를 닫기 위한 발미를 잡으려 한 것 같다. 남측 홍대표의 협상방법에는 이견도 있으나 그 정도 선에서 원칙을 고수한 것은 잘한 일이다. 냉각기라고는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식량지원과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필요성 때문에 무한정 강경자세를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원칙있는 대북 협상자세를 다져 북한을 각성케 하고 남북대화의 틈을 틈틈하게 갖추길 바란다. 그러자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등 현 정권 임기중의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북한과의 꾸준한 물밑협상은 계속해야 할 것이다.

